한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협력

우리나라의 수원 규모와 분야 효과사례 등에 관한 조사연구

이 경 구

KOICA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연 구 자 료
연구 2004-1-25

한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협력

우리나라의 수원 규모와 분야, 효과사례 등에 관한 조사연구

2004. 3

KOICA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책자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연구의원이 실시한 조사 연구결과를 출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 간 사

우리나라가 우리의 이웃 지구촌 여러 개발도상국들에게 본격적인 개발원조를 공여하기 시작한지도 이미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대외 원조가 그 규모 면에서 아직 큰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간 우리가 습득한 귀중한 개발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참신한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해 나가고 있다.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향후 유망한 원조 공여자의 하나로 새로운 국제사회에서 그 독자적인 자리를 찾아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근년에 이르러 원조 공여자의 신분으로 그 지위가 전환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참으로 다양하고도 많은 개발원조를 제공받는 처지에 있어왔음을 알 수 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왔던 만성적인 빈곤과 저개발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단시간 내에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건국 초창기로부터 이러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나가는데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경제의 재건과 개발과정에서 크게 낙후된 기술, 빈약한 자본과 자원의 제약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적극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기꺼이 우리에게 다양한 도움과 협력의 손길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다행히 우리는 그간 국제사회의 여러 지원노력이 헛되지 않게끔 그러한 도움의 손길을 토대로 우리의 경제를 고도 산업사회의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이에 수반되는 경제·사회적 진보를 이룩하였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보다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한 국제 개발협력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매우 중시해야할 사항의 하나는 원조 및 협력의 제공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를 받아들여서 활용하는 수원자의 정신과 자세, 그 방식 등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점은 그간 주요 수원자, 즉 원조 수혜자의 하나였던 한국의 사례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한국의 사례는 개발에 부심하고 있는 여러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물론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외 원조를 펼쳐나가게 될 우리 스스로에게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제공해줄 것임에 틀림이 없다하겠다.

금번의 연구는 적잖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전반적인 흐름과 우리의 수원추세를 살펴보고 그간 우리나라가 접수한 원조의 전체적인 규모와 분야, 형태, 효과사례 등을 개발원조를 중심으로 파악·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관계로 이번의 연구작업은 우선 이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는데 그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간 우리나라에 제공된 국제사회로부터의 개발원조와 협력이 이번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해방 이후의 시기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반세기여의 짧지만은 않은 기간 동안에 큰 규모에 걸쳐 매우 다양한 형태와 방법, 주체 등에 의해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모쪼록 금번의 조사연구 결과가 앞으로 우리의 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좋은 참고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하여 그간의 우리 수원사업에 대해 보다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한층 더 깊이 있는 여러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04. 3.

총 재 김 석 현

목 차

발 간 사

글머리에 7

제 1 장 국제개발협력 환경과 우리의 수원 13

1. 전후 195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태동 13
2. 1960년대 남북문제의 대두 17
3. 1970년대 남북문제의 전개 20
4. 1980년대 이후 남북문제의 지구적 과제화 25

2 장 우리나라 수원의 시대사적 흐름 29

1. 우리나라 수원의 시대적 분류 29
2. 우리나라 수원의 시대적 경과 35
   2.1. 미군정시대의 수원(1945~1948) 35
   2.2. 전후복구 및 경제재건기의 수원(1949~1960) 37
   2.3. 개발연대 전기의 개발원조(1961~1975) 55
   2.4. 개발연대 후기의 개발원조(1976~1990) 66
   2.5. 원조전환기의 개발협력(1990~1999) 67

제 3 장 우리나라의 수원현황 71

1. 수원 규모 71
   1.1. 개관 71
   1.2. 개발원조 73
   1.3. 개발협력 차관 79
2. 수원 유형 및 형태 82
   2.1. 개관 82

2.2. 주요유형별 현황 85
2.2.1. 긴급구호 및 복구를 위한 원조 85
2.2.2. 경제안정과 재정확충 등을 위한 투융자 지원 87
2.2.3. 경제사회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및 부문투자 지원 89
2.2.4. 개발협력 지원 93
2.2.5. 봉사단 접수 94
3. 주요 수원 분야 및 내용 95
3.2. 개발원조 97
3.2.1. 농업 분야 97
3.2.2. 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 100
3.2.3. 직업기술교육 및 훈련 분야 104
3.2.4. 보건의료·사회사업 분야 106
3.2.5. 전력·통신 분야 110
3.2.6. 민간원조단체에 의한 사회사업 원조 115
3.3. 공공차관(Public Loan) 사업 121
3.3.1. 개요 121
3.3.2. 양허성의 기준 등에 따르는 공공차관 도입현황 126

제 4 장 주요 수원사업 사례연구 133

1. UNDP에 의한 기술협력 133
2. 독일에 의한 직업훈련분야 기술협력 141
3.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사업 152
4.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사업 167
5. 국립의료원(Korea Medical Center) 설립사업 176
6. 포항종합제철(POSCO) 건설사업 187
7.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 199

제 5 장 평가 및 교훈 207
1. 시사점 207
1.1. 한국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한 국제개발원조와 협력 207
1.2. 하나의 모델사례: 성공적인 한국의 수원사업 209
1.3. 복합적이고도 전략적인 성격의 개발원조사업 213
1.4.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원조사업추진 필요성 215
1.5. 수원자의 개발의지와 이니셔티브, 참여와 주인의식(Ownership) 217
1.6. 정책적 관점: 원조정책 대화, 선택과 집중의 문제 221
1.7. 기술적 관점: 인적자본과 기술, 정책, 시스템 등 연성요소의 중요성 224
1.8. 문화·사회적 관점: 문화·사회적 가치와 태도의 문제 228
1.9. 개발협력사업 실시 체제: 권위적 통치행태와 중앙집중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문제 232
1.10. 한국의 경험이 북한의 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233
1.11.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한국의 새로운 역할 235
1.12. 원조에 대한 기록, 그것은 공여자측의 몫인가? 237

2. 한국의 수원과 국제개발협력 잇슈 240
2.1. 개발전략: Outward vs. Inward, Even vs. Un-even 240
2.2. 후발자의 이점과 불리점 245
2.3. 외자와 외채, 대외 경제의존과 종속의 문제 247
2.4.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기능 분담 252
2.5. 연성 기술협력과 경성 자본협력의 우선순위와 조화의 문제 254

2.6. 국제개발협력과 빈곤의 해소 256
2.7. 원조와 무역의 상보성과 상대적 효과의 문제 259
2.8. 총체적 안보와 개발원조 264

제 6 장 결 론 268

부록 **277**
Ⅰ. 외국 민간원조단체 및 기관 일람
Ⅱ. 주요 원조사업관련 협정 등 목록
Ⅲ. 공공차관사업 일람
1. Grant Element 25%이상 공공차관사업
2. Grant Element 25%미만 공공차관사업

글머리에

전후의 새로운 국가건설과 개발에 있어서 한국의 예와 같은 사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식민통치에 의해 피폐해진 경제와 사회를 추스르기도 전에 국토의 분단과 함께 한국전쟁이라는 참화를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한 남한은 지난 반세기여의 기간동안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을 통해 거듭된 변화와 발전을 이룩했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써 손색이 없는 시민국가를 건설해 나왔다. 한국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해소되지 않은 양분된 남북간의 이념 갈등과 대립에도 불구하고 전후 제3세계의 경제·사회 발전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성공사례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불과 반세기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저소득·미개발국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정치·경제·사회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매우 폐쇄적이고도 대내지향적인 사회적 일반적인 사고구조와 태도는 개발이라는 근대적 의미의 가치를 수용하는 것과는 먼 거리에 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 기본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한 변화와 발전을 창출해 내는 것은 실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여건과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적 성장은 물론 사회적 진보와 정치적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냄으로써 한 사회가 만성적인 저개발의 상태로부터 성숙된 발전의 단계로 올라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전통적인 1차 산업에 크게 의존하던 농경사회로부터 고도화된 공업 구조를 가진 산업사회로 탈바꿈하였으며 세계 10위권의 산업생산 및 무역국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막대한 규모의 대외원조에 의존하던 빈곤·저소득국의 처지로부터 원조

를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그 지위를 크게 향상·전환시켰으며 서방선진국들의 국제협의체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합류하는 등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

이와 같은 그간의 성과는 한 가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발과 발전에 대한 열망을 자유롭게 추구해나갈 수 있는 자유·경제체제의 선택과 이러한 열망을 구체적인 개발의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정치·사회적인 안정과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새로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리더십, 교육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인적 개발에 높은 사회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근면·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했던 국민 등 적지 않은 요소들이 놀랄만한 변화와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 모두가 극히 어렵고 부족한 것들이 많았던 시기에 여러 가지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국제사회의 고맙고 따뜻한 손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는 우리들의 기억으로부터 거의 잊혀지고 있는 국제사회로부터의 협력, 즉 '개발원조'가 일찍이 우리들로 하여금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었을 뿐 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의 시기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개발원조를 제공하는 공여자의 입장으로 그 지위가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극적인 발전과 변화를 되돌아보며 그간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아온 개발원조와 협력의 추이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자못 그 의미가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조사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경제·사회의 개발과 발전과정에서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제공받은 도움, 즉 개발원조와 협력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 특히 개발원조에 대해서는 196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기에 있어서는 그 결과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우리의 급속한 경제·사회 개발이 이루어진 1960, '70, '80년대 이른바 개발연대 기간 중의 국제개발협력 대해서는 이렇다할 만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따라서 이번의 조사연구는 우선 우리나라가 해방이후 경제의 안정과 재건, 개발을 추진해 나오는 이제까지의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제공받은 개발원조와 협력에 대한 개괄적인 흐름과 그 내용, 즉 수원 규모와 주요 수원 분야, 주요 원조사업의 사례 등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조사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분명하게 해야할 점은 무엇보다도 이 조사연구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제까지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관계로 관련 용어의 선택 및 사용은 물론 조사연구의 영역이나 범위 또한 나름대로의 한계 또는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초 조사연구의 출발은 '우리나라의 수원(受援)', 즉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접수한 '원조'의 규모와 주요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원조(援助)'라는 용어는 OECD에서 보통 'aid' 또는 'assistance'라는 용어로 쓰여 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써 이는 보통 우리가 ODA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조사연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접수한 공적개발원조의 규모와 내용에 관한 사항이 그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ODA 즉 공적개발원조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좀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 제공된 공공차관의 경우 이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견지에서 그 범위를 '개발원조(開發援助)와 협력(協力)'이라는 개념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또한 조사연구과정에서는 ODA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의 민간원조단체로부터 우리나라가 접수한 원조 또한 적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금번의 조사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한편 '개발원조와 협력'이라는 용어의 표현에 있어서 '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경제사회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인 원조나 협력을 이 조사연구의 영역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군사원조 등 개발이 주목적이 아닌 것들은 제외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함은 일반적인 원조, 즉 공적개발원조와 외국의 민간원조단체로부터 공여된 민간부문의 원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발협력'이라고 함은 양허성(讓許性, concessionality)면에서 공적개발원조의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경제사회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공공차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반적인 개발원조 및 협력의 시대사적 배경과 흐름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서는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이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이는 OECD에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재원의 흐름은 물론 개발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이 조사연구는 적어도 두 가지의 관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우리가 제공받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개발협력 지원의 전체적인 면모를 개괄적으로나마 파악하고 이를 조망해봄으로써 과거 우리의 경제 개발과 사회 발전에 있어서 개발원조와 협력이 기여한

역할과 기능, 그 효과와 문제점 등을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현재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는 원조공여사업에 우리의 수원 경험을 활용할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우리의 경제·사회 발전 과정과 궤를 같이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진 수원사업은 우리의 원조공여 대상이 되는 다양한 발전단계의 나라들에 대한 원조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매우 귀중하고도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공교롭게도 필자는 개발연대 후기의 시기에 우리에게 제공되는 국제개발협력프로그램의 실시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 이후 우리나라가 우리보다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마련과 시행에도 참여하는 등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일에 남다른 인연을 만들어 나왔다.

필자는 1980년대 초 세계은행으로부터의 구주조정차관 도입사업과 관련한 수원자측 실무담당자의 한 사람으로 일하기도 하고 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UNDP가 제공하는 자문프로그램에 직접적인 수혜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1986년에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는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한편, 필자는 1987년도에 설립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제도의 창설 준비작업에 참여하였으며 1989년도에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파푸아뉴기니를 위한 원조공여국 회의에 한국 정부가 최초로 파견한 옵저버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였으며 그 이후 1990년대에 개최된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등을 위한 원조공여국 회의에 우리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원조를 제공받기도 하고 또 원조를 공여하기도 하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개발원조 업무를 직접 다루었던 독특한 경력을 가진 사람의 하나로서 금번의 이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남다른 소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하나의 커다란 보람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두고 싶다.

이미 한 세대 이상의 시간이 경과된 개발연대 전기 이전의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용이한 일일 수가 없었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의 조사와 내용의 파악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해주신 포항제철 등 여러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특히 본 연구조사내용에 대한 자문요청에 세심하게 응해주신 성균관대학교 이대근 교수, 재정경제부의 주용식 개발협력과장, 한국수출입은행의 서귀원 경제협력2팀장, 한국국제협력단의 김무옥 협력정책반장, 정우용 IT협력팀장 제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연구조사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각종의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조한덕 과장과 공공차관사업 등 통계자료의 분석과 정리를 도와준 이중재 군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그리고 여기에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도움을 주신 다른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연구위원 이 경 구

제1장 국제개발협력 환경과 우리의 수원

1. 전후 195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태동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형성되기 시작한 새로운 세계의 질서는 유엔(United Nations)[1]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적인 국제안보협력체제가 수립되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및 국제부흥개발은행(IBRD)[2]과 같은 다자적인 국제경제기구의 창설과 함께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3]이 체결되면서 화해와 협력, 자유무역과 국제협력의 증진을 가능케 하는 우호적인 개발협력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국제적인 정치정세는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과 소련의 양국이 주축이 되는 동서(東西) 양진영간의 냉전체제가 구축되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로써 세계는 향후 반세기간에 가까운 오랜 기간동안의 체제경쟁의 막이 올랐으며 이후 양진영국가간의 국제협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미국과 소련을 양 극으로 하는 동서 양극체제(bi-polar system)의 새로운 국제정치 구도가 설정되었다.

전후 서구열강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많은 신생 독립국들은 대부분 자주적 발전에 대한 '상승하는 기대(rising expectations)'를 안고

---

[1] 1944년 4월부터 6월까지 미국의 San Francisco에서 개최된 'UN Conferenc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에서 UN설립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 뉴욕에 본부를 두고 1945년 10월부터 활동에 들어감.

[2]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 Bretton Woods에서 개최된 'UN Monetary and Financial Conference'에서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1946년부터 Washington D.C.에서 그 운영을 시작함.

[3] *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1947년 무역과 경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체결된 국제 다자간 협약으로 관세의 인하 및 자유무역을 추구하며 그간 꾸준한 다자간 협의를 통해 Uruguay Round를 출범시켰으며 1995년에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s)로 그 역할과 기능을 발전시켜나가고 있음.

새로운 국가 건설에 나서게 되었다. 이른바 동맹국들의 식민지로 전락해 있었던 적지 않은 나라들은 종전과 함께 대부분 그들의 독립과 주권을 되찾았으며 다른 열강들의 손아귀에 있던 다른 여러 피식민 국가들도 각자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국가로 탈바꿈해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신생국가들의 탄생 행렬은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들 모두가 큰 열망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의욕적인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미증유의 국제 질서와 새로운 국제사회의 형성은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방식과 유형의 국가 간의 협력과 교류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새로운 국제관계를 모색해나가게끔 하였다.

전후 국제사회의 일차적인 과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오랜 동안의 전화(戰禍)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전쟁당사국들의 재건과 경제부흥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종전에 따르는 국제사회의 혼란과 무질서가 어느 정도 극복되면서 취해진 국제재건과 부흥의 이니셔티브는 전대미문의 선의와 아량의 소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미국의 '마샬 플랜(Marshall Plan)'[1]이었다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자 서방의 유일한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은 1948년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죠지 마샬(George C. Marshall)의 제안에 따라 매우 야심적인 유럽의 경제재건과 부흥을 위한 원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경제재건과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이태리까지를 포함하는 여러 유럽 국

---

1 전후 극심한 경제난에 빠져있던 유럽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계획은 그 공식 명칭이 European Recovery Programme이었지만 1947년 6월 5일 미국의 George C. Marshall국무장관이 Harvard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의해 처음 밝혀진 관계로 Marshall Plan으로 더 잘 알려져 있음. 마샬 장관은 이 연설에서 그들의 정책이 '어떤 국가나 주의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기아, 빈곤, 절망과 혼란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밝혔으며 이 계획에 따라 1948년부터 1952년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유럽의 16개국에 대해 133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경제재건을 위한 원조가 제공되었음

가들에 대해 제공된 미국의 지원은 국제개발원조라는 새로운 개념과 형태의 국제협력을 창출하게 되었으며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1]의 수립이라는 새로운 국제협의체의 창설을 가져오게 되었다.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유럽 국가들의 국가간 협력 움직임에 대응하여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구의 공산사회주의 국가들은 코메콘(COMECON: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2]을 결성하여 회원국가간의 경제적 협력을 도모해나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후 국제사회의 원조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은 마샬 플랜에 의한 유럽재건 및 부흥원조에 의해 서방의 경제와 사회가 안정과 성장의 기반을 되찾게 되면서 관심의 대상은 자연스레 신생 미개발 개도국들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구의 공산사회주의 이념간의 대립이 불러온 동서간의 냉전은 각각의 양 진영에 속해있는 신생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군사적 · 경제적 지원을 경쟁적으로 확대해나가게 하였다.

특히, 1950년대 초 인도지나반도에서의 불란서의 축출과 공산베트남정권의 수립, 한반도에서의 한국전쟁을 통해 더욱 극단화된 동서 양 진영간의 첨예한 대립 등으로 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인도적, 정치 · 경제적 이해관계에서는 물론 각자의 체제 유지와 비교우위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안보적인 전략차원에서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또한 서로 유사한 정치·경제적인 여건

---

1 Marshall Plan에 의한 원조의 접수와 관련하여 수원국간의 정책협의와 사업조정 등을 위해 1947년 6월에 설치된 다자간 협의체로 오스트리아, 벨지움, 덴마크, 프랑스, 서독,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노르웨이, 포르투칼, 스웨덴, 터키, 영국 등 16개 국이 참여하였으며, 1961년 미국과 캐나다가 함께 참여하는 OECD가 만들어지면서 그 기능이 종료되었음.

2 구 소련연방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동구권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체로 Marshall Plan에 의한 유럽경제협력체(OEEC)의 창설에 대응하여 1949년에 만들어짐. 소련은 물론 체코슬라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동독, 알바니아, 쿠바(1972), 몽골(1962), 베트남(1978) 등 10개국이 참여하였으며 공산권의 붕괴와 함께 1991년 해체됨.

하 에서 1950년대 중반이후 그 결속이 크게 강화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비동맹그룹(Non-aligned Group)[1]국가들의 국제적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원조는 정치, 군사, 경제사회분야를 불문하고 커다란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효과적인 전후복구와 재건을 통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경제·사회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한 대부분의 북반구의 서방 국가들에 비해 의욕적인 개발을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대부분의 남반구지역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 · 사회적 후진성과 낙후에 대한 우려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북측의 서방선진국과 남측의 신생 개발도상국가들 간의 현격한 개발 격차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이른바 '남북문제(North-South Problem)'[2]가 국제적인 과제의 하나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후 우리나라에 대한 원조는 이와 같은 시대사적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전후 약 3년여 기간동안의 미군정에 의한 과도기는 말 그대로 피식민 지배체제로부터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정부와 나라로 전환해나가는 극심한 변혁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었다. 1948년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면서는 미국이 유럽에 대해 실시한 마샬 플랜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전후 복구 및 재건을 위한 지원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 접어들었으며 이후 경제 재건과 사회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원조가 전개되는 시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1 1955년 반둥회의(The Bandung Conference of Africa and Asian Countries)로부터 연원되는 남측 개발도상국들의 협의체로 The First World로 지칭되는 서방선진국 그룹과 The Second World로 지칭되는 동구 공산권국가 그룹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이른바 제3세계(The Third World)로 지칭되는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964년 Geneve에서 개최된 제1차 유엔무역개발총회(UNCTAD)과정에서 77개 개발도상국의 참여 하에 결성된 뒤 이른바 비동맹운동(NAM: Non-Aligned Movement)을 전개해나가게 됨에 따라 이를 77 Group으로 부르기도 함. 현재 비동맹회원국은 116개국임.

2 이 어휘는 영국의 Lloyds은행의 회장이었던 Franks씨가 최초로 언급하였음.

그러나 예기치 않았던 6·25전쟁은 이와 같은 계획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흐트러뜨려 버렸으며 국제사회로부터의 다면적인 지원을 통한 긴급재난구호지원은 물론 전쟁 중 복구와 재건사업의 추진 등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1953년 6 · 25전쟁의 휴전 이후에도 전쟁 중에 파괴된 사회기반시설과 산업설비들을 다시 한번 복구해야하는 이중고는 물론 더욱 첨예화된 동서간의 냉전 경쟁을 한반도에서 치러야하는 또 다른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되었다.

더욱이 대부분의 신생 독립국들이 통일된 나라의 형태로 순조로운 국가건설을 추진했던데 비해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극단적인 이념의 대립 하에서 분단된 상태를 유지해나가야만 하는 현실을 감수해야했으며, 더욱 긴박한 남북한간의 체제경쟁 속에서 각각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자립된 국민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그만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한국은 195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신생개도국들이 겪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문제 - 사회적 기반과 산업시설의 낙후, 투자와 기술의 부족, 저소득 빈곤의 악순환, 만성적인 실업과 높은 율의 인구 증가, 국제수지의 적자와 외환의 부족 등 - 들을 경험하고 있었다.[1] 이른바 남북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서방 선진국들과 신생개도국들 간의 빈곤과 개발격차의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닌 중대한 현실의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2. 1960년대 남북문제의 대두

동서간의 이념과 체제 경쟁의 격화, 제3세계 권역국가들의 결속과 국제정치적 역량의 확대 등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원조의 문제는 소위 '남북문제'로 불려지는 국가 간의 개발격차의 문제가 일반화되면서 더욱 큰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전후 복구 및 재건을 통해 서방국가들의 경제기반이 회복되고 자력성

---

[1] Kim Kihwan, *The Korean Economy- Past Performance, Current Reforms and Future Prospects*,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5. 6., p. 3

장과 안정의 기틀이 잡히면서 1950년대 후반이후부터는 빈곤과 저개발이 보편화되어있는 신생개도국들의 개발협력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점차 증대되었다.

또한 그간 전쟁피해복구 및 재건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과거 종주와 피식민지배의 종속관계에 있어왔던 서구열강의 신생개도국에 대한 인도적 · 정치적 차원에서의 원조는 이른바 '남북문제로 표현되는 북반부의 선진국들과 주로 남반부에 위치하고 있는 저개발 · 빈곤 개도국들간의 개발격차에 대한 인식이 크게 증가하면서 점차 '북에서 남으로'라는 방식의 원조 패턴에 따른 경제 · 사회적인 개발지원 성격의 개발원조가 본격화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OEEC회원국과 미국 및 캐나다가 함께 참여하여 발족시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1]는 회원국들의 경제발전과 협력은 물론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에 기여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OEEC에 구성되어있던 개발원조그룹(DAG: Development Assistance Group)을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2]로 개편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발원조사업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였다.

한편, 각 선진국들은 대부분 새로운 원조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각자의 개발원조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케네

---

1 1960년 이 기구의 창립 당시의 참여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지움,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등 19개국이었으며 그 이후 일본(1964), 핀란드(1969), 오스트레일리아(1971), 뉴질랜드(1973), 멕시코(1994), 체크(1995), 헝가리 및 폴란드(1996), 슬로박(2000)이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에 가입함. 현재 총 회원국은 29개국임.

2 1961년 발족 당시 DAC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DAG 원래 가입국은 8개국(벨지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포르투갈, 영국, 미국)과 EC Commission 등 9개 회원이었으나 일본 및 네델란드(1961), 노르웨이(1962),덴마크(1963), 오스트리아와 스웨덴(1965), 오스트레일리아(1966),스위스(1968), 뉴질랜드(1973), 핀란드(1975), 아일랜드(1985), 스페인(1991), 룩셈부르크(1992), 그리스(1999) 등 14개국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 모두 23개 회원이 참여하고 있음.

디 행정부에 의한 새로운 대외원조정책에 따라 기존의 원조관련 조직을 경제개발 중심의 지원을 실시하는 국제개발처(AID: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로 개편하는가 하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국가들도 나름대로의 원조실시 전문조직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개도국 개발원조를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브레튼우즈협정에 의해 설립된 국제개발부흥은행(IBRD) 및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시작하기에 이르렀고 UN의 무대에서도 개발도상국의 개발 촉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즉 IBRD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빈곤개발도상국들에게 IBRD의 개발차관보다는 유리한 조건의 연성차관(soft loan)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0년 9월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를 설립하였으며, 뒤이어 1966년에는 에스캅(ESCAP)[1] 지역 내 국가들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이 설립되었다.

한편 동서간의 냉전이 더욱 격화되고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의 결속이 강화되는 등 국제사회의 흐름은 크게 동과 서, 남과 북이라는 이념과 경제권역간의 정치·경제적인 긴장의 고조로 이어졌으나 활발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논의와 협의 이루어지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발전 또한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UN 등에서의 활발한 논의는 1960년대를 '유엔개발10년(UN Development Decade)'[2]으로 선언케 하고 유엔개발

---

1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의 지역기구로써 역내 경제협력의 증진 및 개발을 촉지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UN의 경제사회이사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가지고 있음. 현재 54개 회원국이 가입해있으며 UN의 회원국이 아닌 9개의 준회원국(Associate Member)도 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음.

2 1961년 제16차 UN총회에서 미국 케네디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1961~'70년을 UN Development Decade로 선언케 되었으며 개도국의 연평균 성장 목표를 5%설정하는 등의 '행동제안(Proposal for Action)'을 채택하였음.

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수립을 통해서 보다 활발한 기술원조를 실시해나가도록 이를 제도화하는 한편, 원조와 무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병행해나가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남북국가들 모두가 참여하는 유엔무역개발총회(UNCTAD: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1]를 개최하여 무역증진과 개발촉진을 위한 남북국가간의 개발협력 현안들을 협의해나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남북간 개발격차의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면서 관련 지원과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냄으로써 1960년대 초부터 실시한 대외지향적인 경제개발전략의 추진에 국제개발원조와 협력을 적극적이고도 적시적으로 활용하였다. 한국은 1955년에 각각 IBRD와 IMF에 가입하였으며 1961년에는 IDA에도 가입하였는데, IBRD로부터 자금지원의 수혜를 받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였다. ADB에는 창립회원국으로 참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했다고 할 수 있다.

3. 1970년대 남북문제의 전개

1970년대를 '제2차 유엔개발 연대(The Second UN Development Decade)로 명명한 유엔은 1970년 제25차 유엔총회에서 잰 틴버겐(Jan Tinbergen)이 제안한 '국제개발전략(IDS: International Development Strategy)'를 채택하여 1960년대 초에 본격화되기 시작한 남북협력의 추진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하였다. '70년대 국제 개발

---

1 비동맹운동 등을 통해 결속을 다지기 시작한 비동맹개도국들의 요청에 따라 무역과 개발을 위한 남북간 협의를 실시하기 위해 개최된 UN회의로 1964년 그 첫 번째 총회를 개최하여 ECLA(Economic Commission of Latin America) 의장이던 Raoul Prebish의 보고서 'Toward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를 채택하고 남측 개도국에 대한 북측 선진국의 원조목표를 GNP의 1%로 설정하는 한편 UNCTAD의 상설화를 결의하였음. 그 이후 4년마다 개최된 총회에서는 1차산품 가격의 안정과 교역조건 개선, 관세 일반특혜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의 도입 등 여러 가지 협력방안을 강구하였음.

에 관한 국제적 합의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략은 '70년대 중 개도국들의 경제성장 목표를 연평균 6%이상으로 하고 수출증가율을 연평균 7%이상으로 신장시키는 한편 대개도국 개발자금의 공여목표를 GNP의 1%로 하되 이 중에서 공적개발원조(ODA)의 목표를 '70년대 중반까지 0.7%이상으로 제고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당초 1960년대의 국제개발에 대한 커다란 기대에 비해 그 성과가 여의치 않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남북 양측 국가들의 여러 가지 견해와 입장의 차이가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 노력과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한 가지 예는 국제개발 노력의 적극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 · 사회적 사정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일부 극빈 저소득국에 대한 별도의 배려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최빈국(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1]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지고 이들에 대한 보다 새로운 관심을 촉구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74년에 개최된 제6차 유엔특별총회에서는 1973년 알지에에서 개최된 비동맹그룹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이른바 신국제경제질서(NIEO: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의 수립에 관한 행동계획과 선언이 채택됨으로써 개도국들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는 국제경제구조를 개편하는데 남북 양측의 국가들이 함께 노력해나간다는 큰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 이것은 '60년대에 원조보다는 무역을'이라는 구호 아래에서 개발도상국들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있는 국제무역 환경과 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국제적 논의의 흐름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중요한 타협을 계기로 남북국가들간에는 더욱 활발한 협의가 진행됨과 동시에

---

[1] UNCTAD Document TD/B/288(1970) 및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No. 에서 규정 - (ⅰ) 1인당국민소득이 100달러이하, (ⅱ) GDP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이하, (ⅲ) 문자해득률이 20%미만인 국가로 당시 Niger, Uganda, Chad, Central Africal Republic, Laos, Upper Volta, Gambia, Benin, Rwanda, Brundi, Nepal, Bangladesh, Somalia, Afghanistan, Ethiopia, Guinea, Haiti, Lesotho, Tanzania, Sudan, Malawi, Botwana, Yemen (Democratic), Mauritania 등 25개국이었으며 현재는 49개국으로 늘어나있음.

동시에 보다 새로운 방향으로의 국제개발협력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의 새로운 구도는 과거 비교우위에 입각한 경제의 성장과 투자를 통한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던 이른바 '지구적 케인즈주의(Global Keynesianism)'적 협력으로부터 분배구조의 개선과 사회적 기초 수요를 우선적으로 확충해야한다는 이른바 '지구적 사회민주주의(Global Social Democracy)' 방식의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1] 즉, 산업개발을 통한 성장을 중시하는 전략으로부터 개도국 내에서의 분배의 개선과 인적기초수요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 중점이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UN과 UNCTAD 등에서는 개도국에게 불리한 국제교역구조의 개선을 위해 1차 상품 가격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남측국가들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해나가기에 이르렀다. 또한 세계은행과 미국 등에서는 이른바 '기초수요전략(Basic Needs Strategy)'을 마련하여 개도국 주민들의 절대빈곤의 해소[2]와 '인적기초수요(BHN; Basic Human Needs)'의 충족[3]에 초점을 맞추는 국제개발협력에 프로그램에 보다 큰 중점을 두게 되었다.

한편, 국가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상호의존성이 더욱 증가하면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관심과 협력의 영역은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한 협력의 분야는 국제적 회합 및 기구 설립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가 있다. 이는

---

[1] Ankie M. M. Hoogvelt, *The Third World in Global Development*, Macmillan, 1982, p. 95

[2] 1973년 Nairobi에서 개최된 World Bank/IMF연차총회에서 McNamara 세계은행총재가 이를 강조함.

[3] 미국은 1973년 Foreign Assistance Act(1961)를 개정하여 인적기초수요의 충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새로운 원조정책을 설정.

국제 환경의 문제는 물론 인구 및 식량, 도시와 주택, 여성, 기초 보건의료 등의 분야를 들 수 있다.[1]

한편 비동맹운동의 활성화 등 제3세계 개도국간의 결속의 강화와 자주적 문제해결에 대한 인식의 증가는 개발도상국가간의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관심을 부여하게 되었다. 1976년 콜롬보에서 개최된 제1차 비동맹정상회의에서는 이른바 '개도국간 경제협력(ECDC: Economic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1978년에 개최된 '개도국간 기술협력에 관한 유엔총회에서는 '개도국간 기술협력의 촉진과 시행을 위한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2]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개도국간의 결속이 급속하게 강화되고 있던 다른 한 쪽에서는 각각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개도국간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매우 복잡하고도 미묘한 양상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즉, 미국과 중국간의 화해가 진전되면서 동서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다른 서방 선진국들의 국력이 크게 신장되면서 종래 양극 중심의 국제적 협력과 정치적 안보의 틀이 다극(multi-polar) 체제로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다극화 또는 분화의 현상은 개발도상국들의 권역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개발의 성과가 크게 부진한 일부의 나라들은 이른바 최빈국의 부류로 분류되어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별도의 배려가 이루어지는 국가그룹이 생겨나게 되었다. 1973년과 1979년에 걸쳐 두 차례의 '석유 파동(Oil Shock)'을

---

1 Stockholm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 및 UNEP(UN Environment Programme)수립(1972), Bucharest에서 개최된 세계인구회의(World Food Conference)에서 세계인구행동계획(World Population Plan for Action) 채택(1974),로마에서 World Food Conference 개최 및 World Food Council창설(1974),'국제여성의 해 세계회의(World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Women's Year) 개최(1975), '1차보건의료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imary Health Care)'에서 알마아타선언(Alma Ata Declalation) 채택(1978).

2 *The Buenos Aires Plan of Action for Promoting and Implementing TCDC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거치면서 석유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석유수출기구, 즉 오페크(OPEC)[1]회원국들은 그들이 국제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기 시작했으며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도 여타 개도국들과는 매우 차별화 되는 독자적인 입장에 서게 되었다. 한편 '60, '70년대를 거치며 다른 보통의 나라들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이른바 '신흥공업국(NICs: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2]이라는 새로운 부류에 속하게 된 국가들이 부상하면서 개발도상권역의 나라들은 과거 일제히 한 목소리를 내던 시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1970년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국제개발협력 노력은 1960년대 초에 시작한 공업중심의 산업화를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시켜 나가고 있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매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국제개발협력을 본격화함은 물론 원조와 무역의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70년대의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흐름은 전반적으로 대외지향적인 한국의 개발 정책 및 전략에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 비중 있게 다루어지기 시작한 기초수요전략 또한 산업부문간 또는 지역 계층간의 개발 불균형 등 한국이 당면한 개발 과제를 극복해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대적인 식량증산개발, 새마을사업의 추진 등은 이와 같은 국제개발의 흐름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1 1960. 9. Baghdad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란, 이락,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베네쥬엘라 등 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설립되었음. 현재는 알제리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타르, UAE,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이 추가되어 11개 국임.

2 1979년 OECD는 *Report on the Impact of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NICs) on Production and Trade in Manufactures*를 발간함. 같은 해에 제출된 의장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NICs의 공통적인 특징은 (ⅰ)세계 공산품시장에의 급속한 침투, (ⅱ)공업부문의 고용비중 증가, (ⅲ)다른 개도국보다는 빠른 실질GDP 증가 등을 들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나라로 싱가포르, 한국, 홍콩, 타이완, 브라질, 멕시코, 스페인, 포르투갈,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등 10개국을 이 부류 속에 넣고 있음.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환경은 한국으로 하여금 '60년대 못지않게 매우 활발한 국제개발협력의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70년대를 거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진전되고 자력개발의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게 됨에 따라 무상형태의 원조에 의한 지원으로부터 점차 탈피해나가는 대신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개발차관 자금의 도입 등 유상협력사업에 보다 치중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1980년대 이후 남북문제의 지구적 과제화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30여 년에 걸친 국제개발협력의 성과는 남북의 국가들 모두 공히 그 기대치에 비해 그 성과는 모두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남측국가들의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의 전반적으로 매우 불만족스러운 성과에 실망하고 이른바 개발의 기대에 대한 환멸(disillusionment)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도국권역의 국가그룹 내에서 각 국가들이 실현한 개발의 성과는 그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견지에서 개발의 실체와 그 근본의 문제에 대한 자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북측의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개발원조 및 협력의 효과에 대하여 이른바 '원조 피로(aid fatigue)' 현상을 실감하게 되었다. 더구나 1980년대에 들어 장기화되기 시작한 세계경제의 침체는 서방 선진국들이 원조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UN이 국제개발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된 '브란트위원회(Brant Commission)'는 1980년과 1983년 두 차례의 보고서를 발표[1]하여 남북문제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납북문제에 대한 포괄적 교섭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중요 과제를 1차 산품과 무역, 개발의 문제는 물론

[1] *North-South: A Programme of Survival*(1980) 및 *Common Crisis*(1983)

국제 통화와 금융의 문제에까지 확장시키는 한편 세계 공동체적 시각에서의 개발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개도국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책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남북문제에 대한 포괄적 교섭과 협력의 문제는 국제경제의 현상과 개발의 여건이 더욱 복잡 · 다기화되기 시작하면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제개발과제 해결의 필요성과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에 대한 인식의 증가는 기존에 수립된 국제기구 및 협의체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방법과 노력으로 국제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잇슈와 과제들을 양자 또는 다자간에 보다 활발하게 협의해나가는 추세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에 들어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의 하나는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겪고 있던 서방 선진국들의 구조조정은 물론 고속 성장을 통해 현저한 발전을 이룩한 일부의 개도국들에 있어서도 경제의 안정화와 산업부문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반면에 개발이 더욱 뒤쳐지기 시작한 최빈개도국(LLDCs) 및 사하라이남(Sub-Sahara)지역의 빈곤개도국 등에 대해서는 채무의 경감 등 특별지원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는 등 국제개발의 과제는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1990년대에 들어서는 환경, 인구, 식량, 여성문제 등과 같은 다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지구적 과제(Global Issue)'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최근에 들어서는 마약, 테러 등 경제외적인 부문의 문제까지도 국제개발협력과 깊은 관련을 갖게 되는 등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1]

1980년대 종반이후 특기할만한 것은 공산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적인 약점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공산사회주의 이념과 체

---

[1] 지구적 잇슈를 논의하기 위한 1990년대의 국제적 회의로는 리우환경회의(The Rio Earth Summit,1992), 비엔나인권회의(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1993),카이로인구회의(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1994), 코펜하겐사회개발정상회의(The World Summit on Social Development, 1995), 로마세계식량정상회의(The World Food Summit, 1996) 등을 들 수 있음.

제는 급속도로 붕괴되고 동서간의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가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최근의 국제개발협력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교통과 통신의 혜택, 시장의 개방과 무역장벽의 완화, 관광산업의 발달 등에 힘입어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크게 확대되는 등 국가 · 사회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 더욱 심화되면서 이른바 '계몽된 자기이익(enlightened self-interests)'[1]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그 간격이 더욱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개발의 격차(development gap), 지식 격차(knowledge gap),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 등을 완화해나가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안정화 시책의 추진과 경제도약기반의 구축을 통해 중고소득수준의 선발개도국으로 그 지위가 향상되면서 대부분의 국제개발협력지원의 접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 시작하였고 1996년에는 세계은행의 차관공여 대상국으로부터도 졸업하고 같은 해에 OECD에 가입함으로써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199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도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개발협력을 공공부문이 필요로 하는 적지 않은 분야의 사업에 지속적으로 활용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후발개도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개발협력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여 1987년에는 대개도국 공적 자본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창설하고 1991년에는 대개도국 무상 및 기술협력사업을 전담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창립함으로써 그간 약 반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받는 개발협력'으로부터 '주는 개발협력'으로 극적인 대전환을 이루게 되었다.

---

1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OECD DAC, 1996.5.

이로써 한국은 과거 막대한 규모의 원조혜택을 받았던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괄목할만한 개발원조를 제공하게 된 최초의 나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는 유망한 신규 원조공여국(a new emerging donor)의 하나로 더욱 큰 기대를 모으게 되었다.

한국은 2000년 1월 1일자로 OECD/DAC가 분류하고 있는 '수원국 리스트(DAC List of Aid Recipients)'에 있어서 Part Ⅱ Countries and Territories in Transition(Official Aid)그룹의 'Mor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and Territories'국가군으로 분류되기 시작함에 따라 이 시점으로부터는 공적개발원조(ODA) 형태의 지원을 받는 수원국(aid recipient)의 신분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되었다.

한국은 아직까지 일부 과거에 받았던 개발협력자금의 일부를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하여 상환하고 있는 입장에 있지만 그간 꾸준하게 늘려나온 다양한 형태의 대 개도국 개발원조에 힘입어 2000년부터는 순계(net) 기준으로 1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규모의 공적개발원조를 개발도상국들에게 공여하고 있다.[1]

---

1 OECD/DAC과 세계은행에서는 우리나라가 2000-2001년간 평균108.2백만 달러의 OA(Official Aid)를 받았으며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제공한 ODA공여자금을 고려한 순공여(Net ODA/OA)규모는 2000년 198백만 달러, 2001년에는 111백만 달러로 집계하고 있음.(www1.oecd.org/dac/images/AidRecipient/ kor.gif, 2003.12.)

제2장 우리나라 수원의 시대사적 경과

1. 우리나라 수원의 시대적 분류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역사의 흐름은 여럿의 관점과 시각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우리들이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온 현대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의 경과를 시대사적 맥락으로 한번쯤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여겨진다.

우리나라 수원의 시대사적인 흐름은 몇 개의 문헌을 통해서 분류해볼 수 있다. '60년대 초에 이루어진 한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개발연대 이전의 원조를 다섯의 시기로 비교적 세부적으로 분류해놓고 있다.[1]

이 분류에 따르면 우선 해방 후 미군정의 통치 하에 있었던 1945년부터 1948년의 사이의 시기를 '일본경제체제로부터 이탈된 한국시민에 대한 구제사업기'로 구분하고 1961년 이후부터를 '한국경제자립을 위한 삭감을 전제로 한 원조기'로 이름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원의 시대적 분류(사례1)>

(1) 일본경제체제로부터 이탈된 한국 시민에 대한 구제사업기(1945 ~ 1948)
(2) 독립된 한국에 대한 경제순환촉진을 위한 경제원조기(1948 ~ 1950)
(3)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한국경제계에 대한 구제 및 복구 사업기(1950 ~ 1953)
(4) 한국경제개발을 위한 원조기(1954 ~ 1960)
(5) 한국경제자립을 위한 삭감을 전제로 한 원조기(1961~)

경제기획원은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수원과 관련한 시대적인 흐름을 외자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경제협력의 변천이라는 맥락에

---

1 서남원, *한국에 대한 외국 원조의 관리*, 아세아연구, Vol. 6 No. 2, 고려대학 아세아문제연구소, 1963, p. 31

서 크게 세 개의 시기로 분류하고 있다.[1] 그 첫 번째의 시기는 원조의 시대이며 그 두 번째가 원조가 차관으로 대체되어 가는 시대, 그리고 그 다음의 시기가 원조의 종식과 더불어 차관 및 외국인투자가 대종을 점하는 시대 등의 셋으로 구분 짓고 있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을 초기의 원조시대를 벗어나는 전환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경제기획원은 해방 후 1961년까지의 시기를 본격적인 원조 수원의 시대로 가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분류에서는 맨 마지막의 시기인 원조의 종식과 더불어 차관 및 외국인투자가 대종을 점하는 시대를 언제부터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 정확하게 나타나있지 않다. 이는 공공개발차관 및 상업차관의 도입과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 이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 이 시기를 가늠해본다면 우리나라가 저소득 개도국에게 지원되는 국제개발협회(IDA)의 연성차관 공여대상국으로부터 졸업을 하면서 미국 국제개발처(AID)의 주 원조공여 대상으로부터도 제외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의 청구권자금 도입이 종료된 1975년경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재무부와 한국산업은행은 우리 수원의 시대적 구분을 미국원조정책의 변경 추이를 고려하여 크게 세 개의 시기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의 시기는 해방 후로부터 1953년 휴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으로 미국이 주로 상호방위원조법(MDA: Mutual Defence and Assistance Act)에 입각하여 긴급 전시구호적인 원조를 공여하던 시기로 이를 긴급구호원조기로 구분하고 있다. 그 다음의 시기는 1953년 이후부터 1961년까지의 기간으로 상호안전보장법(MSA: Mutual Security Act)에 의해 우리의 경제안정과 방위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그 중점이 두어졌던 시기로 이를 본격적인 원조기로 보고 있다. 이 시기에는 미국으로부터 우리의 경제안정과 재건, 정부재정

---

[1] *개발연대의 경제정책(경제기획원20년사)*, 경제기획원, 1982. 12., p. 39

능력의 확충 등을 위한 계획 및 비계획 원조가 커다란 규모로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1961년 대외원조정책을 전환하여 새로운 대외원조법(FAA: Foreign Assistance Act)에 의한 경제지원 중심의 원조를 실시하기 시작한 1962년 이후를 또 다른 하나의 시기로 구분하여 이를 차관으로의 전환기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원의 시대적 분류(사례2)>

구 분	긴급구호원조기 (1945~53)	본격적인 원조기 (1953~61)	차관전환기 (1962~)
기본법령	상호방위원조법(MDA)	상호안전보장법(MSA)	대외원조법(FAA)
성 격	긴급구호원조	경제안정과 방위력강화	차관중심의 경제원조
원조담당	GARIOA(1945~49) ECA(1949~50) SEC(1951~53)	FOA(1953~1955) ICA(1955~61) PL 480(1956~)	AID(1961~)
지원형태	구호물자공여,기술원조,전시긴급원조 등	방위지원원조(계획원조 및 비계획원조), 잉여농산물원조 등	개발차관,개발증여, 잉여농산물원조 등

자료: 한국외자도입 30년사, 재무부 및 한국산업은행, 1993. 12., p. 73

이와 같은 몇 가지의 시대적 구분은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관점에서 현재에 이르는 보다 긴 시대적 경과와 그 흐름을 살펴보면 우리 수원의 연대적 구분은 크게 다섯의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첫 번째의 시대적 구분은 미국에 의한 군정기간동안에 이루어진 원조라고 할 수 있다. 비록 3년의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이 시기의 원조는 과도기적으로 남한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은 미군정청(USAMGIK: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의 권한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

루어진 원조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48년 한국정부가 수립된 이후 195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원조는 한국전쟁이 종료되기까지 이루어졌던 전시 긴급구호적 원조와 그 이후 '50년대 말까지 계속된 전재복구(戰災復舊) 및 경제재건을 위한 원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원조는 주로 미국의 전략적인 상호방위지원 체제 하에서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전재복구를 위해 실시된 UN의 원조가 1960년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하나의 시기로 묶어서 살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수원의 시대적 분류>

구 분	기 간	적 요
(1) 미군정에 의한 원조	1945~1948	미국의 독자적인 미군점령지역에 대한 원조(GARIOA) 접수
(2) 전후복구 및 경제재건기의 원조	1949~1960	UN의 전후복구와 미국의 상호안전보장법(MSA: Mutual Security Act)에 의한 상호방위 및 경제안정 중심의 무상원조 접수
(3) 개발연대 전기의 개발원조	1961~1975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위한 원조 미 대외원조법(FAA:Foreign Assistance Act)에 의한 AID원조 및 독일, 일본 등 여타 원조국과 ADB, IDA 등 다자기구로부터의 다양한 원조 접수
(4) 개발년대 후기의 개발원조	1976~1990	1975 우리의 소득수준이 IDA의 연성차관 지원기준(520달러)을 넘어서서 IDA졸업 1976 미국 AID로부터의 무상원조 졸업 국제개발기구 등으로부터 대규모 개발차관, 구조조정차관 등 도입
(5) 개발원조 공여자로의 전환	1991 ~	1991 UNDP집행이사회로부터 기술원조 순공여국(NCC)으로 전환 한국국제협력단(KOICA)설립

원조의 시대적 구분에 있어서 뚜렷한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은 1960년대 이전의 시기와 그 이후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원조의 성격 면에서 1960년대 이전의 원조가 긴급구호와 시급한 경제재건 및 안정 등을 위한 것이었던데 비해 그 이후의 원조는 경제의 안정과 함께 중장기적인 투자와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계획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원조 공여의 주체도 미국과 UN 일변도로부터 탈피하여 여러 다른 양자, 다자적 기관으로 크게 다변화되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이전까지의 수원이 대부분 공여자 측의 판단과 재량에 입각한 것이었다면 그 이후의 수원은 대부분이 수원자인 우리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능동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도 크게 구분되는 점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부터 1990년에 이르는 약 30년의 기간동안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이른바 개발연대라고 지칭되는 시기이다. 이 기간은 1차로부터 7차에 이르는 5개년 단위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1]하여 정부의 강력한 주도에 의한 성장 · 개발전략을 펴나간 시기이기 때문이다. 1992년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신경제계획'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정책 메카니즘이 도입되고 1994년에는 개발연대의 경제정책을 주도해왔다고 할 수 있는 경제기획원(EPB: Economic Planning Board)이 해체됨에 따라 이른바 개발연대라고 불리는 한 시대의 막이 내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의 시기는 크게는 하나의 시대로 볼 수도 있지만 이 기간 중의 중간시점쯤에서 일어난 몇 가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전 · 후반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개발연대 전후기의 기간동안 모두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유사하다고 하겠으나 개발연대 후기로

---

1 5개년개발계획은 1962년의 1차 계획을 시작으로 1992-'97간의 7차 계획까지가 수립되어 시행되었으나 1982년부터 시작된 제5차 계획부터는 유도계획(Indicative Plan)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였고 시장경제 하에서 정부가 해야 할 기능을 보다 정확하게 설정하고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음.(*개발연대의 경제정책*, 경제기획원, 1982. 12. p. 246)

구분되는 1975년 이후에는 무상의 공적개발원조 성격의 사업이 대부분 종료되고 공공개발차관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개발원조의 수원은 1996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후에도 계속되었지만 그 규모가 1990년대에 들어선 이후 점차 감소하여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도 크게 감소되었다. 한편 1976년 피지에 대한 무상자금 공여[1]를 시작으로 다양한 방식과 유형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원조공여사업이 1987년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창설, 1991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1992년에는 기술협력분야에서의 원조순공여국(NCC: Net Contributor Country)[2]의 지위로 전환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1991년부터 시기는 개발연대 이후의 새로운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수원은 그 시대적 구분을 크게 다섯의 시기로 분류할 수 있게 되었다.

---

1 *개발연대의 경제정책*, 경제기획원, 1982. 12., p. 511

2 1991년의 UNDP 집행이사회에서 1992년부터 한국이 기술원조 순공여국으로 결정됨(과학기술연감, 과학기술처, 1992, p. 162)

2. 우리나라 수원의 시대적 경과

2.1. 미군정시대의 수원(1945 ~ 1948)

우리나라의 수원은 해방 후 수립된 미군에 의한 군사정부에 의한 원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 남한 지역에서의 통치권을 행사한 미군정청(USMAGIK: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은 카이로 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in due course)' 한국을 독립시키는 과정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로써 이른바 점령지역의 경제·사회적 안정의 유지라는 긴급한 필요에 의해 자발적인 원조를 제공하였다.[1]

미군정청을 통해서 제공된 원조는 '점령지역 구호를 위한 정부지출(GARIOA: Government Appropriations for Relief in Occupied Area)'이라는 형태의 구호 원조와 '점령지역의 경제복구(EROA: Economic Rehabilitation in Occupied Area)'라는 형태의 경제부흥원조가 주를 이루었으며 군정 후기에 제공된 대외청산위원회(OFLC: Office of the Foreign Liquidation Commissioner)차관 등을 들 수 있다.

GARIOA원조는 긴급구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원조의 효시였다고 할 수 있다.[2] GARIOA원조는 점령지역내의 식량부족이나 질병구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구호물자 공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써, 식료품, 피복, 의약품, 연료, 석유류 등이 그 주된 지원 품목이었다. 반면에 EROA원조는 점령지역에 대한 긴급한 경제복구용 원조로써, 철광석, 중유, 면화, 건축자재, 화학약품 등의 원자재류가 그 주된 지원 품목이었다.[3]

1945-48년간 GARIOA 및 EROA를 통해 제공된 원조규모는 총 409.4백만 달러로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양곡을 위주

---

1 이대근, *해방후-1950년대의 경제*, 삼성경제연구소, 2002. 5., p. 68

2 구용서, *ICA원조와 한국경제*, 지방행정, Vol.6, No. 8, 1957, p. 50

3 이대근, op. cit., p. 69

로 한 식료품으로 약 170백만 달러가 제공되었으며 원조공여가 집중된 1947년의 경우 국내 총 소비 양곡의 약 44%가 도입 양곡에 의해 충당되었다. 한국정부가 수립된 이후 인 1949년도에 이루어진 92.7백만 달러 규모의 GARIOA원조를 포함하면 GARIOA에 의한 총 원조 규모는 502.1백만 달러에 이르게 된다.

OFLC차관은 1947. 2. 해외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24.9백만 달러 상당의 잉여시설과 해운기자재, 의복,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의 물자를 장기저리차관(연리 2.5%, 20년 분할 상환) 형태로 제공된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도입한 최초의 공공차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차관은 당시에 한국 정부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군정청이 일단 수령하고 나중에 이를 한국정부에 이관하는 조건으로 제공되었다.

<미군정기 품목별 미국원조 도입실적>

(단위: 백만 달러)

	GARIOA-EROA					OFLC	합 계
	1945	1946	1947	1948	소 계		
식료품	3.6	21.6	77.6	67.7	170.5(41.6)	0.1	170.6(39.3)
농업용품	-	7.0	31.4	38.6	77.0(18.8)	-	77.0(17.7)
피복류	-	1.7	25.8	14.1	41.6(10.2)	2.6	44.2(10.2)
고체연료	1.3	7.7	9.0	15.3	33.3(8.1)	-	33.3(7.7)
석유류	-	4.5	5.2	10.2	19.9(4.9)	0.4	20.3(4.7)
철도용품	-	1.6	10.5	0.8	13.0(3.2)	0.2	13.2(3.0)
통신품목	-	0.3	2.2	4.5	7.0(1.7)	0.9	7.9(1.8)
건축용품	-	0.4	2.9	3.3	6.6(1.6)	1.1	7.7(1.8)
의약품	-	0.1	2.1	3.3	5.5(1.4)	2.1	7.6(1.8)
자동차부품	-	2.3	0.6	2.6	5.4(1.3)	3.1	8.5(2.0)
비가공재료	-	0.1	3.8	8.1	12.0(2.9)	0.1	12.1(2.8)
기타	-	2.2	4.3	11.1	17.6(4.3)	14.3	31.9(7.4)
합 계	4.9	49.5	175.4	179.6	409.4(100)	24.9	434.3(100)

주, ( )내 숫자는 구성비임(%)

자료: 홍성유, 한국경제와 미국원조, 박영사, 1961, p. 49

그러나 이 차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한국정부가 수립된 이후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한국 내 건물 및 토지를 미국 측에 제공하는 것으로 상계, 처리되었다.[1] 이 밖에도 1946. 6. 미군이 철수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잉여물자 약 116백만 달러 상당을 무상으로 우리나라에 제공한 것도 미국이 제공한 원조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 있다.[2] 이를 포함시키는 경우 1945년부터 1948년 중에 이르는 기간동안 미군정청이 제공한 원조는 모두 550.3백만 달러에 달하게 된다.

한편 이 기간 중에는 유엔의 구호기구인 UNRRA(United Nations Relief and Reconstruction Agency)에 의한 긴급구호 및 재건 지원을 위한 기관의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그 구체적 지원 내역이나 규모는 파악하기가 어렵다.[3]

2.2. 전후복구 및 경제재건기의 수원(1949~1960)

2.2.1. 개관

건국 이후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원조는 미국이 자국의 대외정책과 한반도에서의 안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안보협력 차원의 긴급구호 및 군사·경제 원조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본격적인 원조를 접수하게 된 것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의 참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위한 경제재건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me), 이른바 '마샬 플랜(Marshall Plan)'이라는 이니셔티브를 1948년에 취한 이후 1949년에 제정한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

1 *식산조사월보*, 한국식산은행 조사부, 제8권 제1호, 1953, p. 14

2 이대근, op. cit., p. 70

3 서남원, *한국에 대한 외국원조의 관리*, 아세아연구, Vol. 6 No. 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3, p. 31

Act)에 근거하여 실시되기 시작한 경제협력처(ECA: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에 의한 경제원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CA에 의한 원조 프로그램이 마련된 뒤 불과 1년여 만에 한국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 일변도의 양자적 원조방식은 유엔의 다자적 원조방식으로 전환되어 전재민(戰災民) 구호를 위한 CRIK(Civil Relief in Korea)에 의한 원조와 전재 복구와 재건을 위한 UNKRA(United Nations Korea Reconstruction Agency)에 의한 긴급원조가 실시되게 되었다.

한국전쟁 휴전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첨예화된 냉전의 최첨단 보루로써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과 이와 관련된 국제 안보적인 측면의 요소가 크게 중시되면서 종전의 ECA에 의한 원조를 대신하게 되었다. 미국이 1951년에 제정한 상호안전보장법(MSA: Mutual Security Act)에 입각하여 실시된 안보중시의 전략적인 원조는 새로운 원조실시 기관인 해외사업처(FOA: 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와 ICA(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에 의해 실시되게 되었다.

한편 미국이 자국의 잉여농산물문제와 관련하여 마련한 '농업무역개발원조법(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ssistance Act of 1954 - Public Law 480)'에 따라 1955년 한미 양국 간에 잉여 농산물 도입협정이 처음으로 체결되고 이에 따라 유상원조자금에 의한 양곡 등 미국의 잉여농산물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 중에 제공된 원조의 규모는 2,521백만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계획되었지만 ECA로 이관되어 1949년에 제공된 GARIOA원조 92.7백만 달러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시기의 원조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ECA 및 ICA로부터 제공된 것으로써 그 금액은 1,809백만 달러에 이른다. PL480을 통해 제공받은 이 기간 중의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 금액 158백만 달러를 고려한다면 그 규모는 1,967백만 달러로 커지게 된다. 한편 이 기간 중에 CRIK 및 UNKRA를 통해 제공된 UN의 다자적 지원은 579백만 달러에 달했다.

이 기간 중에 제공된 원조는 미국으로부터의 양자적 채널과 UN의 다자적 채널로부터 원조를 제공받았으나 UN으로부터 제공된 원조자금의 대부분이 미국으로부터 지원된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거의 대부분의 공여가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 1949~1960간의 수원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연도	미 국				U N			합 계
	ECA	ICA	PL480	소 계	CRIK	UNKRA	소 계	
1949	116.5[1]	-	-	116.5	-	-	-	116.5
1950	49.3	-	-	49.3	9.4	-	9.4	58.7
1951	32.0	-	-	32.0	74.4	0.1	74.5	106.5
1952	3.8	-	-	3.8	155.6	2.0	157.6	161.4
1953	0.2	5.6	-	5.8	158.8	29.6	188.4	194.2
1954	-	82.4	-	82.4	50.2	21.3	71.5	153.9
1955	-	205.8	-	205.8	8.7	22.2	30.9	236.7
1956	-	271.0	33.0	304.0	0.3	22.4	22.7	326.7
1957	-	323.3	45.5	368.8	-	14.1	14.1	382.9
1958	-	285.6	47.9	333.5	-	7.7	7.7	341.2
1959	-	208.3	11.4	219.7	-	2.5	2.5	222.2
1960	-	225.2	19.9	245.1	-	0.2	0.2	245.3
합 계	201.8	1,607.2	157.7	1,966.7	457.4	122.1	579.5	2,546.2

주 [1] GARIOA로부터 이관된 92.7백만 달러의 원조 포함
자료: 서남원 et. el.

2.2.2. 경제 재건을 위한 ECA원조

한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원조는 1948. 12. 한미 양국 간에 체결된 '한·미 원조협정'[1]에 토대하여 1949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전문 12개조로 되어있는 이 원조협정은 미국이 1948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유럽부흥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이

[1] *Agreement on Ai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48. 12. 10. 서울에서 서명됨

루어 진 것으로써 원조사업의 시행 역시 이 원조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설된 경제협력처(ECA)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 원조협정에 의해 미국측은 1949.1. 주한ECA사절단(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Mission in Korea)을 상주토록 하여 GARIOA에 의해 실시되던 원조사업을 인수하는 한편 물자의 지원과 전력난의 해소, 기술지원 등을 위한 원조를 ECA원조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한미 양국 정부는 ECA에 의한 원조의 실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경제협조처간의 협정을 체결하였다.[1]

ECA원조는 한국의 국방력 확보 및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과거 GARIOA에 의한 소비재 중심의 긴급구호적 성격의 지원과는 달리 소비재뿐만이 아니라 기계시설이나 원자재 등 다양한 물자로 이루어졌다. 한편 미국 경제협력처와의 협정은 ECA원조가 한국의 경제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조 물자의 도입 · 관리 · 사용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는 한 편 한국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의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1949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후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1952년 이후 중단된 ECA에 의한 원조 109백만 달러로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내용이 식량과 비료를 주로 하는 소비재와 자동차 운송용품 및 산업원자재로 구성되는 투자재가 각각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건국 후 극심한 경제 불안과 물자난에 봉착해 있던 상황에서 매우 유용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대부분이 현물로 제공된 ECA의 원조 물자 및 기자재는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었으며 그 판매 자금은 한 · 미 원조협정상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한국은행의 '대충자금계정(Counterpart-Fund Account)에

---

[1]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1949. 9. 19. 서울에서 서명됨

예치된 뒤 한·미 양측의 협의를 통해 그 사용처를 결정하였다.

한편 ECA 원조 공여와 관련하여 한 · 미 원조협정에 규정된 한국경제부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는 한국정부는 이를 미국의 ECA사절단과 협의하여 1949. 4. 국무총리의 대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제1차 5개년 생산계획구상'으로 구체화시키기도 하였다.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자립과 부흥이라는 목표 하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ECA원조는 이 프로그램이 착수된 지 불과 1년 뒤인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중단되게 되었으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연합군 파견 및 다자적인 방식의 전시구호 및 전화복구를 위한 원조의 공여로 전환되게 되었다.

2.2.3. 전재민 지원 및 전화 복구를 위한 UN의 원조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미국의 요청에 의해 긴급 소집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는 1950. 7. 7까지 세 차례에 걸친 결의를 실시하였으며 이 결의를 통해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한반도에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군대의 파견은 물론 기타의 원조를 제공할 것을 의결 및 권고하였다.[1]

이와 같은 맥락에서 UN은 1950. 10. 그의 산하에 통일한국의 건설과 민생구호 등을 목적으로 한 기구인 UNCURK(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Re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를 설치하여 전쟁 중의 긴급구호 및 재건 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주요 UN회원국들과 여러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긴급구호 원조인 CRIK(Civil Relief in Korea)에 의한 지원이 실시되었다. CRIK원조에는 미국을 비롯한 참전국 등 36개 국가와 세계보건구, 유엔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 적십자연맹, 세계교회봉사단 등 9

---

[1]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f June 25, 1950(S/1501), June 27, 1950(S/1511), July 7, 1950(S/1588)*

개 국제기구가 참여하였다.

CRIK원조는 UN회원국과 국제기구가 출연하는 자금으로 공여되는 SUN(Sundry United Nations)원조와 미 육군성의 자금지원으로 이루어 지는 SKO(Supply for Korean Organization)원조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CRIK스킴에 의해 실시되는 원조는 주한유엔 민사처(UNCACK: 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in Korea)를 통해 제공되었는데 1951년부터 1956년까지 공여된 규모는 모두 457.4 백만 불에 달했으며 이중 대종의 자금은 SKO로부터 지원된 것이었다.

CRIK에 의한 원조는 모두 긴급구호지원을 위한 물품제공이었으며 식료품과 의류의 비중이 각각 40.3%, 24.4%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타 의약품, 농사용품, 건축자재 등 다양한 품목의 구호물자가 공여되었다.[1]

UN에 의한 전시구호와 전화복구 및 재건 등을 위한 지원은 1950. 10. 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의 설치와 함께 북한지역에는 유엔민사단(U. N. Civil Affairs Team)을 파견하고, 남한에서는 1950. 12. 기존의 유엔보건후생국(U. N. Public Health and Department)을 주한유엔민사처(UNCACK)로 개편하여 실시하였다.

유엔은 한국전쟁 초기 전쟁이 조기에 종료될 것에 대비하여 그의 산하에 유엔한국재건단(UNKRA: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을 설치하고[2] 전후의 전화복구 및 경제재건을 준비하고자 했으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쟁이 종료되기까지는 UNCACK를 통한 긴급민간 구호원조에 치중하였다.

파괴된 산업시설을 복구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UNKRA 원조는 당초 2억 5천만 달러의 규모로 한국경제의 재건사업을 지원하기로 되어있었으나 본격적인 복구 및 재건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종전이 이루어진 1953년부터였으며 1954. 5.에는 한국정부와 유엔간

---

[1] 이대근, op. cit. p. 215 및 농업은행 농업연감 1960, p. Ⅰ-96

[2] UNKRA는 1950. 12. 1. 개최된 제314차 UN총회의 의결(Resolution 410/Ⅴ)에 의해 설치되었음.

에 '한국경제원조계획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재건단과의 협약'이 체결[1]되어 이 협약에 근거한 사업이 실시되었다.

UN은 이에 앞서 산하의 각 기구로 하여금 한국농업 5개년계획(FAO), 한국보건 5개년계획(WHO), 한국교육 5개년계획(UNESCO) 등을 수립케 하는 한편, 미국의 네이산협회(Nathan Associations)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한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에 입각한 장기부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였다. 1952년 중반 한국전쟁의 종료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네이산협회의 한국경제에 조사 및 재건계획의 수립은 1953/54회계연도로부터 1958/59년간의 5개년에 걸치는 것이었다. 네이산협회는 1952. 12. '한국경제재건계획'이라는 제목의 예비보고서를 마련되었으며 1954. 2.에는 최종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여 한국정부와 UNKRA간의 원조사업 실시를 위한 협약체결 및 전화복구사업 추진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UNKRA를 통한 원조는 CRIK를 통한 긴급구호원조에 비해 유엔 회원국들의 호응이 부족한데다가 양 원조 스킴에 대한 최대의 자금 제공국이었던 미국이 휴전과 함께 ICA 및 FOA(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에 의한 양자적 원조에 중점을 두게 됨에 따라 당초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규모의 지원이 제공되었으나 전후 복구 및 경제기반의 재건에 큰 도움이 되었다.

UNKRA를 통한 원조는 주로 장기부흥 즉 전력 · 공업 · 광업 · 수리 · 산림 · 수산 · 교육 · 주택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전재복구 및 재건사업에 치중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하여 생산재와 소비재의 도입 비중이 7대 3 정도의 비중이 유지되었다. UNKRA에 의한 지원에 있어서 특기할만한 것은 중소기업부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1953. 9. UNKRA는 한국정부와 2개의

---

[1] *Agreement for a Program of Economic Assistance to Korea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1954. 5. 31. 서울에서 서명 및 발효(조약 제1149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협정, 곧 '민간 중소기업 융자기금에 관한 협정'과 민간 중소광업 융자기금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신설, 시설복구, 시설개체, 원료구입 등을 위한 목적에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1]

UNKRA를 통한 원조는 1951~1952간 전재민 구호를 위한 목적으로 2,091천불이 제공되었으며 1960까지 총 122백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이 제공되었다.

< 한국재건단(UNKRA)의 지원분야별 원조현황 >

(단위: 백만 달러)

지원분야	'51~2	'52~3	'53~4	'54~5	'55~6	'56~7	'57~9[2]	합계(비중,%)
농림수산	0.6	2.2	2.4	2.1	0.5	0.4	-	8.2(6.7)
광업	-	0.1	0.9	1.9	2.8	4.5	2.5	12.7(1 0.5)
공업	-	0.4	4.9	2.5	12.0	5.9	1.2	26.9(22.1)
운수통신전력	-	2.2	4.0	2.6	0.2	-	-	9.0(7.3)
교육	0.5	2.5	3.6	1.7	0.9	0.3	0.1	9.6(7.9)
주택보건의료	0.2	0.6	2.7	2.7	1.2	1.3	2.7	11.4(9.4)
민수물자[1]	-	19.5	1.2	7.0	3.8	1.3	3.5	36.3(29.7)
기술원조 등	0.8	2.1	1.6	1.7	1.0	0.4	0.2	7.8(6.4)
합 계	2.1	29.6	21.3	22.2	22.4	14.1	10.2	121.9(100)

주 [1] 곡물, 비료, 생고무, 타이어, 종이, 원모, 철강재, 건축자재 등
[2] 1960년으로 이월된 224천 달러 포함
자료: 이대근, op. cit., p. 323~325

2.2.4. 한국전쟁 후 재건기의 원조

한국전쟁 휴전 후 한국에 대한 원조에 대해서는 전쟁의 기간동안 긴급구호와 복구 지원의 양대 주축이 되었던 UN과 미국이 이미 휴전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시기부터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한국경제

---

[1] 이대근, op. cit., p. 323. 융자기금의 규모는 각각 150만 달러(중소기업 융자기금)와 20만 달러(중소광업 융자기금)였음.

의 복구와 안정, 장기부흥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UN은 CRIK와 UNKRA를 통해 전재민 구호를 위한 긴급원조를 실시 해나가는 한편, 전문용역기관(Nathan Associations)을 활용하여 전후 한국의 경제재건과 부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1952. 12.에 제출된 이 용역기관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경제자립에 필요한 기본자원의 결핍, 무역수지균형의 유지 곤란, 인구팽창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행정 및 경제기술 부족, 악성 인플레 등을 지적하고 최단시간 내에 전쟁피해를 복구하여 자립수준의 경제기반을 조성[1]하는 것을 목표로 1953/54 회계연도부터 1958/59 회계연도에 이르는 5개년 동안의 경제재건계획을 수립하였다.[1]

이 계획에 따르면 계획기간 중에 국민총생산의 규모를 40% 증가시키는 한편, 전력 공급을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60만 호에 달하는 주택을 재건하는 등의 목표가 제시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총 19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실시해야하는 것으로 계획함과 동시에 국내 자원으로는 부족한 투자 및 수입수요 충당을 위한 원조의 필요 규모를 12억 4천만 달러로 추계하기도 하였다.[2]

한미 양국은 1952. 5.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이른바 마이어(Mayer)협정[3]이라고 알려진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군 통일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근거하여 한미 양국간에는

---

1 경제자립의 수준을 6.25전쟁 이전인 1949~50년 경제수준으로 보았음. 한국은 6.25전쟁을 통해 605천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354천명의 실종자 등 총 1,998천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으며 산업 및 재산의 피해액은 4,106억 환(圜)으로 당시의 공정환율(1달러=60환)로 환산하는 경우 68.4억 달러, 자유시장환율(1달러=180환)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피해액은 약 23억 달러에 이르는 것이었으며 이는 1953년의 국민총소득 규모인 2,450억 환의 1.7배에 달하는 막대한 것이었음(이대근, op. cit., p. 255).

2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1996, p. 152

3 *Agreement on Economic Coordin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fied Command*. 1952. 5. 24. 부산에서 서명.

합동경제위원회(CEB: Combined Economic Board)가 설치되는 등 미국이 제공하는 원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수립되었다.

한편 미국은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2년 한국의 통화관리와 금융안정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1952. 6. Arthuri Bloomfield가 실시한 한국의 금융에 대한 조사보고를 토대로 한국의 경제안정방안을 강구한 바 있었다. 미국은 또한 전쟁의 종료가 임박해 있던 1954. 4.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경제고문인 타스카(Henry J. Tasca)씨를 특사로 파견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실시케 하고 이른바 타스카 보고서(Tasca Report)를 작성 · 제출케 함으로써 휴전협정이후 미국의 한국경제부흥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대한 원조지침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타스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에 대한 원조의 성격과 공여방식을 종전의 구호원조방식과 구별되는 새로운 개념의 방위원조(Defence Assistance)와 경제재건계획 원조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동 원조의 공여와 관련하여 각종의 재정금융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보고서는 1954년 이후의 3년 간 한국경제의 부흥을 위해서는 883백만 달러의 원조가 필요하며 이를 집행하기 위한 상설원조기관의 설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단계적인 원조실시 전략이 추진되어야함을 제시하고 그 1단계 과제로는 소비물자 자급체제를 확립하고 2단계에 있어서는 일반 문화생활과 공공서비스를 증진하며 마지막으로 제3단계에 있어서는 산업합리화와 함께 인플레를 억제하는 등의 3단계 부흥계획 실시 전략을 제시하기도 하였다.[1]

한국전쟁 기간 중의 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한국전쟁의 발발등과 함께 더욱 격화되기 시작한 미·소간의 냉전으로 말미암아 그 성격과 내용이 크게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원조중심

---

1 *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1996, p. 140

의 ECA원조로부터 상호안전보장법(MSA: Mutual Security Act)에 근거한 상호 안보 및 방위를 중시하는 성격의 원조[1]로 전환되었으며 주로 상호안전보장청(MSA: Mutual Security Agency)에 의해 제공되는 CRIK원조를 통해 실시되었다. 전전과 비교해서 본다면 전전의 ECA에 의한 경제재건 중심의 원조로부터 방위지원과 경제재건지원을 병행하는 보다 전략적인 형태의 원조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2]

1953년 기존의 ECA를 대신해서 만들어진 미국의 해외사업처(FOA: 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는 이러한 상호안보와 방위를 중시하는 원조를 실시하는 기관이었다.

미국은 휴전직후 미국의 새로운 원조체제인 FOA에 의한 200백만 달러 규모의 원조집행을 승인하고 뒤이어 1952. 5. 체결된 경제조정협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합동경제위원회(CEB)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원조자금의 활용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면밀한 협의를 통해 1953. 10. 미국의 전반적인 대한 원조사업계획이 포함된 한국의 종합부흥계획이 마련되었으며 뒤이어 1953. 12.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약정의 일환으로 한미 양국간에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이 체결[3]되었다.

'백 · 우드협약' 또는 CEB협약'이라고도 알려진 이 협약은 전후 한국경제의 재건과 부흥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협약에 따라 UNKRA에 의해 추

---

1 미국의 상호안전보장법(MSA)에 의한 원조는 군사원조, 방위지원(DS: Defense Support), 개발차관기금(DLF), 기술원조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이대근, op. cit., p. 327).

2 한공택, *전후 한국의 세계자본주의체제 편입과 미국의 대외원조*, 부산정치학회보, Vol. 8 No.1, 21세기정치학회, 1998, p. 218

3 *Combined Economic Board Agreement for a Program of Economic Reconstruction and Financial Stabiliz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53. 12. 14. 서울에서 서명 및 발효(조약 제1160호). 이 협약은 한국의 백두진 총리와 유엔군측 대표인 미국의 우드(C. T. Wood)특사간에 서명되었던 때문에 이른바 '백·우드 협약'이라고 알려져 있음.

진 되던 전화 복구 및 재건 사업과 CRIK원조사업, FOA에 의해 지원되던 원조사업 등이 모두 경제합동위원회(CEB)의 관리체제로 일원화되어 보다 체계적인 원조사업의 실시가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UNKRA에 의해 수립된 한국경제재건 5개년계획의 맥락에서 1953. 10.에 마련된 종합부흥계획의 실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보다 종합적인 시야에서 경제재건과 부흥을 도모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그 계획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한미간의 적지 않은 논란이 있기도 했던 종합부흥계획은 각종 원조자금을 중심으로 628백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투자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을 보면 투자 재원의 조달에 있어서 미국 FOA제공자금 223백만 달러, CRIK자금 58백만 달러, UNKRA자금 117백만 달러, 대충자금으로 조성되는 한국외환(KFX: Korea Foreign Exchange)자금 112백만 달러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 투자 자금은 경제재건을 위한 시설투자에 31.3%, 국민생활물자 공급에 38.8%, 국방지원에 21.0%, 구호물자 충당에 8.8%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1]

투자 계획의 내용을 보면 투자계획 수립과정에서 한미 양국간에 이견이 노출되었던 경제재건과 안정의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미국 측이 보다 중시했던 경제안정 쪽에 다소 큰 비중이 두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수립 및 실시를 통해 한국은 비로소 경제의 안정과 재건을 동시에 도모해나갈 수 있는 비교적 계획적인 투자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2.5. FOA 및 ICA에 의한 미국의 원조

전쟁 중 긴급구호와 방위지원이라는 안보중심의 원조로부터 경제부흥과 방위지원이란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새로운 형태의 원조가 FOA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타스카 보고 및 종합부흥계획에 토대하여 이루어진 FOA원조는

---

[1] 이대근, op. cit., p. 284~285

경제안정과 재건을 위한 목적의 시설재와 소비재, 원자재 등을 공여하였으며 원조의 분야를 계획 원조(Project Assistance)와 비계획 원조(Non-Project Assistance)로 구분하여 제공하였다. 여기에서 계획원조라 함은 장기적인 경제기반의 구축을 위해 제공되는 산업시설확충을 위한 시설재 공급 중심의 지원방식을 말하며 비계획 원조라 함은 당장의 경제적 안정에 필요한 소비재와 원자재 등을 공여하는 방식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조의 방식은 FOA가 ICA로 개편된 이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1953년부터 공여가 시작된 FOA원조는 당초 백·우드 협약 및 종합부흥계획에 반영된 223백만 달러보다 큰 481백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1955년 FOA가 ICA로 개편됨에 따라 지원계획규모의 약 43%에 불과한 206백만 불의 공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관련 지원사업의 추진을 ICA로 이관하게 되었다.

미국의 대외원조 조직이 ICA로 개편된 이후 미국은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은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휴전후 미국의 원조라면 바로 이 ICA원조를 의미했다. ICA는 1955년부터 1960년까지 매년 2억 달러가 넘는 큰 규모의 계획·비계획 원조를 제공하였으며, 1958년 Mutual Security Act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만들어진 개발차관기금(DLF: Development Loan Fund)을 통해서도 유상차관 형태의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1953년에 설치된 FOA가 1955년 국제협력처(IC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로 개편된 이후 1961년 이 기구가 다시 국제개발처(AID: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로 개편되기까지 미국은 이 원조 기구를 통해 한국에 대해 1953년부터 1961년까지 총 1,742백만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였다.

휴전 후 1961년까지 FOA 및 ICA를 통해 제공된 원조는 당초의 논란이 무색하리만큼 계획 원조에 비해 비계획 원조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결과를 가져왔다. 초기 약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에 있던 비계획 원조의 비중은 1950년대 말에는 약 80% 이상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 FAO 및 ICA원조의 형태별 구분>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합 계
계획원조[1]	-	10.2	97.5	85.4	92.7	63.9	43.6	50.5	36.1	479.9
(비중,%)	(0.0)	(12.4)	(47.4)	(31.5)	(28.7)	(24.1)	(20.9)	(22.4)	(23.4)	(27.6)
비계획원조	5.6	72.3	108.3	185.6	230.6	201.7	164.7	174.7	118.2	1,261.7
(비중,%)	(100)	(87.6)	(52.6)	(68.5)	(71.3)	(75.9)	(79.1)	(77.6)	(76.6)	(72.4)
합 계	5.6	82.5	205.8	271.0	323.3	265.6	208.3	225.2	154.3	1,741.6

주 [1] 기술원조 포함

자료 : 이대근, op. cit., p. 331~332 및 농업연감 1960, 1961, 1962년 판

1950년대 후반에 대규모로 이루어진 ICA원조를 통해서는 실로 다양한 분야와 품목의 시설재와 원료, 소비재가 공여되었다. 우선 프로젝트(계획) 원조를 통한 지원내역을 보면 농수산업, 광공업, 전력, 교통 및 통신, 보건의료 및 교육, 주택 등의 분야에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중에서도 대표적인 사업을 보면 철도 분야에서 영암선, 충북선, 문경선 , 주인선, 함백선 등 강원-충북-경북지방의 산업철도 건설사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충주비료공장의 건설을 비롯하여 부산공작창, 전선공장, 농약공장, 재생고무공장, 타이어공장, 부산조선소 건설사업 등을 들 수 있다.[1] 전력분야에 있어서는 화천수력발전소는 물론 영월, 당인리, 마산 화력발전소의 복구와 함께 신규 발전기 도입사업 등이 이루어졌다.

비프로젝트(비계획) 원조 형태로 제공된 원조의 내용을 보면 비료, 원맥(原麥), 석유, 인견사 등과 같은 원료 및 반제품의 공여가 대종을 이루었으며 생고무, 종이, 의약품, 목재 등 여러 가지 물자

---

[1]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대규모 원조사업이외에도 전분공장(4개소), 제약공장(5개소), 한천공장(3개소), 석회석 · 잠사 · 피혁 · 석면 · 제지 · 대리석 · 인쇄 · 삼륜차 · 제와 . ·프라스틱제조 공장 등 44개 중소 공장이 건설에 총 7,616천 달러에 달하는 ICA의 시설원조자금이 지원되었음(이대근, op. cit., p. 330)

가 공여되었다.

ICA에 의한 원조에 있어서 그 규모 면에서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서 계획원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원조를 들 수 있다. 매년 5백만 달러 내외의 규모로 제공된 기술원조를 통해서는 주로 국내 기술자의 해외 파견을 통해 선진 기술을 습득하게 하거나 외국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사업이 이루어졌다. 주로 미국의 기술원조를 통해 이루어진 기술 연수생 파견 및 외국인 전문가 초청은 1957년부터 1961년까지의 5년 동안 각각 1,796명과 786명에 달했다.[1]

< FOA 및 ICA 원조 도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합 계
Project원조	-	10.2	97.5	85.5	92.7	63.8	43.6	50.5	36.1	479.9
·농림수산	-	0.2	3.4	1.8	5.9	4.6	6.9	4.9	1.9	29.6
·광공업	-	-	6.7	9.9	19.2	16.7	7.1	19.4	14.2	93.2
·전력	-	6.2	11.9	13.9	6.1	2.2	1.8	8.9	8.5	59.5
·교통·통신	-	1.3	64.6	44.3	45.7	22.5	13.1	3.2	0.6	195.3
·보건위생	-	0.3	2.1	2.1	2.7	3.8	3.1	4.2	2.3	20.6
·교육	-	-	-	1.0	3.5	3.2	3.7	1.5	1.9	14.8
·주택·후생	-	1.6	7.3	9.0	6.3	4.9	2.5	4.0	2.9	38.5
·기타	-	0.6	1.5	3.4	3.3	6.0	5.4	4.4	3.8	28.4
Non-Project	5.6	72.3	108.3	185.6	230.6	201.7	164.7	174.7	118.2	1,261.7
·농산물	3.9	23.4	28.4	37.7	73.8	41.7	32.4	36.8	17.0	295.1
·연료	-	11.7	10.5	23.5	24.0	35.4	20.6	24.6	20.3	170.6
·원료반제품	1.7	30.5	54.9	107.2	105.6	98.0	88.9	76.9	55.2	618.9
·판매용자재	-	6.7	14.5	17.2	27.2	26.6	22.8	36.4	25.7	177.1
합 계	5.6	82.5	205.8	271.1	323.3	265.5	208.3	225.2	154.3	1,741.6

자료: 이대근, op. cit., p. 331~332 및 농업연감 1960, 1961, 1962년 판

1 *과학기술행정20년사*, 과학기술처, 1987, p. 249

2.2.6. PL480에 의한 잉여농산물 원조

미 공법 480(PL 480; Public Law 480)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1954년 미국의 농업교역개발원조법(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ssistance Act)에 의한 원조는 농산물을 원조의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자국 잉여농산물의 처리와 농산물교역의 확대는 물론 수원국의 식량부족의 완화와 물가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중적인 목적으로 실시된 매우 특징적인 유형의 원조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크게 4가지의 목적으로 구분되는 미 공법 480에 의한 농산물 공여는 농산물 공여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현금조달을 통해 수혜주재국 미국기관의 행정비를 조달하고 그 나머지를 수혜국의 경제개발에 활용하는 제1관의 '외환을 위한 판매(Title Ⅰ: Sales for Foreign Currency)'와 수혜국의 기아 또는 긴급구호를 위해 제공하는 제2관의 '긴급구호 및 기타원조(TitleⅡ: Famine Relief and Other Assistance)' 등 4개의 유형으로 나눠져서 제공되었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 중반부터 제1관에 의한 잉여농산물을 제공받다가 1960년대 이후에는 제2관에 의한 긴급구호 등을 위한 공여는 물론 1970년대 초반까지 장기저리차관의 형태에 의한 농산물 도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미국 잉여농산물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1955. 5.에 체결된 한·미간의 최초의 잉여농산물 도입협정을 체결[1]하여 10백만 달러의 원면과 5백만 달러 상당의 엽연초를 공여받기 시작한 이후 1961년까지 202.6백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이 스킴에 의해 도입[2]하였으며 주요 품목은 밀, 보리, 쌀 등 양곡이 대종을 차지했으며 원면, 엽연초, 돈육통조림과 같은 원료제품, 소비재 등이 도입되었다.

미국의 잉여농산물은 PL480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상호안전

---

[1] Surplus Agricultural Commodities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Title I of the 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ssistance Act, 1955. 5. 31.

[2] *농업연감*, 농업은행조사부, 1962, p.Ⅰ-85

보장법(Mutual Security Act of 1954) 제402조에 의해서도 제공되었다.[1] 일반적인 방식의 원조 사업을 통해서도 잉여농산물이 제공된 것이었다. 1960년부터 1972년까지 519.5백만 달러에 달하는 잉여농산물이 무상의 형태로 공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한편 무상공여 방식의 PL480에 의한 잉여농산물의 도입이외에도 유상차관 방식에 의한 PL480 양곡의 도입은 1968년 이후 198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PL 480에 의한 미국으로부터의 잉여농산물도입은 1981. 5. 1981년도의 잉여농산물 도입협정을 마지막으로 26년간의 PL 480에 의한 지원이 종결되기에 이르렀다.[3]

2.2.7 AFAK원조 및 군사원조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방위지원 및 경제재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적 형태의 원조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군사원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군은 1950년부터 1953년의 전쟁기간 중에 AFAK(American Forces Aid in Korea)라는 특수한 형태의 군 조직을 통해 대민 원조를 실시하였다[4]

일반적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원조는 공적개발원조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이 1950년대 및 '60년대에 걸쳐 한국에 제공한 원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의 공적개발원조와 군사적인 원조간에 그 경계를 명확하게 긋기 어려운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1950년에 한미양국간에 체결된 상호방위원조협정 등에 따라 제공된 순전히 군사적 목적의 원조는 논외로 한다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제 원조를 통해 이루어진 특수한 방식과 내용의 원조는 원조의 복합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1 장종익, *1950년대 잉여농산물원조가 한국농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경제사학회, 1990, p.6

2 *국제수지통계*, 한국은행, 1987, p. 30-33

3 *개발연대의 경제정책*, 경제기획원, 1982. 12., p. 541

4 서남원, op. cit., p. 42 및 p. 62

즉, 미국의 ICA를 통해 공여된 민수용(民需用) 물자 및 원자재 등의 판매수입과 잉여농산물 판매수입은 이른바 한국은행에 설치된 대충자금계정을 통해 정부의 세입으로 계상되어 이중의 적지 않은 금액이 방위비 지출에 충당되었다. 1950년대부터 이루어진 원조자금에 의한 방위비 충당은 1973년까지 계속되었다.

< 1960년대 원조에 의한 국방비 충당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국방비[1]	14.7	16.6	20.5	20.5	24.9	29.9	40.5	49.6	64.7	84.4
원조공여	5.3	16.0	15.0	15.0	15.0	18.5	25.9	24.6	19.4	20.5
(원조비중,%)	36.0	96.4	73.1	73.1	60.2	61.9	64.0	50.2	30.0	24.3

주 [1] 결산기준

자료: 재정통계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1991, p. 48-51

한편 1956년부터 1961년까지 MAS(Mutual Security Act) 402호 군사원조 및 구호 증여 등에 의해서도 무상으로 양곡을 공여 받았으며 해방 이후 미국이 제공한 군사원조는 총 17억 달러에 달했다.[1]

[1] 한공택, op. cit., p.219. 미국의 대외원조통계인 Greenbook에 의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한 군사원조는 1949년부터 1993년까지 모두 8,803백만 달러로 나타나있으며 1949~1961간 1,785백만 달러, 1962~1993간 7,005백만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있음.

2.3. 개발연대 전기의 개발원조(1961~1975)

2.3.1. 개관

1960년대의 이른바 개발연대가 전개되기 시작한 시기의 우리나라에 대한 원조는 그 여건과 성격, 공여 방식 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1950년대의 한국전쟁 및 전후 복구기에 집중된 대한 원조는 대부분 긴급구호와 전화복구를 위한 재건 및 경제안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 무상의 형태로 제공된 원조는 대종의 자금 재원이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었지만 많은 사업이 UN의 한국전쟁 전후복구 및 부흥지원이라는 국제 다자적 지원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 시기의 수원 여건은 수원자 스스로의 판단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여유로운 조건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판단해서 공여해주는 원조의 접수에 의존해야하는 피동적인 성격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 지원규모도 전후복구와 경제·사회적 혼란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1950년대 말로 접어드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휴전 후 초년도인 1954년에 154백만 달러에 달하던 원조의 규모는 1957년에는 383백만 달러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를 정점으로 한국에 대한 원조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서 1961년에는 154백만 달로 수준으로 크게 감소되었다.

이와 같은 1950년대 경제안정 및 재건기의 원조 양태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1961년에 발표된 케네디 대통령의 새로운 대외원조정책은 경제안정으로부터 경제의 개발과 성장을 지향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수원자인 개발도상국들의 책임을 중시하는 동시에 무상방식의 지원을 유상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그때까지 미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한국에게는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국제적으로는 브레튼 우즈협정에 의한 이른바 GATT체제의 자유무역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고 미국이외의 다른 서방선진국들의 경우에도 국제개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되는 한편 전후 활발하게 논의되어온 국제개발의 방향이 이른바 '북으로부터 남으로의'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개발협력에 의한 보다 다양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반면에 한국의 대내 사정은 이른바 1960년 초부터 정부의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대외지향적인 공업화전략의 추진으로 사회간접시설 및 국가 기간산업의 확충은 물론 경제·사회개발을 위한 막대한 투자재원과 기술을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의 경제 재건 및 안정화를 위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제반 경제의 여건은 극히 열악하였으며 신규 투자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재원과 기술을 해외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건의 변화 속에서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인 수원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원조의 형태와 내용 또한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과거 우리에 대한 원조의 공여에 있어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던 미국의 역할이 결코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원조 공여의 주체가 일본 독일 등의 여러 국가들로 다변화됨은 물론 본격적으로 개발협력자금을 제공하기 시작한 IBRD, IDA, ADB 등의 다자간 협력이 활성화되게 되었다.

개발연대 전기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의 시기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로부터의 개발협력 지원이 가장 활발하게 실시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는 그 분야를 막론하고 무상의 기술협력은 물론 유상의 차관 협력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개발협력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가장 큰 규모의 개발원조 자금이 공여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개발원조자금의 공여에 있어서 양자 및 다

자적 지원 경로의 다원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2대 원조공여국인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매우 크게 두드러진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1950년대의 원조에 있어서 미국의 절대적 위치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개발연대 전 · 후기를 통 털어서 보더라도 미국과 일본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달리 특기할만한 점은 개발연대 전기에 이르기까지 최대의 원조 공여국으로서 그 위치를 점하고 있던 미국이 개발연대 후기에는 그 역할을 일본에게 이양했다고 하는 점일 것이다.

개발연대 전기까지만 하더러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미국의 역할은 개발연대 후기에 들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다. 개발연대 전기에 총 원조 공여액의 64%를 점하고 있던 미국의 비중은 개발연대 후기의 기간 동안에는 15%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에는 개발연대 전기에 27%에 불과하던 원조 공여액 비중이 개발연대 후기 중에는 57%로 크게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개발연대의 공적개발원조(ODA) 공여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개발연대전기 (1961~1975)	개발연대후기 (1976~1990)
공여 규모	3,941.4(100.0)	3,510.8(100.0)
공여주체별		
·미 국	2,506.2(63.6)	512.0(14.6)
·일 본	1,080.0(27.4)	2,014.3(57.4)
·기 타	355.2 (9.0)	984.5(28.0)
자금성격별		
·무상자금	1,999.0(50.7)	750.4(21.4)
·유상자금	1,942.4(49.3)	2,760.4(78.6)

주 ( ) 내 숫자는 비중(%)
자료: OECD/DAC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개발연대 전기까지만 하더러도 비슷한 수준으로 공여되던 무상원조의 비중과 금액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크게 감소하고 유상자금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연대 전기의 기간동안 51%를 차지했던 무상원조의 비중은 개발연대 후기에는 2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원조의 접수 측면에서 주목되는 것은 매우 다양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이 정부 주도의 강력한 개발계획과 수원자의 강력한 이니셔티브에 의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개발연대 초기에 이루어진 일부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원자측의 주도에 의하여 매우 과감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2.3.2.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추진과 한국에 대한 개발원조

1961년에 수립된 경제개발계획은 종래 각 부분별로 또는 경제안정과 재건에 중점을 두어 수립된 계획과는 다른 크게 성격과 내용을 가진 계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종래의 경제부흥계획 등이 균형성장을 통한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면 5.16 군사혁명을 통해 수립된 새로운 정부에 의해 마련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저개발국이 안고 있는 두 개의 격차, 즉 자본 격차(capital gap)와 기술 격차(technology gap)를 정부주도에 의한 불균형 성장전략을 통해서 해소함으로써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자립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와 같은 전략의 개발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의 투자와 기술의 투입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국내의 자본과 기술의 축적이 거의 이루어져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자본과 기술은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과 협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더욱이 경제사회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수립된 의욕적인 경제개발 투자계획은 극히 빈약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의 확보를 필요로 하였다. 더구나 당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극히 낮은 국가신인도, 모든 부문에서 경험과 기술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대부분의 투자는 국제사회의 자본과 기술에의 의존을 불가피하게 하고 특히 정부협력차원에서의 개발원조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주로 무상원조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던 한국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개발원조의 규모가 크게 감소되는 한편 무상이 아닌 유상차관의 지원으로 원조의 형태가 전환되는 추세 속에서 원조자금의 확보는 물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의 확보가 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1961년에 수립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은 계획기간 중 총 가용자원 중 원조에 의존하는 비중을 계획 초년도인 1962년에 국내총생산의 14.1%로 설정하고 있으며 계획이 끝나는 1966년에 가서야 6.3%로 그 의존 비중을 감소시켜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었다. 한편 수출입 및 무역수지 계획상 기간 중 필요로 하는 수출자금 소요의 대부분을 무상 원조 등 개발협력자금의 지원으로 충당하고자 계획하였다. 이 계획은 기간 중의 무역적자액 19억 달러 중 14.3억 달러를 무상 원조 및 개발차관의 도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제1차 계획 상의 기간 중 투자를 위한 외자소요는 683.6백만 달러를 계상하고 있으며 이중 426백만 달러에 상당하는 규모의 개발자금은 개발차관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실제로 1962-1965년 중에 이루어진 14.2%의 총 투자 중에서 64%에 해당하는 9.1%포인트에 해당하는 투자가 해외저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원만한 추진과 함께 자립적인 경제기반이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투자가 원조 등에 의한 해외 저축에 의존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개발

1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경제기획원, 1966. 7, p. 20

연대 전기를 통하여 해외 저축은 여전히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비 양허성 자금성격의 공공차관 및 상업차관의 도입이 본격화됨으로써 해외저축에서 차지하는 개발원조자금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개발연대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비중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 개발계획 연도별 투자 및 저축 현황 >

(단위: %)

구 분	1962~1966	1967~1971	1972~1976	1977~1981	1982~1986
총투자율[1]	15.1	26.4	27.8	35.5	31.6
·국내저축	6.1	13.1	18.2	23.9	27.4
·해외저축	8.8	12.9	9.8	11.2	4.2
(원조자금)[2]	(7.3)	(10.7)[3]	n.a.	n.a.	n.a.

주 [1] 총투자/국민총생산(GNP)
[2] 자료: 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1995.10., p. 46
[3] 1968~1969간의 수치임
자료: 개발연대의 경제정책, 경제기획원, 1982. 12. p. 258-367

한국정부는 막대하게 소요되는 개발투자자금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무상의 원조자금을 포함하는 외자도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갔다. 즉, 개발원조자금의 획득과 국제개발협력자금의 확보를 위한 정책적·외교적 노력을 다각화하는 한편, 한국의 개발협력 노력을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중장기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단계적인 수립 · 시행과 함께 외자와 해외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시책을 펴나가는 동시에 개발투자자금의 확보를 위해 활발한 정상외교활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각종 투자사절단을 파견하여 국내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한국 정부는 한국의 개발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IBRD 등 다자

간 국제개발기구는 물론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주요 원조공여국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대한국제경제협의체, 이른바 이코크(IECOK: International Economic Consultative for Korea)의 구성을 제의하여 1966년부터는 이 협의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1]

IECOK는 198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1~2년에 한번씩 한국과 관련한 모든 국제개발협력기구와 각 원조공여국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협력실시방안을 강구하는 등 특히 우리나라 개발연대 전기의 발전과정에서 적지 않은 역할과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1]

2.3.3 개발연대 전기의 양자간 개발협력

1950년대 까지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양자간은 물론 다자간 원조의 실질적인 제공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960년대 초반까지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미국이외의 다른 서방 선진국들이 새로운 개발협력 채비를 갖추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개발협력의 필요를 절감하고 있던 한국의 요구가 접합되어 독일, 일본, 프랑스 등으로 양자간 개발협력 대상이 다변화되기에 이르렀다.

1961. 12.에 개최된 한 · 서독 경제회담에서는 3,750만 달러의 장기 개발차관의 제공에 양국이 합의하였으며 1962. 12.에는 한 · 일 재산청구권 문제가 타결되면서 무상자금 3억 달러, 유상자금 2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공여에 합의하게 되었다. 또한 1964. 7.에는 프랑스로부터 팔당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개발차관 1,000만 달러 도입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2]

---

[1] IECOK는 한국정부의 제안에 따라 1966. 6. 런던에서 IBRD의 주도 하에 예비 회담을 개최한 뒤, 1966.12. 파리에서 IBRD를 비롯한 오스트레일리아, 벨지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미국, 자유중국, IMF, UNDP 및 한국, 영국(옵저버) 대표가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이후 영국이 정식 회원국으로 전환되고 오스트리아, OECD, ADB 등이 추가로 참여하였으나 자유중국은 1979년부터 제외되었음(*세계은행그룹과 IECOK*, 경제기획원, 1982. 5., p. 45-46)

[2] *개발연대 경제정책*, 경제기획원, 1982. 12. p. 447, 451 및 457

한편 최대 원조 공여국인 미국은 1950년대 말부터 종래 무상원조 일변도의 지원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유상차관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등 자국의 대외원조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하였다.[1]

미국은 1958. 1. 개발차관기금(DLF: Development Loan Fund)을 설치하고 1958년도에 5억 달러, 1959년도와 1960년도에 각각 7억 5천만 달러, 도합 20억 달러에 달하는 기금을 적립하여 본격적인 유상차관 방식의 원조를 공여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이 기금의 활용을 위해 1958년도 사업으로 9개 부문의 사업에 총 87백만 달러 규모의 차관자금을 요청하였으며 1959년중에 동양시멘트 삼척공장 시설확장자금 등 4개 사업에 1,274만 달러의 자금을 공여 받았다.[2] 1960년 이후에도 한국나이롱의 나이롱사공장 건설, 한국전력의 부산감천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소양댐건설 사업, 충주비료 시설확장 등의 사업에 DLF차관 자금을 활용하였다.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은 1960년대 초 케네디행정부에 의해 일대전환이 이루어졌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1. 3. 국회에 제출한 '대외원조에 대한 특별교서'를 통해 1960년대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의 방향을 밝혔는바, 다른 선진 서방국가들과의 협조를 통해 장기적 안목에서 수원국의 경제개발과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조를 강화해나갈 것과 개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 스스로의 책임을 키워나갈 것 등을 강조하면서 효율적인 원조실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원칙과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1961. 9.에는 1954년의 Mutual Security Act를 대체하는 새로운 대외원조법인 Foreign Aid Act를 제정하고 12월에는 ICA와 DLF를 통합한 국제개발처(AID: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를 창설하게 되었다.

미국의 새로운 원조정책과 개발연대를 시작한 한국의 절실한 협력 수요는 개발연대 전기의 시기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간의 개발협

---

1 이건혁, *미국의 원조정책전환*, 지방행정 Vol.6, No.6,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57, p. 4

2 이대근, p. 333

력의 전성기를 이루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이른바 '북으로부터 남으로'의 원조 패턴이 성립되는 시기에 미국은 한국에 대해 그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원조를 제공하였다.

AID가 설립된 1961년부터 1975년 AID에 의한 원조로부터 졸업하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2,506백만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공여받았다.

일본과의 양자간 개발협력은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일본과의 양자간 협력은 1962년 한일간의 재산청구권자금 협상이 이루어진 뒤 1965년 한일 간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시작되었다.[1]

일제 식민치하에서 수탈당한 재산권과 기타 징병, 징용 등으로 희생당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대일 청구권자금은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유상자금, 기타 3억원 이상의 상업차관 공여로 구성되어 있다. 5억 달러에 달하는 유무상 자금은 농림수산, 광공업, 과학기술개발,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한 부분의 투자재원으로 배분되었으며, 1960년대 하반기에 착수한 포항제철 건설, 경부고속도로건설 등의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결정적인 투자 재원이 됨과 동시에 사업추진에 긴요한 장비와 기술의 도입선으로 활용되었다.

특수한 성격의 대일 청구권자금과는 달리 일본으로부터의 양자간 원조자금의 공여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이르렀다. 일본으로부터의 원조는 1970년대 초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급격하게 감소되는 상황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개발연대 후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활발하게 실시되었다.

1965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일본의 원조는 1975년까지 무상원조 335백만 달러, 유상원조 745백만 달러 등 모두 1,080백만 달러에 달해 미국 다음의 주요 원조공여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

1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1996. 3. p. 254

2.3.4. 개발연대 전기의 다자간 개발협력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IBRD 및 ABD 등 국제개발금융기관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는 한편 저소득 개도국에 대한 특별지원 필요성에 입각하여 보다 연성의 개발협력 차관을 공여하기 위한 기구로 1960. 9.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가 설립[1]되면서 다자간 기구를 통한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 OEEC(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의 산하에 결성되었던 개발원조그룹(DAG: Development Assistance Group)이 1961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발족과 함께 이 기구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라는 새로운 이름의 조직으로 개편됨에 따라 서방 선진국들에 의한 원조가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전기가 마련되는 한편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협력이 일종의 다자적 협력의 성격을 가미하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1960년대로부터 70년대에 이르는 개발연대 전기의 시기는 남북간 경제개발 격차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UN이 주축이 되어 '제1차 국제개발연대(The 1st UN Development Decade)'를 선포하고 1964년에는 UN주관의 무역개발회의(UNCTAD: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를 개최하는 등 다자적인 국제개발협력 노력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자적 기관에 의한 국제개발협력은 양자적 협력에 비해서는 뒤늦게 본격화되었으며 양자적 협력이 대부분 공적개발원조에 해당되는 조건의 자금을 제공하였던데 비해 IBRD 등 국제개발금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자금은 대부분 일반적 조건의 개발협력

---

[1] IDA는 소득수준이 낮은 개도국에 대해 IBRD나 IFC(국제금융공사)보다 조건이 유리한 연성차관(soft loan)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과 IBRD의 주도에 의해 1960. 9. 설립되었으며 선진국으로 구성되는 제1부 회원국(Part Ⅰ Members)과 개도국으로 구성되는 제2부 회원국(Part Ⅱ Members)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음.

자금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개발연대 전기 중에 다자적 형태로 지원받은 개발협력 자금의 규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ODA조건을 충족하는 개발협력 자금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기간 중의 다자간 무상원조는 UNDP, UNICEF, WFP 등 주로 UN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는 바, 그 규모는 76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IDA, ADB, ADF(Asian Development Fund)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양허성 개발차관의 규모는 88백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 기간 중에 도입된 다자간 공공차관의 규모가 7,000백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원조성 자금의 비중은 매우 낮았으며 다자간 개발협력을 통해 지원된 자금의 대부분은 일반 협력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4. 개발연대 후기의 개발원조(1976-1990)

1960년대 초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한국은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기초적인 산업기반의 구축은 물론 중화학 공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는 등 산업국가로써의 기틀이 잡히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한국은 1975년의 1인당 국민소득이 574달러에 다다르게 되면서 국제개발협회(IDA)가 저소득국에 제공하는 연성 차관(soft loan)의 지원대상 기준(1975년 기준 520USD)을 넘어섬으로써 IDA차관공여 대상국으로부터 제외되게 되었다. 그 이후 한국은 이른바 NICs (Newly Industrialized Developing Countries)라고 불리는 신흥공업국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편 1975. 12.에는 한일 간의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협정이 종결됨에 따라 새로운 입장에서 일본과의 개발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내자로 충당할 수 없는 다대한 개발자금 수요가 개발원조 및 협력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도입 · 활용되었다면,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투자의 분야와 자금의 질적 수준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협력사업의 추진을 보다 선별적으로 실시하 등 기본적인 여건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1970년대 후반이후 세계경제의 침체와 함께 찾아온 석유파동(oil shock)이 고속·양적 팽창 일변도의 한국경제에 커다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70년대 이후 광범위하게 시작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도입된 개발자금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과도한 외채부담에 대한 우려가 매우 예민한 경제·사회적인 이슈의 하나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70년대 후반 이후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안정이 조화를 이루는 경제안정화시책의 추진과 함께 산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그 구조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그간의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인하여 파생된 부문간 불균형의 시정과 구조조정에 착

수하는 정책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의 분야에 있어서도 과거 단위사업 중심의 프로젝트 차관이 중심을 이루던 것이 점차 특정 다부문의 종합적인 개발과 경제 및 산업 전반의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섹타 론(sector loan) 및 구조조정차관(structural adjustment loan) 등에 의한 개발협력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편 1970년대 중반 이후로 들어서면서는 AID, 대일청구권자금 등으로부터의 양자간 무상원조 자금의 수원이 종료되고 유상의 개발원조 자금공여 또한 점차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원조의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기간 중의 두드러진 변화는 양자간 개발원조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크게 줄어드는 대신 일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는 독일, 프랑스 등의 여타 선진국들의 원조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일본으로부터의 많은 원조가 제공되었다.

유엔기구 등 다자적 지원경로를 통한 원조에 있어서는 개발연대 후기의 기간 동안에도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IBRD, ADB 등 국제개발금융기구로부터는 더욱 큰 규모의 개발협력 자금이 공공차관의 형태로 도입되었다.

2.5. 원조 공여자로 전환기의 개발협력(1991~1999)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수원자의 입장으로부터 공여자의 입장으로 그 지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은 이미 1986. 12.에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제정하고 1987년에는 이 법에 근거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설치하여 후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연성 개발차관을 공여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설립하여 그간 여러 기관이 산발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던 여러 형태의 기술원조사업을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1987. 5. 동경에서 개최된 세계은행이 주관한 파푸아뉴기니를 위한 원조자문그룹회의(Consultative Assistance Group Meeting)에 옵저버 자격으로나마 처음으로 참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가시적인 원조공여자의 일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1988. 11.에는 IMF 8조국으로 이행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지위로부터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1988. 12.에는 IMF로부터 인출한 신용을 모두 상환하는 한편 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사업도입을 마지막으로 ADB차관 공여 대상국으로부터 제외됨으로써 이른바 개발연대의 개발협력 수원으로부터 졸업하게 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또한 1991년에 개최된 유엔개발계획(UNDP: UN Development Programme)의 집행이사회에서는 1992년부터 한국의 지위를 순공여국(N.C.C.: Net Contributor Country)의 지위로 전환시키기로 결정하였다.[1] 한국은 아직 일부 분야에 있어서 소규모의 기술협력을 수혜받는 입장에 있었지만 이로써 기술원조 수원국으로부터 공여국으로 그 지위가 격상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한국은 1995. 3.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439백만 달러에 달하는 두 건의 개발차관에 서명하는 것을 끝으로 세계은행의 개발차관 공여 대상국으로부터도 제외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한국은 1962년 IDA로부터 은행 최초의 연성 개발차관을 도입한 이래 33년 동안 120여 개의 프로젝트에 약 85억 달러에 이르는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던 세계은행의 개발차관으로부터도 졸업하게 되었다. 이는 1947년 이후 세계은행의 지원으로부터 졸업한 25개의 서방선진국이외에 1975년에 이 은행의 지원대상으로부터 벗어난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최초의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2]

---

[1] *과학기술연감*, 과학기술처, 1992

[2]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rch 16, 1995

여기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은 1996년 세계에서 29번째로 OECD에 가입함으로써 빈곤 저개발 상태에 있던 신생 개발도상국가들 중에서는 최초로 서방 선진국들의 경제협력협의체 회원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그 이후 한국은 1997년에 맞이한 아시아금융위기의 와중에서 다시 한번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개발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긴급 경제구조 조정을 위한 협력자금을 지원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이를 잘 극복해 나왔다.[1]

한국은 2000년부터 OECD/DAC가 분류하고 있는 국가 분류에 있어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대상이 되는 Part Ⅰ그룹의 국가군으로부터 'Countries and Territories in Transition'으로 지칭되는 Part Ⅱ 국가군의 그룹으로 그 위치를 옮겨가게 되었다.[2]

이와 같이 주요 피원조 공여국으로부터 원조 공여국으로 그 지위를 바꿔나가는 전환기에 있어서 한국은 그것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큰 규모의 원조를 공여받았다. 1991년부터 ODA대상국으로부터 제외되기 시작한 2000년 이전까지 한국이 접수한 원조자금은 모두 2,326백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중 무상원조가 1,202백만 달러로 약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1] 한국은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 IBRD와 ADB로부터 107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일부 자금을 조기 상환하고 2003년 말 현재 65억 달러의 상환잔액을 남겨두고 있음.

[2] *2000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OECD, 2001. OECD/DAC가 분류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은 현재 PartⅠ그룹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49개국의 Least Developed Countries(LDCs), 2001년 소득 수준이 $745미만인 23개국의 Other Low Income Countries(Other LDCs), $746~2,975수준인 45개국 또는 속령의 Lower Middle-Income Countries(LMICs), $2,976~9,205 수준의 33개 국가 또는 속령의 Upper Middle-Income Countries(UMICs), $9,206이상의 High- Income Countries(HICS) 1개국 등 5개 소그룹으로 분류되고 있음.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PartⅡ의 국가그룹에는 12개 국가의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New Independent States of the Former Soviet Union(CEECs/NIS)과 우리나라 등 25개 국가가 속해있는 Mor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and Territories 국가군이 있음.

한편 이시기에 있어서 원조자금의 공여는 주로 일본으로부터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에 일본은 751백만 달러의 무상원조와 1,010백만 달러의 유상원조를 제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이 기간 중 총 ODA공여의 약 80%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발연대 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의 원조 공여국이었던 미국은 개발연대 후기에 이미 원조를 사실상 종료시켰다고 할 수 있다. 전환기 중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1994년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원조를 종료하기까지 7백만 달러를 제공하였다.[1]

이 기간 중의 원조접수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비양허성 개발협력자금의 도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부터 1999년까지 도입된 비원조성 개발차관의 규모는 17,348백만 달러로 이 기간 중에 그간에 도입한 비원조성 개발차관 총 도입액의 약 56%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 기간 중에 비양허성 차관의 도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1990년대 후반기에 외환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조정차관을 예기치 않게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원조전환기의 개발자금 도입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개발원조자금		개발협력자금	
공여 규모	2,324.6(100)		17,347.7(100)	
공여주체별	일 본	1,761.1(75.8)	IBRD	8,311.6(47.1)
	독 일	306.3(13.2)	ADB	3,707.9(21.4)
	미 국	7.2 (0.3)	일 본	2,851.9(16.4)
	여타국가	151.6(6.5)	프랑스	2,036.6(11.7)
	NGOs	98.4(4.2)	미 국	439.7(2.5)
자금성격별	·무상	1,300.9(56.0)	-	(-)
	·유상	1,023.7(44.0)	17,347.7(100)	

주 ( ) 내 숫자는 비중(%)

[1] 미국으로부터의 무상원조는 1981년까지 제공됨

제3장 우리나라의 수원현황

1. 수원 규모

1.1. 개관

우리나라에 대한 개발원조 및 협력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그 규모를 포괄적이면서도 일관성 있는 시각에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용이한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인다. 그것은 우리의 수원 및 개발협력 사업이 멀리는 반세기도 넘는 오래 전의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공여자와 수원자 공히 극히 다양한 주체와 기관들에 의해 실시되어 왔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헌데, 다행히도 우리나라 수원 초기에 대한 통계자료 등은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것은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개발원조가 우리경제 전반에 매우 큰 비중과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관계로 전체적인 수원규모와 그 개괄적인 사항 등에 대해 비교적 다양한 자료가 작성되었던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비해 더욱 많은 개발원조 및 협력 사업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1960년대 초 이후의 자료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불가피하게도 이 시기에 있어서의 통계는 대외자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1960년 이후 공여자측의 개발원조 통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총체적인 개발원조 및 협력 규모의 파악에 있어서 해방 후 196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우리측이 비교적 포괄적으로 작성한 수원 통계를 활용하였다. 1960년대 초 이후의 시기에 있어서는 OECD의 DAC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국제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 통계를 주로 활용하게 되었다.

한편 총체적인 수원 규모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간과될 수 없는 것은 공적개발금융(ODF: Official Development Finance)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는 '비양허성 개발차관(non-concessional development lending)'과 ODA는 아니지만 무상원조의 주요한 형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민간원조단체(NGOs)를 통한 지원이었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비양허성 개발차관의 접수현황에 있어서는 정부가 도입한 공공개발차관을 증여요소(G.E.: Grant Element)를 기준으로 하는 양허성(concessionality)의 정도를 산출하여 ODA에 포함되는 않는 G.E. 25%미만의 공공개발차관을 이른바 개발협력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개발협력의 범위를 좀더 넓혀본다면 공적수출신용(Official Export Credit) 등의 기타공적자금(OOF: Other Official Flows),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등의 민간자금(PF: Private Flows) 등을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이 조사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그 범위를 공적개발협력에 국한시켜 공공차관자금까지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외국의 민간원조단체에 의한 원조에 대해서는 보건사회부가 1990년대 초반까지 작성해온 외원사회사업기관에 의한 외원(外援)현황자료를 토대로 개발원조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파악된 개발원조의 접수 규모는 모두 13,976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정부간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공적개발원조(ODA)는 12,776백만 달러이며 민간원조단체를 통해 이루어진 원조는 1,200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 우리나라에 대한 개발원조 및 협력자금 공여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개 발 원 조			비양허성공공차관[2]
ODA[1]	NGOs	합 계	
12,776.3	1,200.2	13,976.5	31,195.6

주 [1] 무상 ODA자금 및 G.E. 25%이상의 공공개발차관자금
[2] G.E. 25%미만의 공공개발차관자금(2002. 12. 현재 인출금 기준)

나타났다. 자금의 양허성이 원조자금의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제공된 공적개발자금, 즉 개발협력자금의 규모는 31,196백만 달러 에 달하는 큰 규모로 나타났다.

1.2 개발원조

그간 우리에게 제공된 개발원조 자금의 규모를 제공 자금의 성격 및 제공 주체 등에 따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우리가 접수한 총 12,776백만 달러의 ODA자금에 있어서 무상(grant) 형태의 지원이 6,997백만 달러로 5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상(loan)형태의 지원은 5,779백만 달러로 45.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제공 주체별 ODA접수 실적을 보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양자간 원조자금이 11,808백만 달러로 전체의 92.4%에 달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전쟁 및 전후 재건기에 이루어진 CRIK와 UNKRA에 의한 지원을 포함하여 UN 기구, IDA, IBRD, ADB 등의 다자 방식의 원조자금은 총 ODA의 7.6%인 968백만 달러에 불과해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적개발원조(ODA)자금 접수현황 >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금 액	비 중(%)
자금성격	무상(grant)	6,997.5	54.8
	유상(loan)	5,778.8	45.2
공여주체	양자(bilateral)	11,808.0	92.4
	다자(multilateral)	968.3	7.6
합 계		12,776.3	100.0

또한 개발원조 자금의 접수를 개발의 단계에 따르는 시대적 구분에 따라 나누어보게 되면 우선 그 규모 면에서는 각 분야에 있어서 여러 공공개발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는 개발연대 초기의 시기에 가장 많은 원조자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61년부터 1975년 간 총 ODA의 30.9%에 해당하는 3,941 백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조자금의 성격 및 형태를 보면 초기 단계에서 대부분 무상의 형태로 제공되던 원조자금의 성격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유상의 형태가 많아지는 추세로 급격하게 전환되었다. 1960년까지의 원조는 거의 모두가 무상자금의 형태로 지원되었으나 그 이후의 지원자금은 대체적으로 유상자금의 지원이 대종을 이루는 모습으로 그 구조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1990년도에 무상원조의 자금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은 특이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 단계별 공적개발원조(ODA)자금 접수현황 >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45~1960	1961~1975	1976~1990	1991~1999	합 계
자금형태	무상	3,045.6	1,999.0	750.4	1,202.5	6,997.5
	(비중,%)	(98.3)	(50.7)	(21.4)	(54.0)	(54.8)
	유상	52.3	1,942.4	2,760.4	1,023.7	5,778.8
	(비중,%)	(1.7)	(49.3)	(78.6)	(46.0)	(45.2)
제공주체	양자	2,518.4	3,777.3	3,312.2	2,200.0	11,807.9
	(비중,%)	(81.3)	(95.8)	(94.3)	(98.8)	(92.4)
	다자	579.5	164.1	198.6	26.2	968.4
	(비중,%)	(18.7)	(4.2)	(5.7)	(0.2)	(7.6)
합 계		3,097.9	3,941.4	3,510.8	2,226.2	12,776.3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제공 주체별 개발원조 공여실적을 보면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규모의 개발원조를 제공한 나라는 미국으로 미국은 약 60억 달러 내외의 유 · 무상 원조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원조는 양자적 채널을 통해서 제공된 것만 하더라도 5,542백만 달러로 나타나있으며 사실상 대부분이 미국으로부터 제공된 자금으로 구성된 다자적 성격의 CRIK 및 UNKTA 원조자금을 감안 시 60억 달러를 다소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1]

우리나라에게 두 번째로 많은 개발원조를 제공한 나라는 일본으로 그 규모는 5,052백만 달러에 달한다. 이와 같이 미국과 일본 두 나라의 절대적인 기여로 인하여 이 두 나라가 제공한 개발원조의 규모는 양자간 총 원조의 9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원조의 제공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한두 가지의 두드러지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건국 및 초기 경제재건과 개발 과정에서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하였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개

< 미국과 일본의 대한 개발원조 비교 >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45~1960	1961~1975	1976~1990	1991~1999	합 계(비중,%)
미국	무 상	2,464.7	1,524.0	16.0	0.2	4,004.9(72.3)
	유 상	52.3	982.1	496.0	7.0	1,537.4(27.7)
	합 계	2,517.0	2,506.1	512.0	7.2	5,542.3(100.0)
일본	무 상	-	335.1	267.6	750.6	1,353.3(26.8)
	유 상	-	744.8	1,943.2	1,010.5	3,698.5(73.2)
	합 계	-	1,079.9	2,210.8	1,761.1	5,051.8(100.0)

[1] 미국 USAID의 Development Information Service(DIS)가 발간하는 대외원조 통계자료집인 *Greenbook* 상에 나타나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원조(Economic Assistance)실적은 1945~1997간 6,161백만 달러임.

발연대 전·후기에 이르는 시기에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개발연대 전기까지 약 90%의 원조를 실시한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개발연대 후반기 이후에 78%가 넘는 원조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발연대 전기의 시기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던 미국의 자리를 개발연대 후기 이후에는 일본이 대신하는 모습으로 크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원조자금의 성격 면에서도 미국의 경우 약 70%이상의 자금이 무상원조로 제공된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반대로 70%가 넘는 원조가 유상자금의 제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미일 양국간의 두드러진 차이점의 하나라고 하겠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원조 공여국은 독일로써 835백만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프랑스 101백만 달러 오스트리아 53백만 달러, 네델란드 18백만 달러, 오스트레일리아 14백만 달러, 벨기에와 영국이 각각 10백만 달러의 규모로 순서를 잇고 있다. 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 원조를 제공한 나라는 그밖에도 캐나다, 스웨덴, 이태리, 노르웨이 등 12개국과 기타 개별적인 국명을 확인할 수 없는 여타 국가들로부터도 소액의 원조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있다.

다자간의 협력방식을 통해 제공된 개발원조의 규모는 양자간 원조의 규모에 비해 의외로 작은 편이다. 한국전쟁과 전후의 재건기에 UN과 UN연합군이라는 깃발 아래에서 다자적 협력방식을 통해 실시된 580백만 달러 규모의 CRIK 및 UNKRA 원조를 포함하더라도 전체적인 다자간 원조의 규모는 968백만 달러에 불과하다.

CRIK 및 UNKRA에 의한 지원 이후에 제공된 다자간 원조는 개발연대 전기 중에 제공된 국제개발협회(IDA)의 연성차관, 세계식량계획(WFP), UNDP 등으로부터 제공된 자금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개발사업에 많은 공공개발차관을 제공한 IBRD, ADB 등의 국제개발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조자금의 규모는 각각 40백만 달러와 7백만 달러에 불과하여 의외로 적은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개발금융기관으로 제공된 개발차관의 대부

분이 증여요소가 25%미만의 자금인 관계로 원조자금으로 분류되는 양허적 기준(concessional level)을 미달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 ODA 주요 공여주체별 원조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양자		다자	
공여주체	공여금액	공여주체	공여금액
1. 미 국	5,542.35	1. CRIK	457.40
2. 일 본	5,051.81	2. UNKRA	122.10
3. 독 일	834.93	3. IDA	102.59
4. 아랍 제국	123.54	4. WFP	98.50
5. 프랑스	101.46	5. UNDP	69.12
6. 오스트리아	52.77	6. IBRD	40.00
7. 네델란드	17.76	7. UNTA[1]	32.40
8. 호 주	14.01	8. UNICEF	14.30
9. 덴마크	10.46	9. UNFPA	7.69
10. 벨기에	10.15	10. ADB	6.80
11. 영 국	9.68	12. ADF[2]	6.34
12. 캐나다	8.07	13. UNHCR[3]	1.87
13. 스웨덴	7.74	14. EC	1.85
14. 이태리	6.31	15. 여타유엔기구	7.69
15. 노르웨이	4.87	16. 기타	0.01
16. 스위스	4.53		
17. 뉴질랜드	3.36		
18. 핀란드	0.95		
19. 스페인	0.71		
20. 룩셈부르크	0.28		
21. 그리스	0.03		
22. 포르투칼	0.02		
23. 폴란드	0.02		
24. 기타국가	2.19		
합 계	11,808.00	합 계	968.31

주 [1] UN Regular Programme of Technical Assistance
[2] Asian Development Fund
[3]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자료: OECD/DAC 등

개발원조의 영역에 포함되는 외국 민간원조단체(NGOs)의 무상 증여는 그 규모가 1,200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부가 집계한 민간외원단체를 통한 외원 현황 및 외국민간원조기관한국연합회(KAVA: Korean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의 자료 등에 따르면 외국의 민간원조단체에 의한 무상자금 및 물자의 도입은 1990년대 초까지 이루어졌다.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의한 활동은 1990년도 중반까지도 이루어졌지만 1990년 이후부터는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이 크게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대신 국내 모금에 의한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원 대상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넓혀지는 등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의한 무상 자금 및 물자 등을 통한 지원은 한국전쟁 중의 시기에 시작되어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원조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은 개발연대 전후기의 시기로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사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사업분야에 전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이들 민간원조단체의 원조 규모를 보면 12,776백만 달러에 달하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의 9.4%에 달하는 적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일반적으로 국제 민간원조단체의 원조 규모가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 규모의 약 10%내외의 비중을 점하고 있는 추세와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도 있다.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의한 원조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 민간원조단체에 의한 원조제공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1945~1960	1961~1975	1976~1990	1991~1993	합 계
131.9	386.8	583.1	98.4	1,200.2

자료: 외원사회사업기관활동사 등

1.3 개발협력차관

정부가 개발을 목적으로 도입하는 공공차관은 원조현황의 파악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굳이 분류해본다면 공적개발원조(ODA)로써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양허적(concessional) 성격의 자금과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양허적(non-concessional) 성격의 자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허적이라 함은 자금의 증여요소(G.E.: Grant Element) 또는 양허성수준(C.L.: Concessionality Level)이 25%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며 비양허적이라 함은 증여요소가 25%미만인 자금을 말하는 것이다.[1] 여기에서 양허적인 성격의 자금으로 분류되는 것은 원조자금이 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비원조성 자금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가 도입한 공공차관은 2003년 말 현재의 협정액 기준으로는 45,131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에서 39,341백만 달러가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헌데 공공차관 자금 중에는 양허성을 기준으로 원조자금의 성격으로 분류되어 이미 앞서 파악한 개발원조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개발원조자금으로 파악된 원조자금 중에서 유상자금으로 분류된 대부분의 원조자금이 곧 이와 같은 원조성 공공차관 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공공차관 인출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약 57억 달러에 달하는 공공차관은 이와 같은 원조성 자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약 300억 여 달러 규모의 공공차관은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비원조성 개발차관, 즉 개발협력차관이라고 할 수 있다.

---

1 개발차관의 양허성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G.E. 또는 C.L.은 모두 차관 액면가액에서 원리금상환액의 현가를 뺀 잔존 가액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다만 G.E.와 C.L.의 차이점은 원리금상환액의 현가 계산 시 G.E.는 그 할인율을 연 1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C.L.은 각국의 평균상업참고금리(CIRR)를 기준으로 하는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것임. 본 조사연구에서는 G.E.방식에 의한 양허성을 기준으로 하였음. 예를 들자면 금리가 연리 4.50%이고 거치 기간이 3년, 상환기간이 10년의 자금인 경우 G.E.는 25.05%가 되어 양허성 원조자금에 속하게 되며 이 조건보다 금리가 낮아지거나 거치 또는 상환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G.E.율은 증가하게됨.

실제로 재정경제부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개별 공공차관사업에 대한 증여요소(G.E.)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분석해본 결과 모두 총 493개의 사업 중에서 227개 사업이 G.E. 25%이상의 개발원조사업에 해당하는 것들이며, 나머지 266개 사업은 비원조성 개발차관사업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금 인출금액 기준으로 보면 원조자금에 해당되는227개 사업의 차관 규모는 5,528백만 달러로 우리가 접수한 유상원조의 규모(5,779백만 달러)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가 비교적 잘 맞아떨어진 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266개 비원조성 공공개발차관사업의 차관자금 인출 규모는 31,196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공차관도입에 있어서 이른바 개발협력차관사업, 즉 비원조성 공공차관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공공차관 도입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원조성차관(ODA)	비원조성개발차관	합 계
건수	227개	266개	493개
금액[1]	5,527.5	31,195.6	36,723.1
(비중,%)	(15.0)	(85.0)	(100.0)

주 [1] 인출금액 기준

다만 이와 같은 공공차관 자금의 분석에 있어서 총체적인 공공차관사업의 자금규모가 재정경제부가 관리하고 있는 테이타베이스 상의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주로 달러화 이외의 차관자금을 달러화 기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라고 할 수 있다. 달러화 이외의 공공차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엔화(￥)와 마르크화(Deutsche Mark)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1970년대 중반이후 절상이 가속화된 엔화의 대 달러화 환율환산 기준 시점의 차이에 따라 자금규모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공차관 사업의 부분별 도입현황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공공차관 사업의 공여주체별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원조성 공공차관 사업에 있어서는 양자간 원조사업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일본과 미국의 비중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은 원조성 개발차관사업 자금의 절반 이상을 공여하였다. 비원조성 공공차관 사업에 있어서는 반대로 국제개발금융기관을 통한 다자적 성격의 개발차관자금의 도입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있다. 특히 IBRD와 ADB의 역할이 대단히 컸음을 쉽게 알 수 있다.

< 공여주체별 공공차관 도입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양 자		다 자		합 계
원조성 공공차관	일본	2,861.3	IBRD	147.0	
	미국	1,958.8	IDA	115.6	
	독일	305.5	ADB	37.5	
	사우디	96.6			
	덴마크	2.8			
	네델란드	1.7			
	캐나다	0.7			
	소 계	5,227.4	소 계	300.1	5,527.5
비원조성 공공차관	일본	3,262.8	IBRD	14,671.9	
	미국	3,221.2	ADB	5,555.7	
	프랑스	3,488.8	EC	7.4	
	캐나다	460.4			
	벨지움	231.4			
	스웨덴	160.8			
	독일	71.5			
	영국	62.7			
	홍콩	1.0			
	소 계	10,960.6		20,235.0	36,743.1

2. 수원 유형 및 형태

2.1. 개관

반세기가 조금 더 넘는 그리 크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의 수원이었지만 한국은 개발원조에 관한 한 하나의 살아있는 역사박물관 또는 개발원조의 백과사전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다양한 형태와 유형의 개발원조를 경험하였다.

다행하게도 한국은 그간 다른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겪고 있는 '채무 재조정(debt rescheduling)' 등 부채 경감 또는 탕감이라는 또 다른 유형의 원조를 경험하지 않은 모범 수원국이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제까지 국제사회가 공여할 수 있었던 거의 모든 형태의 개발원조 및 협력을 제공받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로 많은 나라에서 기술협력 중심의 개발원조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을 두고 '개발 편의점(a development convenience store)'이라는 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1] 그간 한국이 제공받은 개발원조와 협력을 살펴보게 되면 한국은 그야말로 '개발 백화점(a development department store)'라고 지칭해도 손색이 없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더구나 한국은 주요 수원자의 하나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많은 규모의 원조를 접수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이를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되돌려주는 유망한 신규 공여자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국은 개발원조의 살아있는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부여받는 데 손색이 없다고 할 것이다. 건국의 시기로부터 근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한국은 실로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공여받았다.

---

[1] James Gustave Speth, *Speech Note 'People Centered Development Strateg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1995. 9., p. 2. UNDP는 1961년 제1차 유엔개발10년(UN Development Decade)의 선포와 함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산하에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166개 개발도상국에서 각종 개발협력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한국에 대한 개발원조는 한 시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개발원조가 한꺼번에 이루어졌다고 하기보다는, 경제사회 발전의 여러 단계를 거치는 시대적 경과 과정에서 그 환경과 여건에 상응하는 매우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개발원조와 협력이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받아들인 여러 가지 형태의 원조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것은 아마도 현물 형태로 제공받은 전기(電氣) 공급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1948년 북한이 실시한 대남 송전의 중단으로 인하여 야기된 심각한 전기부족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긴급지원방식으로 제공된 발전함(發電艦)을 통한 전기 공급이었다. 미군정 당국은 1948년 초 2척의 발전함을 부산과 인천지역에 도입하여 부족한 전기사정의 완화를 도모하였다. 그 이후에도 다른 여러 척의 발전함에 의한 전기의 공급은 1955년까지 계속되었다.[1]

한국은 이와 같이 현물 형태의 경제 인프라는 물론 소비재와 자본재 등을 포함하는 물자와 시설, 현금과 다를 바가 없는 상품과 기자재, 자본(capital), 전문 기술 및 용역(technical expertise and consultancy), 자원봉사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공여 받았다.

한편 한국은 개발원조의 형태와 유형의 다양성의 면에서는 물론 그 규모 면에서도 하나의 '주요 수원자들(major recipients)' 중의 하나였음에 틀림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99년까지 한국에 공여된 원조의 총 규모는 138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원조 자금은 아니지만 공공차관사업을 통해 실시된 여타 개발협력 사업의 규모가 300억 달러 이상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한국에 제공된 수원사업의 대부분은 어느 특정한 형태의 개발협력 요소만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요소를 가지는 복합적인 형태의 원조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수원 사업을 형태별로 크게 대별해 보면 우선 무상원조사업과 유상차관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한국전력100년사(상권)*, 한국전력공사, 1989. 11., p.405~408

국내 통계자료 및 원조공여자 측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을 토대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의 접수에 있어서 유상원조보다는 무상원조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접수한 원조자금의 규모는 모두 1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무상원조가 82억 달러로 약 58%를 차지하고 있고, 유상원조는 나머지 58억 달러로 42%를 점하고 있다.

무상원조의 경우에는 대부분 물자나 기자재 또는 기술용역의 형태로 공여 되었다. 하지만 원조의 제공은 현물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제공된 물자나 기자재 등을 판매하여 이를 재정자금 또는 경제사회개발 투자 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실상 현금 공여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매우 독특한 방식의 무상원조가 오랜 동안 이루어지기도 했다.

유상 개발차관 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부족한 자본의 조달 및 기술의 도입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양자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진 지원은 거의 모두가 공여자 측의 자본재 또는 기술용역을 도입하는 '조건부 형태의 원조(Tied Aid)'였다고 할 수 있다.

무상원조의 경우 전쟁 중 또는 전후 복구의 시기 등에 있어서의 지원은 소비재 중심의 단순물자와 양곡, 피복 등의 현물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점차 인력 및 기술개발, 정책 능력의 배양과 시스템의 구축 등을 위한 프로젝트사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보습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 초 무상자금 중심의 원조가 유상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제공된 유상자금은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는 연성의 국제개발협회(IDA)차관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관계로 유상원조라 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의 양허성(concessionality)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득과 경제발전 수준이 점차 향상되어나가는 과정에서 유상원조자금의 양허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원조 공여 주체별 구분에 의한 원조의 형태를 보면 국제기구로부터의 다자간(multilateral) 원조, 개별 국가에 의한 양자간(bilateral)

원조, 민간 국제구호단체 및 기관 등 비정부기관(NGO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에 의한 원조 등으로 역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체별 원조사업 유형에 따르면 양자간 원조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약 85%에 달하는 118억 달러의 원조가 양자간 협력, 1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다자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12억 달러가 비정부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 시대·유형·주체별 수원 개요 >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미군정기 1945-'48	경제재건기 1949-'60	개발연대전기 1961-'75	개발연대후기 1976-'90	원조전환기 1991-'99	합 계
유형별	550.3	2,679.5	4,328.2	4,093.9	2,324.6	13,976.5
·무상	525.4	2,652.1	2,385.8	1,333.5	1,300.9	8,197.7
·유상	24.9	27.4	1,942.4	2,760.4	1,023.7	5,778.8
주체별	550.3	2,679.5	4,328.2	4,093.9	2,324.6	13,976.5
·양자	550.3	1,968.1	3,777.3	3,312.2	2,200.0	11,807.9
·다자	-	579.5	164.1	198.6	26.2	968.4
·NGO	-	131.9	386.8	583.1	98.4	1,200.2
수원규모	550.3	2,679.5	4,328.2	4,093.9	2,324.6	13,976.5

자료: OECD/DAC 등

2.2. 주요 유형별 현황

2.2.1. 긴급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원조

경제사회개발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1960년대 이전의 원조는 대부분 긴급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원조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군정이 전후 한국경제와 사회의 안정 차원에서 실시한 긴급 원조, 한국정부가 수립되면서 제공된 미국으로부터의 원조, 한국전쟁이후 이루어진 미국과 국제연합 회원국 및 유엔기구로부터

제공된 양자 및 다자적 형태의 원조는 모두 이 부류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의 원조는 미군정에 의해 공여된 GARIOA원조, 정부 수립기에 유럽부흥계획의 시행을 위해 마련된 경제협력법(ECA: Economic Cooperation Act)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ECA원조, 미국 및 국제연합의 다자적 지원 형태로 이루어진 CRIK원조와 UNKRA원조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상호안전보장법(MSA: Mutual Security Act)에 근거하여 실시한 ICA 원조와 PL480에 입각하여 실시한 미 잉여농산물 원조도 좀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같은 성격의 원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긴급 구호 및 복구적 성격의 원조사업을 통해서는 주로 식량과 의복, 연료, 의약품 등의 생활 필수적인 소비재와 원자재가 그 주종을 이루었으며 기타 195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UNKRA에 의한 지원은 산업, 교육, 보건의료 등의 시설재건 및 확충을 위한 투자에 중점이 두어졌지만 그것은 최소의 기본 수요를 공급하는 한편 전전 수준으로 경제적 생산기반을 회복하는데 그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UNKRA에 의한 전후복구 및 재건을 위한 사업이 1960년에 종료되기까지 이러한 긴급 구호 및 복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성격의 원조사업으로 한국에 공여된 자금의 규모는 최소한 1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것은 우선 GARIOA원조(1945~1948)를 통해서 제공된 409.4백만 달러의 원조와 201.8백만 달러의 ECA 원조(1949~1953), 457.4백만 달러에 달하는 CRIK원조(1950~1956), 122.1백만 달러 규모의 UNKRA원조(1951~1960) 등 공적개발원조 성격의 지원 규모가 1,190.7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조의 내용이 당초의 응급구호와 전후복구지원의 목적을 대부분 달성하고 한국으로부터 1970년대부터 철수하기 시작한 외국 민간원조기관이 실시한 1960년대까지의 원조를 이와 같은 부류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 기간 중 UN을 통해 11.0백만 달러에 달하는 성금을 기부한 외국 민간원조기관들의 제공 자금과

1953년 이후부터 한국에서 활동한 여러 외국민간원조기관 들이 1970년까지 제공한 원조자금 361.0백만 달러를 합하는 경우 그 규모는 372.0백만 달러에 달하게 된다.[1]

2.2.2. 경제 안정과 재정확충 등을 위한 투융자 지원

1950년대 후반 이후 전화의 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경제의 안정과 부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조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경제 전반 및 개별 부분에 대한 조사와 평가에 토대한 경제재건계획의 추진과 관련된 원조사업의 추진이었다. 둘째는 원조 공여자의 이해관계가 크게 고려되는 동시에 한국의 방위력 확보와 재정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방식의 원조자금공여가 그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계획적인 접근을 통한 경제의 재건과 부흥을 위한 원조사업의 추진은 미국의 Mutual Security Act에 입각한 ICA원조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위 Tasca보고서로부터 비롯되는 미국의 전후 한국에 대한 원조는 전후 긴급 복구의 차원보다는 보다 넓은 안목에서 경제안정기반의 구축과 발전토대구축을 위한 지원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61년 미국의 원조가 경제개발지원 중심으로 전면 전환되면서 AID에 의한 원조가 실시되기 이전까지 ICA에 의해 실시된 원조는 1,743.9백만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것이었으며, 원조의 내용을 보면 농산물, 연료, 공업원료 등 이른바 비계획원조의 비중이 대종을 이루고 있었지만 한국경제의 안정기반 구축과 산업 생산력의 확장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 그것은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는 물자의 공급은 물론 재정자금의 확충에도 매우 긴요하였기 때문이다.

---

[1] *외원사회사업기관활동사*, 카바40년사편찬위원회, 홍익제, 1994. 11., p. 66, p. 218

ICA원조 중에서 비계획 원조로 공여된 물자와 시설재, PL 480에 의한 잉여농산물 등은 실수요자에게 판매되어 여기에서 발생한 판매대금은 한국의 방위지원과 재정확충 등의 목적에 활용되었는데 특히 잉여농산물 구입자금의 공여와 활용은 그 형태가 매우 독특할 뿐만 아니라 아주 특이한 방식에 의해 관리되었다.

1955년 첫 번째의 도입협정이 체결된 뒤 무상 지원 방식으로 제공되기 시작한 미국의 잉여농산물 도입은 1972년까지 계속됐다. 매년 한미 양국간에 이루어지는 잉여농산물 도입협정에 의해 도입되는 양곡 등의 농산물은 그 물품의 판매대전과 ICA의 비계획원조를 통해 도입된 물자 및 원자재 등은 앞서 1948년에 한미 양국간에 체결된 원조협정에 근거하여 운용 중이던 특별계정, 이른바 대충자금(Counterpart Fund)에 납입하도록 하고 이 자금을 재원으로 일부 일반 재정자금을 충당하는 한편 경제부흥특별회계를 통해 다양한 투융자 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매우 독특한 원조자금 운용 및 사업실시 메카니즘을 수립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ICA를 통해 실시한 원조 중에서 이른바 비계획원조(Non-Project Assistance)의 대부분과 PL480에 따라 제공된 무상의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는 이와 같은 독특한 성격과 유형의 원조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원조를 통해서 조성된 대충자금 운용은 무상지원에 의한 미국의 농산물도입이 종료되던 1972년까지 운용되었으며 여타 무상원조 물자 판매대금 등과 함께 정부 재정운용에서 차지하는 대충자금의 비중이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총 세입의 40%를 상회하는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경제안정과 재정확충을 위한 이러한 유형의 원조 규모는 1953년부터 시작된 ICA의 원조자금 중 비계획원조 사업에 해당되는 1,261.7백만 달러의 원조와 PL480에 의하여 1960년 이전까지 도입된 잉여농산물 무상 도입액 137.8백만 달러[1]와 그 이후의 1972년까지

---

[1] 서남원, p. 33 및 한국은행 *국제수지통계*, 1987. p. 30-33

무상으로 도입된 잉여농산물 564.2백만 달러 등 702.0백만 달러를 포함하여 모두 1,963.7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2.2.3. 경제사회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및 부분투자 지원

2.2.3.1. 개관

1961년대 초 개발연대에 들어서면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접수하기 시작한 개발원조와 협력 자금은 주로 경제사회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및 주요 산업부분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조에 의한 사업의 방식이 경제사회개발 등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1950년대에 걸쳐 꾸준하게 이루어진 전후복구 및 경제재건 사업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과거 주로 무상의 형태로 공여되던 원조가 점차 유상의 형태로 전환되기 시작함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특정 프로젝트 및 산업 부문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 방식으로 원조사업의 실시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새로운 원조실시 기관으로 AID를 설립하여 실시하기 시작한 경제원조, 한일 국교정상화와 함께 일본으로부터 도입한 대일 청구권자금 등 양자간의 자금은 물론 IDA, IBRD, ADB 등 국제개발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된 개발협력 자금은 모두 이러한 경제사회개발을 위한 투자적 성격의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2.3.2. 대일 청구권자금에 의한 경제사회개발 투자

1965년 한일간의 외교정상화와 함께 이루어지기 시작한 대일 청구권자금의 도입은 국가 기간시설을 위한 투자는 물론 각 산업 부

문의 개발을 위한 재정투융자 자금으로 활용되었다.

무상 3억 달러, 장기저리의 유상차관 2억 달러로 구성된 청구권 자금은 광공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를 중심으로 농림업, 수산업, 과학기술개발 등 전반적인 분야의 투자사업에 활용되었다. 당초 대일 청구권자금은 주로 농림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1차 산업 및 일반 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 여력이 극히 부족한 여건에서 추진하기 시작한 포항종합제철 건설 및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의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불가피 청구권자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당초의 청구권자금 사용계획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대일 청구권자금의 사용에 있어서 국가기간산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에 활용하는 비중을 크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예를 들면 제1기 포항제철건설비를 지원하는데 대일 청구권자금의 24%에 달하는 119.5백만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도 6.9백만 달러의 대일 청구권 자금이 활용되었다.

대일 청구권자금에 의한 경제사회개발 투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1]

< 대일 청구권자금에 의한 주요 투자 내역>

·농림 분야: 농업용수개발(16.4), 농업기계화(4.4) 등 39.7백만 달러

·수산 분야: 어선건조(8.3), 시험선 도입(4.0) 등 27.2백만 달러

·광공업 분야: 포항종합제철건설(119.5), 원자재 도입(132.6), 중소기업 육성(22.2) 등 280.1백만 달러

·과학기술개발 분야: 학교 실험실습시설(6.0), 기상예보시설(6.7), 원자력연구시설 확충(2.7) 등 20.3백만 달러

·사회간접시설 등 분야: 소양강다목적댐 건설(21.6), 경부고속도로 건설(6.9), 철도시설 개량(20.3), 해운진흥(8.2), 시외전화시설 확장(3.7) 등 86.9백만 달러

---

1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1996

2.2.3.3. 프로젝트형 기술원조사업

무상형태의 기술원조사업 중에서도 특정한 개발 목적을 위하여 인력, 기술, 장비 등의 다양한 유형의 투입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공되는 원조사업을 프로젝트형 기술원조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사업은 전화복구 및 인적 기본수요의 충족을 위한 긴급구호 성격의 무상원조사업이 이루어진 이후의 단계에서 인적자원의 개발은 물론 경제 및 사회하부구조의 확충 등을 위한 목적에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방식의 원조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내의 자본은 물론 인력과 기술 수준이 극히 빈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개발 경제 재건은 물론 개발초기단계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프로젝트형 기술원조사업의 추진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50년대 중반 이후의 UNKRA에 의한 계획원조, 미국의 상호아전보장법(MSA)에 입각한 ICA원조와 이에 연이어 계속된 1960년대의 AID원조와 UNDP에 의해 제공된 원조중의 일부, 1950년대와 '60년대에 양자간 협력 차원에서 무상형태로 이루어진 일본, 독일, 벨지움 등으로부터의 주요 원조사업들은 대부분 이러한 유형의 원조사업이었다.

< 주요 프로젝트형 기술협력 사업>

- ○국립의료원(Korea Medical Center) 건립사업: 1956-1969/UNKRA 및 Scandinavia 3국 공동지원/15,565천 달러
- ○중앙직업훈련원(현 인천기능대학) 건립사업: 1968-1981/UNDP지원/2,620천 달러
- ○한국어업기술훈련소 건립사업: 1963-1978/UNDP 및 FAO/3,867천 달러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사업: 1966-1970/미국 AID/9,080천 달러(1,900천 달러의 AID차관자금 포함)
- ○한·독부산직업훈련원 설립사업: 1970-1975/독일/16,000천 DM

○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사업: 1970-1976/일본/1,087백만엔(3,651천 달러)
○ 대전직업훈련원 설립사업: 1976-1983/일본/2,000천 달러
○ 한 · 백창원직업훈련원 설립사업: 1976-1980/벨지움/6,000천 달러
○ 창원기능대학 설립사업: 1979-1990/독일/13,000천 DM

그러나, 전체적인 무상원조 사업비 중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프로젝트형 기술원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은 수집 자료의 부족으로 전반적인 현황의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관련 연구자료 또는 통계연감자료 등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술협력사 업에 있어서도 Project Aid로 분류되는 IRTC(Investment-related Technical Cooperation) 타입의 기술원조사업은 통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1]

다만, 여러 가지 유형의 프로젝트형 기술원조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UNDP에 의한 기술협력사업과 여타 주요 부문의 프로젝트형 기술원조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살펴보게 될 주요 분야에 대한 원조사업 현황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2.2.3.4. 프로젝트 원조(Project Aid) 사업

여기에서 이른바 '프로젝트 원조(Project Aid)' 사업이라고 지칭하는 원조사업은 무상형태의 프로젝트형 기술협력 사업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써 공공차관사업을 통해서 실시된 유상 형태의 대부분의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특정 목적의 개발 사업을 위하여 다양한 내용의 원조 요소가 적절하게 결합되어 추진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개발원조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단위 개발 프로젝트사업의 추진은 양자 또는 다자적 방식의 사업 추진을 통해 1960, 1970년에 걸쳐 가장 활발하고 다양

---

[1] 각 년도 *과학기술연감* 자료 및 최종기, *기술원조계획에 대한 검토*, 행정논총, Vol. 5, No. 1,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1967

하게 실시되었으며 일부 분야의 사업에 있어서는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유형의 개발원조사업은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공공차관현황자료집을 통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대일 청구권자금에 의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일부 유상자금 지원 형태의 프로젝트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유상의 사업 등을 모두 포함하여 우리가 도입한 유상형태의 프로젝트 원조사업 규모는 모두 5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유상의 프로젝트 원조사업에 대한 내용은 추후 주요 수원 분야 및 내용에 대한 사항을 알라보는 과정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2.4. 개발협력 지원

우리가 그간의 경제사회발전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제공받은 지원을 논함에 있어서 개발원조와는 구별되는 개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협력의 범위를 크게 넓혀본다면 외국인에 의한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물론 상업차관(Commercial Loan) 등 민간자금의 흐름(Private Flow)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무상 또는 공적개발원조의 영역에 해당되는 유상차관 협력이외에 정부를 통해 도입된 공공차관으로 그 범위를 축소시켜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부문(Sector) 개발 또는 다부문(Multi-sector)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연대 후반에 접어들어서면서는 공공차관을 통한 개발협력 차원의 단위 개발프로젝트사업의 추진과 함께 단위 부문 또는 다부문에

대한 개발사업의 추진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즉, 산업합리화를 위한 기업시설개체자금,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자금 및 농업자금 지원의 확충을 위한 농업신용차관은 물론 교통, 통신, 주택, 수자원개발 등의 특정부문 개발을 위한 공공차관 자금의 도입이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1970년대 초 이후 지역 간 개발격차의 완화 등을 위해 확대된 지역개발 투자를 위한 공적 자금의 도입이 증가되고 개발연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환경과 같은 다부문에 대한 투자 자금의 도입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또 다른 한 가지 공공차관을 통한 개발협력사업은 거시적인 경제운용의 차원에서 경제안정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정부문의 집중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불균형 발전전략의 추진 및 초고속 성장의 결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산업간, 지역간 불균형의 시정은 물론 정부주도의 경제 운영 결과 빗어진 가격 및 시장구조의 왜곡 등의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공적 자금의 도입이 개발연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1970 및 '80년대에는 기업·금융의 구조조정과 시장 및 가격구조의 개선 등을 위한 구조조정차관(SAL: Structural Adjustment Loan)이 주로 세계은행으로부터 도입되었다.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과정에서는 경제전반의 긴급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대규모 공적자금이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으로부터 도입되었다.

< 연대별 구조조정차관 도입현황 >

(단위: 백만 달러)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합 계
-	260	550	10,734	11,544

자료: 공공차관분석(Working Paper), 재정경제부, 3003. 9

이러한 일반적인 개발협력차관 자금의 도입에 있어서도 역시 주요 원조 분야 및 내용을 분석·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2.2.5. 봉사단 접수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1981년까지 16년 동안에 걸쳐 미국이 파견한 평화봉사단(Peace Corps)의 자원봉사단원을 접수하였다. 미국은 이 기간 중에 영어교육 강사를 주축으로 주로 교육 분야에 중점을 두어 봉사단을 파견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대외원조 통계자료인 Greenbook에 따르면 한국에 파견된 봉사단을 위하여 지출된 사업비는 1966년부터 1981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모두 30.6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매년 약 2백만 달러 정도의 자금이 이 사업을 위해 쓰여 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의 평화봉사단 파견 및 접수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 정부는 1966년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체결[1]하여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 *Agreement Relating to the Peace Corp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44. 9. 14. 각서 교환

3. 주요 수원 분야 및 내용

3.1. 개관

수원과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연속성 및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부재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문 또는 분야, 유형별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 다만, 196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까지는 수원사업을 시행했던 주요 기관이 발간했던 당시의 자료 또는 연감 등의 문헌에 부분적으로나마 해당 분야에 대한 수원사업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들을 발견할 수 있다.[1]

예를 들자면 농업부문에 대한 원조현황에 있어서는 농업은행이 1960년대 초에 발간한 농업연감에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수원실적 이외에도 농업부문에 대한 원조내역이 비교적 포괄적으로 나타나 있다. 과학기술처가 매년 발간한 과학기술연감 및 과학기술행정20년사(1987)에는 197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까지의 비교적 종합적인 내용의 기술원조 접수실적이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내역에는 이른바 FSTC(Free 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방식형의 기술원조에 대한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이른바 프로젝트형 기술원조 즉, IRTC(Investment-Related Technical Cooperation)방식의 기술협력사업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1980년대 중반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FSTC방식의 사업내용도 전혀 나타나있지 않다.

한편 그 이외의 주요 부문에 대한 원조사업에 있어서는 직업훈련분야의 경우 노동부가 발간한 국제협력업무편람(1995)에 개괄적인 이 분야 원조사업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며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가 발간한 제29차 세계보건총회자료집(1976)에

---

1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국제수지통계에서는 이전거래에 있어서 대일청구권 자금(PAC), ICA원조, PL480원조, 기타원조 등의 구분과 경상수지에 있어서 개발차관, 상업차관, 직접투자 등의 구분을 하고 있으나 제공 분야에 대한 구분은 하고 있지 않음.

1970년대 중반까지의 수원 개요가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전력 및 통신부문에 있어서의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원조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흐름은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한 한국전력 100년사(1989) 및 체신부가 발간한 차관사무편람(1971)을 통해서 아주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여러 유형과 분야에 대한 개발원조에 있어서 가장 소상하게 그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외국민간원조단체에 의한 무상원조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KAVA라고 알려져 있던 외국민간원조기관한국연합회가 1995년에 발간한 외원사회사업기관활동사(40 Years History of KAVA)는 195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40여 년 동안의 민간원조단체의 활동사항과 그 내역을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해놓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원조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의 제약을 감안하여 주요 분야의 개발원조에 대한 현황은 상기 몇 개 분야에 있어서 주로 1960년대 또는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부분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만, 도입자금의 인출 및 상환 관리 측면에서 그 전체적인 개요의 파악이 가능한 공공차관, 이른바 공적개발금융(ODF)사업에 있어서는 OECD/DAC가 사용하고 있는 주요 원조분야별로 이를 분류하여 그 내역을 분석 · 정리해 볼 계획이다.

3.2. 개발원조의 주요 분야별 수원

3.2.1. 농업분야 수원

전후 복구 및 재건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된 1950년대의 시기에 있어서 농업은 가장 중요한 원조 대상 분야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전체취업인구의 절반 정도가 농업부분에 의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 중심의 경제 여건상 농업생산력의 회복과 생산성의 향상은 식량 등 인적 기본수요의 충족 측면에서 가정 중요한 과제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초기의 수원은 농업 부문에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개발연대에 진입하기 이전까지 대체로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까지 공여된 정부개발원조는 모두 29억 4천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중 PL480에 의한 농산물 및 1차 산품을 포함하는 농업부문에서의 수원 규모는 12억 3천만 달러로 4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농업분야에 대한 원조현황 >

(단위: 천 달러)

원조주체	총원조(1945~1960)(A)	농업부문원조(B)	비중(B/A,%)
양자(미국)	2,356,285	989,118	42.0
GARIOA	502,097	129,576	25.8
ECA	109,164	37,307	34.2
ICA	1,587,302	664,513	41.9
PL480	157,722	157,722	100.0
다자(UN)	579,462	239,654	41.4
CRIK	457,378	214,297	46.9
UNKRA	122,084	25,357	20.8
합 계	2,935,747	1,228,772	41.9

자료: 농업연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60, 1961

1953년 총 수원액의 64%에 달하던 농업부문 원조의 비중은 그 이후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1960년까지도 40%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950년대에 연도별 수원 규모가 크게 증가되는 가운데에서도 전반적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원조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원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CA를 통한 원조에 있어서도 비료 등 농사용 물자와 원면 등 1차 농산품의 공여가 많았으며, 특히 PL480에 의한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의 규모가 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후 복구와 재건에 중점이 두어졌던 유엔에 의한 UNKRA원조

에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전후 미국이 계획원조와 비계획원조로 나누어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양자간 원조인 ICA원조에 있어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원조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다.

1960년대의 개발연대 들어서면서는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UNDP가 제공하는 다양한 방식의 기술원조가 농업 및 수산 분야에 실시되었다. 특히 1960년대에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UNDP 지원사업에 있어서 농업부문은 총 지원 규모의 60%를 차지할 만큼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62년부터 1971년까지 실시된 36건 27.3백만 달러의 사업 중에서 농업부문의 사업은 12건 16.2백만 달러에 달했다. UNDP에 의한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은 1990년대까지도 계속되어, UNDP가 제공한 총 249건 95.4백만 달러의 원조 가운데 30건 23.7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한편 UNDP가 제공한 농업부문에 대한 원조사업은 그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비교적 다양한 형태의 농업기술 및 교육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1960년대 중반이후 도입된 대일 청구권자금을 통해서도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당초 농림수산부분에 중점을 두었던 자금의 사용계획이 포항종합제철소 건설사업 등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지원확대로 그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농업용수개발 등 여러 분야에 이 자금에 의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농업부문의 식량수급 등과 관련하여 특기할만한 것은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에 의한 식량의 도입뿐만이 아니라 FAO와 WFP (World Food Programme)의 식량원조 프로그램에 의한 양곡의 도입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1973년도부터 소규모로 시작된 WFP에 의한 지원사업은 그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1976~1979년 동안에는 24.2백만 달러에 달하는 소맥분 76,344톤이 공여되었으며 이 무상 공여 식량판매 대전으로는 낙후지역의 간이급수시설 3,983개소 및 위생우물 55,200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 시행되기도 하였다.[1]

---

1 *제29차 세계보건총회자료*, 보건사회부, 1976, p.41

3.2.2. 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

3.2.2.1. 기술원조의 개념

기술원조는 크게 FSTC(Free 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방식의 기술협력과 IRTC(Investment-Related Technical Cooperation)방식의 기술협력 사업으로 나뉘어 진다. 여기에서 Free 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은 훈련생 파견교육, 전문가 또는 컨설턴트의 초청, 기술 용역의 접수 등과 같은 연성의 기술협력을 일컫는 것이다. 한편 Investment-Related Technical Cooperation은 무상 공여 방식의 '프로젝트 원조(Project Aid)'와 같은 것으로써 교육훈련, 기술자문 등과 같은 Free 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 방식의 기술협력 요소는 물론 기자재 및 장비 등과 같은 자본적 요소를 포함하는 기술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IRTC방식의 프로젝트형 기술원조사업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정부와 UNILO, FAO, UNESCO, ICAO, WHO, ITU, WHO와 공동으로 체결된 개정 표준 협정[1]에 따르면 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는 바, 이들 모두 FSTC방식의 기술협력에 속하는 협의의 기술원조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중반에 작성된 기술원조와 관련한 논문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이 시기까지의 기술원조 내용은 대부분이 협의의 기술협력

---

[1] *Revised Standard Agreement between the UNILO, the FAO, the UNESCO, the ICAO, the WHO, the ITU, the WHO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58. 6. 19.

(a) 기술 자문 또는 지도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서비스 제공
(b) 세미나, 훈련프로그램, 시범프로젝트(demonstration projects), 전문가 작업그룹(expert working groups)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하기 위한 지원
(c) 지명된 후보자에 대한 장학금(scholarships)과 연구비(fellowships) 등의 제공
(d) 시험프로젝트(pilot projects), 검사(tests), 실험(experiments) 또는 연구(research)의 준비 및 실시 지원 등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Free 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 범주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연감 및 과학기술행정10년사 등에 나와 있는 기술협력의 경우에는 1960년대 후반 이후 본격화된 무상 프로젝트 방식의 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는 없는 실정이다.

3.2.2.2 기술원조 접수 현황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원조는 전후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1950년대 후반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1980년대 중반의 개발연대 후반기까지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기술원조는 그 성격상 사업에 투입되는 자금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개발의 주체가 되는 인력과 조직의 개발역량(development capacity)을 배양·확충한다는 측면에서 그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기술원조는 긴급구호지원과 복구를 위한 원조가 종료되면서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의해 실시되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UN 및 여타 선진국들로부터의 양자간 지원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편 기술원조의 접수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196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판 과학기술연감까지 나타나 있는 매 년도의 기술원조 접수현황을 종합해 보면 1951년부터 1985년까지 35년 간 우리나라에 제공된 각종 기술원조는 모두 383.8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은 1950, ‘60년대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경로로부터 원조의 공여가 거의 없었던 1950년대에 있어서 기술원조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지원은 거의 독보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50 및 ‘60년대를 통해 미국은 각종 Fellowship 프로그램의 제공 등 FSTC유형의 기술원조 사업을 매우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UNDP와 UNEPTA[1]및 UNSF[2]등을 통한 UN기구로부터의 기술원조는 1960년대 이후에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협력은 1999년에 이르러서야 일본이 일본국제협력사업단(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통해 지원하는 한국으로부터의 연수생 초청사업 등을 종료한 것에 비추어볼 때 우리가 제공받은 기술원조의 총 규모는 그 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자료의 제약 상 기술원조에 대한 사항 역시 1980년대 중반까지의 현황소개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편 1960년대 중반부터는 다자 협력의 형태로 일면 수원, 일면 공여의 기술협력이 실시된 Colombo Plan[3]에 참여했으며 이 계획으로부터도 적지 않은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 공여주체별 기술원조 제공현황(1951~1985) >

(단위: 백만 달러)

	1951-1961	1962-1971	1972-1981	1982-1985	합 계(비중,%)
미국	53.1	62.5	22.7	-	138.3(36.0)
UN	2.3	42.2	53.6	15.8	113.9(29.7)
Colombo Plan	-	7.1	25.2	7.3	39.6(10.3)
기타	0.5	12.1	61.2	18.2	92.0(24.0)
합 계	55.9	123.9	162.7	41.3	383.8(100)

자료: 과학기술행정20년사, 과학기술처, 1987 p249

[1] U.N. Expanded Program for Technical Assistance

[2] U. N. Special Fund

[3] 영연방국가(The Commonwealth) 중심으로 1951년에 Sri Lanka의 Colombo에 설립된 지역경제협력기구로 공식 명칭은 Colombo Plan for Cooperative Economic Development in Asia and Southeast Asia였음. 현재의 공식명칭은 Colombo Plan for Cooperative Economic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24개국의 회원국과 1개 잠정 회원국(Provisional Member)으로 몽골이 참여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이 계획에 1963년에 가입하였음.

기술원조 형태별 수원 현황을 보면 전문가 초청, 훈련생 파견, 용역기술, 물자 및 장비 공여 등 FSTC방식 4가지의 유형 모두를 비교적 고르게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기술원조를 통하여 1951년부터 1985년까지 각 분야에 모두 4,643명의 외국인 전문가가 초청되었으며 20,877명의 우리 인력이 외국에 파견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교육 또는 기술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기술원조 내역을 보면 기술용역 제공 및 물자 · 장비의 공여가 약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와 같은 기술원조의 공여가 어느 분야에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1] 더욱이 ·80년대 중반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내용의 파악마저 여의치 않다.

< 유형별 기술원조 수원현황(1951~1985) >

(단위: 백만 달러)

	1951-1961	1962-1971	1972-1981	1982-1985	합 계(비중,%)
전문가 초청	13.8	29.1	31.6	15.0	89.5(23.1)
(명)	(792)	(1,547)	(1,696)	(607)	(4,643)
훈련생 파견	8.5	21.5	39.2	15.0	84.2(22.6)
(명)	(2,310)	(7,049)	(8,717)	(2,708)	(20,784)
용역기술 접수	28.9	38.2	13.3	2.4	82.8(22.3)
물자·장비 접수	4.6	35.1	66.8	8.9	115.4(31.0)
합 계	55.8	123.9	150.9	41.3	371.9(100)

자료: 과학기술행정20년사, 과학기술처, 1987 p249

[1] 1951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술원조 접수 내용에 있어서는 비교적 상세한 내용은 '기술원조계획에 대한 검토(최종기, 행정논총, Vol. 5, No. 1,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1967)'에서 찾아볼 수 있음.

3.2.3. 직업기술교육 및 훈련 분야

3.2.3.1. 개요

개발연대 전기를 중심으로 가장 활발하게 공적개발원조사업이 실시된 분야가 직업기술교육 및 훈련 분야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만큼 다양한 여러 원조 공여주체로부터의 협력을 제공받은 것 같아 보인다. UNDP, ILO 등의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원은 물론 ADB, IBRD 등으로부터 개발협력을 제공받은 이외에도 독일, 일본 미국, 벨지움 등의 여러 나라들로부터도 여러 가지 형태의 원조를 공여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양자간 협력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독일로부터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는 주요 사례연구의 일환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직업기술교육 및 훈련이야말로 개발도상국이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으로의 중간적인 기술과 기능, 제도 등의 이전을 통해 수원국의 인적·기술적 능력을 가시적으로 배양하는데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협력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절대적인 지원 규모가 그리 큰 것은 아니지만 특정 부문에 매우 가시적으로 그 부문의 역량 확충과 제도 발전을 이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3.2.3.2. 직업기술교육 및 훈련 분야 수원현황

이 분야에 대한 협력은 우리나라가 이 분야의 일반적 제도, 시설 및 장비가 거의 불모인 상태로부터 시작되어 이 분야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해나가기 시작하면서 공여자로부터의 관련 교육훈련 시스템과 장비와 기자재를 제공받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사업시행과 관련된 거의 모든 요소들을 해외로부터의 원조에 의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인 직업훈련원은 1967년 직업훈련법을 제정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기초를 만들어나가면서 병행하여 실시된 UNDP와 ILO 공동지원에 의한 중앙직업훈련원 설립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로 독일, 일본 ,미국, 벨기에 등의 나라로부터 여러 직업훈련원설립을 위한 기술과 장비 등을 공여받았으며 직업훈련분야 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기술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받기도 하였다.

ADB, IBRD에 의한 직업훈련분야의 사업은 대부분 각 지방지역의 직업훈련원 설립을 위한 장비 및 기재의 도입 등을 위한 개발차관 사업이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이들 다자간 개발협력기관들로부터의 차관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직업훈련 실시 기능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충되었다.

< 직업기술교육 및 훈련분야 무상 원조사업 현황 >

(단위: 천 달러)

공여주체	사업유형	사 업 명	지원기간	지원규모
UNDP	프로젝트	중앙직업훈련원 설립	1968~'81	2,620
	"	서울국제직업훈련원 설립	1990~'97	570
양자				
독일	프로젝트	부산직업전문학교 설립	1970~77	4,622
	"	창원기능대학 설립	1979~'90	7,441
	정책·기술 자문	한국직업훈련자문사업 (1차~6차 사업)	1975~'93	13,802
		추가 자문사업	1994~'96	385
일본	프로젝트	대전직업훈련원 설립	1976~'88	2,000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		3,651
벨지움	프로젝트	창원직업전문학교 설립	1976~'90	5,461
미국	"	정수직업훈련원 설립	1976	250
합 계		10 건		40,802

자료: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노동부, 2003. 7. 등

3.2.4. 보건의료 · 사회사업 분야

3.2.4.1. 개요

보건의료 및 사회사업 분야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상원조 형태의 지원이 제공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야의 사업은 특히 6 · 25전쟁기간동안은 물론 전후의 긴급구호 및 사회적 기초수요의 충족을 위한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중 연합군에 참여하여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 참전 16개국은 물론 의료지원 등을 제공한 5개 국가와[1]여러 유엔기구 등의 경우 의약품 제공 및 의료 인력의 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긴급 의료구호활동 및 사회사업에 참여하였던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의료보건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사회의 지원은 전후 1950년대의 재건기 이후에도 계속되어 1970년대의 시기까지도 꾸준하게 지속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 증진 등의 기초 보건의료 활동의 진작은 물론 의료시설의 확충과 기술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의료보건 및 사회사업 분야에 대한 국제적 지원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미국, 일본 등에 의한 양자적 지원도 적지 않았지만 UNKRA를 비롯하여 WHO, IPPF[2], UNICEF[3], UNDP, UNFPA[4]

---

1 6·25전쟁의 발발과 함께 소집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U. N. Security Council)는 1950. 6.25. 및 6. 27. 두 차례의 회의를 소집하여 북한의 남침을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에 대한 지원을 결의하였으며 7. 7.의 회의에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 및 원조의 통일화를 위해 미국이 지휘하는 '통합사령부'에 회원국들이 집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Security Council Resolution of July 7 1950)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타일랜드, 그리스, 네델란드,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필리핀,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16개 국이 참전하는 한편 스위스 등 여러 나라들이 의료구호원조 등을 제공하였음

2 The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국제가족계획연맹)

3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ern's Emergency Fund(국제연합국제아동긴급구호기금)

4 The 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국제연합인구활동기금)

등 다양한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에 진출한 많은 민간외국원조단체에 의한 지원 또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2.4.2. 보건의료·사회사업 분야 수원

매우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보건의료 및 사회사업 분야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관련 자료 획득의 미흡 등으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의료보건 분야 협정자료집이라는 업무용 책자와 1976년 제29차 세계보건총회 참가와 관련하여 작성된 참고자료 등을 통해 197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진 보건사회 분야에 대한 총괄내역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민간원조단체에 의해 이루어진 의료 및 사회사업분야 원조활동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외국민간원조기관한국연합회, 이른바 KAVA의 자료를 통해 비교적 소상한 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

1947년부터 1975년까지 공여된 보건의료 및 사회사업 분야에 대한 총 원조 제공규모는 575.1백만 달러에 달하며 WHO 등의 다자협력기구는 물론 미국AID 등의 여러 양자원조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헌데 보건 · 의료분야 무상원조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외국의 민간원조단체에 의한 사회복지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원조단체를 통한 원조 규모가 440.5백만 달러로 의료 · 보건 분야 총 원조액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의료보건 및 사회사업 분야에 대한 지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내용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민간외원단체 등에 의한 민간 원조사업은 1990년대 초까지 계속되었으며 모두 1,200백만 달러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주요 원조사례 연구과정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의료보건 분야 수원에 있어서 또 달리 특기할만한 사업은 UNKRA와 Scandinavia 3국(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이 공동으로 제공한 국립의료원(Korea Medical Center)건립사업과 UNFPA, IPPF 등에 의해 제공된 가족계획지원사업, WFP에 의해 낙후지역 보건위생사업 지원 및 취로사업(Work for Food) 등과 연계하여 실시한 식량공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스칸디나비아 3국이 주축이 되어 실시한 국립의료원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의 주요 원조사업 사례연구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가족계획사업은 국제기구 및 양자협력기구 등이 참여하는 다자적 형태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국제기구로는 국제연합인구활동기금(UNFPA), 국제가족계획연맹(IPPF)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사업은 UNFPA와의 협정체결[1]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는바, 이 계획에는 이들 국제기구는 물론 스웨덴국제개발처(SIDA)[2], 미국 인구협회 등과 같은 여러 기구와 단체가 참여하였다. UNFPA와의 협정서 부록상의 가족계획사업을 보면 1974년 한해만 하더러도 UNFPA가 제공하는 원조자금 1.4백만 달러를 포함 모두 6.4백만 달러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족계획사업의 경우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에 따르는 인구증가율의 급속한 둔화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의 가족계획 분야의 수원사업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취로사업, 간이급수개량사업 등의 사회사업과 연계하여 실시된 이 사업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식량계획(WFP)과 1968년도에 체결된 원조협정[3]에 토대하여 1969년부터 실시되었다. 1969년

---

[1] *Agreement on a Population Programm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1974.3.

[2] The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3] *Basic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FAO World Food Program concerning Assistance from the World Food Program*, 1968.5. 3.

부터 1982년 간에 걸쳐서 실시된 WFP의 무상 식량지원사업은 총 99백만 달러가 지원되었다.[1]

< 보건사회 분야 수원 현황 >

(단위: 천 달러)

공여주체	1947-1965	1966-1970	1971-1975	합 계
UNDP(유엔개발계획)	326.0	239.3	177.0	742.3
UNICEF(유엔아동기금)	1,887.8	2,076.6	1,733.0	5,697.4
WHO(세계보건기구)	1,127.6	1,558.1	1,949.2	4,634.9
UNFPA(유엔인구활동기금)	-	-	1,672.2	1,672.2
WFP(세계식량계획)	-	-	720.3	720.3
UNKRA(유엔한국재건단)	2,430.3	-	-	2,430.3
Colombo Plan	24.7	64.7	127.4	216.8
IPPF(국제가족계획연맹)	63.0	815.6	2,538.5	3,417.1
SM(Scandinavian Mission)[1]	12,076.6	3,073.1	415.9	15,565.6
다자 소계	17,936.0	7,881.7	9,333.5	33,096.9
미국(USAID)	11,824.5	73,130.8	7,885.4	92,840.7
일본(JICA)	-	234.6	2,307.7	2,542.3
양자 소계	11,825.5	73,365.4	10,193.1	95,383.0
NGOs(KAVA)[2]	200,229.2	90,349.1	146,823.0	440,543.3
기타	170.1	54.8	104.7	329.6
합 계	230,159.8	176,084.7	168,862.6	575,107.1

주 [1]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3자간 대한 지원협의체
[2] Korean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
자료: 제29차 세계보건총회자료, 보건사회부, 1976. 5

[1]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ECD/DAC

3.2.5. 전력·통신 분야

3.2.5.1. 전력 분야

가장 기초적인 경제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전력 및 통신 부문에 대한 원조는 긴급구호지원 다음의 단계에서 절실한 지원이 요구되는 수원분야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력부문은 가장 시급한 원조가 요구되는 실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지역 간의 정치적·이념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1948년 초부터 북측으로부터 공급되던 전기의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남한지역은 심각한 전력부족 현상을 겪게 되었다. 더구나 6 · 25 전쟁에 의한 투자의 중단은 물론 기존 시설에 대한 피해는 전후 남한의 전력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력의 공급은 중요한 원조사업의 하나가 되었으며 그 이후 경제재건기에 있어서도 커다란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전기는 기술과 자본 모두를 해외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기초적인 경제하부구조가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성적으로 부족한 전기의 공급은 미군정시기로부터 발전함(發電艦)에 의한 전기 생산 및 공급이라는 특이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식의 전기 비상 공급은 GARIOA원조는 물론 건국 이후의 ECA원조, 6·25전쟁 및 전후의 CRIK, UNKRA, ICA원조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1] 발전함에 의한 전력의 생산 및 공급은 1948년부터 부산항과 인천항에 도입되어 각가 발전을 개시한 자코나(Jacona)호와 일렉트라(Electra)호를 시작으로 그 이후 부산, 인천, 마산, 목포, 장승포 등의 항구에 마쉬(Marsh)호, 와이즈맨(Wiseman)호, 호스(Horse)호, 화이트호스(White Horse)호, 임피던스(Impedance)호, 사라낵(Saranac)호 등이 정박하면서 전기를 생산 공급하였다. 발전함에 의한 전기공급은 1955년 9월 대형 발전함 임피던스호가 발전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귀환하기까지 계속되었다.

---

[1] 한국전기100년사, 한국전력공사, 1989. 11., p. 405-406

발전함을 통한 전기의 공급은 전후 복구가 본격화되어 발전 시설에 대한 피해복구 및 발전설비 증량을 위한 건설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중단되었지만 한때는 우리나라 총 발전량의 56%에 이를 만큼 그 기여가 컸다고 할 수 있다.

< 발전함에 의한 전기공급 현황 >

(단위: 백만 KWH)

구 분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발전함발전량(a)	83.3	132.6	64.3	190.0	231.5	211.7
국내총발전량(b)	984.0	655.0	420.7	336.6	639.7	736.1
발전함비중(a/b,%)	12.0	20.2	15.3	56.4	36.2	28.8

자료: 한국전기100년사, 한국전력공사, 1989. 11., p.407

6·25 전쟁 이후에는 단계적인 전원개발계획의 수립과 함께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시설사업에 많은 원조자금을 활용하였다. 1953. 5. UNKRA와 체결한 '발전시설 및 송배전선 부흥계획에 관한 협정'[1]을 토대로 영월, 청평, 당인리 발전소 복구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한 360만 달러 규모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 계획에 따를 각종 시설복구 및 증강사업이 1954년부터 1956년에 걸쳐 실시되었다.

한편 1954년에 수립된 전원개발 3개년 계획에 의해 실시된 마산, 삼척, 당인리 등 3개 화력발전소 시설확충 사업에 미국 FOA로부터의 원조자금 3,296만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화천수력의 발전기 증설 및 복구 사업에 FOA 원조자금 898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그 이후에는 영월 화력발전소 복구, 군산화력발전소 건설 등을 위한 사업에 미국의 ICA 및 AID에 의한 원조자금이 제공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도 두세 차례의 장기 전원개발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졌으나 재원조달의 문제 등으로 그 계획의 추진은

[1] 한국정부와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 국제연합군총사영부 등 3자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이 협정은 부산에서 이루어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1] 쉽게 말하자면 이 기간까지의 전력부문에 대한 투자는 원조자금에 의존하여 기존의 시설복구 및 증강이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개발연대에 들어서서는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연계된 중장기 전원개발계획에 따라 수력, 화력, 원자력 등 다양한 형태의 전원개발 사업이 여러 경로의 개발차관 및 상업차관 등을 통해 활발하게 추진되기 시작했다.

3.2.5.2. 통신 분야

통신 분야 역시 기술과 자본 모두를 해외에 의존해야만 했던 분야로 전후 통신부문에 대한 투자는 195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는 대부분 정부의 경제부흥특별회계예산에 반영되는 무상원조사업을 통해 실시되었다. 통신부문에 대한 투자가 내자 및 개발차관 사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196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통신 분야에는 약 1,754만 달러의 원조자금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졌다.[2]

통신 분야는 전후 복구 및 재건에 있어서 중점이 두어졌던 분야의 하나이기도 했지만 제일 먼저 유상자금형태의 공적개발원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통신부문에서는 이미 1950년대 말부터 미국의 연성 개발차관지금인 DLF(Development Loan Fund)를 통한 통신시설자금이 도입되기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1959. 4. 미국의 DLF와 체결한 통신 분야 개발차관협정은 통신분야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유상차관이자 우리나라가 도입한 최초의 공공차관이라고 할 수 있다.[3]

---

[1] 1955년 및 1957년 두 차례에 걸쳐 전원개발 5개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958년에는 1959~1968간의 10년에 걸친 장기전원개발계획이 수립되었음

[2] *차관사무편람*, 체신부, 1971. 12.

[3] *Lo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velopment Loan Fund, an Agency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59. 4. 8. 재무부와 한국산업은행이 공동으로 발간한 '외자도입30년사(1993)'에서는 1959년 미국의 DLF로부터 도입된 동양시멘트건설사업자금(5백만 달러)을 우리 최초의 공공차관으로 보고 있음.

DLF로부터 도입된 350만 달로 규모의 개발차관은 전화선로자재, 반송전화 자재, 자동전화교환시설 및 전화기 도입 등을 위한 것으로 연리 3.5%, 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 20년의 비교적 유리한 조건이었으며 특징적인 것은 상환 기준 통화가 원화로 되어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DLF로부터의 연성 차관도입을 시작으로 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다양한 주체로부터 유상협력방식의 공적개발원조 및 협력자금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즉 독일의 재건은행(KFW: Kreditanstalt Für Wideraufrau), 미국 AID와 수출입은행(Eximbank: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대일 청구권자금, 카나다 수출개발공사(EDC: Export Development Corporation) 등으로부터의 공공차관을 도입하여 통신시설 확충사업을 실시하였다.

< 무상원조에 의한 통신사업 현황 >

(단위: 천 달러)

연 도	사업 내역	사업규모
1954	서울중앙전화국 교환시설, 마산국 교환시설, 체신학교 실습지원 등 9개 사업	6,057.0
1955	전신전화기계시설, 해안무선시설, 국제무선시설, 외국인기술자초빙 등 9개 사업	4,620.5
1956	서울시내 선로시설, 전신전화케이블시설, 공전식 교환시설, 전기통신기술자 해외훈련 등 11개 사업	4,249.8
1957	자동식 전화교환시설, 공전식 전화교환시설 등 4개 사업	1,210.3
1958	자동식 전자교환시설 등 4개 사업	1,053.3
1959	외국인기술자 초빙사업	100.0
1960	외국인기술자 초빙사업	250.0
합 계	39개 사업	17,540.8

자료: 차관사무편람, 체신부, 1971. 12.

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1970년대 이후에는 위성 통신시설, 전자 교환시설 등을 위한 대규모 공공차관 사업이 실시되었다. 통신 분야는 개발원조 및 협력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있어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과감한 투자기 이루어진 통신 분야에 의한 투자의 적지 않은 부분이 개발차관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 '60년대의 통신분야 주요 개발차관 사업 >

사 업 명	도입시기	규 모	조 건
시내전화시설확장을 위한 서독차관(1차)	1962.11.	35,000천 DM	연리4%, 3.5년 거치 16.5년 상환(G.E:33.14)
시내전화시설확장을 위한 서독차관(2차)	1964.12.	19,000천 DM	연리4%, 3.5년 거치 16.5년 상환(G.E:33.14)
시내전화시설확장을 위한 미국AID차관	1964.12.	8,400천 달러	연리2% 12년 거치 30년 상환(G.E.:67.69)
대일 청구권 차관	1966.3.	1,000천 달러	연리 3.5% 7년 거치 13년 상환(G.E.:39.67)
시내전화시설확장을 위한 서독차관(3차)	1967.9.	4,500천 달러	연리6% 10년 상환
미국EXIM차관(1차)	1968.7.	6,280천 달러	연리6% 2년 거치 8년 상환
대일 청구권 차관	1968.10.	1,800천 달러	연리 3.5% 7년 거치 13년 상환(G.E.:39.67)
미국EXIM차관(2차)	1969.7.	2,920천 달러	연리6% 2년 거치 8년 상환

자료: 차관사무편람, 체신부, 1971. 12.

3.2.6. 민간원조단체의 의한 사회사업 원조

공적개발원조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는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자칫 간과되기 쉬운 분야가 민간원조단체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된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비정부단체(NGOs)의 원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원조사업과 관련된 여러 문헌과 자료를 접하는 과정에서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1976년 제29차 세계보건총회 참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참고자료[1]에 주한민간외원단체의 원조실적에 관한 통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들의 활동을 수소문한 끝에 다행히 이들 민간단체가 발간한 활동사(活動史)[2]를 입수함으로써 그 전체적인 모습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쉽게 말하자면 KAVA, 즉 외국민간원조기관한국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던 민간외원단체들의 사회사업 내용이 곧 우리나라에 대한 민간원조단체의 원조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KAVA가 조직되기 이전에도 외국의 민간원조단체에 의한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950년의 한국전쟁 이전의 사항은 알 수 없지만 1950. 7.부터 1952. 11.까지 유엔을 통해 전달된 다양한 단체들로부터의 구호성금이 10.9백만 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나있다. 우리나라에 구호성금을 보내온 외국의 개인 또는 민간단

---

[1] 1976. 5. 3. ~ 5. 22.부터 열린 세계보건총회자료 Ⅲ 중의 보건사회사업관계 외원현황(1947~1975)

[2] 외국민간원조기관한국연합회40년사'라는 부제를 가진 외원사회사업기관활동사는 이른바 KAVA(Korean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라고 불렸던 주한민간외원단체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음. 1946년에 조직된 LALA (Licenced Agencies for Relief of Asia)라는 이름의 단체가 모체가 되는 KAVA는 1953. 3. 5.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7개 외원단체가 모여 조직하였으며 1954. 5. 4. 정관을 채택함으로써 공식화되었음. 이 협의체는 회원단체간의 정보교환과 통일된 기획, 타 기구에 대한 협조적 접근을 통하여 그 활동을 증진하는데 그 설립 목적을 두고 있으며 1954년 출범 당시 33개 단체로부터 출발하여 그 활동이 가장 활발하던 1970년대 초에는 회원단체의 숫자가 120개를 넘어서기도 했음. 민간외원단체 명단 등은 부록으로 정리하여 수록할 예정임.

체는 25개에 달했으며 그 금액은 적게는 80달러로부터 많게는 70만 달러에 이르기도 하였다.[1]

1954년 KAVA가 공식 출범한 이후부터는 이 협의체가 그의 회원단체가 실시하는 각종 원조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 · 정리하고 활동의 개선과 발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들 외원단체들의 활동은 휴전과 함께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활동영역도 점차 넓어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 협의체의 활동사를 펴낼 당시 이 협의체의 대표를 맡고 있던 조기동회장은 발간사에서 회원단체들의 활동과 역할이 어떻게 변화 · 발전되어 나왔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 'KAVA회원단체는 지난 40년간 전쟁난민의 응급구호에서 전후복구사업에 이르기까지 현금 및 물자의 지원뿐만 아니라 종래의 자선적 차원의 사회사업과 시설복지사업에서 탈피하여 병원 내 의료사회사업과의 설치, 전후 정착민을 위한 가정복지사업의 전개 등에 공헌하였으며, 4H클럽 활동 등 농촌개발을 위한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소개와 지도는 한국의 근대 전문사회사업 도입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고 사회,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 전문인력 양성에도 큰 몫을 하였다고 본다.'(p.16)

외국민간원조단체들의 활동은 전쟁난민에 대한 구호활동을 중심으로 보건 및 의료, 교육,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사업 등 그 영역이 좁지 않다. 이들 민간원조단체들의 사업은 보건, 구호, 교육, 지역사회개발, 보건 · 구호, 보건 · 교육, 구호 · 지역개발, 구호 · 교육, 교육 · 문화 등 9개 분야로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2]

워낙 다양하게 펼쳐졌던 이들 민간외원단체들의 활동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KAVA의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외원단체는 크게 세 가지의 영역에서 정부나

---

[1] 원자료: United Nations Civil Affairs Activities in Korea , G 5 H.Q., U.S. Army Forces, Far East, 1952. 11., Annex 24. 이들 25개 단체의 명칭은 부록(Ⅰ)에 별도로 수록하였음.

[2] *'93년도 외원관리현황*, 보건사회부, 1994. 4.

사회로부터의 제공이 어렵거나 부족한 분야에 대한 역할 또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의 역할과 기능은 한국전쟁 중이나 전후에 매우 긴요했던 기아방지 등의 필요에 부응하여 유엔민사원조처(UNCAC: 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및 유엔한국재건단(UNKRA)과 협력하여 양곡, 의복의 분배 등을 구호활동을 전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의 영역은 한국의 정부와 사회가 미처 감당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사업을 전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전쟁고아보호, 전쟁미망인을 위한 사업, 신체장애자 지원, 빈곤아동에 대한 생활비 및 학비보조, 해외입양 등의 사회사업과 사업, 4H클럽을 통한 농촌개발지원, 청소년운동, 의료 · 보건 · 교육 · 지역사회개발 등을 들 수가 있다. 또 다른 한가지의 사업영역은 자발적 봉사기관이라는 특성을 살려 사회개발을 위한 실험적 사업을 시도하기도 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의료보험제도의 실시, 신용조합(Credit Union)의 설립, 기생충박멸운동 등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1]

이들 민간외원단체들의 활동은 자국으로부터 각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금 또는 물자 등을 지원 받아 한국에서의 사회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1968년 중 KAVA의 회원단체로 등록되어 있던 106개의 외원단체들이 도입한 자금과 물자의 규모는 모두 35.3백만 달러로 나타나 있다. 이중에서 현금은 24.4백만 달러이고, 물자는 10.9백만 달러로서 현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외원단체들이 도입하는 재원 중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가 유지되었다. 민간외원단체에 의한 사회사업분야 원조활동이 축소 · 종료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한 1980년대에 도입된 현금은 363.7백만 달러로 총 도입금액 398.5백만 달러의 91%에 달했다.

민간외원단체에 의한 원조사업이 가정 왕성했던 것은 1960년대

1 *외원사회사업기관활동사*, p. 25~26

의 시기로 이 기간 중에는 모두 13개국으로부터 123개의 많은 외원단체와 기관들이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1] 1970년대에 들어 80개 수준으로 줄어든 외원단체의 수는 1990년대에 들어 30개 이하로 크게 줄어들면서 사업재원에 있어서도 외국으로부터 지원되는 자금뿐만이 아니라 국내 모금을 통해서 충당되기 시작했으며 국외로 그 사업범위를 넓혀나가는 등 외원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원조라는 관점에서의 민간외원단체들의 역할은 1980년대에 이르러 그 기능을 거의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KAVA가 설립된 이후 1990년대 초까지 이 협의체의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에 공여한 민간외원단체의 원조규모는 모두 1,189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쟁기간 중 UN을 통해서 제공된 구호성금 11백만 달러를 포함하는 경우 1,200백만 달러의 규모가 되는 것이다.

< 민간외원단체 등에 의한 원조현황>

(단위: 백만 달러)

KAVA활동기						
1950~'52	1953~'60	1961~'70	1971~'80	1981~'90	1991~·93	합 계
10.9	121.0	240.0	343.0	386.9	98.4	1,200.2

자료: 외원사회사업기관활동사 및 '93년도 외원관리현황 등

민간외원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특기할만한 것 중의 하나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양자간의 협정이 체결되었던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한국에서 활동을 전개했던 민간외원

[1] 미국, 독일, 이태리, 영국, 스위스, 스웨덴, 프랑스,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네델란드, 벨기에 등 13국

단체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미국정부와 우리정부간에 체결된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1]이다. 이 협정은 1955년에 체결된 이후 1971년 한 차례의 수정을 거치기도 했는데 그 중요 내용은 민간 비영리 구호 및 재건 기관(voluntary nonprofit relief and rehabilitation agencies) 등에 의해 증여, 구매 또는 수입되는 물자에 대해 관세 및 내국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활동하는 민간외원단체의 경우에는 면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민간외원단체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1963년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2]을 제정하여 민간원조단체가 도입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정하고 도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구호 및 사회사업 원조활동을 전개한 민간외원단체들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이들의 상당수가 기독교 등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그 단체가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였다는 것이다. 1989. 12. 현재 등록된 74개의 민간원조단체 중에서 36개 단체(48.6%)는 기독교, 26개 단체(35.1%)는 천주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었으며 불과 12개 단체만이 특정 종교와 관련이 없는 단체라고 할 수 있었다.

수많은 채널을 통해 매우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실시된 외국민간원조단체에 의한 활동에 대해서는 그들의 비교적 뚜렷한 족적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만한 평가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워낙 다양하게 전개된 활동 자체가 이에 대한 섣부른 평가를 어렵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외원사회사업기관활동사'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국민간원조단체에 의한 한국에서의 활동은 몇 가지 점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1] *Agreement on Voluntary Relief Activiti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d of America*(Exchange of Notes방식으로 1955. 4. 2. 및 5. 2. 서명되어 1955. 5. 2. 발효, 1971. 5. 19. 개정됨).

[2] 법률 제1480호(1963. 12. 7. 제정)

우선은 이들의 활동이 한국에 서구식의 전문사회사업의 실천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문에 있어서도 사회사업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성립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외원사업은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사회사업 및 복지사업에 관한 국민의식을 형성하는데 미시적 · 거시적 관점 모두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외국민간원조단체에 의한 사회사업지원 규모가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만 보더러도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일이다. 이 시기까지 만도 외국민간원조단체에 의한 사회사업규모가 보건사회부 전체의 예산규모를 능가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 보건사회부 예산과 외원사회사업규모 비교 >

(단위: 백만 원)

구 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80	1985	1990
보사부예산(a)	8,590	13,304	11,003	10,341	10,382	42,669	176,957	352,431	1,188,566
외원사회사업 규모(b)	9,083	9,603	10,993	11,361	15,116	14,822	25,912	35,712	23,460
b/a(%)	105.7	72.2	99.0	109.9	145.6	34.7	14.6	6.4	2.0

자료: 민경배, 월드비전 한국50년운동사 1950~2000, 월드비전, 2001. 12., p. 636~637

경제 · 사회적 측면에서 본 외원사회사업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외원이 한국경제의 자생적 발전을 저해했다는 평가로부터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축적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매우 커 보인다. 사회복지측면에서는 막대한 외원의 도입으로 한국경제의 복지비 부담을 경감시킨 측면이 있는가하면, 반대로 민간의 사회복지재원을 외원에 의존케 함으로써 민간사회복지부문의 취약한 재정구조를 초래하는 등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3.3. 공공차관(Public Loan) 사업

3.3.1. 개요

국제개발사업에 있어서 주요 부문별 사업내역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분야는 공공차관을 통해서 실시한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차관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비교적 충실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차관사업을 ODA성격의 사업과 비ODA성격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이를 총체적인 개발원조 규모의 산정에 반영한 것은 앞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공공차관을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정부가 도입한 외부자금이라는 관점에서 우선 이를 총체적으로 살펴본 다음 이를 다시 ODA 성격의 사업과 비ODA성격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그 주요 지원분야 등에 대한 내역을 파악해 보도록 한다. 공공적 성격의 자본적 지원이 ODA성격의 자금이든 아니든 이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이다.

공공차관의 총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마침 공공차관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기관(재정경제부)에서 구분하고 분류에 따라 주요부문별 도입실적 등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2002년 말 현재 공공차관 도입 협정액은 모두 505건의 사업에 45,131백만 달러에 이르며 이중 인출이 이루어진 금액은 39,431백만 달러이고 이미 22,721백만 달러의 상환이 이루어진 상태여서 미상환 잔액은 16,620백만 달러 규모이다.

공공차관의 형태를 보면 IBRD 등 국제개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도입 규모와 양자간 협력 형태의 도입 규모가 서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와는 달리 다자 협력의 비중이 52.4%로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공공차관의 도입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IBRD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IBRD로부터는 그간 무려 123건의 사업에 15,609백만 달러의 차관협정이 체결되었으며 2002년

말까지 15,029백만 달러의 인출이 이루어졌다. 대부분 장기차관으로 제공된 IBRD의 개발금융은 2002년 말 기준으로 7,837백만 달러의 상환잔액을 남겨놓고 있다.

공적개발원조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주체인 미국과 일본은 공공차관의 제공에 있어서도 가장 큰 공여자로 자리하고 있다. 39,341백만 달러 규모의 공공차관 총 인출액 중에서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3,2%, 21.6%로써 이들 2개 국가의 비중이 전체의 1/3을 넘어서고 있다.

< 공공차관 도입현황[1]>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다자			양자				합 계
	IBRD[2]	ADB	소 계	미 국	일 본	기 타	소 계	
건수(건)	123	79	202	100	114	89	303	505
협정금액	15,609	6,360	21,969	7,237	10,284	5,641	23,162	45,131
인출금액	15,029	5,593	20,622	5,180	8,480	5,059	18,719	39,341
상환금액	7,192	1,676	8,868	4,563	6,250	3,040	13,853	22,721
잔 액	7,837	3,917	11,754	617	2,230	2,019	4,866	16,620

주 [1] 2002. 12. 현재
[2] IDA사업(8건) 포함
자료: 공공차관현황, 재정경제부, 2003. 4.

공공차관사업이 도입된 부분별 내역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과 경제구조조정 부문으로 이 두 개의 분야가 6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제구조조정 부문의 공공차관도입 규모가 큰 것은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IBRD와 ADB로부터 각각 70억 달러와 37억 달러, 모두 107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구조조정자금을 지원 받은 때문이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부문 다음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 분야는 민간기업 지원 등 산업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지원을 포함하여 그간 모두 5,702백만 달러의 차관자금 인출이 이루어졌다.

< 부문별 공공차관 도입현황 >

(단위: 백만 달러)

분 야	협약액	인출액	상환액	잔 액
농수산광업	1,799	1,707	1,551	156
민간기업지원	6,131	4,942	3,673	1,269
중소기업진흥	817	760	684	76
주택	625	576	541	35
의료	619	549	415	134
환경	262	221	133	88
교육, R&D	1,799	1,734	1,233	501
지역개발	2,083	1,338	1,109	229
경제구조조정	11,873	11,544	811	10,733
SOC	14,591	12,928	10,141	2,787
미곡도입	2,203	2,153	1,726	427
기타	2,329	889	704	185
합 계	45,131	39,341	22,721	16,620

자료: 공공차관분석(Working Paper), 재정경제부, 2003. 9.

한편 도입시기별 공공차관 도입현황을 보면 1970년대 이후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가 유지되었다. 주요 부문별 추세를 보면 1960, ‘70년대 농수산, 민간기업 지원 등 생산부문을 중심으로 한 도입으로부터 점차 사회서비스 및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그 중점이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60, ‘70년대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환경부문의 차관도입이 ‘80, ‘90년대에 들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미곡도입을 위한 차관의 경우 ‘90년대에 들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연대별 도입규모를 보면 1990년대의 공공차관도입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있지만 ‘90년대에 도입된 차관의 경우 대부분이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도입된 금융 등 구조조정차관인 점으로 미루어 직접적인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차관의 도입은 주로 1970년대와 ‘80년대의 개발연대에 보다 활발하게 이루

어졌음을 알 수 있다.

< 부문별 공공차관 도입현황 >

(단위: 백만 달러)

분 야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합 계
농수산광업	80	1,252	331	43	1,706
민간기업지원	161	1,386	801	2,593	4,941
중소기업진흥	122	126	316	197	761
주택	-	95	381	100	576
의료	3	103	322	122	550
환경	-	2	77	142	221
교육, R&D	17	288	918	511	1,734
지역개발	30	173	1,018	117	1,338
경제구조조정	-	260	550	10,734	11,544
SOC	409	4,313	5,301	2,905	12,928
미곡도입	197	1,214	742	-	2,153
기타	71	262	171	440	889[1]
합 계	1,090	9,474	10,928	17,904	39,341

주 [1] 부문별 내역집계과정에서 발생한 오차 55백만 달러를 제외한 금액임

자료: op. cit.

공공차관의 제공주체별 현황을 보면 IBRD, ADB 등 다자적 국제개발금융기관으로부터 도입된 자금의 규모가 20,581백만 달러로 대체적으로 전체의 절반을 다소 상회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자적 협력기관 중에서는 IDA와 IBRD를 포함하는 세계은행 그룹이 전체의 40.2%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다른 절반을 조금 못 미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자적 채널의 공공차관은 대부분이 일본과 미국, 프랑스로부터 도입된 것으로써 이들 3개국의 비중이 43%에 이르고 있다. 개별 국가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일본으로 전체의 22%를 점하고 있다.

< 공공차관 공여주체별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도입인출규모	비 중(%)
다자 협력	20,581	52.2
IDA	116	0.3
IBRD	14,935	37.9
ADB	5,530	14.0
양자 협력	18,760	47.8
일 본	579	1.5
OECF[1]	3,694	9.4
JEXIM[2]	3,017	7.7
FAOJ[3]	1,198	3.0
미 국	4,998	12.6
PL480	868	2.2
AID	570	1.4
EXIM[4]	3,560	9.0
프랑스	3,494	8.9
독 일(KFW)[n]	380	1.0
기 타	1,400	3.7
합 계	39,341	100.0

주 [1]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해외경제협력기금)

[2] Export-Import Bank of Japan(일본수출입은행)

[3] Food Agency of Japan(일본식량청)

[4]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미국수출입은행)

[n]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재건은행)

자료: op. cit.

3.3.2. 양허성의 기준 등에 따르는 공공차관 도입현황

공공차관의 도입내역에 대해서는 양허성의 기준 등에 따르는 사업 및 도입자금 성격의 변화추세 등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사업의 특성은 물론 경제 발전 단계의 변화에 따라 부분별 차관자금의 도입 및 그 자금의 성격도 두드러진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모두 505건에 달하는 공공차관사업 중에서 세부 단위사업으로 분류되어있는 일부 사업을 1건의 사업으로 간주하는 등의 조정에 따라 사업 건수가 일부 줄어들게 되어 모두 493개 사업(양허성 사업 227개, 비양허성 사업 266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첫 번째 작업은 공공차관사업의 도입내역을 개발원조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부문별 분류기준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분석의 두 번째 작업은 도입된 자금의 양허성 수준을 산정하여 그 성격을 양허성 원조사업과 비양허성 협력사업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우선 공공차관사업의 부문별 도입내역에 대한 일반적인 분류기준에 있어서는 IBRD 및 OECD/DAC에서 사용하고 CRS(Creditor Reporting System)에 입각한 사업부문별 분류기준에 따르는 분류를 실시하였다. 이른바 CRS Code라고 알려져 있는 이 분류 방식은 한국국제협력단이 매년 작성 · 발간하는 '국제협력단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KOICA Aid Statistics)'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된 494개 전체 사업의 부문별 도입 내역을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차관 도입은 경제하부구조의 확충 및 생산부문의 육성에 큰 중점이 두어졌음을 알 수 있다. 총 36,723백만 달러의 도입자금 중 교통, 통신, 전력 등 경제 하부구조 확충에 투자된 금액이 12,682백만 달러, 농업, 공업 등 산업개발에 6,145백만 달러 등 모두 18,827백만 달러가 투입되어 약 51%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교육, 보건, 주택 등 사회하부구조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는 총 도입자금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3,001백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상품원조 및 일반프로그램지원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긴급구조조정 등을 위한 일반프로그램지원 자금의 도입이 매우 큰 규모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부문별 공공차관 도입현황 >

(단위: 백만 달러)

부문 구분	도입규모(인출금기준)	비중(%)
Ⅰ. 사회하부구조	3,001.5	8.2
1. 교육	1,251.8	3.4
2. 보건, 인구정책	428.0	1.2
3. 주택, 수자원 등	1,321.7	3.6
Ⅱ. 경제하부구조	12,682.1	34.5
1. 교통	5,321.8	14.5
2. 통신	1,287.5	3.5
3. 전력, 에너지 등	6,072.8	16.5
Ⅲ. 생산	6,145.2	16.7
1. 농림수산	828.2	2.2
2. 공업, 광업	5,278.5	14.4
3. 건설, 무역, 관광 등	38.5	0.1
Ⅳ. 다부문	1,421.2	3.9
1. 환경, 여성개발	613.5	1.7
2. 지역개발 등	807.7	2.2
Ⅴ. 상품원조, 일반프로그램지원	13,473.1	36.7
1. 양곡, 상품원조	1,736.3	4.7
2. 구조조정 등	11,736.8	32.0
합 계	36,723.1	100.0

한편 양허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해본 원조성(양허성) 공공차관사업과 비원조성(비양허성) 공공차관사업의 분야별 내역을

보면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해 낼 수 있다. 우리나라 공공차관의 도입 분야가 경제하부구조와 생산, 경제구조조정 등의 산업중심으로 되어있는 차관도입 구조가 G.E. 25%미만의 비원조성 공공차관의 도입에 있어서는 그 구조가 더욱 편향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G.E. 25%이상의 공공차관 중에서 사회하부구조관련 사업에 대한 비중은 17.3%로 다소 높은 편이지만 G.E. 25%미만의 차관에 있어서는 불과 6.6%의 비중에 그치고 있다. 개발협력에 있어서 사회개발 부문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자금성격별 주요 부문의 공공차관 도입현황 >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G.E. 25%이상	G.E. 25%미만	합 계
사회하부구조	958.4(17.3)	2,043.1(6.6)	3,001.5(8.2)
경제하부구조	1,753.0(31.7)	10,929.1(35.0)	12,682.1(34.5)
생산	1,178.6(21.3)	4,966.6(15.9)	6,145.2(16.7)
다부문	312.2(5.7)	1,109.0(3.6)	1,421.2(3.9)
기타일반프로그램	1,325.3(24.0)	12,147.8(38.9)	13,473.1(36.7)
합 계	5,527.5(100)	31,195.6(100)	36,723.1(100)

주 ( )내 숫자는 구성비(%)

공공차관의 부문별 도입내역을 개발 연대순으로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뚜렷한 변화추세를 발견하게 된다. 우선 워낙 당연한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공공차관의 성격이 양허성 자금으로부터 비양허성 자금으로 점차 전환되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원조성 공공개발차관의 도입은 개발연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뒤 1990년대 이후에는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에 개발연대 후기에 그 도입 규모가 크게 증가된 비원조성 공공차관의 경우 1990년대 이후에 그 규모가 더욱 크게 증가하였다. 개발연대 전기에 있어서 양허성 공공차관의 기여가 컸던데 비

해 개발연대 후기 및 전환기에 이르러서는 비양허성 공공차관의 기여가 컸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개발연대별 공공차관 도입현황 >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59~1975 (구성비,%)	1976~1990 (구성비,%)	1991~1999 (구성비,%)	합 계 (구성비,%)[1]
양허성 공공차관	2,030.8	3,496.7	-	5,527.5
	(56.0)	(22.2)	(0.0)	(15.1)
(구성비,%)[2]	(36.7)	(63.3)	(0.0)	(100.0)
비양허성 공공차관	1,597.7	12,250.2	17,347.7	31,195.6
	(44.0)	(77.8)	(100.0)	(84.9)
(구성비,%)	(5.1)	(39.3)	(55.6)	(100.0)
합 계	3,628.5	15,746.9	17,347.7	36,723.1
	(100.0)	(100.0)	(100.0)	(100.0)
(구성비,%)	(9.9)	(42.9)	(47.2)	(100.0)

주 [1] 해당 연대에서 양허성 공공차관과 비양허성 공공차관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임

[2] 해당 성격의 공공차관이 연대별로 도입된 비중임

공공차관 자금의 성격별로 연대별 도입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G.E. 25%이상의 양허성 자금에 있어서는 모두 개발연대후기 이전에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1년 이후의 전환기 중에는 단 한 건의 도입약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입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경제 하부구조 및 생산 부문에 대한 도입이 주를 이루었으나 사회 하부구조 및 다부문에 대한 지원을 위한 도입 비중이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개발연대 후기에 들어서서 교육, 보건 등의 사회개발 부문과 환경, 지역개발 등 다부문에 대한 공공 투자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개발연대 전기 중에는 큰 몫을 차지하던 양곡 등 상품차관의 비중은 그 이후에는 크게 줄어들었다.

G.E. 25%미만의 비양허성 공공차관의 도입에 있어서는 개발연대 후기에 들어서면서 차관의 도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 기간 중에는 경제하부구조의 확충과 산업생산 지원을 중심으로 큰 규모의 자금이 도입되었다. 1990년대 이후의 전환기에 접어들어서는 경제 · 사회개발 투자를 위한 차관자금의 도입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긴급구조조정 등 경제시스템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긴급자금의 도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 양허성 공공차관 연대별·부문별 도입현황 >

(단위: 백만 달러)

분 야	1959~1975	1976~1990	1991~1999	합 계
Ⅰ. 사회하부구조	154.1(7.6)	804.3(23.0)	-	958.4(17.4)
1. 교육	46.9	293.2	-	340.1
2. 보건·인구정책	7.8	302.1	-	309.9
3. 주택·수자원 등	99.4	209.0	-	308.4
Ⅱ. 경제하부구조	463.5(22.8)	1,289.5(36.9)	-	1,753.0(31.7)
1. 교통	243.1	637.9	-	881.0
2. 통신	107.8	622.7	-	730.5
3. 전력·에너지 등	112.6	28.9	-	141.5
Ⅲ. 생산	522.3(25.7)	656.3(18.8)	-	1,178.6(21.3)
1. 농림수산	178.9	413.0	-	591.9
2. 공업·광업	343.4	243.3	-	586.7
3. 건설·무역·관광 등	-	-	-	-
Ⅳ. 다부문	26.1(1.3)	286.1(8.2)	-	312.2(5.6)
1. 환경, 여성개발	7.3	226.1	-	233.4
2. 지역개발 등	18.8	60.0	-	78.8
Ⅴ. 상품·일반프로그램	864.8(42.6)	460.5(13.1)	-	1,325.3(24.0)
1. 양곡, 상품원조	55.1	-	-	55.1
2. 구조조정 등	809.7	460.5	-	1,270.2
합 계	2,030.8(100)	3,496.7(100)	-	5,527.5(100)

주 ( )내 숫자는 부문별로 각 기간 중의 도입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 비양허성 공공차관 연대별·부문별 도입현황 >

(단위: 백만 달러)

분 야	1959~1975	1976~1990	1991~1999	합 계
Ⅰ. 사회하부구조	174.3(10.9)	1,374.7(11.2)	494.1(2.9)	2,043.1(6.6)
1. 교육	52.5	551.2	308.0	911.7
2. 보건·인구정책	32.0	-	86.1	118.1
3. 주택·수자원 등	89.8	823.5	100.0	1,013.3
Ⅱ. 경제하부구조	552.6(34.6)	6,835.4(55.8)	3,541.1(20.4)	10,929.1(35.0)
1. 교통	403.3	1,825.5	2,219.9	4,440.7
2. 통신	79.6	477.4	-	557.0
3. 전력·에너지 등	69.7	4,532.5	1,329.2	5,931.4
Ⅲ. 생산	605.9(37.9)	2,436.7(19.9)	1,924.0(11.1)	4,966.6(15.9)
1. 농림수산	63.1	173.1	-	236.2
2. 공업·광업	504.3	2,263.6	1,924.0	4,691.9
3. 건설·무역 등	38.5	-	-	38.5
Ⅳ. 다부문	141.7(8.9)	752.4(6.1)	214.9(1.2)	1,109.0(3.6)
1. 환경, 여성개발	4.8	160.4	214.9	380.1
2. 지역개발 등	136.9	592.0	-	728.9
Ⅴ. 상품·일반프로그램	123.2(7.7)	851.0(7.0)	11,173.6(64.4)	12,147.8(38.9)
1. 양곡, 상품원조	123.2	287.8	-	411.0
2. 구조조정 등	-	563.2	11,173.6	11,736.8
합 계	1,597.7(100)	12,250.2(100)	17,347.7(100)	31,195.6(100)

주 ( )내 숫자는 부문별로 각 기간 중의 도입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공공차관의 도입에 있어서 한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차관 공여주체별로 각각 양허성 · 비양허성 자금의 공여내역을 비교해보는 것이다.

우선 눈에 띠는 것은 국제금융기구의 다자간 공공차관은 대부분 G.E. 25%미만의 비양허성 자금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이다. 다자 1, 2위의 차관공여주체인 IBRD와 ADB의 경우를 보면 모두 공여자금의 99%가 비양허성 자금임을 알 수 있다. 양자 1, 2위의 공공차

관 공여주체인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는 양허성 자금의 비중이 각각 46.7%와 37.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큰 규모의 공공차관을 제공한 국가 중에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전액 비양허성 자금만을 제공한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캐나다, 벨지움, 영국 등의 경우에도 비양허성 자금의 차관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비양허성 자금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였으며 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도 양허성 차관만을 공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여주체별·자금성격별 공공차관 제공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공 여 주 체	G.E.25%이상	G.E.25%미만	합 계
다 자	300.1(1.6)	20,235.0(98.4)	20,535.1(100)
IDA	115.6(100.0)	-	115.6(100)
IBRD	147.0(1.0)	14,671.9(99.0)	14,818.9(100)
ADB	37.5(0.7)	5,555.7(99.3)	5,593.2(100)
EC	-	7.4(100.0)	7.4(100)
양 자	5,277.4(32.3)	10,960.6(67.7)	16,188.0(100)
일본	2,861.3(46.7)	3,262.8(53.3)	6,124.1(100)
미국	1,958.8(37.8)	3,221.2(62.2)	5,180.0(100)
프랑스	-	3,488.8(100.0)	3,488.8(100)
캐나다	0.7(0.2)	460.4(99.8)	461.1(100)
독일	305.5(81.0)	71.5(19.0)	377.0(100)
벨지움	-	231.4(100.0)	231.4(100)
스웨덴	-	160.8(100.0)	160.8(100)
사우디아라비아	96.6(100.0)	-	96.6(100)
영국	-	72.7(100.0)	62.7(100)
덴마크	2.8(100.0)	-	2.8(100)
네델란드	1.7(100.0)	-	1.7(100)
홍콩	1.0(100.0)	-	1.0(100)
합 계	5,527.5(15.1)	31,195.6(84.9)	36,723.1(100)

주 ( )내 숫자는 각 공여주체별 G.E.25%이상과 미만의 구성비중임(%)

제 4 장 주요 수원사업 사례연구

1. UNDP에 의한 기술협력

1.1. 개요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은 1961년 유엔개발연대(The United Development Decade)의 선포와 함께 설립된 유엔기구의 하나로 그간 개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개발경험과 자원의 공유 등을 통해 국제개발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오고 있다. UNDP는 현재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하는 166개 국가에 UN의 '지구적 네트워크(global network)' 역할을 담당하면서 소득수준이 연 750달러 미만의 약 50여 저소득 국가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UNDP는 현재 '민주적 통치(good governance)', '빈곤경감(poverty reduction)', '위기 예방 및 회복(crisis prevention and recovery)', '에너지 및 환경(energy and environment)', HIV/AIDS 등 크게 5개 부문에 중점을 두고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The United Nations Millenium Summit)'에서 채택된 '밀레니엄 개발목표(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1]의 달성을 위한 노력의 선봉에 서 있는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UNDP는 1961년대 초 설립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 대하여 주로 Free Standing방식의 기술협력을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꾸준하게 실시해왔다. 그간 UNDP가 제공한 기술협력의 분야는 주요 공공부문의 정책 및 제도 개발, 인적 능력의 배양 등 개발 역

---

[1] UN의 밀레니엄정상회의는 밀레니엄총회의 일환으로 2000. 9. 6. ~ 9. 8.간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는 21세기 UN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함께 2015년까지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설정하였음. 이것은 일일 1달러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인구의 비중을 절반수준으로 줄임으로써 '극심한 빈곤과 기아의 해소(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를 도모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모두 8개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량(Development Capacity)의 확충은 물론 산업, 기술, 사회개발, 환경 등 제 부문의 기초적 기반 구축을 위한 중소규모 연성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 등 그 형태와 내용이 대단히 다양하다.

UNDP는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방적인 공여형태의 기술협력사업은 이미 오래 전에 종료하였으나 두만강유역개발 프로젝트나 남남기술협력(South-South Technical Cooperation)의 촉진, 한국의 과학기술 개발경험 활용 등과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협력사업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UNDP는 1998년 우리나라에 대해 이른바 CCF, 즉 국가협력프레임웍(Country Cooperation Framework)이라는 2년 단위의 협력 실시 기본전략을 수립한바 있다. 이 전략에 따르면 UNDP는 우리나라를 과거와는 다른 하나의 새로운 협력파트너로써 인식하고 UNDP가 추진하는 사업에 한국 정부의 참여와 비용분담을 늘리는 방향에서 '새로운 연대적 패러다임(a new partnership paradigm)'을 모색해 나오고 있다.

한편 2001년부터는 1998년도에 수립된 1차 CCF의 연장선상에서 제2차 CCF(Second Country Cooperation Framework for the Republic of Korea 2001-2003)를 수립하여 우리나라가 수원국으로부터 공여국의 위치로 그 지위가 전환된 시기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 · 발전시켜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1.2. 협력사업 실시 내역

UNDP는 그간 40여 년에 걸쳐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협력을 제공해오는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사회여건과 협력수요 등을 감안하여 그 지원 중점을 점진적으로 전환시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개발연대 초기인 1960년대의 UNDP사업은 당시의 주력산업이었던 농업 및 수산업 부문의 생산성제고와 보건, 교육 등의 기초수요충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이 두어졌다. 개발연대 후기에 들어서면서는 한국 토착의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과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경제사회개발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있어서의 정책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개발역량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각종 연구개발기관 설립지원 사업과 4, 5,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자문사업 등이 이 기간 중의 주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발연대 후기에 접어들어서는 환경관리와 사회개발, 산업구조조정(industrial restructuring) 등에 대한 지원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최근의 UNDP사업은 환경, 정부혁신 및 통치(governance), 고용, 사회보호 및 건강 증진, 성차별문제, 남북 평화정착 지원 등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 공동협력사업의 추진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개발연대순의 시기별로 UNDP가 실시한 사업금액 5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주요 지원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개발연대전기 주요사업(1961~1975) >

- ○토양비옥도 및 토양조사/Soil Fertility and Soil Research/1963~1971/1,027천 달러
- ○원양어업훈련소사업/Deep Sea Fishing Training Centre/1964~1971/2,877천 달러)
- ○토양조사/Soil Survey/1964~1971/1,672천 달러
- ○중기업은행서비스확장Ⅰ,Ⅱ단계/Extension of Extension Services Department in the Medium Industry Bank PhaseⅠ,Ⅱ/1966~1977/1,630천 달러
- ○정밀기계센터Ⅰ,Ⅱ단계/Fine Instruments Centre PhaseⅠ,Ⅱ/1966~1974/2,984천 달러
- ○낙동강유역개발 조사Ⅰ,Ⅱ/Nakdong River Basin Delta and Tributary Studies/1966~1981/2,733천 달러
- ○산지개발 및 수역관리/Uplands Development and Watershed Development/1967~1976/2,156천 달러
- ○산림조사 및 개발/Forestry Survey and Development/1968/499천 달러
- ○관정관개사업/Tubewell Irrigation Project/1969~1974/2,097천 달러
- ○연안어업훈련센터/Costal Fishing Training Center - Shipjack Fishing/1968~1982/3,317천 달러
- ○중앙직업훈련원Ⅰ,Ⅱ/Central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PhaseⅠ&Ⅱ/1968~1982/2,622천 달러
- ○지역개발계획/Regional Physical Planning/1970~1974/552천 달러

○ 식물검역조사 및 훈련기능강화/Strengthening Plant Protection Research and Training/1972/1,130천 달러
○ 식물질병 및 해충방제/Disease and Insect Pest Control on Plants/1969~1973/990천 달러
○ 농산물가공센터Ⅰ,Ⅱ,Ⅲ단계/Food Processing Centre PhaseⅠ,Ⅱ & Ⅲ/1973~1982/1,387천 달러
○ 호텔관리학교설립/Establishment of Hotel Management School/1973~1982/576천 달러
○ 조서농업기술서비스/Shipbuilding Industry Technical Services/1974~1984/2,035천 달러
○ 한국해양연구개발원/Korean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1973~1983/954천 달러

< 개발연대후기 주요사업(1976~1990) >

○ 국립노동과학원/National Institute of Labour Scienc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1975~1985/812천 달러
○ KIST기계공업연구소/Mechanical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of KIST/1975~1986/1,017천 달러
○ 산림훈련원/Forestry Training Institute for Fire Supression/1975~1983/446천 달러
○ 야외수리연구소/Outdoor Hydraulics Laboratory of Irrigation, Drainage and Flood Control/1975~1985/1,569천 달러
○ 관개개선/Drainage Improvement/1975~1987/1,081천 달러
○ 조선 용접 및 철강 조립/ Shipbuilding Welding and Steel Fabrication/1975~1984/523천 달러
○ KIST반도체재료기술/Semiconductor Materials Technology of KIST /1979~1985/938천 달러
○ 한국전자기술·통신연구원/Korea Electrotechnology and Telecom Research Institute/1978~1985/854천 달러
○ 산업국제관리원/International Management Institute/1977~1982/2,465천 달러
○ 기계계측센터/Reliability and Environmental Test Centre/1982/499천 달러
○ 제4,5,6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 계획수립지원/Assistance in Development Planning (4th, 5th & 6th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1975~1988/1,345천 달러
○ 한국에너지자원연구원지원/Assistance Towards Korea Institute for Energy and Resources/1979~1986/620천 달러
○ 생산적 산림자원 관리/Productive Forest Resource Management/1983~1989/588천 달러

○ 기상연구조사활동강화/Strengthening Meteorological Research Activities/1983~1988/551천 달러
○ 민간항공훈련센터/Civil Aviation Training Centre/1984~1988/566천 달러
○ 독극물연구소Ⅰ,Ⅱ단계/Toxicology Research Centre PhaseⅠ&Ⅱ/1983~1990/796천 달러
○ 한국에너지관리공사/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KEMCO)/1985~1994/555천 달러
○ 핵 및 관련기술을 통한 식량·농업생산증대/Improving Production of Food an Agriculture through the Aid of Nuclear and Related Technology/1985~1990/644천 달러
○ 한국전자기술 및 통신연구원 지원/Assistance to Korea Electro-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 Research institute/1985/1,036천 달러
○ 한국기계연구소 CAD과 설립/Establishment of CAD Section within the Die and Moulds of KIMM/1986~1993/572천 달러
○ 과학 및 공학 교수 장학/Training of Science and Engineering Professors/1988~1993/732천 달러
○ 산업관리컴퓨터지원/Improved Industrial Management Computer Support/1987~1992/1,194천 달러
○ 과학기술정책센터/Assistance Centr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CSTP)/1988~1994/472천 달러

< 원조전환기의 주요사업(1990~1999) >

○ 종합 해충관리 개발 및 훈련 프로그램Ⅰ,Ⅱ,Ⅲ/Integrated Pest Management Development and Training Program PhaseⅠ,Ⅱ,Ⅲ/1993~ /1,540천 달러
○ 과학기술분야 정부능력확충Ⅰ,Ⅱ,Ⅲ/Strengthening of Government CapabilitiesⅠ,Ⅱ,Ⅲ/1988~ /735
○ 기술금융정보센터 설립/Establishment of Technology and Financing Information Centre(TFIC)/1993~1994/539천 달러
○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촉진/Promotion-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STIS)/1993~1997/400천 달러
○ 경기북부지역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상세 연구 및 제안/Detailed Study and Proposal for ESSD in Northern Kyunggi Province/1996~ /500천 달러
○ 수자원해양오염모니터링/Water and Marine Pollution Monitoring/1994~ /600천 달러
○ 한국환경정보 네트워크 시스템/Korea Environmental Information Network System(KEINS)/1994~ /404천 달러

○NGO 지속개발네트워크 개념확산/NGO Activities Promo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 Concept/1994~/400천 달러

한편 UNDP의 사업실시 분야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모든 분야에서 UNDP로부터의 지원을 제공받았음을 알 수 있게 된다. UNDP는 그가 지원하고 있는 분야를 크게는 일반개발(GD: General Development), 에너지 및 환경(En: Energy & Environment), 농림수산(Ag: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공업(In: Industry), 사회개발(SD: Social Development),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등의 6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20개 분야로 세분하고 있다.[1]

한국에 제공된 UNDP의 협력사업은 2003년까지 총 250개 사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산업부문에 지원된 사업이 모두 65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시 연대별로는 '70, '80년대의 개발연대 전기의 시기 중에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UNDP로부터 제공된 총 지원자금의 규모는 95,354천 달러에 이르고 있다. 연대별 지원 현황을 보면 1960년대 이후 그 지원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가 유지되었지만 꾸준한 지원이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요 부문별 지원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지원 초기 농림수산부문에 대한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데 비해 그 이후에는 사업개발과 일반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

[1] 1) Political Affairs, 2)General Development Issues, 3) General Statistics(이상 GD), 4) Natural Resources, 5) Energy(이상 En), 6)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Ag), 7) Industry, 8) Transport, 9)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10) Trade and Development(이상 In), 11) Population, 12) Human Settlements, 13) Health, 14) Education, 15) Employment, 16)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Management, 17) Social Development, 18) Culture(이상 SD), 19) Science and Technology(ST), 20) Environment(En)

< UNDP지원사업 연대별·부문별 지원현황 >

(단위: 천 달러, %, 개)

지원분야	'62~'71	'72~'81	'82~'91	'92~'03	합 계
농림수산(Ag)	16,227	3,259	2,661	1,540	23,687
비중	59.5	12.5	11.4	8.2	24.8
사업수	12	7	8	3	30
에너지및환경(En)	833	4,503	4,400	3,399	13,135
	3.0	17.3	18.8	18.2	13.8
	5	13	16	12	46
일반개발(GD)	4,310	1,437	2,604	8,602	16,953
	15.8	5.5	11.1	46.0	17.8
	5	7	16	22	50
산 업(In)	4,006	13,347	9,800	1,446	28,599
	14.7	51.3	42.0	7.7	30.0
	8	21	31	3	63
사회개발(SD)	1,652	2,388	1,805	2,831	8,676
	6.1	9.2	7.7	15.1	9.1
	5	7	8	21	41
과학기술(ST)	235	1,080	2,094	895	4,304
	0.9	4.2	9.0	4.8	4.5
	1	8	7	3	19
합 계	27,263	26,014	23,364	18,713	95,354
비 중(%)	100	100	100	100	100
사 업 수	36	63	86	64	249

주: %는 연대별 분야 구성 비중

자료: UNDP Projects('62-'03), UNDP Korea, 2004. 1

워낙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UNDP의 기술원조에 대한 평가 역시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991년 개최된 UNDP의 집행이사회에서 1992년부터는 한국이 순공여국(N.C.C.: Net Contributor Country)으로 인정됨[1]에 따라 한국이 더 이상 해외의 기술원조와 협력에 의존하는 위치에만 있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1] 한국은 1989년 Net Contributor Country의 기준(threshold)이 되는 국민 1인당 GNP $4,700을 초과하였으며 그로부터 3년 간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거쳐 1992년부터 실질적인 순공여국의 신분이 되었음.

에 대한 기술원조와 협력이 충분한 효과와 성과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UNDP에 의한 기술원조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통해서 주요 사업의 효과 및 성과에 대한 검토는 물론 그 시사점과 교훈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 독일에 의한 직업훈련분야 기술협력

2.1. 배경

개발연대에 들어 산업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주도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숙련기능공을 포함한 전문기술 인력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기술인력 수요전망에 따르면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 중에 소요되는 242천명의 기술인력 중 일반 교육기관으로부터의 공급만으로는 부족이 예상되는 120천명의 기능 인력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통해 공급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게 되었다. 또한 이보다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3차 계획기간('72~'76)중의 다양한 기능 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직업훈련 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한국정부는 1965년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미국의 인력개발 전문가 인 맥보이(Edgar C. Mcvoy)씨를 초청하여 한국의 인력개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른바 'Mcvoy 보고서'로 알려진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증가되는 전문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기능을 적극적으로 확충해야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직업훈련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1] 이는 실업계 고등학교 이외에 별다른 직업훈련 시설이나 관련 제도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전문적인 직업훈련 시설 및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근대적 직업훈련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UNDP가 ILO의 기술지원을 받아 건설 중에 있는 중앙직업훈련원 시설이외에는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매우 긴요한 실정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중반부터 직업훈련분야에 있어서 독일과의 협력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66년

---

[1] *노동행정10년사*, 노동부, 1972, p.201~202

한독 양국정부간에 체결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1]을 기반으로 하여 1970년부터 1975년까지 계속된 부산 한독직업전문학교 설립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1976년 직업훈련 자문사업, 1979년 창원기능대학 설립사업, 1994년의 추가지원 사업 등 개발연대 전반으로부터 후반에 이르는 기간동안 직업훈련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았다.

우리 정부가 독일로부터의 직업훈련 협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독일방식의 산업화를 통해 경제를 부흥시킨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1964년에 이루어진 독일에 대한 한국 정상의 방문과정에서 독일과의 우호적인 협력분위기가 조성되었던 점이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업훈련분야에 있어서 독일과의 협력은 간호와 탄광 분야에 우리의 인력을 독일에 파견하는 인력협력을 시작으로 이미 1960년대 초부터 긴밀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2] 한편 독일과의 협력을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하였던 데는 1960년대에 들어 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감소하기 시작한데 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개발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한 자금과 기술의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국가로 원조의 접수를 다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등의 절실한 필요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여하튼 미국을 제외하고 개발연대 초기에 우리나라에 대해 제일 먼저 본격적인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한 한 나라는 독일이라고 할 수 있다.

---

[1]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regarding Technical Cooperation*. 1966. 8. 26. 서명 및 1967. 2. 13. 발효(조약 제233호).

[2] 한독 양국 정부간에는 이미 1961. 3. 18. 직업학교설치에 관한 각서교환(*Exchanges of Notes concerning the Joint Establishment of a Skilled Workers School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이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의정서(*Protocol concerning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가 서명되었음.

2.2. 사업추진 경위 및 경과

독일 정부는 일련의 직업훈련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기능을 발전시키고 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더욱이 원조공여자인 독일은 각종의 직업훈련 및 자문제공 사업을 통해 독일의 직업훈련 제도 및 훈련 표준을 우리나라에 전파하고 독일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기능장제도와 산학협동훈련제도 등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을 실시하기도 했다.

< 주요 기술원조사업 추진 경과 >

(1) 한독부산직업훈련원 설립사업

- 1967. 3. 뤼브케 대통령 방한 시 한독부산공공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양국 대통령의 공동성명 발표
- 1967. 5. 한독정부간 '부산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약정' 체결 및 독일로부터의 1,300천 달러 규모의 원조공여 합의
- 1971. 6. 훈련원 건설 착공
- 1972. 9. 기능사과정 훈련 시작
- 1973. 3. 한독정부간 협정 개정, 장비지원비 및 기술자문용역 사업, 장학지원사업 확대
- 1973. 10. 훈련원 개원
- 1982. 10. 동래지역 기능훈련센터 설립
- 2000.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으로 훈련원 이전 배치

(2) 창원기능대학 설립사업

- 1979. 11. 한독정부간 창원기능대학(Chang Won Industrial Masters' College)설립에 관한 약정 체결
- 1986. 8. 한국기업체를 위한 기능장 훈련제도 확립에 관한 독일정부의 제안 각서 접수 및 한국정부측 제안각서 송부

(3) 직업훈련자문사업

- 1966. 9. 한독기술협력협정 체결(조약 제233호)

- 1976.1.~1978. 8. IBRD차관자금에 의한 신설 7개 직업훈련원에 대한 기술자문 제공(1차 지원사업)
- 1978. 9.~1983. 12. IBRD차관사업에 의한 직업훈련원 기술지원 및 한독부산직업훈련원 공업전자과 신설 지원(2차 지원사업)
- 1984. 1.~1986. 12. 산학협동훈련제도 도입 지원 및 한독부산직업훈련원 공업전자과 운영 지원(3차 지원사업)
- 1986. 8. 한독 직업훈련자문사업 독일측 제안각서 접수(1987. 1. ~ 1988. 12.간 산학협동훈련제도 보완지원 및 한독부산직업훈련원 금형공과 지원, 4차 지원사업)
- 1987. 9. 독일 경제협력성 차관보 방한 시 직업훈련 자문사업 추가지원 합의(1989. 1.~1990. 12간 교사양성기관 설립지원 등, 5차 지원사업)
- 1992. 10. 직업훈련 기술자문 실무약정 체결(1991~1993년 간 직업훈련사업 종료단계에서의 총괄적 지원, 6차 지원사업)

(4) 1994년 이후의 지원 사업
- 1994. 10. 한독정부간의 실무약정 체결을 통해 양국 공동부담 방식으로 독일 측의 기술자문 등을 지속적으로 접수함

2.3. 사업추진 내역

2.3.1 단위 직업훈련 전문기관 설립 지원

독일은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한국의 경제사회발전 여건과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업훈련기관 설립을 지원하였다. 각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해당 기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자문은 물론 각 분야의 직업훈련전문가 및 교사의 파견 등을 통해 초기의 사업 준비 및 실시 지원, 포괄적인 기술자문의 제공은 물론 훈련교육에 소요되는 장비와 기재 등을 모두 제공하는 이른바 Turn-key Base방식의 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일측은 한국측의 핵심 직업훈련 전문인력 및 관리 인력에 대한 자국 초청 연수 등을 실시하여 수원자측의 사업수행능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한편 독일측은 직업훈련분야에 있어서의 원조공여에 있어서 20년이 넘는 기간동안의 사업실시를 통해 해당분야의 경제 여건 및 수요 변화 등에 발맞추어 이에 알맞은 지원을 제공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즉, 개발연대 전기 우리나라의 직업훈련기반이 매우 취약했던 시기에 있어서 독일의 지원은 일반 기술 분야 기능사 및 직업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원의 설립을 지원하였던데 비해 1970년대 후반의 개발연대 후기에 들어서서는 고기능 전문기술자 훈련을 위한 기능대학의 설립을 지원하는 등 지원 분야에 대한 차별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1980년대에 들어서는 학술교육과 기능교육을 병행하는 종합 직업기술교육을 위한 기술교육기관인 기술대학에 대한 사업 지원을 실시하였다.

2.3.2. 직업훈련 자문제공 사업

직업훈련에 대한 독일측의 지원에 있어서 특징적인 점 중의 하나는 직업훈련시설과 기능의 확충을 위한 단위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과 병행하여 직업훈련제도의 발전과 직업교육성과 향상 등을 위한 기술자문 사업이 꾸준하게 병행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직업훈련 수요가 더욱 크게 증가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 독일측은 직업훈련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 및 제도 개발과 이의 효율적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자문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 및 기술자문사업은 1976년부터 1996년까지 7차례에 걸친 사업실시를 통해 꾸준하게 계속되었으며 이러한 자문사업은 그 분야가 특정한 분야로 크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1997년 이후에도 한국측이 관련 비용의 일부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속되었다. 이와 같이 독일측으로부터는 직업훈련분야에 있어서 실로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매우 다양한 형태의 원조사업이 제공되었다.

< 독일의 의한 직업훈련자문 제공 사업 개요 >

구 분	사업기간	지원규모	주요사업내용
1차 자문사업	1976.1 ~ 1978.8.	3,000천 DM	·IBRD 8개 직업훈련원설을 위한 차관사업에 대한 기술자문 제공 ·독일자문관 4명,105m/m 파견, 한국인력 53명 파독 연수 실시
2차 자문사업	1978.9.~ 1983.12.	12,530천 DM	·IBRD차관사업 지원계속 및 직업훈련검정제도 개선, 한독훈련원 공업전자과 신설 지원 등 ·독일자 문관 11명,174m/m파견, 120명 파독 연수 실시
3차 자문사업	1984.1.~ 1986.12.	3,970천 DM	·산학협동훈련제도의 발전 및 한독직업훈련원 전자공업과 지원 ·자문관 4명, 125m/m 및 파독 연수27명 ·장비 및 부품 공여 80천 DM
4차 자문사업	1987.1.~ 1988.12.	5,000천 DM	·직훈제도 발전 및 부산직업훈련원 금형공과 지원 ·전문가 123m/m 및 파독연수 207m/m . 훈련장비제공 1,250천 DM
5차 자문사업	1989.1.~ 1990.12.	3,700천 DM	·기술교육대설립 지원 및 산학협동훈련제도 정착 지원 등 ·전문가 49m/m, 파독연수 209m/m
6차 자문사업	1991 ~ 1993	6,000천 DM	·기술교육대 교사양성지원, 부산훈련원·창원기능대 사후지원 등 · 전문가 80m/m, 파독연수 346 m/m, 단기시찰 36명 · 장비제공 847천 DM
후속 자문사업	1994 ~ 1996	700천 DM	· 사업경비 공동분담 방식에 의한 독일 자문관 활용, 연수생 파견, 독일 현지시찰단 파견 등
합 계	7 건	34,900천 DM	

2.4. 평가 및 교훈

독일의 한국에 대한 직업훈련사업 지원은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집중적인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선 매우 특기할만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재건은행(KFW)의 개발자금의 지원에 있어서는 농업, 통신 등의 여타 부문에 대해 비교적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독일의 기술협력공사(GTZ)[1]를 통한 기술원조에 있어서는 직업훈련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독일의 우리나라 직업훈련분야에 대한 지원은 거의 30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한국의 산업발전과 그 궤를 같이하면서 우리 직업훈련 정책과 제도의 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미국 AID로부터의 무상 기술원조사업이 197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종료되기 시작한데 비해 독일로부터의 무상 기술원조사업은 1990년대 중반까지도 지속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제도가 정착되어 완전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기까지 꾸준하게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독일 방식의 직업훈련교육은 일반 공교육기관에 의해 실시되고 있었던 실업계 직업학교의 교육목적과 방식이 크게 달랐다는 점이 커다란 특징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반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공과계 대학으로의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이론중신의 교육이 실시되었던데 비해 독일방식의 직업교육은 교육훈련 후 곧바로 산업체로 투입할 수 있는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특히 이점과 관련해서는 1967년부터 진행된 한독부산직업전문학교 설립사업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독일정부간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측에서는 이 직업훈련학교의 설립을 문교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독일측은 과거 문교부와의 협력을 통

[1] 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German Technical Cooperation)

해 실시하였던 인천 한독실업학교의 부적절한 사업운영사례 등을 지적하며 직업훈련사업의 실시를 노동청이 실시할 것을 주장했던 것으로 나타나있다.[1] 한편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정부가 관계부처간의 의견조정을 실시한 결과 독일측의 의견을 우리측이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이 관련 사업약정서에도 반영되게 되었다.[2]

따라서, 독일측이 제공하는 직업훈련사업의 경우 이는 문교부가 아닌 노동청에 의해서 실시되게 되었으며 이론교육보다는 실습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등 독일 고유의 직업훈련 방식을 따르는 직업훈련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결과적으로 독일의 직업훈련 체제와 방식이 우리나라 직업훈련 제도의 성립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독일의 직업훈련분야에 대한 협력은 철저한 인적 연성 협력에 토대를 두고 선후 관련사업간의 면밀한 연계 하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각종 협력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독일측이 담당한 부분은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자문은 물론 개별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교과 과정 개발 및 시스템 운영,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필수 장비 및 기자재의 제공 등 인적 능력의 배양에 중점이 두어졌다는 것이다.

독일의 지원에 의해 추진된 주요 3개 직업훈련사업에 투입된 65.3백만 DM의 원조자금 중 장비공여 등 경성 협력 요소에 지원에 지원된 자금의 규모는 10.7백만 DM에 불과하여 연성 협력요소에 투입된 자금의 비중이 83.7%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1 독일 경제협력성조사단 조사결과(1969.3.14~3.25.) 및 한독공공직업훈련소설치안에 대한 경위보고서(노동청, 1969. 5.)

2 부산한독공공직업훈련소(가칭) 설치에 따른 관계부터 의견조정회의 참석 결과 보고서(노동청, 1969. 5. 15.) 및 한독정부간 사업약정서(*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in Pusan*, 1970. 5. 16.)

이와 같이 연성 협력요소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전체 지원사업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직업훈련자문사업의 비중이 큰 데도 그 원인이 있지만 나머지 두 개의 단위 프로젝트형 기술원조사업을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한독부산직업훈련원 및 창원기능대학 설립지원사업과 같은 프로젝트형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연성 사업요소의 비중이 각각 83.4%, 64.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한독 직업훈련사업비 구성 >

(단위: 천 DM)

구 분	연성요소[1]	경성요소[2]	합 계
한독직업훈련원사업	14,070(83.4%)	2,800(16.6%)	16,870
창원기능대학사업	8,650(64.0%)	4,870(36.0%)	13,520
직업훈련자문사업	31,920(91.5%)	2,980(8.5%)	34,900
합 계	54,640(83.7%)	10,650(16.3%)	65,290

주 [1] 전문가활용, 해외연수 교육 등
[2] 장비 및 기재 공여
자료: op. cit., p. 37

또한 독일측으로부터 제공된 협력 요소는 매우 고도화, 표준화된 자국의 직업훈련 기준 및 시스템을 토대로 하여 아주 정교하게 이루어졌으며 긴밀한 산학협동체제 속에서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교과 과정의 마련, 훈련장비 및 기재의 제공 등이 이미 자국에서 충분히 검증되어 표준 · 전문화된 기준과 제도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관계로 별다른 시행착오 없는 사업 추진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되며 관련 장비의 추가 부품 공급 및 사후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국적인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표준화되어있는 독일의 직업훈련제도와 체계 덕분에 표준화된 훈련

과정의 운용은 물론 응용과정의 개발과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사업관리를 통해 우수한 표준 제품이 선정됨으로써 질 좋은 장비와 기자재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장비의 장기적인 애프터서비스와 부품 확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유지 · 관리가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초청연수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연수 참여자 수준, 훈련 희망 요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개별 연수생 단위의 연수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공공직업훈련원은 물론 민간 연구기관, 민간 기업체 등에서의 다면적인 훈련실시 등 개방적인 방식의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의 제고는 물론 훈련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독일 자국으로의 초청연수 교육의 실시에 있어서 연수 실시기간을 최소한 18개월 이상으로 하여 연수 내용의 심도를 크게 높이는 한편 전문분야 교육훈련 이전에 미리 충분한 현지 자국어의 능력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공여국에서의 사회·문화적 적응력과 교육훈련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는 점이 눈에 띠는 특기할 만한 사항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연수생의 접수 전에 연수를 받고자하는 이는 훈련 및 교육 수요와 희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연수사업내용에 반영함은 물론 연수 실시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신축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수요자의 필요를 적극 수용했던 점도 특기 할만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문 훈련분야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어느 특정 교육기관에서 모든 훈련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잘 조직된 정부와 민간간의 해당 분야 산학협동체제에 입각하여 여러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폭넓은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개방적이면서도 신축적인 연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 한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직업훈련제도 및 방식의 발전에 있어서 공여자측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자국 방식의 훈련제도

를 적극적으로 전수시키고자함은 물론 자국의 사회 · 문화적 가치와 전통이 반영된 고유한 시스템을 이전시키고자 한데 있어서도 노력을 기울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독일이 특별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기능장(Meister) 제도, 산학협동훈련제도 등을 한국의 직업훈련분야에 제도적으로 접합시키고자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는 것이다. 한편 수원자측인 한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이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업현장 방문조사 및 공여자측의 관련 보고서[1]등에 따르면 그와 같은 노력은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한국사회의 가치관, 교육 및 직업의식 등이 그러한 제도가 잘 발전되어왔던 독일의 것들과는 적지 않게 달랐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독일정부가 우리나라에 제공한 직업훈련분야에 대한 원조는 아마도 특정한 어느 하나의 원조 공여국이 특정한 어느 다른 수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 중에서도 매우 두드러진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독일에 의한 개발원조 및 협력이 이 분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으며 이 분야에 지원된 기술원조의 규모가 반드시 컸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직업훈련분야에 대한 한국에 대한 독일의 지원은 어느 특정한 비교우위의 협력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하는 부문중점(sectoral focus) 전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으며 그것이 나름대로의 뚜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경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전문적인 직업기술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역량을 확충함은 물론 산업기술 인력의 양성이라는 중요한 개발과제의 하나를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내리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다.

---

[1] Klaus Schaak, *The Transferability of the Dual System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e Korean Example*, Nov. 1999, p. 5

3.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사업

3.1. 배경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설립사업은 원조 공여자와 수원자 모두의 전략적 이해가 잘 조화 · 접합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양자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추진된 대표적인 개발원조 사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원조 사업의 공여자인 미국은 당시 여러 각도에서 제기되고 있던 미국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불식시키는 한편 동맹국과의 전략적 동반관계를 강화해나간다는 견지에서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두드러지는 협력사업의 추진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Linden B. Johnson)가 지향하고 있는 이른 바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의 건설이라는 목표에 걸 맞는 대외원조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 있었다. 또한 미국은 트루만 대통령이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의 하나로 밝힌바 있는 원조계획인 이른바 '포인트 퓌 프로그램(Point Four Program)'[1]이후 미국은 개도국에 대한 기술원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처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그간에 이루어진 막대한 규모의 대외원조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극히 미흡하다는 대내외적인 비판에 대응하여 개발도상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주적 개발 능력을 배양시키는 방향으로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의 방향을 다시금 전환하는 맥락에서 선택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개발원조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점증하는 가운데에서 이른바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두뇌유출(brain drain)'이라는 부정적 현상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이

---

[1] 1949~1953년 간 시행된 미국의 대외원조계획으로 1949년 Harry S. Truman 대통령의 취임연설 제4항(The fourth point)의 관련 정책표명으로부터 연유됨.

를 시정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의 추진을 이 사업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이 더욱 깊게 개입하기 시작한 월남전이 점차 확대되면서 이로부터 빗어지는 아시아지역에서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고 전통적인 우방국과의 전략적 동반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다 전략적인 원조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이 원조사업의 수혜자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제1차 경제개발계획기간 중에 추진코자했던 종합과학기술연구소 설립추진이 관련 부처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좌절[1]된 이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차에 미국이 제안한 이와 유사한 성격의 연구소설립지원 제안은 매우 반갑고도 시의 적절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더구나 남한과 북한이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안보적 현실과 혁명정부가 안고 있는 정통성의 문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자유 진영의 슈퍼파워인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안보의 공고화는 물론 대내외적인 신인도를 향상시키는 등에 있어서 매우 유효하지 않을 수 없었다.[2]

3.2. 사업추진 경위 및 경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에 관한 미국측의 제안은 1965. 5. 박정희 대통령의 미국 공식방문중 한·미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을 통해 밝혀졌다. 즉, 5. 16.에 있었던 양국정상의 공동성명에서 '미국측은 한국의 공업발전에 기여할 종합연구기관의 설립에 대한 한국측의

---

1 과학기술처의 전신이었던 경제기획원의 기술관리국은 1963년 우리나라 과학기술관계 연구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기존의 국립공업연구소를 개편하여 '종합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상공부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1964년에는 다시 상공부 산하의 금속연료종합연구소를 모체로 하는 종합과학기술연구소 설립을 추진했으나 중단되고 말았음.(*과학기술행정 20년사*, 과학기술처, 1987, p. 16)

2 김근배,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설립과정에 관한 연구: 미국의 원조와 그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제12권 제1호, 1990, p. 46~48

희망을 이해하고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연구소를 설립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이 제의를 한국이 환영함에 따라 미국측은 한국의 공업기술 및 응용과학연구소의 설립 가능성을 한국의 공업계 · 과학계 · 교육계 지도자들과 더불어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 과학기술자문관을 한국에 파견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던 것이다.[1]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된 이 사업의 추진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같은 해 연구소설립사업에 대한 기초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듬해 양국 정부간의 사업시행협정이 체결된 뒤 본격적인 건립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연구소 설립추진 개요 >

- 양국의 공동성명에 입각하여 연구소 설립을 위한 양측의 준비 착수
  ○ 한국측은 1965.5.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 주관 하에 '과학기술연구소 설립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소 설립준비 자문위원회'를 구성
  ○ 미국측은 대통령의 과학기술특별고문인 Donald F. Hornig박사를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1965. 7. 한국에 파견하여 연구소설립지원과 관련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동 결과보고서를 제출

- 1965. 9.~ 1965. 12.간 미국 AID의 의뢰를 받은 연구전문 용역기관인 Battelle Memorial Institute가 연구소설립방안에 대한 한국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 및 조직에 관한 조사보고서' 작성 제출

- 1966. 2.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에 관한 한미 양국 정부간(경제기획원과 USAID) 협정' 체결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법인 설립

- 1966. 3. 미국 바텔기념연구소가 한구과학기술연구소 설립에 관한 제안서를 미국정부(USAID)에 제출 및 1966. 4. 미국정부와 바텔연구소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 및 초기업무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

---

[1] *KIST 30년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98. 12., p.94~95

- 1966. 5. 연구소 설립 부지 선정(임업시험장내 국유지 79,142평 확보)

- 1966. 6.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 계획을 제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반영,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바텔기념연구소 간에 기술용역계약 체결 및 자매결연

- 1966. 10. 연구소 건물 신축공사 착수

- 1966. 11. 연구소 참여 하에 바텔기념연구소에 의해 한국의 16개 분야에 대한 산업실태조사 착수

- 1996. 12.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 시행(법률 제1837호) 및 1967. 1. 과학기술진흥법 시행(법률 제1864호)

- 1967. 3. 정부조직법을 개정,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산하에 과학기술처를 신설

- 1967. 5. 연구소 직제 설치 및 연구업무 착수(정부와 장기 에너지수급계획에 관한 연구용역계약 체결)

- 1967. 8. 연구소 건설용 기자재 및 시설용품의 통관면세조치 공포 (법률 제3193호)

- 1969. 3. 미국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IESE)과 기술지원협정 체결

- 1969. 10.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준공식 개최

3.3. 사업추진 내역

한미 양국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키로 한 연구소의 성격은 응용과학(applied science)과 산업기술(industrial technology)의 발전을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응용과학기술연구소였다. 새로이 설립될 연구소가 실용성이 강조된 응용연구소가 되어야한다는 것은 이 사업의 모태가 된 한미 양국정상간의 공동성명에서 이미 확인된 바

가 있었다.[1]

이와 같이 새로이 설립하고자하는 연구소의 성격이 설립제안 및 구상단계에서부터 뚜렷하게 부각되었던 데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우선 '기술에서의 마샬계획(Technological Marshall Plan)'이라고까지 불렸던 존슨행정부의 대외원조의 추진에 있어서 실용적인 기술원조를 강조하는 당시의 정책의지가 이 사업에 반영되어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은 이미 Point Four Program을 통해 기술원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으며 1960년대 초까지 한국의 대학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실시된 기술원조사업 역시 대부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점 등이 작용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실용적인 연구소로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던 것은 공여자측에서 볼 때 대외원조가 구비해야할 요건 중의 하나인 '수원국이 빠른 시간 내에 원조의 효과를 얻어야한다'는 실용성의 기준을 중시했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한편 수원자측에서는 공업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과 성장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응용연구소의 설립 필요성이 매우 크지 않을 수 없었다.[2]

1965. 7. 미국 존슨대통령의 과학기술특별고문이었던 호닉박사(Dr. Donald. F. Hornig)를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의 파견으로부터 본격화된 연구소 설립추진은 같은 해 동 사업의 기술자문 용역을 담당한 바텔기념연구소(Battelle Memorial Institute)에 의한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시 및 사업계획수립 등을 통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1965. 8. 존슨대통령에게 제출된 호닉조사단의 보고서는 설립될 연구소가 한미 양국 정부와 산업계의 확고한 재정지원으로 그 설립기반이 조성되어야하며, 연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연구소로써 최고 수준의 과학자를 유치할 수 있는 예산 운용의 신

---

1 1965. 5. 18.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이 연구소는 'Institute for Industrial Technology and Applied Science'로 명기되어 있음.

2 김근배, op. cit., p. 47~49

축성을 부여해야함은 물론 설립될 연구소가 한국의 산업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국내자원의 유용성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사업활동의 토대를 제공해야한다는 요지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 조사보고서는 신설될 연구소가 앞으로 다른 개발도상국에 설립하게 될지도 모르는 유사한 연구기관의 모델이 되리라는 점과 이 연구소가 충분한 저력을 쌓고 능력을 갖춘 외국의 연구기관과 적극적이고도 장기적인 유대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제안한 응용과학 및 공업기술연구소 설립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과 이 원조사업의 실시 책임을 미국국제개발처(USAID)에 부여할 것 등을 건의하였다.[1]

한편 호닉조사단에 뒤이어 미국국제개발처가 1965. 9. 파견한 바텔기념연구소 조사단은 같은 해 12월까지 한국에 머무르면서 우리나라의 산업과 기술에 대한 실태 파악은 물론 정부 · 산업계 · 과학기술계 · 교육계의 지도적 인사들과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방안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바텔기념연구소의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는 12. 15.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 및 조직에 관한 보고서'[2]라는 제목으로 양국 정부에 제출되었으며 양국 정부는 이 조사보고의 결과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그 보고서에 토대한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방안이 마련되기에 이르렀으며 1966. 2. 4.에는 한미 양국간의 공동지원사업계획 협정서가 체결되게 되었다.

우리측의 경제기획원과 미국측의 USAID간에 체결된 연구소설립협정은 사업기간을 1966년부터 1970년까지로 하고 연구소의 건설은 물론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한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1 *Report to the President Regarding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in Korea with United States an Institute for Industrial Technology and Applied Science*(1965. 8.)

2 미국 AID와 바텔기념연구소간의 계약(AID/fe-194)에 의해 시행·제출된 이 타당성조사보고서는 보고서는 연구소를 설립함이 타당하다는 결론과 함께 연구소설립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은 물론 연구소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안)을 제시함.

< 한 · 미간 연구소설립협정 주요 내용 >

·자율성을 가지는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기관의 과학기술 연구소 설립·운영

·1966년에 1차로 75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사무용 건물건축을 병행하며 연구소 설립 후 초기 5년 간 210명의 직원과 약 200,000평방 피트 (약 5,500평)의 연구실 및 사무실 마련

·자매연구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및 국제적인 기술교류의 문호를 개방

·가장 유능한 과학기술인력을 충원하며 대우 수준을 국내외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정도로 함

·연구소를 과학기술과 공업경제와 관련된 전문적 타당성조사, 기술도입과 응용, 과학기술정보의 제공, 특수용역 및 실험의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기관으로 육성

·연구소는 신설되는 대학과 연구기관, 기타 특별기술기관과의 협조적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

·연구소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계약연구업무를 수행하며 수탁연구업무 수행에 있어서 수탁자의 비밀과 소유권을 보호함 등

연구소 설립추진과정에 있어서 한미양측간에 무엇보다도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논의되었던 사항은 연구사업 운영 방식 및 방침과 관련된 것이었던 것 같아 보인다. 양측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된 연구소의 운영 방침은 당시 우리나라 기존의 연구기반이나 풍토를 기준으로 볼 때 매우 획기적인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양국간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연구소의 연구사업 운영방식이 수원자측의 경험 및 능력 여부와는 관계가 없을 정도로 가장 선진적인 사업관리와 조직운용 시스템의 도입 및 적용이 시도되었기 때문이다.

즉, 연구소의 기본적인 체제와 관리 방식에 있어서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매우 진보적인 방향을 설정하였다. 우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연구의 충분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캐나다의 NRC(National Research Council)의 제도를, 국가발전에 필요한 우선적인 연구과제의 선정하는 연구수의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호주의 CSIRO(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의 방식을,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균형을 유지하고 연구소와 대학 등과의 유대 관계를 구축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는 독일의 MPG(Max-Plank Institute)를, 연구소 운영에 있어서 연구실 단위체제와 연구의 독립성에 관한 원칙을 살리면서 연구결과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일본 이화학연구소(理化學硏究所)의 방식 등을 참고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려를 통하여 마련되었던 연구소의 기본운영방침은 다음과 같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기본운영방침 >

·국가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축적
·사업과 직결되는 응용연구와 이의 원천이 되는 기초연구의 균형적 개발
·연구성과의 활용을 위한 산업계와의 긴밀한 유대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광범위한 교류와 기술제휴
·자유롭고 의욕적인 연구를 가능케 할 충분한 연구요원의 채용
·능력과 연구과제에 따른 계약에 의한 연구요원의 채용
·정확한 연구원가계산에 의한 책임회계제도 확립

한편 주요 연구 인력의 충원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거나 연구 분야에 종사하고 있던 한국인 과학자들을 당시 한국내의 기준으로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채용함으로써 국내 기존 다른 연구능력을 위축을 방지하는 한편 연구소가 최신의 기술 수준은 물론 최고의 인재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연구소 설립을 위한 투자비는 1,200만 달러 규모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사업 시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금액의 약 2배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되었다. 그것은 건축비의 증가와 당초 규모보다 증가된 수준의 연구소 운영에 따르는 운영비 및 용역비의 지출이 크게 증가했던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측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한편 추가되는 일부의 건축비 등을 미국 AID의 차관자금[1]과 대일 청구

[1] *Loan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the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1968. 11. 7. 서울에서 서명 및 발효, 조약 제289호)

권 자금으로 충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당초 676만 달러로 계획되어 있었던 미국측으로부터의 지원자금 규모는 908백만 달러로 증가하게 되었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투자 현황 >

(단위: 천 달러)

구 분	합 계	자금원			투자내역			
		한국	미국	기타	건물건축	연구장비	연구소운영	용역비
계 획	12,080	5,320	6,760	-	4,750 (2,000)[1]	3,000 (3,000)[1]	2,570 (-)	1,760 (1,760)[1]
(구성비,%)	(100.0)	(44.0)	(56.0)	(0.0)	(39.3)	(24.8)	(21.3)	(14.6)
실 적	23,400	14,100	9,080[2]	220[3]	10,640 (4,290)[1]	1,900 (1,620)[1]	7,690 (-)	3,170 (3,170)[1]
(구성비,%)	(100.0)	(60.3)	(38.8)	(0.9)	(45.6)	(8.1)	(32.8)	(13.5)

주 [1] 미국의 지원자금

[2] 이중 190만 달러는 AID차관 자금임

[3] 대일 청구권자금

자료: 김근배,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과정에 관한 연구, 1990

3.4. 평가 및 교훈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사업은 미국이 대규모적이고 체계적으로 저개발국에 원조한 최초의 과학기술연소로써 과거 행정지원활동에 치중되어 있었던 기존의 연구기관과는 달리 본격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한 최초의 종합과학기술연구소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이 주는 의미가 한미 양국에는 서로 달랐지만 그 중요성은 매우 컸으며 저개발국의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이 많은 제약요인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제대로 성장·발전하지 못했는데 반해 KIST는 한국의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성공적인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즉, KIST는 국가적

필요에 부합하는 과학기술연구의 본격화, 기업체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정보의 제공, 대학과 다른 연구기관 활성화에의 기여하는 등의 성과를 이룩했으며 저개발국에서 연구소를 설립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전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1]

응용과학기술에 중점을 둔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및 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말미암아 기초 순수분야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이나 평가가 있기도 하지만 이는 여러모로 두드러진 KIST설립사업의 성과를 과소평가하게 하는 성질의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제한된 자원과 낙후된 연구기반 위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불균형발전 전략의 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여하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사업은 한미 양국의 공동노력을 통해 실시된 대표적인 개발원조사업으로 양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이루어낸 좋은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을 또 다른 측면에서 평가해본다면 이 사업은 응용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기반이 극히 미흡한 우리의 실정에서 원조공여자인 미국측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은 미국측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려와 새로운 대외원조정책 하에서 미국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매우 큰 열의와 적극성을 보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원조사업의 공여 동기에 대해서는 베트남전에 한국이 미국을 도와 한국군을 파견하기로 한데 대한 미국의 보답이었다는 견해1와는 별개로 이 사업은 미국측으로부터의 제안이 이루어진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사업 제안이 이루어진 후 불과 6개월 여 만에 양국간의 사업시행협정이 체결된 것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주요 원조사업 사례의 하나로 먼저

---

1 김근배, op. cit., p. 45

살펴본 바 있는 한독부산직업훈련소 건립사업의 경우 1966년에 한국과 독일 양국간의 기본약정이 체결된 이후 무려 4년 후인 1970년에 가서야 사업시행약정이 체결된 사례와 간단하게 비교해 볼 수 있다.

여하튼 이 사업의 추진은 앞에서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공여자측의 조사단에 의한 기초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기민한 후속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매우 원만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더욱이 공여자측은 연구소 기본 체제의 수립은 물론 연구소 관리 · 운영 방향, 연구개발 업무수행 방식 등의 조직의 기본 시스템과 사업운용 방식의 설정에 있어서 매우 분명한 입장과 복안을 가지고 사업 추진에 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여자측은 면밀한 현지 조사와 평가에 입각하여 수원자측에 대한 적극적 자문 및 지원에 임함으로써 시행사업이 매우 뚜렷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게 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측은 연구소 재정의 안정성 확보, 합리적이고 역동적인 연구 환경 및 여건의 조성, 자율적이고도 독립적인 연구 활동의 보장, 계약연구제도의 도입 등 책임과 성과 중시의 연구 실시 등 매우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하는데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우수한 연구 인력의 확보, 관계기관과의 파트너십관계의 발전, 연구개발정보의 축적과 활용 등에도 각별한 중점을 부여하였던 점도 공여자측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매우 뚜렷한 복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

한편 수원자인 한국의 입장을 보면 미국측으로부터의 사업제안을 수용한 이후 이 사업의 준비 및 사업 추진 역시 공여자 못지않게 매우 적극적이 고도 개방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측은 연구소 설립에 관한 양측의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인 1965. 6. '과학기술연구소 설치방안'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곧이어 7월에는 연구소설립준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실시 준비를 서둘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그 이듬해 2월 한국정부는 연구소설립에 관한 양국간 약정의 체결과 함께 재단 형태의 연구소를 출범시키는 한편 이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육성법'등[1]을 제정하여 연구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당초 양측간에 체결된 사업목표를 능가하는 수준의 인력의 확보 및 예산의 배분 등을 통해 매우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측은 연구소의 안정적인 재정운용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단운영기금을 조성하였으며 1970년의 연구소 전체 인력이 당초의 계획인원인 210명의 두 배가 넘는 573명을 충원[2]하였으며 이를 위한 운영자금을 당초 계획보다도 크게 증액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한 신속한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한편 제반 지원이 원만히 이루어진 관계로 단시간 내에 연구소의 운영이 활성화되는 등 초기의 사업 목표와 성과를 원만하게 달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듯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사업은 공여자 측의 전략적 고려와 수원자 측의 적극적인 수용이 잘 조화되어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낸 원조사업의 하나의 좋은 사례로 제시해도 손색이 없을 듯싶다. 즉, 시대적 상황과 여건, 양자의 능동적 사업 추진이 사업 소기

---

1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육성법은 1966. 12. 27. 법률 제1857호로 공포되었으며 이 법은 정부가 연구소의 건설비와 운영비, 운영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의 회계감사나 사업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그 이후 연구소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한 법률로는 과학기술진흥법(1967.1.16., 법률 제1864호), 연구소건설용 자재 및 시설용품의 통관면세조치(1967.8.13., 법령 제3193호),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1967.11.29.) 법률 제1974호), 전지공업진흥법(1969.1.28., 법률 제2098호) 등이 있음.

2 김근배, op. cit., p. 65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실패를 거듭한 '후발자의 이점(late-comer's advantage)'을 살리는 원조사업 성공 사례의 하나를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건립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 우선은 사업의 시행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도 면밀한 사업검토와 전문기관에 의한 심층적인 현지조사와 평가에 토대한 철저한 준비가 뒤따랐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이 사업에 대한 검토와 시행에 있어서 공여자측은 대통령의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을 단장으로 하는 최고수준의 사업조사 및 평가단을 구성하여 면밀한 정책조사 및 사업검토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 분야에서 오랜 사업운용 경험과 우수한 컨설팅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하여 고도로 전문화된 사업추진을 도모함으로써 수원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극복하고 사업의 성과를 거들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소의 운영 및 연구 시스템 구축, 연구 중점분야의 선정 등과 관련해서 한미 양측이 미국측이 파견한 사업실시 용역단을 중심으로 실시한 한국의 산업실태조사는 바텔기념연구소 전문가 23명과 한국측 전문가 57명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조사단에 의하여 1966. 11.부터 1967. 8.에 이르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실시되었다.[1] 또한 사업시행과정에 있어서 유수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크게 강조되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소 설립추진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것은 사업요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인적 자본, 운영 시스템 등 연성 요소를 중시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여자측에서는 사업시행의 가장 중요

---

[1] 김근배, op. cit., p. 64

한 요소로써 '사람중심론'을 관철시킴으로써 수원자측의 '시설중심론'을 일축시킴[1]은 물론 연구소 운영 초기부터 우수한 인재확보를 바탕으로 하여 탄탄한 인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원조 공여자측인 미국은 특히 연구소 책임자의 선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는바, 연구소의 설립 목표 구현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사를 천거하여 이 인사를 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관철시켰으며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다.

이와 같은 연성 요소의 중시하는 방향에서 운영시스템의 개발과 인적 기반 구축에 치중한 나머지 당초 계획했던 투자 금액보다도 훨씬도 더 많은 자금이 연구소 운영과 용역 등의 연성 투자 비용으로 지출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사례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한 가운데에서도 면밀한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관련 사업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연구소 설립 초기에 도입된 조직 및 사업운영 제도와 방식이 당시의 경제 · 사회적 여건 면에서 효과적인 수용이 쉽지 않은 것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즉, 독립적이면서도 자율적인 사업운영시스템의 구축, 계약연구제도(contract research system)의 도입 을 통한 책임연구실시, 산학협동 연구 및 국내외 유관 협력기관 등과의 정보 교류 및 유대관계 구축 등 과 같은 제반 과제들은 당사 한국의 여건상 이를 정착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은 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면밀한 검토와 준비는 물론 뚜렷한 경영 방침과 제도적 뒷받침 등으로 이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과 정착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를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1] 김근배, op. cit., p. 54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소 설립이 이루어진지 이미 30여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그간의 연구소 운영을 뒤돌아볼 때 한두가지의 매우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다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 첫 번째의 평가는 개발연대의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역할과 기여가 매우 컸으며 당초에 기대했던 1차적인 목표는 달성했다 하더라도 과연 현재의 연구소 역량과 체제가 앞으로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보다 큰 역할과 기여를 과연 감당해낼 수 있느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과거 과학기술연구가 불모의 상태였던 시대로부터 우리나라의 과학과 산업기술개발의 전위적인 산실로서 기능을 해왔던 것 같은 선도적 기능을 앞으로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의 문제는 과연 현재의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연구소 설립 당시에 설정했던 조직 발전의 비전과 사업운영의 방침을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잘 업그레이드시켜 나오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연구소 설립 당시에 수립된 비전과 조직 및 사업운영 방침이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매우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답은 동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평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가 없다. 그것은 양국간 협정서 상의 공동지원사업기한인 1971년에 미국의 사업시행자측이 마련한 사업 최종보고서(Final Report)[1]가 제출된 이후 아무런 사후평가 결과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1] Battelle Memorial Institute, *Report on Battelle's Assistance to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1971. 6. 30.

4.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사업

4.1. 사업추진 배경

1960년대 중반 산업화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확산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기계공업부문의 숙련 기술공을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1969년 당시 우리나라의 단위 인구 당 기술공의 숫자는 미국의 6분의 1 수준으로 그 숫자 뿐만이 아니라 수준 또한 매우 저급한 상태라고 하지 않을 할 없었다.[1]

전통적으로 기술과 기계 등 상공부문에 대한 차별적, 천시적인 사회적 가치와 태도가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문에 대해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대부분의 실업계 학교의 경우에도 대학진학을 위한 이론교육 위주로 교과가 편성되어 있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숙련 인력의 교육훈련이 곤란하였으며 사실상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중의 많은 사람들이 일반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 지금이나 과거의 한국적 교육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숙련 기능 인력의 공급은 산업화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과제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폭넓게 자리하고 있는 기술 및 기능교육에 대한 경시현상을 불식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교육기관으로써의 기술교육학교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일본 통치시대로부터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던 한국인의 기능적 소질과 능력에 대한 극히 부정적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여 기술과 기능에 대한 한국인들의 새로운 가치와 태도를 창출시켜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2]

---

1 오원철, *한국형경제건설7: 내가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한국형경제정책연구소, 1999. 10., p. 269

2 오원철, op. cit., p. 252~265

4.2. 사업추진 경위

새로운 형태의 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하는 방안은 1970년 상공부가 기계공업분야에서 숙련기술공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사립형 기술공업고등학교 형태의 학교설립구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업개발의 추진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후 기계공업 등 공업개발의 육성 필요성과 숙련기술공의 필요를 절감하고 있던 상공부가 직접 시범적인 공업기술교등학교 설립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립고등학교나 공립직업훈련소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상공부로서는 기존의 형태와 방식과는 다른 공업기술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사립형 고등학교형태의 학교 설립을 계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기성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다른 정부부처의 간섭을 받지 않는 가운데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독창적인 모델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했던 것이다.

또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학교 설립을 위한 재원과 이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과제는 이미 학교설립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지원을 전제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1] 원조자금이외에 이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안을 찾기가 어려웠던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상공부는 한국정밀기계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마련한 공업기술고등학교 설립방안을 일본 정부측에 제출하여 일본의 원조자금지원을 통한 학교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 학교설립 추진 개요 >

- 1970. 5. 일본 정부측에 기술고등학교 설립지원을 요청

---

[1] 오원철, op. cit., p. 268

- 1970. 7 제4차 한일정부간 각료회의 시 양국정부가 협력하여 기술 고등학교를 설립하기로 합의

- 1970. 11. 일본 정부측 조사단(단장: 문부성 모로사와 심의관) 방한, 사전조사 실시

- 1971. 8 한일 양국 정부간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지원을 위한 증여 약정 체결

- 1971. 11. 한일 정부간 제1차년도 분 증여 약정 체결

- 1072. 7. 한일 정부간 제2차년도 분 증여 약정 체결

- 1972. 11. 학교설립 인가

- 1973. 3. 제1회 입학식, 기계공작과, 판금용접과, 금속공업과, 주물 목형과, 전자과 등 5개 공과 360명 입학

- 1973. 5. 일본인 교사 부임

- 1974. 2. 한일 정부간 제3차년도 분 증여 약정 체결

- 1976. 5. 일본인 기술교사 귀국

4.3. 사업추진 내역

학교건설 사업은 교육사업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공부에 의해 추진되었지만 범정부적인 협조지원체제가 구축되어 관련 부처가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우리측에서는 한국측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부지확보, 건물건축, 학교운영 등의 사항에 있어서 시설건축 등 자본적 투자비는 경제기획원이, 교사 충원 등 교직원 관리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가, 학생의 장학금 제공 및 숙식지원 및 졸업한 학생에 대한 군 복무지원 등의 업무는 국방부가 담당하는 4자 공동 지원형태로 운영되게 되었다.

한편 이 사업에 대한 기술원조를 제공하는 일본측에서는 교육훈련 장비 및 기재의 공여와 학교운영 초기 일본인 기술교사를 파견하는 것이었다.

구미공업단지 내에 자리를 잡아 건축된 학교 시설은 총 195,227평방미터(59,159평)의 부지 위에 연건평 28,809평방미터(8,730평)에 달하는 근대적인 공업기술고등학교가 건립되었다. 한 학년도에 360명에 불과한 학생을 교육시키는 시설로써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새로이 마련된 교육시설은 40개의 교실, 실험실, 사무실 등을 포함하는 본관과 실습동, 기숙사, 교직원 사택, 체육관 겸 강당, 식당 과 기타 편의시설 등 종합적인 교육시설을 구비하게 되었다.

학교건립을 위한 부지의 확보와 건물의 건축 등과 같은 경성 사업비의 대부분은 우리측의 재원으로 마련되었지만 기술교육을 위한 모든 장비와 기자재, 교과의 내용 등은 일본으로부터 무상 기술원조를 통해 제공되었다. 일본으로부터 공여된 교육훈련장비와 기자재는 1971. 11. 1차 연도 증여약정의 체결을 시작으로 1974. 2. 3차 증여약정에 의한 지원이 실시되기까지 모두 1,087백만 엔(3,651천 달러)에 달했다.

이로써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새로운 교육 여건을 구비한 금오공업고등학교가 새로운 형태의 공업기술교육기관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 1973. 3.에 치러진 제1회의 입학식에서는 기계공작과, 판금용접과, 금속공업과, 전자과 등 5개 과에 360명의 학생들을 받아들였다.[1]

한편 학교가 개교된 직후 일본으로부터 파견된 기술교사 8명은 3년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1976. 5. 귀국하였다. 또한 일본측은 한

---

1 기계공작과는 선반(20명), 기계조립(20), 밀링(30), 연삭(30), 정밀측정(20) 등 5개 반 120명, 판금용접과는 판금(30), 용접(30) 등 2개 반 60명, 주물목형과는 주물(20), 목형(10) 등 2개 반 30명, 금속공업과 1개 반 30명, 전자과는 전자기기(60), 통신기기(30), 제어측정(30) 등 3개 반 120명 등 모두 5개과 13개 반이었음.

국의 교사들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3~6개 월 간의 연수를 제공하였다. 기술교사 등 전문인력 파견과 한국인 교사 초청연수와 관련한 일본측의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여의찮았다.

< 일본측으로부터의 지원 사항 >

구 분	지원기간	지원규모	지 원 내 역
장비 및 기재 공여	1971~1974	1,087천 엔 (3,561천 달러)	실험 및 실습 장비, 실험 및 실습 기재
기술교사 파견	1973~1976	8명	지원단장 및 주물, 용접, 기계, 열처리, 단조, 목형 등 7개 분야
교사 일본연수	n.a.	n.a.	

자료: 오원철, 한국경제건설 7권, 한국형경제정책연구소, 1999. 10.

학교운영에 있어서 교과 과정의 운영과 교사 충원, 학생 선발 및 관리 등 여러 사항이 기존의 일반 실업계 고등학교와는 크게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교과 운영은 실습 중심으로 과정이 편성되어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비율을 40대 60으로, 전문교과의 이론 대 실험실습 비율을 30대 70으로 배분하여 기술 분야 전문교과에 치중하는 한편 실습교육의 비중을 크게 중시하는 교육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우수한 교사를 충원하고 이들의 교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이들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도입되었다. 이른바 '금오수당'이라고 알려진 이 특별수당 형태의 급여는 본봉의 100%에 달하는 것으로써 학교의 교직원들에게는 일반학교의 교직원의 약 2배의 수준에 이르는 보수가 지급되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3~6개월의 기간동안 일본에 파견되어 앞선 교사연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커다란 인센티브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었다.

학생의 선발은 전국의 중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10% 상위의 성적에 해당되는 학생 중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모든 학생들은 학교 내의 기숙사에서 의무적으로 생활하면서 학비와 기숙사비를 면제받았다. 학사 운영에 있어서 특이했던 것은 학과 선택의 방식과 학교를 졸업한 학생 모두에게는 하사관으로 병역의무를 하게 하는 이른바 학군(RNTC)제도가 마련되었으며 학교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은 이 제도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해야만 했다.

학생의 선발은 학과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전공 기술 분야의 선택은 1년 동안의 기초 소양교육이 이루어진 이후에 개인의 적성과 희망 등을 고려하여 2학년 과정부터 정하도록 하였다.

학생 모두가 학교 내의 기숙사에서 기숙을 해야 했으며 이들의 학비와 숙식비는 모두 국비지원을 통해 면제되었다. 학생들은 모두가 학교 졸업과 동시에 현역 군인으로 임용되어 3년간의 의무 병역기간 동안 기술하사관으로 근무케 하는 대신 학비와 숙식비 등 일체의 비용을 국고로부터 지원 받았던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방부 소관의 예산을 통해 지원되었다.

4.4. 평가 및 교훈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 사업은 특정한 개발 목표의 구현을 위해 기존의 제도와 방법의 여하에 크게 관계하지 아니하고 수원자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대단히 신축적인 사고와 협조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한 매우 독특한 유형의 협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시의 일반적인 교육체제나 직업전문교육 제도의 틀 속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독특한 전문기술교육 체제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물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전문적인 기능 및 기술 교육이 아직 자리를 잡고 있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방안이 강구될 수는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상공부가 직접 주관하여 일반 교육기관 형태의 기술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한 것은 그

발상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다. 그것은 기술 ·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그마만큼 관련된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은 어떤 주어진 제도적 틀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특정한 과제의 수행을 위해서 제반 정책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개방적이고도 능동적인 수원자책임의 업무추진 결과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학교의 교육 과정을 의무적인 병역의무의 수행과 연계하여 군의 기술관리 능력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병역의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육효과의 간단 또는 단절현상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갔다는 점에서도 그 독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좀더 확대하여 해석해본다면 산업개발과 안보역량의 확충문제를 유기적으로 연계·조화시킴으로써 투자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1]

시범적으로 설립되어 실험적인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이 사업은 우리 산업계에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등의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학교교육을 통해 양성된 젊은 기술 인력은 당시에 요구되던 긴요한 기술 인력 수요를 충당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기술과 기능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도 일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학교의 학생들은 전국 기능대회 또는 세계기능경시대회 등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학교 교육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함을 물론 기술과 기능에 대한 가치의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새롭게 창출해내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

1 학교 학생에 대한 학군(RNTC)제도는 1971. 3. 창설된 이후 1993. 3. 폐지되기까지 22년 간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임관된 기술하사관의 숫자는 7,000명에 이르렀음. 금오공업고등학교는 2003. 2. 제28회 졸업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11,431명의 졸업생(기술전문인력)을 배출하였음.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 사례는 우수한 학생의 선발, 우수한 교육훈련시설과 교사진에 의한 내실 있는 교육,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지원을 통해 새로운 형태와 방식의 전문기술교육의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전례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기술고등학교의 출현은 실업계 교육 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그 이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기술고등학교가 여러 지역에 설립되는 등 그 파급효과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업은 사업 구상 및 입안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던 기술과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전환에 있어서는 사업 시행 후 상당기간 동안 나름대로의 임팩트를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1970년대 초에 투자된 훈련장비 및 시설이 노후화되고 낙후되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새로운 재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것은 한국 사회가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뿌리 깊은 학력지상주의 풍조와 이공계 기피현상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퇴조하기 시작한 전문기능기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위축 문제는 금오공업고등학교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 학교의 운영에도 역시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기능기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퇴조하면서 학교는 시설개체 투자자금 확보의 부진, 우수 학생 유치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른바 사양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제·사회적 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금오공업고등학교도 새로운 변신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다행히도 1990년대 중반에 들어 학교의 성격이 사립학교로부터 공립학교로 전환된 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규모의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개방적인 자율학교 형태로 학교의 운영방식을 크게 전환하면서 학교는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헌데 이 사업이 당면할 수밖에 없었던 '80년대 후반기 이후 사양화 현상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의 경제 · 사회적 현실을 쉽게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 사업 구상 및 추진 초기에 중시했던 실용적 산업기술 교육을 통한 인력개발과 산업 발전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신과 자세로 되돌아가서 꾸준하게 노력한다면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학교발전 노력이 나름대로의 충분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

[1] 금오공업고등학교는 1993. 3. 공립으로 전환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시설재투자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는바 2001년부터 2003년 간 3개년에 걸쳐 107억 원의 건축시설 개체비와 139억의 원 장비개체비 등 모두 280억 원을 투입하여 전반적인 교육시설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정보산업사회형 기술전문교육기관 성격의 학교로 그 기능과 역할을 변모시켜나가고 있음.

5. 국립의료원(Korea Medical Center) 건립사업

5.1. 사업 개요

국립의료원 건립사업은 전후 복구 및 경제재건의 시기에 추진된 원조 사업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스칸디나비아(Scandinavia) 3국[1]은 이미 한국전쟁기간 중에 각종 긴급 의료지원을 통해 우리나라를 지원해 왔으며 전쟁 종료와 함께 3국 공동의 무상원조사업으로 UNKRA의 다자적 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국가적 수준의 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1956년에 건립을 착수하여 1958년에 개원된 국립의료원(Korea Medical Center)은 이후 10년 간 공여국들의 의료진과 경영 · 기술진에 의해 운영되다가 1968년 그 운영권이 한국 측으로 완전 이양되었다.

의료원의 운영권이 한국 측으로 이양된 뒤에도 공여자측은 상당기간 동안 추가적인 의약품 및 의료 장비의 제공, 의료 인력에 대한 해외 연수 등의 방법을 통해 꾸준하게 의료원의 운영을 지원하였다. 한편, 이를 양여 받은 한국 정부는 이 시설에 대한 자체 투자를 지속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여러 가지 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의료 기관으로 그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5.2. 사업추진 경위

스칸디나비아 3국은 한국전쟁에 군사력을 지원한 참전국들은 아니었지만 전쟁 기간 중에는 물론 전후 전재복구 및 경제의 재건 과정에서 도움을 제공한 나라들이다. 스칸디나비아 3국은 전통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중점을 둔 대외 원조사업을 추진하고있는 나라로 잘

[1]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알려져 있으며 근년에 이르러서는 여러 다른 선진국들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개발원조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다.[1]

스칸디나비아 3국은 한국전쟁 중의 기간동안에는 전재민 구호 등을 위한 긴급 의료지원을 실시하였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병원선 Futlandia호를 부산항에 파견하였으며 노르웨이는 동두천 지역에 이동외과병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가하면 스웨덴의 경우에는 부산에 적십자병원을 설치하여 여러 가지 의료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전쟁 이후의 전화복구와 경제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UNKRA를 통해 이루어졌다. 스칸디나비아 3국은 UNKRA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의료지원사업을 우리나라에 제공하였다. 스칸디나비아 3국은 1956. 3. 13. 한국정부 및 UNKRA 등 5자간의 협정을 통해 종합병원 설립사업 추진에 합의하였다.[2]

5자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르면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 3국은 이 병원건설사업의 추진을 인도적인 사업에 공헌하고자하는 목적(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humanitarian work)에서 한국정부 및 UNKRA와 함께 추진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종합병원 건립사업은 병원건설에 소요되는 자금 2,400천 달러는 UNKRA가 제공하며 병원운영 인력과 시설과 장비비 2,000천 달러는 스칸디나비아 3국이, 병원건축에 필요한 대지 등의 내자비용 167백만 환(930천 달러 상당)은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등 모두 533만 달러를 투입하여 1958년까지 환자진료와 의료요원의 교육 훈

---

1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3국은 22개의 OECD/DAC회원국 중에서 국민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율이 가장 높은 세 나라들임. 2002년 덴마크는 1,643백만 달러, 노르웨이는 1,696백만 달러, 스웨덴은 1,991백만 달러의 ODA를 공여하였으며 이는 GNI대비 각각 0.96, 0.89, 0.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2 *Agreement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National Medical Center in Korea*에는 스칸디나비아 정부들(The Scandinavian Governments)로 불려지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3국의 대표와 한국정부와 UNKRA의 대표 등이 서명하였음.

련 등을 담당하는 국가적 수준의 종합병원을 서울에 설치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사업은 병원의 건립뿐만이 아니라 병원 건립이후의 환자진료 및 의료 인력의 교육 등 병원 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 즉, 병원건립이 완료된 이후에는 스칸디나비아 3국이 연간 1,500천 달러의 자금을 공동 부담하여 병원 건립이후 5개년 간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한국측에서는 병원건립 이후 병원운영 초 년도에 173백만 환을 시작으로 병원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었다.

병원건립 및 운영사업은 다자간에 이루어진 복잡한 형태의 원조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순조롭게 추진되었다. 1956. 9.에 착수된 병원 건물건축 공사 및 시설작업은 2년만인 1958. 10. 준공과 함께 개원이 이루어졌다. 이 병원은 근대적인 의료 장비와 시설을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스칸디나비아 3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하여 순조롭게 운영되었다.

그러나 당초 5년 예정으로 1963년에 종료키로 되어있던 스칸디나비아 3국에 의한 병원운영은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5년의 기간이 연장되어 1968년까지로 조정되었다. 이를 위해 스칸디나비아 3국과 한국정부 및 UN의 대표간에 1964. 6. 19. 추가협정이 체결되었다.[1]

한편 이 추가협정(Addendum)을 체결하면서는 이 추가협정에 첨부되는 '병원운영계획'[2]에도 합의하였는바, 이 계획에는 5년 동안의 추가 협정기간이 만료되는 1968. 10.부터는 한국측이 병원의 운영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 병원운영과 준비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추가협정은 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프로젝트형 기술원조사업의 좋은 본

---

[1] *ADDENDUM containing additional articles to The Agreement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National Medical Center in Korea and its Annex of March 13, 1956.*

[2] *Plan of Operation for the National Medical Center*

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추가협정기간이 만료되기에 앞서 계획된 일정대로 병원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한국측으로 넘겨주기로 하고 1967. 10. 한국 보건사회부장관과 스칸디나비아위원회 간에 '국립의료원에 대한 스칸디나비아책임의 한국정부 이양 등에 관한 양해 각서에 서명하게 되었다.[1] 이리하여 1968. 9. 추가 협정기간이 만료됨과 함께 스칸디나비아 3국에 의해 운영되어왔던 한국국립의료원의 운영권은 한국측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병원의 운영권이 한국측으로 이양되면서는 한국과 스칸디나비아 3국간의 의학과 문화교류 증진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스칸디나비아재단(Korea-Scandinavia Foundation)이 발족되었다.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이 재단은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

5.3. 사업추진 내역

한국전쟁 후 의료분야에 있어서의 스칸디나비아 3국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한 협의가 있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병원건립과 관련한 사전조사, 타당성조사 등 사업 준비 및 당사자간의 협의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을 발견할 수는 없으나 1956. 3. 병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5자간 협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업 타당성조사 등 사업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들이 우리측에 구체적으로 남아있지 않은 것은 이 사업의 구상 및 준비가 모두 스칸디나비아 3국 및 UNKRA주도로 이루어졌던 때문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즉, 전반적인 사업의 추진이 수원자인 한국측의 주도가 아니라 공여자측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1]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Minister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candinavian Board of the National Medical Center in Korea Regarding Transfer to Korean Authorities of Scandinavian Responsibilities at the National Medical Center*

병원 건축을 위한 부지를 신규로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관계로 서울시 을지로에 소재하고 있던 기존의 서울시립시민병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병원의 시설 규모에 있어서는 당초 1,000병상 규모의 진료 중심의 의료기관으로 계획되었던 병원은 한국측의 요청에 따라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기능을 추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병상의 규모는 450개로 축소하고 의사, 간호사, 기술자 훈련 등을 위한 시설을 추가하게 되었다.[1]

UNKRA로부터 2,400천 달러의 지금지원에 의해 건축된 병원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의 본관건물(9,127㎡ 2,760평), 별관(3,097㎡ 937평), 부속건물(21,870㎡ 6,616평) 등 총 34,095㎡ 10,214평의 현대적 구조와 시설의 건물로 건축되었다. 본관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는 당시에는 보기 어려운 시설 중의 하나로 그 자체가 하나의 구경거리가 될 정도였다고 한다.

의료장비 및 시설의 도입은 스칸디나비아 3국의 지원자금에 의해 이들 국가로부터 모두 2,000천 달러 상당의 각종 장비와 시설이 제공되었다. 여기에는 각종 의약품은 물론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 용기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의료 및 병원 용품이 공여자측으로부터 공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 지원된 장비와 시설 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설의 수준이 1958년의 개원 당시로서는 동양에서 가장 훌륭한 장비와 현대식 시설을 갖춘 병원이 설립되었다는 찬사를 받았으며, 개원 이후에도 스칸디나비아 3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의료장비 및 인력의 지원을 받아 종합병원 규모의 걸 맞는 현대식 장비를 구비할 수 있었음은 물론 양질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2]

1968년 병원의 운영권이 한국에 이양되는 과정에서는 의료장비 유지에 필요한 164천 크로네(8만 달러 상당)의 장비 부품이 무상으로 제공되기도 하였다.[3]

---

1 *국립의료원30년사*, 국립의료원, 1988. 11. p. 17

2 op. cit. p. 46 및 p. 50

3 op. cit. p. 50

병원과 같은 형태의 사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문화된 인력과 사업관리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의료전문인력 확보 및 병원 운영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원 당시 한국의 극히 빈약한 의료 인력 사정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의료 인력과 기술진은 원조 공여국 측으로부터 파견된 인력으로 채워졌다. 더욱이 병원의 운영은 공여국 대표단(The Scandinavian Mission)에서 파견하는 의료단(The Medical Mission)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의료원의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은 당초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5년 동안 원조공여 3국에 의한 공동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스칸디나비아 3국은 자국인들로 구성되는 의료 및 기술진의 파견비용을 포함하여 개원 후 1963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500천 달러에 상당하는 병원 운영비를 제공하였다.

헌데 스칸디나비아의 의료단은 당초 계획된 5년간의 운영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국측이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들은 스칸디나비아 3국 정부측에 병원에 대한 운영지원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것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의료원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지원은 1968년까지로 5년이 연장되게 되었다.

한편 연장된 지원기간 동안에는 총 6,500천 달러의 범위 내에서 각종 지원을 실시키로 하는 추가약정 방식의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 추가약정(Addendum)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측으로 병원의 운영권을 이양하는 시기를 1968년으로 명시하는 한편 병원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 및 방침이 'Plan of Operation for the National Medical Center'라는 추가협정 부속서에 담겨지게 되었다.

공여국측은 병원 운영지원과정에서 한국측이 의료원 운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력개발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스칸디나비아측은 병원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을 책임지는 Governing

Board를 구성하는 이외에도 한국인 의료인력 및 기술진에 대한 해외훈련 등을 심사하는 자문위원회(The Advisory Committee on Scholarships)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당초 의료원 운영을 위해 공여국측으로부터 파견하기로 한 80명 수준의 의료 전문인력의 규모는 한때 90명 이상에 이르기도 하였다. 여자측의 파견 인력은 2차 지원기간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964년 이후 한국측의 인력수준이 점차 향상되기 시작하면서 그 숫자를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하였다. 한편 스칸디나비아측은 의료전문 인력의 기술수준 향상에 커다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병원운영 및 관리능력을 확충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측의 병원 운영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여자측에서는 1965년 회계 관리감독 및 자문을 담당하는 병원경영 전문가를 파견하는가 하면 한국인 병원관리 전문가 2명에 대해서는 유학 초청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의료원은 개원 이후 한국 최고의 의료기관으로써 왕성한 의료시술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의료원 부설로 1959년에 세워진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을 통해 간호 전문 인력을 양성함은 물론 1960년에는 5년 과정의 전문의 수련 시스템을 도입하여 초창기 의료전문 양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간 의료원은 그간 전문의 1,300명, 간호사 1,500명, 의료기술자 2,200명 등의 인재를 양성하였다.

특히 의료원의 우리측 의료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공여국측은 NORAD[1], DANIDA[2], SIDA 등을 통해 30명 이상의 의사들에 대한 장기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수많은 단기견학,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였는바 초창기 우리나라 고급 의료인력의 양성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의료원의 진료방식은 북구 사회주의 방식이 도입되어 원칙적으로 무료의 의료시술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병원의 운영권이 한

---

[1] The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2] The Danish Agency for Development Assistance

국 측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는 유료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진료시스템으로 그 방식이 전환되게 되었다. 이는 의료원의 진료방식이 한국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진료비의 징수를 통해 병원의 자력 운영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5.4. 지원사업 종료이후의 사업운영

한국측의 자력 운영 능력과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에서 병원의 운영권이 한국측에 양여된 의료원은 그 후 약 10년 동안 별다른 추가 투자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다가 1979년에 이르러 외자의 도입 등을 통한 투자를 실시하여 신규 의료장비를 도입하는 한편 내자에 의한 병원시설 증축사업을 추진하여 전반적인 병원의 시설을 확충 · 업그레이드하였다. 즉, 1980년부터 1983년 중에는 내자 11,469백만 원을 투입하여 2개 병동을 신축하고 130개의 병상을 증설하는 한편, 거의 같은 기간 중에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으로부터의 개발차관을 통해 9,925천 달러에 상당하는 신규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의료 시설을 크게 향상 시켰다.

< 의료원 시설 개선투자 현황 >

구 분	병원 시설 증축	신규 장비 도입
·사업기간	1980. 8. ~ 1983. 12.	1980 ~ 1984
·투자규모	11,469백만 원	9,925천 달러(7,960백만 원)
·사업내용	2개 병동 신축 130개 병상 증설	전산용 컴퓨터시스템, 의료장비 등 총 312종

의료원은 그간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공적의료기관으로써 의료시술은 물론 의료인력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나 '80년대 초 이후 민간부문의 일반의료 시설 및 기술 수준이 크게 향상

되면서 기존의 기능 유지와 함께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새로운 영역의 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 기능이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의료원은 환자진료는 물론 의료기술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의료기관 운영기준 설정 등의 연구개발 활동은 물론, 혈액원 운영(1977~), 응급구조사 양성(1986~), 응급의학 교육(1997~), 장기이식정보센터 운영(1998~), 2000년부터는 장기이식센터 운영, 중앙응급의료센타 운영 등 공공성이 더욱 중시되는 특수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영역으로 그 활동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5.5. 평가 및 교훈

한국의료원 설립사업은 전후의 경제재건기에 추진된 대표적인 사회개발분야의 협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원자측에서는 사업 부지의 제공 등 극히 부분적인 참여의 여력밖에는 없는 실정에서 자본, 기술, 인력 등 모든 사업요소가 해외로부터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사업의 대표적인 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자본과 기술 모두가 낙후된 개발초기 단계의 사회개발사업에 있어서 이른바 자본격차(capital gap)와 기술격차(technological gap)를 한꺼번에 모두 개발원조에 의존하여 극복해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병원건물의 건축비는 물론 의료장비 도입, 의료 전문인력의 제공 등 거의 모든 사업 요소가 대외원조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원 사업은 이러한 사회개발부문에 대한 개발의 격차를 수원자의에 점진적인 개발역량의 확충을 통해 줄여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공여자의 책임 하에 관리되던 병원의 운영이 10년 동안의 인력개발과 관리능력의 배양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수원자측에 순조롭게 이양되었으며 그 이후 자력에 의한 병원의 운영과 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1980년대에 들어 내자에 의한 대규모의 시설확충 투자가 이루어지는 한

편 무상원조가 아닌 유상의 개발차관 도입에 의한 의료장비가 도입되어 시설이 개선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운영의 역량이 단계적으로 구축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의료원사업은 전통적인 원조분야에서 뚜렷한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주도면밀한 계획에 입각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본래의 목적 달성은 물론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양자적 구도의 사업추진 방식에 의해 실시된 사업이지만 다자적 지원요소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역량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UNKRA라는 기관에 의한 건물건축비가 지원되었던 관계로 원조공여국인 스칸디나비아 3국은 의료장비의 제공과 의료 전문인력과 관리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의 핵심부분에 집중적이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원조공여자측은 이 사업이 3자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특이한 형태의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상호협의 등을 통해 10년 이상에 걸치는 장기간의 시간동안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면서 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조직운영 시스템을 충분히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전문인적자원의 개발과 시스템관리 역량의 확충에 중점을 둠으로써 수원자측이 조기에 사업을 인수하여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켰으며 추후 조직과 기능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료원사업은 원조공여자측의 비교우위와 원조의 중점을 충분히 살려 뚜렷한 형태와 규모의 전략적인 협력사업에 집중함으로써 다부문 소규모 지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었으며 공여자에 대한 우호적 · 긍정적 이미지를 분명하게 구축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의료원에 대한 운영권의 이양과 함께 설립된 한-스칸디나비아재단(한스재단/Korea-Scandinavian Foundation)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하나의 색다른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1968년에 발족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운영되고 있는 한스재단은 개발과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문화적 요소의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주는 한 가지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병원의 운영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시술과정에서 수입 · 적립된 자금(157,000달러)을 주 재원으로 하여 설립된 이 재단은 한국과 스칸디나비아 3국간의 협력을 통해 설립된 의료원사업을 기념하는 한편 한국과 이들 국가간의 교류와 우호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스재단은 그간 의료 연구비의 지원과 장학금 지급, 양측간의 인사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의료원내에 소재해 있는 북구식 뷔페식당인 스칸디나비안 클럽(Scandinavian Club)을 운영하고 있다.

스칸디나비안 클럽은 스칸디나비아 3국의 의료단이 한국에 머물던 시기 이들의 식당으로 이용되었던 시설이다. 병원의 운영권이 한국측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이 시설은 한스재단의 관리 하에 북구식의 문화적 특색을 가진 대중식당으로 운영됨으로써 원조사업의 실체적인 내용 못지않게 그 모습을 그들의 문화적인 모습을 위 사회에 오래도록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스재단 역시 그와 같은 맥락의 독특한 사회적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스재단의 설립과 스칸디나비안 클럽의 지속적인 운영은 원조공여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양측간에 지속적인 교류관계를 가시적으로 유지시켜나가는 터전을 마련하는 한편 공여자측의 문화적 자취를 자연스럽게 전수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6. 포항종합제철(POSCO) 건설사업

6.1. 사업추진 배경

국가 기간사업이자 산업의 기초 소재가 되는 제철공장의 건설에 대한 논의와 시도는 전후 경제 재건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시도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수준은 극히 소규모의 재래 적인 상태에 머물러있지 않을 수 없었다.

최초로 시도된 제철공장 건설계획은 1957. 6. 미국 ICA로부터 300만 달러 규모의 원조자금의 지원을 받아 묵호지역에 건설하기로 합한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경제성이 의심된다는 미국 측의 부정적 판단에 따라 무산되고 말았다.

뒤이어 1958. 8.에는 상공부가 선철 20만 톤 규모의 양양 일관 제철소 건설계획을 마련하여 3,745만 달러에 달하는 외자조달 방안을 모색했으나 이 또한 여의찮았다.

1960년 제2공화국이 수립된 후 마련 중에 있었던 5개년개발계획에서도 제철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외자 3,200만 달러, 내자 300억 환을 투입하여 25만 톤의 선철을 생산하고자했던 이 계획은 이 계획을 추진했던 정권의 단명으로 역시 무산되고 말았다. 한편 제3공화국에 들어서서도 1960년대 초 서독 DKG그룹(Demag, Krupp, GHH)과의 합작투자 추진, 미국투자공동체와의 합작투자를 실시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었으나 여건의 미성숙 등으로 모두 실현시킬 수가 없었다.

이와는 달리 EC를 비롯한 세계의 각 국들은 1950년대 이후부터 철강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여 그 추세가 1960년대에 들어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었다. 한국의 조강능력은 1960년대 초까지는 불과 10만 톤, 197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도 불과 50만 톤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60년대 초부터 추진된 공업화중심의 개발전략의 시행으로 산업기초소재인 철강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철강공업의 육성 필요성

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한국의 철강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한국의 철강사업 투자에 대한 자본이나 기술을 제공해줄 수 있는 서방 선진국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회의적인 시각이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규모의 자본과 축적된 기술을 요하는 기초 소재산업의 투자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객관적으로 보여 지는 한국의 경제적인 여건이자 현실이었다.

이러한 여의치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산업개발을 통한 근대화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개발연대 국가지도자의 '경제자립'에 대한 비전과 '자주국방'을 도모하고자하는 안보적 측면에서의 전략적 고려는 개발연대 초기 철강산업에 대한 육성의 강력한 의지를 키웠다고 할 수 있다.

6.2. 사업추진 경위

보다 가시적인 제철공장의 건설을 위한 계획은 1962. 1.에 발표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상의 '태백산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검토 반영되었다. 이와 같은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1964. 12. 경제장관회의에서 '철강공업육성계획'이 의결되어 연산 100만 톤 규모의 제철소 건설 기본방침이 설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계획되었던 제1차 계획의 수정과정에서 철강공장건설계획은 다시 차기의 과제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1966. 7.에 수립된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는 1단계 50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공장을 1971년까지 건설하는 방안이 반영되어 외자조달 등의 사업 준비에 착수하게 되었다. 일본 야와타제철로부터 3,000만 달러, 미국 AID차관으로 3,000만 달러, 서독 개발차관으로부터 2,000만 달러 등을 도입하여 사업을 추진코자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제철소건설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끝에 1966. 12.에는 미국의 코퍼스사를 주축으로 하는 차관단이 구성되기

에 이르렀다. 미국의 피츠버그에서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4개국의 7개 회사의 대표가 참석하여 개최된 회의에서는 한국에서의 제철소건설을 검토지원하기 위한 대한국제제철차관단, 이른바 KISA (Korea International Steel Associates)가 발족되고 종합제철건설을 위한 다자간 협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종합제철소 건설에 대한 검토와 협의는 순조롭게 추진되는 듯해서 1967. 1.에는 제2차 KISA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후 1967. 4.에는 KISA대표단이 방한하여 종합제철건설에 관한 가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67. 10.에는 한국정부와 KISA간에 종합제철건설에 관한 기본협정 체결하는 등의 큰 진전을 이루었다.[1]그러나 그 이후 이 사업추진에 대한 미국[2] 및 국제개발기관[3] 등의 입장이 부정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동 사업의 추진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고 1969. 4. KISA와의 협정이 사실상 폐기됨에 따라 제철건설사업의 추진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이렇듯 종합제철건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1969. 6. 경제기획원은 종합제철사업계획연구위원회라는 명칭의 종합제철건설 전담반을 설치하여 종합제철건설 사업을 원점으로부터 재검토하여 새로운 제철건설 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던 점은 역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막대한 건설자금의 확보였다.

---

1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Korea International Steel Associates*(1967. 10. 20.). 이 협정에서 KISA측의 주관사인 미국의 코퍼스사(Kopers Co., Inc.)를 비롯하여 미국의 Westing Electric International사와 Blaw-Knox사, 독일의 Demag사 및 Simens사, 영국의 Wellman Engineering사, 이태리의 Societa Italiana Impianti사, 프랑스의 ENSID사 등이 참여하였으며 초기 조강규모 60만 톤, 확장규모 110만 톤의 철강공장건설에 95.7백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2 USAID/K, *Comment on Analysis of Pohang Iron and Steel Co. Financial Plan*, April 8, 1969.

3 1967. 5. 내한하여 KISA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였으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이 제기 되었으며, 1969. 3. IBRD가 제출한 '1968년도 한국경제평가보고서에서도 한국에서의 종합제철건설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시됨.

당초 기대했던 미국, 독일 등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은 어렵다는 것이 판명이 난 상태였으므로 그 새로운 대상은 일본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도 별도의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종합제철건설전담반에 의해 1969. 7.에 마련된 신사업계획은 제철소의 초기 시설규모를 국제단위 수준인 100만 톤으로 확대하는 한편 건설자금으로 대일 청구권자금을 활용한다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9. 8.에 개최된 제3차 한일각료회담에서는 우리측이 종합제철소 건설계획을 제기하고 일본측과의 협의에 착수하게 되었다. 한일 양국간의 협의를 진행한 끝에 양국 정부는 1969. 12. '포항종합제철공장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기점으로 하여 제철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 기본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합제철소의 건설 규모, 설비내용, 건설공정 등에 관해서는 한국측의 건설계획을 조정한 일본조사단의 보고서에 의거 실시하되 일본이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협정 및 그 관련 문서'에 근거하여 제철소 건설자금으로 청구권 자금 등 1억 2,370만 달러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정부는 포항종합제철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측면에서 1970. 1. 철강공업육성법을 제정 시행하는 한편 1970. 4.에는 역사적인 제철소 건설에 착수하게 되었다.

공사에 착수한지 3년여 만인 1973. 7. 드디어 제철소의 조강규모 103만 톤의 제 1기 시설이 완공되었으며 그 이후 제 2, 3, 4기에 이르는 신규설비 사업을 실시하여 1982. 1. 제철설비 제 4기 2차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조강능력 910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 능력을 구비하게 되었다.

한편 1970년대 초 중화학 공업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구상된 제2제철소 건설사업은 광양만을 입지로 하여 1982년에 착공하여 1992. 10.에는 조강능력 1,140만 톤 규모의 광양제철소를 완공하게 되었다.

6.3. 사업추진 내역

여러 차례에 걸친 제철소건설사업 시도 및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사업계획이 수립되기도 했다. 1969년 일본과 합의된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계획은 기본적으로 KISA에 의해 마련되어 추진되던 계획을 보완한 것으로서 UNDP와 Battelle Memorial Institute의 기술평가와 일본측 기술평가단(JG: Japan Group)의 의견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

KISA의 계획은 당초 50만 톤 규모의 시설을 두 차례에 걸쳐 건설한다는 것이었는데 UNDP 및 일본측의 평가 결과, 규모의 경제면에서 시설의 규모를 한꺼번에 100만 톤 이상의 규모로 건설해야만 경제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제철소 건설과 관련된 간접자본시설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제철소의 초기 설비규모는 100만 톤으로 하는 제철소건설 기본 방침이 설정되었으며 그 이후 이루어진 일본의 기술평가위원회(Technical Evaluation Committee) 조사단 및 IBRD평가단의 조사 결과 역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종적으로 제철소의 시설규모는 103만 톤으로 확정되었으며 한일 양국정부간에 제철소건설에 관한 기본협약이 체결되었다.

제2차 5개년계획 상에 반영된 종합제철소건설 계획은 조강능력 50만 톤 규모의 시설로써 외자 67백만 달러와 내자 48억 원 등 모두 227억 원을 1968~1971기간 중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가 103만 톤으로 크게 증가하고 사업실시시기도 2년 정도 순연된 관계로 실제의 투자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70. 5. 공사착공 당시의 투자계획에 따르면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는 외자 137.7백만 달러, 내자 25,389백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일부 연관 공장 시설의 규모가 확대되고, 물가와 환율이 상승되는 영향으로 실제로 투자된 총 사업비는 외자 168.1

백만 달러, 내자 39,560백만 원을 합쳐 모두 106,783백만 원이 투입되었다. 따라서 총 투자비 중에서 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3%를 차지했으며 내자는 국내조달이 가능한 건설 및 기계장치를 비롯한 기초자재, 토지매입, 부지조성, 해상운임, 보험료, 엔지니어링, 감리감독 등의 비용에 충당되었고 대부분 국내 조달이 불가능한 공장설비와 부품들의 도입은 외자로 충당되었다. 한편 제 1기의 제철설비 중에서 국산의 장비나 기재로 조달된 금액은 총 기자재 구입자금 79,200백만 원 중에서 9,400백만 원으로 국산기자재 조달 비중은 12.5%에 불과하였다.

한편 제철 공단 건설과 관련한 전기, 도로, 항만, 용수시설 등의 사회간접시설은 정부의 지원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항만, 철도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투자에 있어서는 철강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물론 조세 및 관세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시장경제적 측면에서의 형평성 문제와 투자 사업의 경제·재무적 타당성 측면에서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었던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유시장경제의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포항제철건설사업에 대한 USAID의 의견을 통해서 제기한 것처럼 한편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유치산업육성에 있어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재정, 조세지원 등 정부의 특혜적 지원을 통한 포항종합제철의 건설이 시장의 가격구조 등을 교란시켜 철강부문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1] 이에 비하여 포항종합제철의 건설을 추진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유치산업의 단계에서 간접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경우 사업추진의 경제·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투자문제는 아주 중요한 투자 선결조건의 하나가 아닐 수 없었다. 1969. 9. 내한하여 포항종합제철건설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일본측 조사단의 경우 정부의 조세 등의 지원조치가 강구되어야만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2]

---

[1] USAID/K, op. cit., p. 1

[2] *포항종합제철20년사*, 포항제철, 1989. 12., p. 151

정부지원에 의한 기반시설 지원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1969. 10. 에 내한한 IBRD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제기되었다. 즉, 항만, 철도, 준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기반투자비용의 경우에도 업체가 건설비에 포함하여 부담하여야한다는 논리였던데 비해 우리 정부측에서는 제철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사회간접자본적인 투자로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결국 IBRD측도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가 실시하는 제철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이를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1]

제1기 설비투자사업기간 동안 정부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기반시설투자 사업에는 항만건설에 11,442백만 원, 공업용수시설에 1,553백만 원, 철도시설에 715백만 원, 도시토목사업에 1,156백만 원 등 모두 14,866백만 원이 투입되었다.[2]

< 제1기 건설사업비 투자 내역 >

구 분	5개년계획	건설계획	투자실적
시설규모(조강, 천 톤)	500	1,030	1,030
내 자(백만 원)	4,824	25,389	39,560
(비중,%)	(21.3)	(31.5)	(37.0)
외 자(천 달러)	67,333	137,714	168,058
(비중,%)	(78.7)	(68.5)	(63.0)
합 계(백만 원)[1]	22,694	80,475	106,783

주 [1] 공단기반시설지원비 제외
자료: 포항제철10년사,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1979

포항제철 제1기 건설사업비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 외자는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제공된 대일 청구권자금과 상업차관으로 조달되었다. 그리고 전체의 외자조달 자금 중에서 대일 청구권자금을 통해서 도입된 자금은 무상 내지는 상업차관에 비해 그 조건이 매우 유리한 장기저리의 자금이었다.

---

[1] op. cit., p. 152

[2] op. cit., p. 180

< 포항제철 제1기 건설 외자조달내역 >

(단위: 천 달러)

자 금 구 분	금 액	조 건	도입설비 내역
대일청구권자금	77,228		
무상자금(PAC)	30,800	무상	원료처리설비, 제강공장, 항만하역설비, 철도설비, 급배수설비 등
유상자금(ECOP)	46,428	연리 3.5% 7년 거치 13년 상환	소결공장, 제선공장, 강판공장, 구내수송설비, 증기가스 및 중유설비 등
상업차관			
일본수출입은행	52,498	연리 5.875% 1년 거치 11.5년 상환	산소공장, 수배전 및 발전송풍설비, 열연공장 등
공급자신용	38,323		
일본동양면화(주)	13,987	6.5% 1년 거치 10년 상환	코크스공장설비
오스트리아 VOEST사	24,345	6.5% 3.4년 거치 8.5년 상환	중후판공장설비
합 계	168,058		

자료: 포항제철20년사,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1989. 12.

6.4 평가 및 교훈

포항제철 건설사업은 수원자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주도적으로 계획되고 시행된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사업준비 당시 대내외적으로 극히 부정적이었던 일반론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경이적인 성공을 거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차에 걸쳐 시도된 사업추진 과정에서 좌절하고 실패한 경험이 사업의 토대가 되어 최종 사업추진단계에서 보다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결연한 사업추진 의지를 북돋우었다고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극복한 끝에 추진된

포항제철 건설사업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포항제철소 건설사업은 우선 면밀한 사업 준비와 추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원국의 관련분야의 자본과 기술의 축적이 크게 미흡하다 하더러도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제공되는 기술의 도입활용 · 소화 · 개량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의 하나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술의 부족뿐만이 아니라 개발협력에 의한 외자의 확보를 통하여 대규모 자본부족, 즉 자본격차(capital gap)의 문제라 하더라도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초의 제1기 포항제철 건설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19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제철소 건설사업에 있어서 초기에 절대적이었던 자본과 기술적 갭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포항제철건설사업에 있어서 제2기 설비까지만 해도 약 3분의 2를 차지하던 외자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제4기 2차 설비사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그 비율이 50%미만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투자자금의 대부분을 자체자금 및 사채 등의 내자에 의존하는 구조로 투자자금 조달방법이 크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내자조달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자본적

< 제철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내역 >

(단위: 10억 원)

구 분	포 항 제 철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4기2차	1985[1]	1990[1]
외 자(천 달러)	168.1	348.2	766.0	665.9	162.6	134.8	-
내 자	39.6	96.6	299.6	435.4	148.7	416.7	1,752.1
(내자비중,%)	(37.0)	(36.6)	(44.6)	(52.2)	(57.6)	(78.4)	(100)
합 계	106.7	265.4	671.2	835.0	258.0	531.5	1,752.1

주 [1] 포항제철 및 광양제철의 연간 투자비

자료: 포항제철20년사 및 포항제철과 국민경제(곽상경 외, 수정당, 1992)

갭의 격차를 축소시켜나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적 갭의 격차를 축소시켜나가는데 있어서는 설비투자에 소요된 시설의 국산화율을 통해 그 추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포항제철 제1기 설비사업투자에 있어서 불과 12.5%에 불과했던 설비의 국산화율이 1990년대 초 광양제철의 설비투자를 완료할 시점에 이르러서는 60%를 넘어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제철설비 국산화 추이 >

(단위: 10억 원)

구 분	포항제철					광양제철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4기2차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생산량(만 톤)[1]	103	260	550	850	910	270	540	810	1,140
설비총액(A)	75.2	161.4	446.9	446.4	184.8	939.0	510.5	1,070.2	1,213.8
국산설비(B)	9.4	25.0	100.8	156.7	76.6	464.2	282.6	655.9	765.8
국산화율(B/A,%)	12.5	15.5	22.6	35.1	41.5	49.4	55.5	61.3	63.1

주 [1] 누적된 총 설비규모

자료: 곽상경 외, 포항제철과 국민경제, 수정당, 1992, p. 47, p. 54

이를 보다 거시적인 투자와 경제운용의 관점에서 평가해본다면 시장경제적 시각에서의 대외지향적·개방적인 투자정책이 내수시장, 정태적 기술수준 등에 입각한 대내지향적·소극적 투자정책에 비해 보다 많은 성공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대외지향적인 개방적 투자 정책이 보다 큰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다.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싶을 만큼의 커다란 성과를 거둔 포항종합제철건설 사업은 기초 소재산업의 중요성과 미래지향적 투자의 필요성을 잘 대변해주는 사례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포항제철은 그간 국내 철강산업에 대한 투자 이윤과 축적된 기술 등을 토대로 국내 철강산업을 위시한 여타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투자의 실시를 통해 자본과 기술을 대외로 이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항제철은 이제 국내의 자본과

기술의 격차해소를 벗어나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자본과 기술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다방면의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포항제철은 2003. 6. 현재 해외 중국, 베트남 등 7개국에 13개의 철강생산 법인을 설립하여 1,921.3백만 달러를 투자하였다.[1]

포항종합제철사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올바른 정책과 투자에 있어서 지도자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포항제철건설사업의 추진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의 지도자는 산업입국의 건설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긴 안목에서 올바르게 바라보았으며 이 산업의 육성에 대한 불굴의 집념을 불태웠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서방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한제철차관단(KISA)의 지원을 통한 사업추진이 좌절되자 새로운 사업준비 체제를 갖추기 위해 단행한 개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KISA로부터의 차관도입교섭이 결렬된 이후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종합제철 건설사업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에 기용할 만큼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2]

후발자의 위치에 있는 저개발국의 투자결정과 추진에 있어서 적지 않은 경우 적시에 올바른 방향에서의 과감한 정책 결정과 투자를 실시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적 리더십의 발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업의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포항제철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문제는 근년에 이르기까지도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개발 초기단계에서 기초적인 사업기반은 물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산업에 대한 어느 정도만큼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이른바 유치산업의 보호 ·

---

1 포항제철은 2003. 6. 현재 세계적으로 13개의 철강생산법인을 포함하여 제철원료확보, 및 제품판매 등을 위한 현지 투자회사 등 모두 37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2 *포항제철20년사*, op. cit., p. 143

육성이라는 정책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과 자본의 축적이 빈약한 후발개도국의 여건에서 산업의 근간이 되는 대규모 사업은 그것이 비록 민간부문이 담당하게 되는 투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불리 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직 · 간접적인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산업의 초기발전단계에서 주어졌던 특혜적인 지원을 어느만큼 빨리 축소시켜서 이를 해소시켜 나가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또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 투자과실을 어떻게 재분배하여 그 혜택을 국가경제에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느냐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철산업 육성 초기에 제공되었던 각종 지원 제도는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었다. 산업발전 초기단계에서 주어졌던 정책적인 배려 또한 일찍이 중단되었다. 한편 한국정부는 1988년 정부 및 공적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포항제철에 대한 주식을 이른바 국민주(國民株) 보급방식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하여 그간 투자 이윤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어쨌든 오랜 숙원의 과정을 통해 일으켜 세운 포항제철은 국제개발협력은 물론 국가의 발전과 산업의 개발에 있어서 더할 수 없이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제공해주는 사업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7.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

7.1. 사업추진 배경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산업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196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부터는 산업 물동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산업 수송능력의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서울과 부산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계획은 당초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사업이었다. 제2차 경제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IBRD와의 용역협정에 의해 실시된 네데코 조사단의 교통부문에 대한 조사결과는 낙후되어있는 도로망 확충과 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철도중심의 투자계획을 도로 중심으로 전환시킬 것 등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고속도로 건설에 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제3차 계획기간까지 건설해야할 고속도로에 대해 서울~인천과 서울~수원간의 도로건설에 대해 조심스런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였다.[1]

물론 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검토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건설부는 1965년부터 고속도로건설 및 이를 위한 외자도입의 필요성 등에 입각하여 서울~부산간, 서울~인천간, 서울~강릉간, 대전~광주~여수간 모두 1,138킬로미터의 고속도로 건설방안을 검토하고 먼저 서울~부산간 고속도로건설을 위한 차관획득을 위한 계획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고속도로에 대해 일반적인 인식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으며 특히, 막대한 건설자금 확보의 애로라는 큰 장애물로 인하여 이 계획은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발전되지 못했던 것이다.

---

[1] 김정렴, *한국경제정책30년사*, 중앙일보사외, 1990. 10., p. 231-232

[2]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지*, 건설부·한국도로공사, 1974. 7., p. 43

그러나 경부고속도로 건설문제는 1967년의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근대화와 산업화를 위해서는 기간도로의 고속화가 필요하며, 고속도의 건설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농촌의 근대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경부고속도로건설사업을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을 통해 제시한 정치적 판단이자 구상이었던 것이다. 다. 대내외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강했던 경부고속도로건설 문제가 정치적 리더십을 통하여 제기된 것이었다.

7.2. 사업추진 경위 및 내역

1967. 4.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고속도로건설 구상은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 강릉, 부산, 목포를 잇는 기간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선거가 치러지고 난 뒤 곧바로 고속도로건설을 위한 준비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1967. 12. 국가기간 고속도로건설 추진위원회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계 지도층 인사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었으며 그 아래에는 고속도로건설계획조사단을 설치하여 고속도로건설과 관련된 제반 조사 및 계획수립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한편 고속도로의 건설사업은 국내의 자본과 기술로 추진한다는 방침이 설정되었다. 그것은 당시 IBRD등 국제개발금융기구는 물론 미국 등 주요 원조공여국 모두 한국의 고속도로 건설이 시기상조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개발원조자금을 확보하여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난망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것은 고속도로건설사업에 대해 가장 유망한 개발차관 공여주체로 인식되고 있던 국제개발협회(IDA)가 이에 대한 자금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내자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다만 필수적으로 해외로부터의 도입이 필요한 건설장비와 중요 건설자재에 있어서는 대일 청구권자금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을 전

제로 국내 기술과 자본에 의한 고속도로건설사업을 진행해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속도로건설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을 국내 기술진에 의해 실시토록 하고 1968. 2. 서울~수원 구간의 건설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당시 정부의 예산규모가 약 3,000억 원에 불과하던 시기에 사업예산 규모가 300억 원이 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었던 관계로 그야말로 거국적인 사업추진 체제가 수립된 가운데 시행되었다.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간 고속도로건설 추진위원회에는 주요 정부부처의 장관은 물론 경제 · 사회 각계의 주요 인사가 망라되었으며 고속도로건설 계획조사단 역시 관계부처 공무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학계, 경제계 등으로부터 실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거족적으로 추진되었다.

원칙적으로는 국내의 자본과 기술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국내조달이 곤란한 주요 건설장비와 건설자재, 국내 공급이 부족한 일부 건축재 등의 경우는 해외로부터의 도입이 불가피하였으며 이를 도입하기 위한 외자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당초의 서울~부산간의 고속도로건설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상 건설사업비는 모두 330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360억 여 원에 이르는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했다. 한편 이 당시에 고려된 외자는 PL480을 통해 도입한 차관 양곡자금과 대일 청구권자금중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었다.[1] 뚜렷한 공여자가 있는 원조사업의 형태로 추진된 사업은 아니었지만 투자 재원 부족과 핵심기술 부족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원조라는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고자했던 것이다.

한편 실제로 건설 사업에 투입된 건설 자금은 총 429억 원으로 당초의 계획에 비해 99억 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다. 지가 및 물가의 상승 등으로 당초의 계획보다 용지보상비와 공사비가 추가된 것이 사업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었다.

---

1 서울~부산간 고속도로건설을 위한 재원계획은 1968. 2.에 개최된 경제장관협의회에서 의결되었음.

<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 사업비 투자내역 >

(단위: 백 만원)

사업내역	계획(1968)	실적(1970)	증 감
용지보상	1,224	1,963	719
공사비	28,294	37,390	9,096
시험장비비	55	44	-11
장비도입	-	492	492
물자도입	2,194	1,892	-302
외국인용역	110	86	-24
부대비 등	1,123	1,106	-17
합 계	33,000	42,973	9,973

자료: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지, 건설부·한국도로공사, 1974. 7.

대부분의 사업을 국내의 자본과 기술에 추진해나갔지만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외자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자재는 물론 국내 생산능력상 공급부족현상이 발생하는 일부 건축 자재의 도입이 불가피하였다. 당시 시멘트와 같은 건설 자재의 경우에도 국내 공급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신속하고도 능률적인 건설공사의 시행을 위해서는 다량의 외산 건설 장비의 도입이 불가피하였다. 원조 자금은 주로 이러한 건설 장비와 특수 기자재의 도입에 활용되었다.

외자의 도입에 있어서는 당초 ADB로부터의 차관도입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ADB로부터는 이미 경인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차관도입 교섭이 진행 중에 있었던 관계로 서울~부산간 고속도로건설사업을 위한 외자 도입선은 당장 대일 청구권자금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미 사용처가 설정되어있던 청구권자금의 사용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건설사업에 투입된 외자의 총 규모는 8,450천 달러로 총 건설 사업비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 외자 등 활용현황 >

(단위: 천 달러)

구 분		규 모	활 용 내 역
대일청구권자금 (유상자금)	3차년도사업	326.9	관리유지장비, 무전기
	"	2,671.6	가드레일 등 건설기자재
	소 계	2,998.5	
	4차년도사업	748.8	포장장비
	"	3,148.6	철근 등 건설기자재
	소 계	3,897.4	
	합 계	6,895.9[1]	
ADB 차관[2]		872.7	포장장비
KFX 자금		681.5	공사장비
총 계		8,450.1	

주 [1] 대일 청구권자금은 1968, 1969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00천 달러, 5,000천 달러 등 8,000천 달러가 도입된 것으로 나타나있으나 세부 활용 내역은 표에 나타난 것만 확인 가능함

[2] ADB자금으로 각종 포장장비를 도입하여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ADB로부터 차관을 도입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인고속도로 건설사업용으로 도입된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자료: op. cit.

한편 국내 기술진에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도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 유수의 기술용역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전반에 대한 기술자문 및 감리를 실시토록 하였다. 즉, 도로건설에 따르는 기본조사(Feasibility Study), 노선선정 및 실시설계 모든 조사 및 계획은 한국측의 기술진에 의해 마련되었으나 공사 시공과정에서의 기술적인 지원을 해외의 유수 건설전문용역회사에 의뢰하였던 것이다. 이 기술지원 회사로는 미국의 디 루 캐더 인터내셔널(De Leuw Cather International) 용역회사가 선정되어 주로 건설공사

초기의 시기인 1968년도에 이 기술용역기관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였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공사 시작 2년 6개월 만인 1970. 7. 당초 예정 사업완공 예정 일자인 1971. 6. 보다도 11개월을 단축하여 완공하게 되었다.

7.3. 평가 및 교훈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 역시 국제개발기관은 물론 사회 일각으로부터 시기상조라는 비판을 속에서 시작된 사업이었으며 사업재원의 조달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산업화를 촉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개발연대 초기에 축적된 우리의 기술과 자본을 토대로 추진했지만 불가피한 기술 및 물적 요소에 대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이점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원만한 사업의 추진은 물론 사업의 경제성 제고와 품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이 사업에 의해 창출된 투자 효과를 계량화하여 제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시기상조론을 일축하고 과감하게 추진된 서울~부산간 고속도로건설사업이 우리의 경제 개발과 사회발전에 미친 영향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비록 제반 여건이 다소 불비하다고 하더라도 개발 초기단계에서 여러 분야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국가 기간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산업화의 바탕이 되는 사회간접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이 아니라 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사례의 하나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업을 마친 뒤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간된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지(建設誌)'에 따르면 이 고속도로 건설의 경제적 · 경

제외적 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고속도로 건설의 직접적인 효과로 차량 주행비의 절약은 물론 수송시간의 단축, 화물파손의 감소 및 여행자 편의의 증진, 교통사고 감소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간접적인 효과로는 지역개발의 촉진, 농어촌개발과 지역격차의 축소, 시장권의 확대, 자원개발의 촉진, 합리성의 효과 등 모두 언급하기 어려울 만큼의 효과를 적시하고 있다. 한편 이 고속도로 건설의 경제외적인 효과로는 이 도로가 유사시 군사적 목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견지에서 국방력의 강화효과를 들고 있다.

서울~부산간 고속도로건설사업은 이 사업을 통해 거둘 수 있었던 국민경제적 효과와는 별도로 주목할만한 것은 이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잠재되어 있던 국민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 낼 수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과거 유례가 없었던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을 위해 별도의 임시 특별 조직을 설치하는 한편 이 조직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다양한 사업투입 요소를 적시적소에 투입시킴으로써 사업의 수행의 능률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

428킬로미터에 달하는 서울~부산간 고속도로의 건설에 투입된 비용은 모두 426억 원으로 이 고속도로 1킬로미터 당 건설비는 불과 1억 원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건설단가는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건설된 동경~나고야~고베간의 고속도로에 비해 약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다. '선개통·후보완'이라는 방침 하에서 서둘러 추진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었지만 그것은 세계 고속도로 건설 역사상 가장 최단 시간 내에 최소의 비용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국가의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이는 한편 향후 보다 적극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건설사업에 뒤이어 시행된 대전~전주간, 신갈~새말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역시 우리의 자본과 기술에 의해 순조롭게 추진되자 IBRD 등의 국제개발금융기관은 그들의 종전 입장을 수정하여 한국의 고속도로건설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본을 공여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전주~순천간의 호남고속도로, 순천~부산간 해남고속도로, 새말~강릉간 연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등의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IBRD가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제 5 장 평가 및 교훈

1. 시사점과 교훈

1.1. 한국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한 국제개발원조와 협력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개발 원조와 협력은 한마디로 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국제개발 원조 및 협력은 한국이 빈곤저개발상태의 주요 수원자(Recipient)의 한 나라로부터 유망한 원조 공여자(Donor)의 입장으로 그 지위가 변화되는 것으로부터, 한국전쟁 중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학교 학생들로부터 유엔을 통해 보내온 80달러의 구호성금의 접수와 1997년에 도래한 아시아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 도입해야만했던 107억 달러의 막대한 규모에 달하는 IBRD와 ADB로부터의 긴급구조조정차관 자금의 도입에 이르기까지 그 폭 과 깊이를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한국은 그간 반세기여 동안의 극히 역동적인 경제·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지속해오는 과정에서 그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매우 적극적인 국제사회의 원조와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국제사회는 이를 비교적 능동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한국이 종종 경이롭다고 평가되는 괄목할만한 발전과 변화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국제개발 원조와 협력은 한국의 경제와 사회가 단계적인 변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지원의 규모나 방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각각의 단계에 상응하는 다이내믹하고도 흥미로운 변화를 겪어왔다. 그것은 앞서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의 단계를 1960년까지의 경제재건기, 1961년부터 1975년까지의 개발연대 전기, 1976년부터 1990년에 이르는 개발연대 후기, 그리고 그 이후 1999년에 이르는 전환기 등 크게 다섯의 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본 우리에 대한 국제개발 원조와 협력의 흐름 및 그 변화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었다.

빈곤과 저개발, 전쟁의 참화 속에 있었던 한국전쟁 전후의 복구 및 경제재건기에 있어서는 제반 여건은 원조의 접수마저 수동적일 수밖에 없을 만큼 취약하고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구호가 무엇보다도 시급했다. 발전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만으로도 벅찰 만큼 당면한 기본수요의 충족이 급급하였던 시기에 있어서 국제사회는 우리들에게 주로 물자 중심의 무상원조를 제공하였다.

이른바 개발연대로 불려지기 시작했던 1960년대로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는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 · 사회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능동적인 개발과 투자가 본격화되었다. 새로운 방향의 개발전략과 계획이 수립되고 산업화를 향한 국가적 자원과 에너지가 결집되었고 부족한 자본과 기술이 국제개발 원조와 협력을 통해 보완되었다. 적극적인 개발시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한 한국의 정치지도자와 테크노크래츠(Technocrats), 기업가와 국민들은 진취적이고 개방적이었으며 급속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였다. 국제개발이 유행처럼 논의되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개발노력은 호의적으로 평가되었고 비교적 관대한 대접을 받았다. 그리고 여러 주체와 경로를 통해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개발원조와 협력이 제공되었다.

개발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저소득저개발의 상태를 극복하고 이른바 도약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외원조에 의한 제약이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정책의 선택과 집행이 가능해지고 산업의 고도화는 물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게 되었다. 공적개발원조 성격의 개발지원은 크게 줄어드는 대신 국제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개발협력 자금의 도입이 크게 늘어나는 한편 외국인투자 등 민간부문에서의 개발자금의 유입이 크게 증대되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기여 또한 각각 달랐던 한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협력은 한국이 빈곤과 저개발, 산업기술의 낙후, 자본의 부족 등 제반 제약조건을 순차적으로 극복하고 산업입국의 목표를 실현하고 그 지위를 공여자의 위치로 전

환시키기까지 실로 다대하고도 동태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각각의 발전 단계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이루어진 한국에 대한 각종의 개발원조와 협력 사업의 사례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징과 내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개발과 발전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많은 후발개도국들에게 매우 유용한 경험과 교훈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로부터의 개발원조 및 협력에 대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우선은 대외지향적인 발전전략과 보다 능동적인 국제협력을 통하여 이룩한 한국의 역동적이고도 활력 있는 경제 · 사회 발전 과정에 대한 정책적 경험과 역사적 교훈은 후발개도국들이 그들이 국가개발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나가는데 있어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각 발전 단계에서의 경험한 다양한 수원 경험은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원조 정책의 수립과 사업시행에 그 어느 사례보다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1.2. 하나의 모범사례: 성공적인 한국의 수원사업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각종 지원 사업은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모든 개발원조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제까지는 국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뚜렷한 실패사례를 발견할 수는 없다.

다만 개발원조 또는 협력 사업이 실시된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경제 ·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해당 사업의 추진 여건과 그 내용이 적지 않게 변화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업 지속성 측면에서 볼 때 해당 사업이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오히려 바람직한 변화와 발전을 모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재건기와 개발연대에 있어서 국제개발 원조와 협력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기여와 역할을 했는지는 시대사적 흐름을 통해서 이미 충분하게 살펴본 바와 같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한국의 경제사회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하면서 그 때 그때 매우 유효적절하게 제공되었다. 전후 복구 및 경제재건의 시기에 제공된 긴급구호 및 각종 물자와 원자재의 제공은 기초수요의 충족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실정에서 경제사회의 안정과 새로운 발전기반의 구축에 매우 긴요하고도 유효하였다. 경제 · 사회개발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개발연대에 들어 국제개발 원조와 협력은 원천적으로 빈약한 자원과 자본의 부족을 메워주고 낙후된 기술의 격차를 채워주는데 결정적인 역할과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개발원조 및 협력사업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금번의 조사연구 과정에서 조사된 사업들 대부분이 그 사업의 효과, 사업의 지속성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모두 그 성과가 충분하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원조사업사례로 제시된 7개의 사업은 그 성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사업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도 개발원조 및 협력사업에 대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간 우리에 대한 개발원조 및 협력 사업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그간 우리에게 공여된 개발협력차관의 상환에 있어서 단 한 건의 연체나 채무조정(rescheduling) 또는 탕감의 사례도 없었다는 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가 제공받은 개발차관의 상환잔액은 1999년을 최고로 그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그간에 인출된 총 39,341백만 달러 의 개발차관 중 2002년 말까지 22,721백만 달러를 상환하였으며 16,619백만 달러의 잔액을 남겨두고 있으나 이들은 현재까지 모두 순조로운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원조와 관련한 평가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사례를 발견하기

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한두 가지의 예를 들자면 PL480에 의한 대규모의 잉여양곡 도입이 한국의 저곡가(低穀價) 체제를 유지시키고 양곡시장의 사장구조를 왜곡시킴으로써 한국 농업생산 기반의 위축시키고 농 · 공간의 불균등 발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등을 초래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1]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가 PL480에 의한 무상원조사업의 성과를 크게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국민경제 전반의 시각에서 좀더 폭넓게 보아야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상에 의한 잉여농산물 원조가 중단된 이후에도 부족한 국내의 양곡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상차관에 의한 양곡의 도입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국내시장의 부족한 양곡에 대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양곡의 도입이 필요했던 것이다.

전후 미국의 대규모 대한 원조로 인하여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시장체제 속으로의 편입되었으며 그 결과 한국경제의 대미의존을 불가피하게 했다는 평가가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2] 원조의 속성이 이를 통해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의존적인 경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그것이 한미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그간의 한국과 미국간의 호혜적이면서도 동태적인 상호 의존 및 협력관계의 발전을 지켜보건대 이를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평가할 일은 결코 아닐 것이다.

마샬 플랜을 통해 전후 복구 및 경제 재건의 성공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960년대 이후 새로운 개발원조 체제를 구축하여 나름대로의 개발 원조를 실시해온 서방 선진국들의 입장에서는 점증하고 있던 제3세계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비판과 요구를 감안해 볼 때 개발원조에 대한 하나의 성공적인 모델케이스를 기대할 수도 있었다고 할 수도 있다. 한편 그것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

1 장종익, *1950년대 미국잉여농산물원조가 한국농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경제사학회 연구논문, 1990

2 한공택, *전후 한국의 자본주의체제 편입과 미국의 대한 원조*, 21세기정치학회 부산정치학회보, 1998

한국은 바로 그러한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만큼의 특징적이고도 경이적인 개발원조와 협력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여겨진다.

한국에 대한 개발원조의 성공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개발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환멸(disillusionment)을 느끼던 개발도상국들과 원조 피로(aid fatigue)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던 서방선진국 모두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었으며 많은 후발개도국들에게 개발과 성장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를 거치면서 고속성장을 지속한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으로 지칭되는 신흥공업국의 출현은 개도권 국가들의 권역을 다분화시킴으로써 같은 개발도상국가들간의 이해관계 또한 한층 복잡·다기화 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남북간 개발격차의 문제가 남북의 국가간에 국제정치적인 이념의 문제로 양분되어 소모적인 대립을 격화시키는 구조로 악화되지 않는 데에도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발전과정에서 다량의 개발 원조와 협력의 수혜자의 입장에 있었던 한국의 괄목할만한 발전은 심지어는 국제개발협력이 무용하다는 국제사회의 극단적인 논란을 일축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개발협력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외지향적인 개발전략을 통해 고도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낸 한국의 사례는 세계의 경제발전사적 시각과 맥락에서도 큰 의의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성공을 거둔 것은 자유진영의 번영과 함께 민주주의적 가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우월성이 입증되면서 공산 사회주의 체제가 전면적으로 붕괴된 것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마디로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한 서구진영의 성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에 대한 국제개발원조와 협력의 성과는 한국이 거둔 성공이자 국제사회가 거둔 성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1.3. 복합적이고도 전략적인 성격의 개발원조사업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개념에 따르면 이는 '수원국의 경제·사회 발전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자금의 제공'으로 비교적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1] 물론 그러한 경제 · 사회 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근원적 배경과 전략적인 이해관계에 대해서까지는 어떠한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한국에 제공된 건국 초기 및 전후 재건기, 개발연대 초기에 이루어진 다량의 원조는 국제정치적인 역학관계는 물론 당사국간의 전략적인 이해관계 등의 측면에서 매우 복합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에 대한 서방 자유진영측의 원조는 동서냉전이라는 커다란 국제질서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 국제정치 및 안보와 관련한 고도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산물이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민주 자유주의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견지에서 공산사회주의로부터의 위협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을 좌시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빈곤 저개발 상태의 신생 독립국의 입장에서 국방, 행정 등 국가건립의 기초가 되는 요소들을 자력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원조의 공여는 경제 · 사회 개발이라는 본연의 목적이상의 보다 크고 복합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그 지원의 범위와 내용 또한 일반적 의미의 공적개발원조의 개념보다는 매우 포괄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 케네디 행정부에 의해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이 제정되기 이전인 1950년대까지 미국의 우방에 대한 원조는 상호

---

[1]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Grants or Loans to countries and territories on Part Ⅰ of the DAC List of Aid Recipients(developing countries) which are: ·Undertaken by the official sector. ·With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and welfare as the main objective. ·At concessional financial terms(if a loan, having a GRANT ELEMENT of at least 25%).

안보법(Mutual Security Act)에 의하여 시행되었으며 정치 · 군사 등의 안보적인 고려가 보다 우선 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실제로 미국의 1950년대 대외원조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군사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고 우리에게 제공된 경제원조의 적지 않은 부분이 사실상 안보적인 목적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원조의 공여에 있어서 전략적 이해관계의 고려가 중시된 사례는 PL480에 의한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당사자간의 보다 포괄적인 정치적이고도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원조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앞의 주요 원조사업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 이미 보았듯이 미국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설립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미국의 고도의 전략적 의도와 한국의 이해가 합치되어 시행된 사업으로 그 배경의 복합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추진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사업목적 또한 원만하게 달성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른 하나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한일 양국간에 합의를 통해 추진된 대일 청구권자금에 의한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일 청구권자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를 개발원조 자금으로 보아야하느냐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일단 국가 간의 경제 · 사회개발지원을 위한 공적 자금의 흐름이라는 견지에서 이를 원조자금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자금의 배경을 본다면 경제 · 사회적 측면보다는 훨씬더 정치적인 측면의 전략적인 이해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서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한국의 자력성장과 자주 방위의 역량이 확보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 원조의 성격은 점차 경제 · 사회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원조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그 규모가 크게 감소되었다.

이렇듯 한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협력사업은 수원국의 경제사회

개발이라는 일반적 개념의 개발목표를 넘어서는 보다 복합적이고도 다원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된 것들이 적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1.4. 보다 장기인 안목에서의 원조사업추진 필요성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신생국가의 탄생으로부터 현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르기까지의 짧지 않은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 제공된 국제개발 원조와 협력은 한결같이 한국이 필요로 하는 긴요한 수요에 대한 공급이었으며 한국인들이 펼쳐나가고자 하는 발전과 개발 욕구에 대한 응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간에 이루어진 각종의 개발협력사업들을 주요 사례연구 등을 통해 되돌아 보건대 각각의 사업에 대한 안목과 시야가 대단히 길고 넓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개별 원조사업의 준비 및 실시 방식을 보면 대부분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미리 실시하여 전략적인 사업 분야와 명확한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을 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개별적인 개발원조사업에서 뿐만이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 운용의 관점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즉, 경제재건기 및 개발연대 전기의 초기에 이르는 시기에 있어서 대외원조가 고려되지 않은 경제정책은 있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자본과 기술 모두가 절대적인 공급부족과 수준미달의 상태에 있던 한국의 경제사회 상황에서 외부경제로부터 유입되는 대외원조 자금과 기술은 정책의 선택은 물론 투자의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원조자금에 의한 투자계획이 곧 우리나라의 투자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외부문은 커다란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개발원조와 협력은 전반적인 정책의 수립과 경제운용과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당연하게 장기적

인 정책운용의 안목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개별 원조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주목되는 것은 당초에 계획된 사업지원이 종료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의 후속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단계에서의 사업목표 달성에 머무르지 않고, 상당 기간 동안에 걸쳐 해당 지원 사업의 효과성이 업그레이드되고 그 지속성이 유지되어 자립적인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후속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추가적인 지원을 예정하지 않은 사업에 있어서는 수원자측의 사업운영 주체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영의 독립성 유지는 물론 재정의 안정과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미리 충분하게 마련해놓는 대안제시 능력의 치밀함을 보여준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긴 안목과 넓은 시야에서 주도면밀하게 추진된 대부분의 원조사업들은 앞서 주요 사례조사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시대적 여건의 변화와 발전 추세에 부응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때로는 이를 전환시켜 사업 본연의 목표를 십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례1> 국립의료원(Korea Medical Center) 설립사업

현대적인 의료와 의학 기술이 불모상태에 있던 전후 한국사회에 스칸디나비아 3국 등의 지원으로 세워진 국립의료원은 한국 국민에 대한 의료시혜는 물론 의학 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동 의료원이 설립된 이후 공여자측의 후속적인 추가 지원과 수원자측의 지속적인 투자 등을 통해 그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 · 향상시켜 나옴에 따라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공 의료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 사업은 13년에 이르는 사업기간동안 당사자간에 3차례의 협정이 체결되는 과정을 거치며 꾸준하게 진행되었다.

<사례2> 중앙직업훈련원 설립사업

공공직업훈련제도 도입 초기 UNDP의 지원에 의해 설립된 중앙직업훈련원은 직업훈련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어 우리나라의 공공직업훈련시설이 획기적으로 확충되는 1970, 80년대에 관련 분야의 고급 기술인력 공급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 기관은 교육 및 산업 환경, 직업교육 여건의 변화에 발맞추어 보다 새로운 기능의 교육기관으로 전환 · 발전되었다. 이 기관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Polytechnic College'라는 유형의 직업전문대학으로 발전되었다.

<사례3>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사업

미국의 제안에 따라 미국 주도의 사전 조사 및 준비 등을 통해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당초 설립과정에서부터 중시되어 제도화된 자율 · 독립적인 조직운영 및 사업관리 방식과 인력 중시의 전략 등을 꾸준하게 발전시켜 한국 기술연구개발의 선도기관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해 나왔던 것으로 여겨진다.

기관 설립 준비과정에서부터 논란과 관심이 대상이 되어온 연구원 초창기에 도입된 여러 가지 연구개발 관련제도 및 조직운영 시스템은 이 기관 설립 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책임과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시스템 관리와 효율적인 조직운영 등의 여러 면에서 벤치마킹 (Bench Marking)의 대상이 될만한 사례로 평가된다.

1.5. 수원자의 개발의지와 이니셔티브, 참여와 Ownership

어느 정도 전후 복구가 이루어지고 경제 · 사회적인 안정이 이루어진 이후 개발연대의 시기에 추진된 대부분의 원조사업으로부터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수원자측의 강력한 개발 의지와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전후 원조 공여와 관련된 정책대화 및 협의 과정에서도 재건과 개발 등 경제부흥을 우선하고자하는 수원자인 한국 측의 입장과 재정과 민생의 안정에 우선을 두고자하는 공여자측의 입장이 서로 간

에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등 수원자측의 개발의지는 개발연대 이전의 시기로부터 의욕적으로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53. 12. 에 한미 양국 간에 체결된 '경제 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의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기간산업의 재건 내지 신설을 우선하는 등 경제부흥을 중시하고자하는 한국 측의 입장과 인플레를 억제하고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안정 우선의 정책에 중점을 두고자하는 미국측의 입장이 심각하게 대립되어 협약의 체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적이 있기도 하였다.[1]

한편 원조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협의에 있어서도 원조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한 견해와 입장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수원자와 공여자간의 입장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즉, 원조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본재 또는 생산 · 시설재가 중심이 되는 이른바 계획원조의 비중을 높이고자 희망했던데 비해 공여자측은 소비재 또는 원자재에 치중하는 비계획원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여 견해의 일치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사람중심의 투자 중시와 시설 우선의 투자 중시 주장이 서로 상충되어 양측간의 견해가 쉽게 일치되지 않았던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전후에 미국주도로 이루어진 원조의 결과를 보면 수원자측의 의지가 잘 관철되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수원자인 한국측의 희망이 결과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후 한미합동으로 마련하게 된 이른바 '종합부흥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원조의 내용협의에 있어서 한국측이 생산재와 소비재의 도입비중을 7대 3 정도로 하고자 주장하였지만 미국측의 입장이 달라 결국은 5대 5의 비중으로 합의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 이루어진 원조의 실제 내역은 생산재와 소비재의 비중이 3대 7로 역전되는 오히려 소비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말았다.[2] 한마디로 수원자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어려웠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

[1] 이대근, op. cit., p. 232 및 p. 286

[2] op. cit., p. 275

이에 비해 개발연대에 들어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개발원조 및 협력 자금 수원에 있어서는 수원자의 강력한 의지와 요구에 따른 수원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의지와 적극적인 요구는 우선 원조자금의 획득을 위한 국가정상의 외교활동을 통해서 나타났다. 개발연대 초기 국가에 대한 신인도가 극히 낮았을 뿐만 아니라 개발역량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아닐 수 없었다. 이른바 건전 통치(Good Governance)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의 올바른 비전과 지도력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의지와 대외협력의지가 당시의 정치지도자로부터 강력하게 발현되었던 것은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1960년대 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에 연이어 이루어진 미국, 일본, 서독 등에 대한 국가 정상의 방문은 개방적이고도 적극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해나감은 물론 원조자금의 확보 등을 통해 개발재원과 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치지도자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자 실천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개발연대의 대부분의 개발 사업들은 과거 전시 또는 전후복구기의 수동적인 자세와는 달리 매우 능동적인 입장에서 개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발굴 · 수립하고 이를 주요 원조공여 주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개발연대 전기의 시기에는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인 수원노력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로서는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극히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의 적극성과 요청만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러나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장기개발정책을 토대로 하여 수립한 개발투자 프로젝트를 강력한 개발의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함으로써 이를 하나하나씩 실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개발연대 전기에 추진된 몇몇의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을 보면 대부분 각각의 사업추진에 대

한 극히 부정 · 냉소적인 국제사회의 시각과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수원자의 이례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무모하다싶을 만큼의 과감한 추진을 도모한 나머지 잘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점은 수원자의 이니셔티브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전략적 입장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방침이 결정된 연후에는 이를 이른바 오우너십(Ownership)이라고 일컬어지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매우 능동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성과를 한층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원자주도적인 오우너십을 가지고 적극적인 원조사업을 도모한 것은 한국이 국제사회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원조사업의 추진을 보다 협조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한 것으로부터도 잘 알 수 있다. 1960년대 중반이후 더욱 많은 경제 · 사회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자 한국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의 경제 · 사회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의체의 구성을 국제사회에 제안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주관하는 대한국제경제협의체(IECOK: International Economic Consultative Organization for Korea)가 구성되고 이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원조자금의 조달 및 직접투자의 확대를 촉진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경주되었던 것이다.

1966. 5. 런던에서 창립 예비회담을 개최한 이후 1966. 12. IBRD 주관 하에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벨지움, 미국, 중국, IMF, UNDP, 한국 및 영국(옵저버)의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창립된 IECOK는 그 이후 1 ~ 2년에 한 차례씩 모두 10여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의 개발계획 및 협력 현안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한편 1960년대 초에 마련된 외자유치촉진법과 강력하게 시행된 일련의 외자유치 정책도 수혜자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보다 진취적

인 개발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발현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장기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지불보증을 실시하는 등의 매우 이례적인 외자도입촉진 시책이 추진된 것은 그만큼 수원자측의 의지와 주인의식이 명확했던 또 다른 예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1]

공여자의 호의와 배려에 의존하기보다는 공여자를 직접 찾아 나서서 원조 자금을 포함하는 개발자금의 획득에 적극적이었던 예를 한국의 사례 이상으로 찾아보기는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1.6. 정책적 관점: 정책 대화, 선택과 집중의 문제

한국의 원조 접수 초기의 원조 실시와 관련한 수원국 조사 및 정책 대화는 공여자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의 와중에서도 유엔의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은 전쟁 종료 이후에 요구되는 전후 복구 및 재건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한국 정부와의 정책협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은 이미 1952년에 미국의 용역기관인 네이산 협회(Nathan Associations)에 의뢰하여 한국경제 전반과 전쟁 피해복구소요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원조공여자가 주축이 된 사전조사 작업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측의 정책협의가 이루어진 결과 한국정부와 국제연합한국재건단간에는 '한국경제원조계획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고 이 협약에 따른 전후 복구 및 재건사업이 추진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한국전쟁이 진행 중에 있었지만 한국정부와 유엔군사령부간에 보다 긴밀한 정책협의 및 원조사업을 실시해나가는 방안의 하나로 이른바 '마이어협정'으로 알려진 '대한민국과 국제연

---

[1] 1962. 7. 18.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법과 대한 정부 지불보증법이 제정되었는바 민간기업이 도입하는 외자를 정부가 지불 보증하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였음.(김흥기, *영욕의 한국경제*, 매일경제신문사, 1999. 4., p. 75)

합군통일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미 양측의 대표단으로 구성되는 경제합동위원회(Combined Economic Board)를 구성하여 경제 안정과 긴급복구 등과 관련한 정책협의를 실시해 나갔다.

전쟁의 종료가 임박해오면서 미국은 전후의 경제 복구와 재건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원조계획의 수립과 시행차원에서 미국대통령의 특사로 타스카(Henry J. Tasca)씨를 파견하여 이른바 '타스카 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토대로 휴전협정 이후의 한국경제재건과 부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침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제연합과 미국 등의 원조공여 주체는 사전에 원조대상국의 실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원조 수요의 판단은 물론 수원국과의 정책대화 및 협의를 위한 면밀한 준비를 실시하였으며 원조정책의 수행 및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철저히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책대화 및 협의 과정에서는 공여국의 전략적 이해는 물론 구현하고자하는 정책조건을 철저하게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도 관련 원조협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개발연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독자적인 정책운영을 도모해나가기까지 원조 공여국, 특히 미국과의 정책대화 및 협의는 매우 긴밀하고도 강도 높게 이루어졌으며 수원국인 한국의 경제정책운용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원조 공여 또는 공적개발협력의 제공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정책대화 및 협의는 개발연대에 들어서면서 다자 또는 양자간 협의 방식으로 보다 제도화되고 활성화되었다. 이 시기 이후의 정책대화와 협의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여자측의 주도가 아니라 수원자측의 주도로 그 이니셔티브가 전환되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앞서 설명한 바가 있지만 1966년에 구성된 대한국제경제협의체(IECOK)는 개발연대 후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한국에 대한 국제개발 원조 및 협력과 관련한 정책대화

및 협의 창구로써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은 물론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은 주요 원조공여국들과는 별도의 양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발협력과 관련한 정책대화 및 협의를 정례화·활성화하였다.

이러한 다자 또는 양자간의 정책대화 및 협의는 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는데 매우 긴요하였다고 평가된다. 이 협의를 통해 수원자는 경제운영 성과와 과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현상과 문제 등을 제기하여 공여자측의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히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상호간의 평가와 의견조정을 통해 비교우위에 입각한 각자의 역할을 설정하고 개별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제한적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 조화로운 사업의 추진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공여자주도로 또는 수원자주도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조 공여자와 수원자가 함께 정책대화와 협의의 장을 통해 긴밀한 협의를 실시하는 것은 원조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개발협력 당사자간의 정책대화와 협의 결과는 합의의사록 또는 사업시행 약정 및 사업시행 부대조건 등의 형식으로 명문화되어 이행되게 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발연대 후반기에 들어서서는 개별 단위 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한 사항보다는 경제 전반의 안정과 구조조정, 긴급금융 지원과 같은 협력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초 정부주도에 의한 고도성장의 후유증 등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부문간 불균형 문제와 가격 및 시장구조의 왜곡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도입한 구조조정차관(SAL: Structural Adjustment Loan)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제도적 개선 사항이 협력자금 제공과 관련한 정책 대화의 주된 내용이 되었다. 1990년대 말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국제개발금융기관으로부터 도입한 긴급경제구조조정 금융과 관련해서도 경제 및 재정의 긴축과 안정, 구조개선 등을 위한 정책조건이 정책

대화를 통해 부과되기도 하였다.

모든 유형의 원조 및 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공여자, 수원자 양측의 전략적 고려사항과 중요한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관련 사업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 준비는 물론 긴밀한 정책대화와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대화와 협의를 통한 전략적 이해관계의 확인과 조정은 제한적인 가용 재원의 범위 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원조 분야 및 사업의 선택과 집중의 도모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추진 사업의 투자의 우선 순위 등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공여자와 수원자 상호간에 유용한 정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양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원조의 성과와 기대치 등에 대한 괴리의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1.7. 기술적 관점: 인적자본과 기술 ,정책, 시스템 등 연성 인적 개발요소의 중요성

개발원조 및 협력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기술적 관점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특히 프로젝트형 무상원조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인적자본과 기술, 정책, 시스템 등의 이른바 연성(soft)의 인적 개발(human development) 및 인적 자본(human capital) 요소가 보다 중시되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 성과에 대해서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많은 관찰과 연구가 있어왔지만 최근에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인적 개발 투자 및 연성 인적 개발 요소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한 UNDP의 연구는 이와 같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인적개발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분석결과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1]

---

[1] Jong-Wha Lee, *Occasional Paper 24 - Economic Growth and Human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1945~1992, http://hdr.org/docs/

즉, 인적 자본(人的 資本)은 한국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요소의 하나임을 재확인하면서 이러한 인적 자본의 기여는 종래에 인식되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역할을 수행했음을 밝히고 있다. 잘 교육된 풍부한 인적 자원은 외국으로부터의 선진 기술을 흡수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대외지향적(outward-oriented)인 개발전략과 소득균형을 추구하는 정책에 힘입어 더욱 빠른 속도의 인적 자본의 형성이 가능했다고 풀이하고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 인적 자본의 축적은 고도성장에 따르는 보다 큰 인적 개발욕구를 창출시킴으로써 이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성장과 인적 개발의 상관관계를 여러 관점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다.

개별적인 개발원조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이를 다소 미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 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원조사업의 구성 내역을 살펴보는 것이다. 무상원조사업의 사업내용 구성과 관련해서는 주로 공여자측의 인력과 기술진의 참여에 의존하는 프로젝트 컨설팅, 기술 자문 및 교육, 운영시스템 개발 및 운용지원 등 연성 요소의 비중문제는 때로는 논란의(controversial) 대상이 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사업비 중에서 공여자측이 주로 제공하는 연성 사업요소의 비중이 큰 경우 수원자에게 제공된 원조자금이 공여자측의 인력파견 또는 기술자문 비용으로 다시 공여자측으로 환류되어 원조효과가 반감된다는 견지에서의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다.

헌데 우리나라가 공여 받은 프로젝트 무상원조사업의 경우 이와 같은 연성 요소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1968~1981년 간 UNDP사업으로 지원된 중앙직업훈련원사업의 구성 내역(component)을 보면 총 262만 달러의 지원자금 공여자측의 전문가 등이 제공하는 컨설팅 및 기술자문 비용과 수원자측의 인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수비 등 연성 요소의 사업비가 163만 달러로 총 지원 사업비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앞

서 살펴본 독일 정부가 제공한 직업훈련분야에 대한 원조사업의 실시에 있어서도 연성 사업요소가 경성(hard)의 사업요소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이 제공한 일련의 직업훈련지원사업에 있어서 자국 전문가의 파견을 통한 기술자문 용역의 제공, 초청연수교육의 실시, 직업훈련 시스템의 구축 등 연성 요소의 비중은 80%가 넘는 수준이었다.

미국의 지원에 의해 추진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사업에 있어서도 AID에 의한 양허성 차관자금 190만 달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무상으로 공여된 718만 달러의 44%에 달하는 317만 달러의 자금이 전문적인 용역자문의 제공방식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수원자측이 부담하는 건물건축비의 일부도 무상원조자금으로 지원되었는데, 이를 제외하면 145백만 달러에 달하는 연구 장비 및 기기구입비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인 317만 달러가 기술자문 용역비로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무상 원조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조사와 정책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원조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연성 요소가 중시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66~'70년 간 추진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사업의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은 연성의 사전 준비적인 요소에 얼마나 큰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사업의 공여자인 미국은 이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준비와 관련하여 1차적으로 대통령의 과학기술특별고문(Donald F. Hornig)을 단장으로 하는 사전 조사단을 파견하여 기초타당성조사 및 검토를 실시토록 하였다. 또한 원조사업실시와 관련한 양자간 협정체결에 앞서서는 공여자측이 선정한 자국의 전문용역기관(Battelle Memorial Institute)으로 하여금 보다 심층적이고도 포괄적인 본 조사를 실시토록 하였다.

미국측이 파견한 전문용역기관의 사업평가조사단은 3개월에 걸친 비교적 긴 기간을 체한하면서 매우 깊이 있는 조사활동을 전개하였는바 그들은 조사활동간 중 20개의 기업체, 8개의 대학 및 8개의 연구소, 기타 수 개의 기관을 방문 · 접촉하면서 수원국의 연구

개발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면밀하게 파악 조사하는 등 매우 광범위한 조사연구 활동을 벌였다. 사전 조사 및 준비에 매우 철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들이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준비 등 연성의 사업 요소에 큰 비중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77~1991년 간 360만 달러에 달하는 직업훈련 장비 구입자금이 공여된 양허성 개발차관사업과 관련하여 차관 공여 기관인 ADB는 1972년 한국의 경제전반은 물론 직업훈련과제 정책과제도 및 일반현황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이후[1] 수차례에 걸친 정책대화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지은 뒤 자금지원을 실시하였다.

특히 UNDP에 의한 대부분의 기술원조사업의 수원에 있어서는 이러한 연성의 협력 요소가 더욱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UNDP가 제공한 기술원조사업의 대부분은 거의 모두가 연성 기술협력 요소로 구성된 것들이며 프로젝트형의 기술원조사업인 경우에도 연성 구성 요소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장비 및 시설재 등 경성의 원조사업 구성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프로젝트형 기술원조사업의 추진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고 사료된다. 공여국으로의 자금 환류로 인하여 원조효과가 크게 반감된다는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연성의 사업요소가 중시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추진에 있어서 무형의 기술적·인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사전조사, 정책대화 및 협의와 같은 형태의 보다 원천적인 유형의 연성 요소에 대한 언급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다음에 소개하는 사례는 정책자문(policy consulting)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연

---

[1] *Appraisal of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s Project in Korea*, ADB, Feb. 11, 1972

성 협력요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것은 1964년 원조자금의 획득 등을 위해 이루어진 우리나라 정상의 독일 방문 중에 있었던 일화의 하나다. 정상의 외국 방문 시에 의례적으로 실시되는 방문국의 주요 정치 · 경제계 인사들을 초청 대상으로 하는 리셉션이 당시의 서독 수도였던 본(Bonn) 방문 시에는 일반 호텔이 아니라 라인강(The Rhine)상의 유람선에서 실시되었던 것이다. 일반 호텔에서 마련하는 행사에 비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유람선상의 리셉션을 마련한 것은 그 행사에 참여하는 독일의 주요 인사들로부터 가급적 많은 시간 동안 독일의 개발경험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다.

라인강을 오르내리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아무도 행사장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독일측 인사들로부터 그만큼 많은 값진 이야기를 청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비용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독일의 경제개발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얻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른바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전후 경제부흥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귀중한 정책조언과 자문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1.8. 문화·사회적 관점: 문화·사회적 가치와 태도의 문제

원조와 개발협력과 관련한 문화 · 사회적 가치의 문제는 최근까지도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일종의 금기처럼 여겨왔던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국제개발협력의 추진에 있어서 공여자와 수원자간에 빚어질 수 있는 문화·사회적 갈등을 가급적 유발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문화와 사회적 가치의 문제는 최근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 수원자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태도가 경제 · 사회발전과 변화, 국제협력의 성과에 있어서 적지 않은 상관관계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

다는 가설 아래 일부 국제개발논자들 간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1]

국제개발과 관련한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태도 등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회의 문화 · 사회적 구조와 토양이 얼마만큼 근대적 의미의 개발과 변화를 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일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는 개발이 가져오는 문화 · 사회적 가치와 태도의 변화를 얼마나 진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사회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한마디로 개발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곧 '산업화(industrialization)와 개방화'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수 천년동안 지속되어온 전통적인 농경사회는 매우 빠른 시간 내에 현대적인 산업사회로 크게 변모하게 되었다. 그것은 한편으로 한국 사회가 성장과 발전이라는 개발의 메카니즘이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인적 자원, 교육, 사회적 시스템 등을 상대적으로 빨리 구비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다른 한편에서 보면 한국 사회가 그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과 포용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쨌든 이러한 산업화와 개방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한국에 대한 국제개발원조와 협력은 개발초기 한국사회 전반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즉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및 인력, 기술개발 분야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개발원조 및 협력사업은 개별 사업 그 자체가 통째로 수원주체인 한국 사회의 문화가치와 사회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개발원조 및 협력사업으로부터 연원된 한국의 산업화와 개방화는 기존의 정태적이고도 폐쇄적이었던 한국의 농경사회문화를 동태적이며 개방적인 산업적 사회문화로

---

[1] Lawrence E. Harrison & Samuel P. Huntington, *Culture Matters: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 Basic Books, 2002

매우 급속하게 변화시키면서 사회적 이동성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사회적 분화를 촉진하는 등의 중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에 못지않은 강도 높은 국제개발협력이 전개된 많은 다른 나라에서 그와 같은 개발노력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개발과 관련한 이러한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태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개별 원조 및 협력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미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문화적 가치와 및 사회적 태도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주요 수원사례 조사연구과정에서 발견된 특징적인 사항을 소개한다.

< 사례 1 >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의 기본 취지

일본의 원조자금을 통해 금오공업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게된 것은 가깝게는 그 수요가 급속하게 증대되는 산업기술 인력의 충당을 위한 것이 그 기본 목표였다고 할 수 있지만 보다 원시적으로는 한국사회의 오랜 유교적 전통 하에서 경시되고 있는 기능과 기술에 대한 인식, 이 부문에서의 패배의식 등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나가고자 하는 전략적인 의도가 담겨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이 그러한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태동의 변화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이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놓고 볼 때 나름대로 당초의 기본 취지가 어느 정도는 구현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사례 2 > 독일식의 기능장제도 지원 사업

서독의 지원에 의해 실시된 창원기능대학설립사업(1975~1985)은 독일 방식의 기능장(Meister)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으며 대학 설립이 완료된 이후 1987년부터는 기능장훈련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추가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정규 학력을 중시하고

사무관리직종을 선호하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사회적 전통과 가치는 독일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는 기능장제도를 한국에 정착시키는 데는 사실상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사례는 사회적 가치와 토양의 성격에 따라 특정한 제도 도입의 성공과 그 사업의 성패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 사례 3 > 가시적으로 남아있는 원조사업의 문화적 자취

1950년대에 스칸디나비아의 3국과 UNKRA의 공동지원에 의해 설립된 국립의료원(Korea Medical Center)이 원조에 의해서 세워진 시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이는 극히 드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업이 종료된 지 이미 40여 년이 흐른 지금의 이 시점에서 이를 가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 수원사업과 관련된 부대시설의 하나로 건축되어 운영되어왔던 식당의 경우, 그 시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독특성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생동감 있는 문화공간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스칸디나비아 3국으로부터 파견된 100명에 가까운 규모의 의료 인력과 기술진의 식생활 공간으로 이용되던 이 식당은 1975년 그 운영권이 비영리 재단법인인 '한-스칸디나비아 재단(Korea-Scandinavian Foundation)'으로 이전 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Viking Buffet'라는 북구풍 방식의 대중식당으로 운영되면서 오늘날까지도 원조 공여권 국가들의 문화적 자취를 간직하고 있다. 당초 순전히 기능적인 목적 하에서 운영되었을 구내식당이 4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그 숨결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어느 사회에 수용된 문화적 가치나 자산은 지속적인 변화와 부침을 지속하는 가치 또는 문화 중립적인 기술이나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그 생명력과 자생력이 보다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원조 및 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그 사업 추진이 가져오게 될 문화 · 사회적 영향이 어떤 것이며 특히 제도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거시·미시적 관점에서 문화 · 사회적인 관점의 고려를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1.9. 개발협력사업 실시 체제: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와 중앙집중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의 문제

한국의 경제사회개발과 국제개발협력의 추진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이를 계획하고 준비해서 용의주도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통치의 방식과 행정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 새롭고 획기적인 발전의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과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았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여건은 권위와 중앙집중에 매우 익숙한 오랜 유교주의적 전통과 중앙집중의 식민주의 행정 유산을 물려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권위적인 통치와 중앙집중식 계획행정이 유효하게 침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성장과 개발을 지향하는 강력한 리더십의 출현은 구테타(*coup d'état*)를 통해 정권을 획득한 것으로부터 기인하는 통치권의 정통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흩어져있던 국민적 에너지를 새로운 방향으로 결집할 수 있었으며 중앙집중적인 계획과 집행을 비교적 원만하게 실행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개발연대 전기의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주요 사업추진의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은 권위적인 통치의 전통과 중앙집중적인 관리방식이 매우 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도성장과 산업화, 빈곤의 퇴치라는 개발중심과 우선의 논리 면에서 볼 때, 국제개발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개발연대 전기의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와 중앙집중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 체제는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쟁점과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하겠다.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의 발휘가 다른 전략과 방향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테면 대외지향적인 불균형 발전 전략이 아닌 대내지향적인 균형발전전략이 추진된 경우에 과연 어떤 방향으로 한국의 경제 · 사회가 변모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반대로 강력한 계획경제 정책의 수립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고도의 중앙집중적인 의사결정 및 사업시행 시스템이 가져다준 결과, 즉 그 공과와 영향 또한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협력의 문제를 조망해보는 것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 경제·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가 가져다준 경제규제의 완화와 자유화, 권위주의적 통치의 방식과 체제로부터의 탈피,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적 분화 등 한국사회의 경제와 정치, 문화 발전의 문제는 물론 이들 상호간의 역동적 역학관계에 대해서도 매우 흥미로운 논점과 시사점 등을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1.10. 한국의 경험이 북한의 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그간의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사례와 그 경험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값진 의미와 귀중한 시사점 및 교훈은 아마도 북한의 대외개방 및 경제사회 개발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단 이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 지나치게 극적이리만큼 서로 다른 상황에 도달해 있는 한국과 북한의 실정이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한국과 북한의 극히 대비되는 현재의 상황은 근본적인 경제이념과 정치체제의 문제이외에도 개발전략의 선택과 리더십의 문제, 대외개방 및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태도와 방식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실로 많은 것들에 대한 시사점과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1940년대 후반의 분단 초기 당시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서 보면 산업화의 추진이라는 기본적인 여건 면에서 북한은 남한에 비해 결코 뒤질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남북한간의 발전과 변화의 추이는 그간에 발생된 서로간의 차이를 여기에서 새삼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만큼 분명하고 현저해졌다.

그것은 국제개발 원조와 협력이라는 다소 제한된 영역으로 이

문제를 축소시켜서 살펴본다 하더라도 너무도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대외지향의 개방적인 국제개발전략을 추진한 한국측과 대내지향의 폐쇄적인 개발전략을 구사한 북한의 차이가 너무도 분명하게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는 그간에 빚어진 결과의 차이가 아니라 앞으로 장차 북한사회가 불가피하게 겪게 될 개방과 개발의 단계에서 분명하게 필요로 하게 될 우리의 경험과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전후 경제 재건은 물론 개발연대의 국제개발협력 과정에서 얻어진 귀중한 경험과 교훈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보다도 북한에서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미 인도적 차원의 원조를 시작으로 북한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발 원조와 협력이 북한 사회의 전향적인 발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서로가 함께 지향하는 개발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지원되는 원조 및 협력 자금의 활용이 이와 같은 목표의 달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선행되어야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 및 지원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평가를 토대로 한 긴밀한 정책대화와 협의가 모든 지원에 앞서 이루어져야하며 지원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가 가능한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은 간섭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성패 및 효과와 관련된 것으로써 원조 공여자와 수원자 공동의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다.

물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발협력 당사자인 북한측이 개발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인식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것은 자유·민주적 가치와 개방적인 시장경제체제를 중시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를 인정하는 문제가 그 어느 개별적인 개발원조 또는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서서 선행되어야만 하는 과제일 것이기 때문이다. 개발원조와 협력의 문제가 보다 복합적이고 전략적일 수밖에 없는 성격의 것이라는 점이 보다 분명해짐을 알 수 있게 된다.

1.11.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의 한국의 새로운 역할

한국은 전후의 세계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비중 있는 협력 수혜자(beneficiary)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도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경이적인 성과로 말미암아 많은 후발개도국들에게 자조적인 노력과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개발과 성장, 발전의 도모가 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의 동참을 실현할 수 있다는 실증적인 사례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은 그간의 개발과정에서 한국만이 가지는 독특하고도 생생한 개발경험과 기술을 축적해왔다. 더욱이 한국은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범했던 제국주의의 유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로써 보다 참신하고도 능동적인 개발협력을 전개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그 능력과 영역 또한 협력의 방법과 수단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는 크게 키우고 넓혀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과거 국제개발협력 과정에서 양자적 협력은 물론 다자적 협력의 틀을 적극 활용해왔으며, UN주도에 의한 UNKRA협력, IECOK의 설치 운영 등 독특한 다자적 협력의 전통을 만들어 나왔다. 이와 같은 수원과정에서 한국이 수립한 다자적 협력의 전통이 시사해주는 것은 한국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양자적 협력관계의 수립은 물론 국제기구 등과의 다자적인 방식의 연대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다자적 협력접근방식을 여러 차례 유용하게 활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획일화되어 있는 양자간 협력 중심의 기술협력방식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유용한 개발경험과 기술,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s)' 등의 공유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비하고 있지 못한 부족함이나 한계는 상대방으로부터 얻어 보완해나갈 수 있다는 견지에서 3자간, 더 나아가서는 다자적 협력의 방식에 의한 협력추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의 국제적인 유대와 연대를 확대해나가는 문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간혹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의 가입문제까지로도 확대시켜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OECD와 DAC의 뿌리를 살펴보게 이들 기구의 의의를 새롭게 되돌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OECD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 대한 미국의 개발원조 제공과 관련하여 설립된 유럽경제협력협의체(OEEC)가 모태가 되어 설립된 것이며 이 산하의 DAC 역시 OEEC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대적인 개방원조와 협력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개발원조그룹(DAG)을 근간으로 하여 발전된 것이다.

이와 같은 DAC의 설치연원 등을 되돌아보건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조력하고 참여하는 정신의 DAC에의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견해를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의 제공 규모의 크기가 아니라 그와 같은 연대적 협력을 보다 중시해야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수원 과정에서 획득한 무형의 귀중한 개발경험과 국제협력 노하우를 공유하여 활용하는 것은 개발원조의 재원을 늘려나가는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한지 이미 여러 해를 넘기고 있다. OECD산하 국제개발 협력전문기구인 DAC에의 가입을 조속하게 추진할 의의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더욱이 한국은 그간에 한국이 습득한 귀중한 개발 경험과 교훈을 살려 여러 국제개발기구 등과의 다자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도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싶다.

1.12. 원조에 대한 기록, 그것은 공여자측의 몫인가?

과제에 대한 자료조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중의 하나는 수원과 관련한 자료가 중앙정부의 관계 부처는 물론 해당 수원기관에도 거의 남겨져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관련 자료의 소장여부는 불문하고 관련 자료가 존재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기록마저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개발원조사업과 관련된 30여 개의 관계 기관을 방문하면서 사료적인 가치가 있는 문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하였다.[1] 물론 관련 사업이 추진된 지 이미 길게는 두 세대, 짧게는 한 세대의 세월이 흘러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관련사업에 대한 정확한 역사의 기록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다는 사실에서 다시 한번 기록물의 작성 및 보존과 관리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원조사업관련 자료나 문헌이 제대로 보관·관리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이를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우선 우리가 너무나도 급격한 사회변동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기존에 높은 평가를 받아오던 기록 중시의 전통적인 가치를 상실하게 된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또한 그간에 추진되었던 많은 개발원조 및 협력사업들의 대부분 지나치게 권위적주의적이고도 중앙집중적인 방식으로 시행·관리되어 왔던 때문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보게도 된다. 사업관련 기본 정책이나 추진 방침의 설정 등의 중요사항은 대부분 수원사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사업 수혜기관 또는 실시기관에서는 관련 사업의 실무적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한 나머지 사업실시기관에서는 원조사업과 관련한 자료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마저 흔치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와 같은 사업실시기관의 소극적 참여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있어서도 다소나마 부정적인

[1] 포항제철(POSCO)은 'POSCO역사관'을 건립(2003. 5.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한 다른 한가지의 생각은 개발원조사업에 대한 본연적 인식의 속성으로부터 기인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것이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의 유쾌하지 못했던 수원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기록들을 굳이 신주 모시듯 보관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과거 흔히 전문성이 미흡한 관리자에 의해 운영되어오기도 했던 우리나라의 소규모 도서실 또는 자료실의 실상을 이해하는 것도 원조관련 기록의 부재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반면에 우리나라에 원조를 공여한 기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철저하게 관련 기록이나 자료들이 관리 ·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예로 우리나라가 UNDP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원조의 전반적인 내역은 우리나라의 어느 기관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웠지만 UNDP 서울사무소 측으로부터는 쉽게 입수할 수 있었다. 우리 측으로부터는 극히 일부 아주 두드러졌던 몇 개의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적인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을 뿐인데 UNDP 측으로부터는 그간 우리나라에 제공된 250여 건에 이르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 사항은 물론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우리 측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미국으로부터의 수원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원조 공여자인 미국 측으로부터는 이른바 그린북(Greenbook)이라고 불리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뢰할만한 통계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짐작하건대 다른 공여 기관의 경우에도 정확하고 체계적인 원조 공여관련 자료나 기록물들을 보관·관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결국 원조사업과 관련된 자료나 문서의 보관이나 관리는 수원자측의 몫이기보다는 공여자측의 몫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원조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협정문, 사업실시계획서, 평가서 등의 문서자료의 보관과 관리는 해당 사업의 실시 성과 및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확인과 사후관리, 사후 평가 등에 긴요한 자

료일 뿐만 아니라 사업 실시의 모태가 되는 중요한 기록물로써 역사적 사료로써의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원조사업의 실시와 관련한 도큐멘테이션(documentation), 즉 적정한 문헌과 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1]

[1] 금번의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2003. 11. 21.부터 12. 15.까지 25일간에 걸쳐 과거 수원과 관련된 중앙정부기관은 물론 주요 수원사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기초자료 조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방문기관은 중앙정부기관으로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농림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등 9개 부처, 농촌진흥청, 농업기반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중소기업진흥공단(SMIPC), 포항제철(POSCO), 한국도로공사, 한국통신(KT), 대한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기능대학(전 UNDP중앙직업훈련원), 창원기능대학, 창원한백[벨지움]직업전문학교, 부산한독직업전문학교, 금오공업고등학교, 국립의료원 등의 17개 사업실시기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수출입은행(EXIM), 정부기록보존소 등의 관련기관들이다. 수원사업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사업실시기관들 중에서 관련 자료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은 포항제철 등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며 주요 사례조사 사업의 하나로 계획했던 통신 분야의 전자교환시설(ESS: Electronic Switching System)사업에 대한 사례연구는 해당 사업실시기관인 한국통신(KT)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없었던 관계로 이를 진행시킬 수 없었다. 그간 수십 건의 개발원조 및 협력사업을 실시했던 한국통신으로부터는 단 한 건의 원조관련 자료도 입수할 수 없었다.

2. 한국의 수원과 국제개발협력 잇슈

2.1. 개발전략: Outward vs. Inward, Even vs. Un-even

개발경제학(development economics)에 있어서 가장 해 묶은 논점 중의 하나가 바로 개발전략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 중의 하나는 대외지향(outward-looking) 대 대내지향적(inward- looking)인 개발전략의 문제와 균형(even) 대 불균형(un-even) 성장정책의 선택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

한국은 산업화과정에서의 경제개발 및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경제개발전략의 선택과 시행에 있어서 매우 특징적인 사례를 제공해주는 경우로 평가되고 있다. 그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의 두드러진 개발전략과 성장 정책을 채택하여 다방면에서의 경이로운 성과를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은 대외지향적인 공업화전략의 선택과 불균형적인 성장정책의 시행을 통해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은 물론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한국이 이와 같은 개발 및 성장 전략을 선택했던 것은 당시의 한국이 처하고 있는 경제 · 사회적 상황 하에서 불가피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초수요의 충족과 민생의 안정에 중점을 두어 추진된 전후 경제 복구 및 재건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개발과 생산을 위한 투자는 새로운 전략과 정책을 요구했다. 특히 수원국의 개발역량을 중시하면서 무상원조를 축소하고 유상원조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의 변화 또한 새로운 개발전략의 선택을 필요로 하게 하였다.

과거의 균형적인 성장전략으로부터 불균형성장 전략으로의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개발 개념의 도입을 시도하기 시작한 것은 1960

---

[1] Erik S. Reinert, *The Role of Technology in the Creation of Rich and Poor Nations: Underemployment in a Sumpetrian System, Rich Nations - Poor Nations* edited by Derek H. Aldcroft and Ross E. Catterall, Edward Elgar Publishing Ltd., 1996

년의 4월 혁명으로 들어선 민주당 정부의 경제고문이었던 미국 랜드연구소의 찰스 울프(Charles Wolf)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1] 한국의 처한 여건상 불균형 성장전략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울프의 견해는 민주당 정부가 1961. 5.에 성안한 1961~1965간의 5개년개발계획안과 그 이후 군사혁명정부에 의해 수립된 1차 경제개발계획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배경이 뚜렷하게 나타나있지는 않지만 1960년대 초에 수립된 새로운 군사혁명정부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대외지향적인 개발 및 불균형적인 성장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등의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다. 일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한국의 새로운 개발 및 성장전략의 선택과 시행의 경험사례는 이와 같은 전략을 선택했던 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 변화의 과정이 너무도 역동적이었다는 견지에서 다양한 방식의 개발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많은 발도상국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Inward-looking versus Outward-looking의 문제

협소한 내수시장, 빈약한 부존자원, 만성적인 인플레와 실업, 저급한 기술수준과 자본부족 등 최악의 경제 · 사회적 상황에서 한국이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을 선택한 것은 오랜 전통의 폐쇄적 대내지향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개발연대 이전의 한국사회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에 들어 감소추세로 반전되기 시작한 대외원조와 무상지원이 급속하게 감소하기 시작한 원조내용의 변화는

---

[1] 1961년 민주당정부가 입안한 5개년계획의 이론적인 고문역으로 1개월 동안 한국에서 활동한 Charles Wolf는 한국의 여건상 싱어(Singer)나 허쉬맨(Hirshman)이 개진한 불균형 성장의 주장 속에 한국에 타당한 이론이 내포되어 있으며 가용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투자에 비해 산출량이 체증하는 분야와 외부경제효과가 높은 분야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 요청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Economic Planning in Korea*, Asian Survey, 1962. 12.)

자체적인 외환의 확보를 위한 수출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급속히 증가되는 취업인구의 흡수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1차 산업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긴박한 현실이었다.

한편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 등을 무기로 비교우위에 입각한 대외지향적 공업화전략을 선택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한 것은 일면 당연한 선택의 결과였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확신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정치지도자에 의한 고도의 전략적 결단의 산물이 아닐 수 없었다. 물론 이와 같은 결단의 배후에는 이를 일사분란하게 뒷받침했던 전문가 집단, 즉 테크노크랫츠의 역할이 컸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하겠다.

한국 정부의 대외지향적인 공업화전략의 선택은 당시 IMF 및 GATT체제가 정착되면서 자유무역에 대한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조보다는 무역을 통한 개발'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무역과 개발을 병진시키는 국제적 개발협력의 흐름에도 잘 부합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한국의 대외지향적인 개발전략은 공적개발협력을 포함하는 대외원조는 물론 상업차관과 직접투자 등을 통한 외자와 기술도입을 적극화하고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의 개발을 촉진하는 등 종래의 대내지향적 가치관과 태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Even versus Un-even Growth의 문제

극히 대내지향적인 경향의 농경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던 당시 한국의 경제적 상황에서 대외지향적인 공업화중심의 개발전략을 선택한 것은 전통적으로 중시되던 농업 중심의 사회로부터의 중심의 이동을 의미했다. 또한 그것은 공업이라는 전략적 투자부문에 대한 재원의 배분을 중시하는 불균형적 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도 앵글로색슨 전통의 자유주의적 균형 성장전략이기보다는 독일과 같은 대륙국가 전통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선택을 의미했던 것이다.

시장의 자유주의적 메카니즘의 작동과 정부의 일반적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 전략의 한계는 이미 1950년대 후반의 대내지향적 경제안정화중심의 정책으로부터 확인되었으며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적 수단의 하나가 정부의 강력한 개입에 의한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전략은 정부의 개입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의 설정과 재원의 배분 등에 따르는 문제점 등의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했지만 극히 불안정한 경제사회 여건과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기술 · 자본 · 외환의 부족, 크게 위축되어있는 기업가정신 등을 감안 시 택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 수 없었다.

정부의 개입을 통한 불균형 성장전략의 추진은 1960년대 초 이후 정부주도의 장기 경제개발계획 수립·시행으로 그 골격이 만들어졌으며 이 계획에 입각한 사회간접기반시설의 확충과 노동집약적 수출산업 중심의 공업화 촉진 등 특정 전략적 산업부문에 대한 집중 지원 및 육성으로 구체화되게 되었다. 개발연대 초기 정부 주도의 전략부문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공적개발원조 및 협력 자금으로 충당되었으며 계획된 투자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특정부문의 산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과 지원은 해당 전략적 육성 부문에 대한 투자 재원의 우선적인 배분은 물론 독점적 지위의 제공 등 각종의 특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방식으로 전폭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수원사업에 대한 사례조사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었다.

< 전략적 산업부문에 대한 특례적인 지원 사례 >

(1) 제철산업 육성

·철강공업육성법을 제정하여 포항종합제철공업단지 건설에 필요로 하는 댐, 항만, 용수시설, 도로 및 철로 등에 대한 간접지원의 제공 및 수입 시설재 등에 대한 관세, 국세의 감면, 공적자금에 의한 자본금 납입 등

(2) 과학기술 연구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을 제정(1966. 12. 27.)하여 연구소육성에 관한 특례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세법을 개정(1967. 8. 13.)하여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원조자금에 의해 도입되는 연구소 건설용 장비와 기재 및 시설용품에 대한 관세 면세조치를 실시

·과학기술진흥법을 제정(1967. 1. 16.)하고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1967. 11. 29.)하여 연구소의 법인세,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 물품세 및 관세 등의 조세지원 실시

불균형 성장 전략을 통한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집중 투자 및 지원은 해당 산업 부문의 고속성장과 함께 여타의 모든 산업 부문에 파급효과를 미침으로써 경제전반의 성장과 함께 산업구조를 공업중심으로 고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다. 반면에 이는 필연적으로 투자와 지원이 소홀했던 여타 부문의 상대적 낙후와 일부 특정부문에 대한 과잉투자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대외지향적인 공업화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선택 및 강력한 추진은 불과 한 세대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동안에 한국을 하나의 산업국가로 탈바꿈시켰으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가능케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불균형 성장정책의 추진결과 급속한 불균형 성장으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대외지향적인 개발전략과 불균형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협력은 둘도 없는 지원자가 되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발연대 전기에 이르는 기간까지의 기간 동안 다양하게 이루어진 개발원조와 협력사업은 한국이 선택한 전략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의 한 부분을 담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개발원조와 협력은 개발연대 후반에 들어 지역 및 산업부문간 불균형의 시정과 과잉투자의 조정 등을 위한 목적의 지역개발, 다부문, 구조조정 등의 분야로 그 역할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견지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시의 경제사회적 상황 하에서 정치적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대외지향적인 공업화전략을 선택하고 또한 여러 시각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강도 높은 불균형 성장전략을 선택했던 한국의 사례는 한국과 유사한 여건에 있는 많은 개도국들에게 매우 귀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하겠다.

2.2. 후발자의 이점과 불리점

일반적으로 뒤늦게 산업화를 추구하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른바 후발자(late-comer)가 향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으로 인하여 개발의 속도를 빠르게 가속화 할 수 있으며 시행착오와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믿어지고 있다.[1]

여기에서 후발자가 누릴 수 있는 이점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언급되고 있다. 나중 또는 지금의 시점에서 경제개발을 추진하게 되는 후발개도국들의 경우 과거 선진국이 앞서서 밟은 산업발전의 모든 단계를 되풀이해서 답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생략된 단계만큼 산업화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의 기술진보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간혹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기술변화가 일어나면 새로운 첨단 산업이 짧은 시간 내에 등장하게 됨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은 이를 재빨리 응용하여 그들의 것으로 유리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금의 시기는 선진국들이 산업화를 추진하던 시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이 축적되어 있으며 국제적인 개발협력을 통해 선진국들의 자본과 기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 그 이론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미 제도화된 과학기술과 실증된 개발경험 등을 도입 · 활용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소화 · 개량 · 발전시켜 나간

---

[1] Derek H. Aldcroft, *Rich Nations - Poor Nations: The Penalty of Lateness*, op. cit., p. 1

다면 후발자의 성장과 발전의 속도는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후발자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설은 서구보다 후발자로 산업화를 추진했던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에서 이미 입증되었으며 특히 현대의 전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지역의 이른바 신흥공업국(NICs)의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욕적인 산업화와 국가 개발을 도모했던 많은 신생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후발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개발의 정체와 낙후의 지속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많은 국가들이 국가의 독립과 자주·자결의 권리를 획득한 이후에도 지나치게 의욕적이고도 환상적인 목표의 설정, 성급한 과신 등에 의한 정책의 실패, 국가 권력의 부패와 정부의 무능, 내부의 분열과 갈등 등 정치·사회적 불안정, 경제 체제의 그릇된 선택 등으로 인하여 후발자의 이점을 활용하기는커녕 오히려 후발자가 범하기 쉬운 문제점들에 빠져드는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많았다.[1]

돌이켜보면 후발자의 이점을 적절하게 활용한 사례보다는 저개발과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후발자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며, '후발자의 불리점(late-comer's penalty)'을 극복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전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러한 후발자의 이점을 잘 활용한 나라들과 그렇지 못한 나라들 간의 개발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개발도상국가들 간의 분화현상은 더욱 뚜렷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빈곤개도국들의 저개발과 빈곤의 심화는 국제개발협력의 더욱 큰 난제로 부각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 들어서는 정보통신 등 후기 산업사회의 발전이

---

[1] Derek H. Aldcroft, op. cit., p. 6

가속화되면서 이른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라고 불리는 정보통신 발전의 격차가 이들 후발자들의 개발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지식자산의 축적과 정보화 기술의 확산을 통해 개발에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신장되고 있음에도 보다 근본적인 지식 · 정보화 기반의 낙후와 투자의 부족 등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지식 · 정보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지 않을 까하는 염려가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개발에 있어서 단시간 내에 개발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성급한 시도에 앞서 경제발전과 사회적 진보의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인적 능력의 배양 등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과 지속적인 투자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게 되었다. 후발자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앞서 후발자가 극복해야하는 불리점의 해소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점도 새롭게 인식하게 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이 그간 후발자의 불리점을 극복해나가면서 국제개발협력 등을 통해 그 이점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룩한 성장과 개발의 두드러진 성과는 후발개도국들에게 매우 유용한 경험과 교훈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2.3. 외자와 외채, 대외 경제 의존과 종속의 문제

과거 양대 국제개발협력 이론의 한 축에는 '마르크스주의자 전통(Marxist Tradition)'으로부터 연원되는 저개발 종속이론이 자리하고 있다. 제국주의국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들의 상태는 제국주의국가들에 대한 종속(從屬)이 더욱 심화되면서 저개발(under-development)과 '빈곤의 악순환(vicious circle of poverty)'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종속이론주의자들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개발이라는 형태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의 자본은 이른바 매판자본(買辦資本)과 결탁하여 토착 기업과 산업을 도산시키고 경제의 대외 의존적인 구조

를 고질화시키게 된다는 것도 그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1970년대 후반이후에 들어서면서 그간의 초고도 압축성장과 특정 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둔 불균형 성장발전전략에 의한 부작용이 노정되면서 한때 이와 같은 대외의존과 종속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농산물과 1차 산품 등 원자재의 수입은 물론 공산품의 수출에 있어서 해외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구조가 지나치게 대외의존적인 모습으로 취약해지고, 그간 활발하게 도입한 개발차관 등 외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국가의 대외채무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외자의 도입을 통한 경제개발의 성과와 투자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적지 않은 우려와 회의의 목소리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개발연대의 기간동안 무상 또는 장기 저리로 도입되는 개발 자금은 환차손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규모가 왜소한데다가 금융의 공급부족에 따르는 고금리의 부담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의 자본조달이 매우 어려웠던 관계로 그 도입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공공부분은 물론 민간부분에 있어서도 공공개발차관 및 상업차관 등 해외 자본은 그 수요가 항상 초과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욕적인 개발 투자는 대규모 해외자금의 무부별한 도입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키고 해외 자금이 과다 도입된 일부 부문에 있어서는 중복 · 과잉투자의 문제를 불러오는 등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은 개발연대의 후기에 접어들어 이른바 '외채망국론'으로까지 비화되게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해외로부터의 자본 도입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정치적 공방의 와중에서 정부측에서는 공공 개발차관 등을 포함하는 외자의 효용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외자도입정책을 점검하는 조치와 함께 '외채백서'를 작성 · 발간하는 등의 대응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외채의 문제는 특히 1980년대 초 한국이 정치사회적인 혼란과 경제적 침체를 겪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커다란 논란거리의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 이후 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외채가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레 수그러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채의 문제는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다시 큰 문제점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대외 지불능력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단기성 대외차입의 증가와 이에 따른 상환부담의 증가 등이 우리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강요하게 한 아시아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것이다.

다행히도 1997년에 말에 빗어진 한국의 외환 유동성의 위기는 국제사회의 긴급지원과 경제긴축 및 구조조정 시책의 추진 등에 힘입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었지만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 및 과다한 대외 채무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나치게 외자에 의존하는 공공 및 민간부분의 투자는 경제의 기반과 구조가 취약해지고 도입 자금의 운용과 관리의 부실이 수반되는 경우 상환 유동성의 부족 등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고 하겠다.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때 25%까지 치솟았던 한국의 대외 채무상환부담율(DSR: Debt Service Ratio)은 총 대외채무규모가 감소하기시작하면서 이제 15% 수준이하로 떨어졌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외채권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6월부터는 대외채권 규모가 대외채무의 규모를 능가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순채권국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경우 공적개발원조와 협력은 물론 민간부문의 각종 외자의 도입을 통해 매우 의욕적인 경제개발과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때 과도한 외채 증가로 인한 경제 불안, 대외 의존 또는 종속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를 잘 극복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굴곡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그간 대외로부터의 자본 및 기술지원을 통해 산업화 등의 경제발전의 성과를 이룩한 한국의 사례는 외자의 유효적절한 활용을 통해 산출의 증가는 물론 총체적인 투입요소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실증적인 사례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대외채무 부담에 대한 우려와 외환의 위기를 극복하고 매번 경제의 발전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 올린 한국의 사례는 이미 그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마르크스 전통의 종속 저개발이론의 허구를 입증하는 좋은 사례의 하나를 제공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의 대외채무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79	1981	1985	1991	1999	2002
1. 장기(1년이상)	14,831	22,206	36,030	21,898	110,487	91,936
2. 단기(1년미만)	5,456	10,227	10,732	17,237	42,458	53,235
대외채무(A)[1]	20,287	32,433	46,762	39,135	152,945	144,602
DSR(%)[2]	13.3	13.9	18.7	4.6	25.2	11.6
대외채권(B)	6,294	7,963	11,222	27,186	146,104	184,025
대외순채권(B-A)	-13,993	-24,470	-35,540	-11,949	-6,841	39,423

주 [1] 1991년까지의 수치는 1994. 4/4부터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통계기준 이전의 수치로써 시계열상의 정확한 수치비교에는 무리가 있음.

[2] Debt Service Ratio, 각 연도의 외채원리금상환액, 즉 장기외채원금 상환액과 투자소득이자지급액을 합한 수치를 경상외환수입액, 즉 상품수출액, 서비스수지수입액, 소득수지수입액을 합친 금액으로 나눈 것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자료: 1979년 및 1981년 수치(경제기획원 1984년도 경제백서), 1985년 및 1991년 수치(재무부외 한국외자도입30년사), 1999년 및 2002년 수치 (한국은행 경제통계)

해외자본 도입과 대외 채무의 관리에 있어서 한국은 그간 오랜 기간에 걸쳐 커다란 규모의 국제개발 원조 및 협력자금을 도입하였

음에도 단 한 건의 대외 채무 불이행이나 채무조정을 실시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1968. 7. IDA로부터 도입한 350만 달러 규모의 도로개발 차관의 상환에 있어서 이 자금의 상환을 1971. 9. IBRD로부터 도입한 도로사업차관자금으로 대환하여 상환한 단 한번의 사례[1]가 있을 뿐이다.

1997년에 야기된 금융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일시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긴급 구조조정을 위한 구제금융자금을 여러 국제기구로부터 도입한 바가 있었으나 이를 대부분 상환하였다.[2]

---

1 대한민국과 세계부흥개발은행간의 도로개발사업 차관협정(차관번호 769KO, 1971. 9. 29). 동 차관협정 부속서 1의 차관자금인출계획 상에는 320만 달러의 IDA융자금 상환은 물론 기존의 IDA사업완결을 위한 자금 30만 달러 등 모두 5,450만 달러의 자금인출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2 1997년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한 막대한 자금을 IMF, IBRD, ADB 등으로부터 도입하였으나 이를 대부분 상환하였음. IBRD와 ADB로부터 도입한 구조조정자금은 연차적인 상환계획에 의해 상환 중에 있으나 IMF로부터 도입한 긴급금융자금 195억 달러는 2001. 8.까지 모두 상환하였음.

2.4.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기능 분담

초고속의 산업화와 압축성장(forced growth)으로 표현되는 한국의 개발과 발전은 개발연대 초기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역할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그 방향 또한 대외지향적인 시각과 국제개발협력의 적극적인 활용이라는 틀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가능케 하고 있다. 이른바 지식기반(knowledge-based)의 정보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의 경제는 이제 성숙된(full-fledged) 시장경제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단계적인 발전과정에서 겪었던 정부의 역할과 실패, 시장의 기능과 실패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민간부문의 역할과 기능이 실패하는 분야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고전주의경제학적 시각에서 볼 때 이른바 개발연대의 시기에 있어서 한국정부가 행사한 역할과 기능은 아마도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방식에 그 토대를 두되 그 방식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운용의 것을 따랐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회주의 방식의 계획경제를 운용한 많은 나라들은 물론 강력한 정부 주도에 의한 경제운용방식을 도입한 혼합경제체제의 여러 다른 나라들의 경우 경제개발과 성장에 있어서 별다른 성과를 이루어낸 사례를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강력한 정부의 개입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음은 물론 개발에 있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기에 손색이 없어 보인다.

한국은 개발연대 초기 매우 강력한 정부의 개입을 통해 투자재원의 배분과 가격의 결정 등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지만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그 수준이 점차 향상되면서 그 개입의 정도와 방법을 전환시켜나갔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간부

문에 대한 정부 개입의 강도는 줄여나가면서 점차 시장의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역할을 줄여나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이 단계적인 발전을 거쳐 나오면서 수행했던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기능의 분담은 물론 정부와 민간부문 상호간의 역학적인 관계의 발전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뚜렷하게 특징 지워지는 것은 개발초기의 단계에서 개발원조자금의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한국 정부는 국내 자본과 기술 등의 절대적 부족현상을 절감하고 그 부족 부분을 개발원조 등을 통해 충족시키고자하는 노력을 매우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이다.

그나마 국가라는 주체만이 국제사회에서 최소한의 신용을 획득할 수 있었던 개발연대 초기의 시기에 있어서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는 외원 자금의 확보에 발 벗고 나섰던 것이다. 원조 공여자들이 원조라는 수단을 그들의 영향력과 전략적 이해의 지렛대로 이용하기 이전에 오우너십에 입각한 주인정신을 발휘하여 수원자주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으로써 그와 같은 지렛대가 끼어들 만한 틈새를 내어주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정부는 원조자금의 활용과 관련한 사업 우선 순위의 설정 및 회계의 관리가 올바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운용체제와 예산운용시스템을 구축해나갔던 것이다. 정부는 원조자금의 도입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를 내자동원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이 자금을 배분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경제 발전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간 관계가 변화·발전되어 나온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있어서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상 모든 과정과 부문에 있어서 정부가 전면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역할 한계와 기능의 분담 자체가 모호했

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로부터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적 분화 및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양자의 역할과 기능은 보다 분명해지기 시작했으며 상호간의 새로운 관계의 모색이 불가피해지고 이러한 맥락에서의 역할조정과 관계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한 인식은 최근에 이르러서는 더욱 동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종래 정부의 역할과 기능으로 당연시되었던 분야가 민간에 의해서도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인식과 그 사례가 증가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기능해야 하는 보다 뚜렷한 역할과 분야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지고 있다.[1]

이를테면 의료, 통신, 교육과 같은 전통적으로 공공적 성격의 기능이라고 간주되어오던 분야의 일부 기능이 민간에 의해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등의 인식 전환이 있는 반면, 정부의 기능으로 당연시되었지만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정치·사회적 안정, 건전 통치와 법치, 환경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정부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한다는 등의 시각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기능의 분담, 상호 보완 문제가 보다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는 개발초기단계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와 발전해 나가야한다는 관점에서 정부 최적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5. 연성 기술협력과 경성 자본협력의 우선순위와 조화의 문제

우리의 수원사업, 특히 무상기술협력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연성사업요소의 비중이 매우 중시되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살펴본 바가 있다. 연성의 사업요소가 중시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업의 인적, 기술적 측면이 중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

[1] Joseph E. Stiglitz and Lyn Squire, *International Development: Is It Possible?*, Foreign Policy, Spring, 1998

수 있다. 연성 기술협력과 경성 자본협력의 우선순위와 조화의 문제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헌데 한국의 개발원조 및 협력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첫째는 개발원조에 대한 시대적 변천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원조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모습의 하나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무상원조 형태의 연성 기술협력으로부터 유상 형태의 경성 자본협력으로의 개발원조의 그 형태적인 중심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개발 초기단계에서 공공부문의 개발원조를 통해 이루어졌던 기술이전 등의 연성 협력 수요가 민간협력채널을 통한 국제적 자금흐름을 통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은 연성 기술협력으로부터 경성의 자본적 협력으로 큰 흐름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여전하게 중시되었던 것은 연성의 인적·기술적 요소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개발협력사업의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인적·기술적 · 제도적 연성 요소라는 점이 부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공여자측이 개발원조 및 협력을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연성 요소에 큰 중점을 부여하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이는 UNDP의 오랜 사업이력으로부터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UNDP의 사업추진은 경제의 발전단계마다 그 대상 분야와 내용, 추진 방식 등이 다를 뿐 한결같이 연성의 협력요소가 중시되는 기술협력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일정한 수준의 경제·사회 인프라가 구축된 상황에서의 도약을 위해서는 경성의 자본적 요소이상으로 연성의 인적·기술적 요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6. 국제개발협력과 빈곤의 해소

빈곤의 문제는 21세기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반세기에 걸친 개발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구의 약 5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절대빈곤의 상태에 있다는 점[1]하나만 보더라도 빈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간 빈곤을 완화하고 이를 해소시켜나가기 위한 노력은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매우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받았다. 1970년대에 들어 사회 민주주의(Social Democracy)적인 개발전통아래에서 중시되기 시작한 이른바 '기본수요 전략(Basic Needs Strategy)'이 국제사회에서 채택된 이후 빈곤 퇴치를 위한 당사자의 노력은 물론 국제적 협력이 꾸준하게 전개되어 왔다. 특히 근년의 세계화라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흐름은 국제개발과 빈곤의 문제를 보다 시급한 지구적 과제로 부각시키게 되었으며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또한 강화되고 있다.[2]

지난 반세기간의 한국의 개발과 국제개발협력은 빈곤과 개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전후 십수년이 흐른 과거 수세기 동안 한국에 만연해있던 빈곤이 한국이 불과 한 세대 남짓한 기간동안에 성공적으로 퇴치되었다는 사실이 우선은 주목할만하다 할 것이다. 당초 부존자원이나 조건 등의 면에서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볼 때 결코 유리한 점을 발견하기가

---

1 1일 1달러 미만의 소득 수준을 절대빈곤(absolute poverty)의 국제적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개발도상국 인구의 숫자는 약 12억 명에 달하고 있으며, 1일 생활비가 2달러를 넘지 못하는 빈곤 인구 가 28억 명으로 세계 전체 인구의 약 절반에 이르고 있음.

2 1995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사회개발정상회담(Social Summit)에서는 빈곤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제개발과제의 하나로 확인되었으며 UN은 1966년을 '세계빈곤근절의 해'로 정하고 '제1차 유엔빈곤근절10년(1997~2006)'을 선포함. OECD/DAC는 1966년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21세기 전략'을 공표하면서 2015년까지 개발도상국의 절대빈곤 인구를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목표를 설정함.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대외지향적인 공업화전략을 통한 성장과 발전에 힘입어 전체적인 경제의 규모화는 물론 빈곤의 해소가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60년대 초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한 불균형 성장전략의 선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십 수년 간의 정책과 원조는 당시의 시대적 필요성 등에 따라 사회적 기초 수요의 충족과 안정에 중점을 들 수 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이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1950년대의 균형적인 성장 · 발전 전략은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 사회가 빈곤을 탈피하고 저개발과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이른바 고도의 압축성장이라는 모습으로 그 결과를 드러낸 한국의 산업화중심의 불균형성장전략은 결국 광범위한 저개발의 상태와 만연된 빈곤 문제의 해결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오랜 논란을 대상이 되고 있는 개발에 있어서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 설정문제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시사점과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적 개발전통으로 회귀하면서 중시되었던 기본수요 및 분배 중시의 개발전략을 추구하기보다는 ‘60대 이후 꾸준하게 추진해온 성장 우선의 전략을 견지해나감으로써 장기적인 발전의 토대를 구축함과 동시에 빈곤의 해소라는 보다 원초적인 개발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그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사례는 특정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잘 결정되고 또 원만하게 추진되는 경우 이것이 경제 · 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오는 성장의 촉발을 가져오게 되고 그 성장의 과실이 분배의 개선으로 이어져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의한 발전의 실현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은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분배에 앞선 성장이 성장에 앞선 분배에 비해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빈곤이라는 후발자의 불리 점을 극복해주는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종래의 빈곤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결핍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 빈곤에 대한 개념은 물질적, 생리적인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육과 사회적 참여는 물론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무력함의 해소 등과 같은 인적개발(human Development) 개념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1] 이와 같은 개념은 더 나가서 인적안보(human Security)라는 보다 폭넓은 관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적안보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다행히도 한국은 이와 같은 새로이 확장된 개념의 빈곤에 있어서도 국제개발협력 등에 힘입은 개발의 성과와 함께 괄목할만한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소득과 소비라는 경제적 지표면에서는 물론 확장된 개념의 빈곤 문제와 견주어 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국제 개발과 발전 지표에 있어서도 두드러지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이러한 복합적인 결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시사점 중의 하나는 빈곤의 해소에 있어서 사회복지적 분배정책과 교육 기회의 확대라는 정책 수단의 유용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이 이룩한 고도 성장의 과실이 소득수준의 향상과 빈곤의 해소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현재화되는 과정에서 소득재분배라는 소득 관점과 교육을 통한 인적개발이라는 능력 관점에서 각기 선택한 정책의 내용과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1 UNDP는 빈곤의 개념을 소득관점(income perspective), 가본욕구관점(basic needs perspective), 능력관점(capacity perspective)의 세 관점에서 정리하면서 '소득의 결핍 차원을 넘어 통상적인(tolerable)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회와 선택으로부터의 단절'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2 UNDP는 개발 및 빈곤과 관련한 국제적 지표의 하나로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와 인간빈곤지수(HPI: Human Poverty Index) 등의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음. UNDP가 매년 발간하는 인간개발보고서에 나타난 한국의 인간개발지수와 인간빈곤지수는 매우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만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효과적인 소득 재분배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개발과 진흥에 한국이 보다 높은 정책의 우선 순위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예는 지속발전을 가능케 하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에 있어서 분배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 있는 교훈을 제공해주고 있다.

한국의 개발을 통한 빈곤퇴치와 관련하여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사점의 하나는 그간 한국이 지속적인 고도의 경제 성장을 통하여 절대빈곤의 해소라는 극히 어려운 개발과제를 성취해냈지만 보다 해결하기 어려운 상대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남겨져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사회에서의 상대적 빈곤의 문제는 이른바 20대 80의 사회라고 지칭되는 부와 소득의 편재 현상을 통해서 잘 대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에서 이러한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상대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일이 과거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관련한 정책과 과제의 추진에 있어서는 보다 넓은 안목에서 절대빈곤의 해소는 물론 상대적 빈곤의 문제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하다할 것이다.

2.7. 원조와 무역의 상보성과 상대적 효과의 문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원조와 무역은 각각이 모두 매우 핵심적인 개발 요소의 하나로 각각 커다란 역할을 해왔으며 상호 대체적(substitutive)이기보다는 서로가 상호 보완적(complementary)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그간의 국제개발의 과정과 성과 등을 돌이켜볼 때 원조와 무역이 기여한 각각의 역할과 성과, 상호간의 연관성 및 상보성 등은 물론 원조와 무역의 상대적 효과의 면에서도 한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한국의 개발과 발전과정에서 원조와 무역이 이바지한 사항과 그 역할의 변화와 상호간의 관계 등을 국제개발협력 환경의 변화와 함께 살펴보면 많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1960년대 초 '북으로부터 남으로의 원조' 패턴이 성립되기 시작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개발원조는 나름대로의 꾸준한 규모의 확대와 방법론의 개발이 부단하게 이루어졌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여자, 수원자 공히 이른바 '원조피로 현상'과 '원조에 대한 환멸'이라는 불만족과 실망의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 반면에 전후 자유무역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이 수립되고 세계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원조보다는 무역'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무역과 개발을 통한 국제개발을 촉진하고자하는 노력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노력은 무역의 자유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쉬지 않고 이어져왔다.

1964년 아르헨티나의 라울 프레비쉬(Raoul Prebish)는 'Toward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라는 UN 보고서를 통해 무역을 통한 개발의 촉진이라는 새로운 개발이념의 틀을 발전시켰다. 또한 그 해에 개최된 제1차 유엔무역개발총회(UNCTAD: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를 시작으로 이에 대한 꾸준한 논의와 협력이 진행되었으며 그로부터 4년 뒤인 1968년에 개최된 제2차 UNCTAD총회에서는 개발도상국에게 무역거래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무역의 일반제도에 대한 결의(Resolution on a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가 이루어지고 EEC 원가맹국[1], 일본, 미국 등이 이 결의에 입각한 무역특혜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세계은행도 국제개발위원회(The Commission on International Development)에 보고 된 피어슨(Pearson)의 보고서 'Partners in Development'를 통해 국제개발을 위한 제1 요건으로 '활발한 세계무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무역과

---

[1] 프랑스, 서독, 이태리, 벨지움,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국.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는 EC(European Community)에 설립된 국가연합으로 1957년에 체결된 로마조약(The Treaties of Rome)에 의해 1958년 설립되었으며 유럽 공동시장(The Common Market)으로 불려지기도 함.

개발의 문제는 그 이후 Uruguay Round 및 Doha무역개발회의 등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무역시장의 개방과 자유화의 문제 및 무역을 통한 개발의 과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했다.

국제개발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는 소위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보다 근본적인 세계경제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 개발원조보다는 무역과 투자를 통한 개발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 이러한 국제사회의 큰 흐름은 개발원조를 통해 특정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이에 의한 불균형적인 성장을 조장하기보다는 무역과 투자라는 시장주의적 일반 지원을 통해 균형적인 성장과 개발을 도모를 더욱 중시한다는 맥락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개발 초기에 다양한 형태의 개발원조를 접수하여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한편 무역을 통한 개발을 도모하는 새로운 흐름과 세계 무역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이들을 유효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감으로써 어는 한가지만으로는 거두어들일 수 없는 성과를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즉, 개발원조를 활용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대외지향적인 공업화 전략을 능동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발원조에 의한 투자와 협력을 무역 확대로 연결시키고 이를 경제의 성장과 고용의 창출, 외환의 확보 수단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투자와 재투자의 확대 등 '선 순환(virtuous circle)'의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개발연대 초기 한국의 산업화 수준이나 성장과 고용, 무역 거래, 외환사정 등 경제의 전반적인 모습은 극히 열악한 상태에 있었으며 사실상 원조에 의한 재원조달과 기술도입에 힘입어 투자와 무역을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산업화의 추진이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개발연대 초기 급속한 경제의 성장과 산업의

---

[1] Michael Hirsh, *Give More U.S. Aid... No - Trade, Not Aid*, Newsweek, Oct. 8, 2001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대외원조에 의존하는 비중은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주로 유상 자금협력을 통해 다양한 투자를 확대하게 되었다. 1960년대 초의 무역규모가 불과 수천만 달러의 규모에 불과하던 수준으로부터 2천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한국은 원조보다는 무역을 통해 두 개의 개발격차, 즉 저축과 투자간의 '저축 갭(saving gap)'과 수출과 수입간의 '무역 갭(trade gap)'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개발연대 초기의 경제와 대외원조 >

(단위: 백 만원)

구 분	1961[3]	1966	1971
정부예산규모(A)[1]	61,423	141,629	555,345
대외원조자금에 의한 정부예산 충당(B)[2]	29,747	33,083	13,238
비 중(B/A,%)	48.4	23.4	2.4

주 [1] 최종예산 일반재정세입 기준
[2] 대충자금 수입규모
[3] 1962년 화폐개혁(100환→10원) 감안
자료: 한국재정40년사 제1권, 제2권, 한국개발연구원, 1990. 6.

특히 경제개발 초기 단계까지의 한국의 상황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개발연대에 진입하는 시기에 이르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한국은 총 수입 수요와 총 투자의 절반 이상의 재원을 대외로부터의 원조재원에 의존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인 1962년부터 196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국제수지 경상지불에 대한 원조의존 비중이 41.8%로 매우 높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1]

---

[1] 한기춘, *미국원조와 한국의 국제수지분석*, 아세아연구 10권 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p. 211

이와 같은 개발초기의 모습은 개발연대 이후 자유무역과 개발을 중시하는 적극적인 대외지향전략의 추진을 통해서 얻어낸 한국의 개발 성과와 비교해볼 때 시사해주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 총 수입 및 자본형성에 대한 원조의 비중 >

(단위: 백만 달러, 10억 원)

구 분	1953~1961	1962~1966	1967~1969
총수입(A)	3,100.0	2,566.3	4,288.0
원조자금수입(B)	2,282.5	935.9	384.4
원조의존비중(B/A,%)	73.6	36.5	9.0
총투자	190.0(100%)	578.0(100%)	1,293.7(100%)
국내저축	57.5(30.3)	269.8 (46.7)	677.7(52.4)
해외저축	128.4(67.6)	279.6 (48.4)	526.0(40.7)
순차입	-3.6(-1.9)	55.0 (9.5)	340.4(26.3)
순이전[1]	132.1(69.5)	224.6 (38.9)	185.6(14.3)

주 [1] 무상원조에 의한 이전자금(AID, PL480 등)

자료: 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1995. 10.

2.8. 총체적 안보와 개발원조

국제개발 원조와 협력의 기본적인 성격이 정치 · 경제 · 인도적 목적 등 매우 다면적이고도 복합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미국의 대외원조는 군사원조를 포함하여 자국의 대외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의 하나로 안보적 측면에서의 전략적 요소가 가장 큰 원조의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개발연대 전기의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 한국에 대한 원조의 공여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미국의 원조 역시 고도의 안보적인 고려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원조의 내용을 보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 및 기술원조 등 개발원조의 규모보다도 더 많은 원조가 상호 안보적 차원의 군사적 원조로 이루어진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개념의 설정에 있어서 군사적 목적의 원조는 이를 개발원조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례는 전후 복구 및 개발연대 초기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원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된 것이 바로 '총체적인 안보(total security)'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보적 차원의 군사원조가 비록 개발원조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큰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1] 그것은 국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자금(ODA)과 민주자유진영의 수호를 위해 지출되는 방위비를 함께 계산하여 이른바 '총체적 안보부담(total security burden)'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에 미국의 원조는 참으로 특징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즉, 특히 한국전쟁 이후 더욱 증대되기 시작한 공산사회주의 세력의 확장으로부터 한국과 자유진영의 여러 국가들을

---

[1] Richard Nixon, *Beyond Peace*, Random House, 1994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인 고려와 판단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여러 나라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원조가 실시되었다. 그와 같은 특징은 군사원조이외의 목적으로 제공된 일반적인 원조중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 등 방위적 성격의 목적에 활용되었던 점으로부터도 찾아볼 수 있다.

개발연대 초기 미국이 제공한 일반 원조자금에 의해 대충자금(counterpart fund)이 조성되고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일반재정의 부족을 충당하는 방식의 원조가 이루어진 것은 직접적인 군사원조 이외에도 사실상 막대한 규모의 방위비가 일반 원조자금을 통해 지원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수 있다.[1]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정부 재정의 약 절반 정도를 원조자금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특히 이는 재정지출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방위비의 지출에 있어서도 상당비중의 예산이 대충자금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원조자금

< 원조 대충자금 일반재정 지원 및 방위비 현황 >

(단위: 10억 원)

구 분	1958	1959	1960	1961	1966	1971
일반재정규모(A)	28.7	30.8	36.6	61.4	141.6	555.3
대충자금규모(B)	31.9	28.0	26.6	29.7	33.1	13.2
(B/A,%)	(111.1)	(90.9)	(72.7)	(48.4)	(23.4)	(2.4)
방위비규모(a)	12.4	14.2	14.9	16.8	40.5	134.9
대충자금충당(b)	5.3	5.3	5.3	7.9	n.a.	n.a.
(b/a,%)	(42.7)	(37.3)	(35.6)	(47.0)	..	..

자료: 한국재정40년사 제1권, 제2권, 한국개발연구원, 1990. 6.

[1] 이 점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비 분석으로 본 대충자금 및 미국 대한원조의 성격(1954~1960)* (신용옥,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Vol. 3, 1998) 참조.

을 통해서 충당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원조자금에 의한 재정 및 방위비 지원은 1970년대 초까지도 계속되었으며 1971년 이후가 되어서야 이러한 형태의 지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발초기 상당한 기간동안의 한국에 대한 원조는 총체적인 안보 차원의 원조라고 할 수 있었으며 한국의 경제와 재정자립 능력이 서서히 확충되면서 1970년대 초반이후에 이르러서는 이와 같은 이른바 '총체적 안보 부담(총체적안보부담=공적개발원조+방위비 지출)'을 모두를 한국이 책임지게 되고 한국에 대한 원조의 성격도 전통적 개념의 개발원조로 환원되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이 한반도에서의 방위를 위한 스스로의 안보비용을 스스로 모두 부담하게 됨에 따라 1970년대 초반이후 한국이 책임지게 된 총체적 안보부담은 매우 큰 것이었으며 이러한 거시적 개념 하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조망해보는 경우 한국의 기여는 매우 큰 것이었으며 아직도 커다란 기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방위비부담은 GNO의 6%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2000년의 경우 우리나라 ODA부담은 GNP규모의 불과 0.05%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방위비부담으로 인하여 총체적안보부담은 3%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 한국의 총체적 안보부담 현황 >

(단위: 10억 원)

구 분	1970	1980	1990	2000
GNP(A)	2,277	36,750	178,262	521,959
방위비(B)	102	2,308	6,856	15,479
ODA공여(C)	-	-	-	249[1]
총체적안보부담 (B+C/A,%)	4.48	6.28	3.85	3.01

주 [1] OECD/DAC기준 Net ODA(198백만 달러), 연말 기준환율 기준

자료: 한국개발연구원의 각 년도 재정통계자료집, OECD/DAC의 국별 자료(2003), 한국은행 국제수지자료(2003.11.) 등

총체적 안보부담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와 관계가 깊은 역학관계중의 하나는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종래 미국이 거의 총체적으로 부담하던 아시아지역에서의 안보적 역할과 부담을 점차 줄이는 대신 일본이 공적개발원조의 획기적인 증대 등을 총체적인 안보부담을 키우고자하는 정치 · 외교적인 협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이후 한국에 대한 원조 및 개발협력이 미국 중심의 구도로부터 일본 중심의 구조로 변화한 것도 이와 같은 국제정치 · 안보적인 흐름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서냉전의 종식 및 동구 공산권의 몰락과 함께 보다 전향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군비축소와 이른바 '평화배당금(peace dividend)'의 혜택을 국제개발협력에 전환 또는 활용하는 문제 또한 총체적 안보부담의 개념과 관련하여 논의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예를 보더라도 향후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는 경우 현재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방위비를 ODA 등 보다 전향적인 국가안보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의 하나는 한국이 개발과 산업화의 과정에서 내내 변치 않았던 과중한 방위비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여건에 있지 않았던 여러 나라들을 능가하는 개발성과를 이룩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음. 한국의 사례는 경제사회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때로는 '버려진 비용(sunken cost)'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방위비의 부담과 개발과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흥미로운 연구의 소재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제 6 장 결 론

이의 조사연구의 기본 목적은 우리나라에 대한 개발원조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었다. 개발원조의 시대사적 흐름과 일반적인 추세, 총체적인 규모와 주요 형태 및 몇 개의 지원사례 등을 파악하여 정리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우리에게 제공된 개발원조와 협력은 그 범위와 형태, 내용이 매우 넓고 다양했으며 그 영향 또한 매우 컸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었다. 또한 금번 조사연구를 통해서는 체계적인 이론의 뒷받침이나 깊이 있는 계량분석 등에 입각한 보다 구체적이고도 학술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우리에 대한 국제개발원조 및 협력과 관련하여 극히 일반적이나마 포괄적인 일단의 평가를 가능케 했다고 할 수 있다.

전후 반세기여에 걸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원조와 협력은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를 연상시킬 만큼 극적인 것이 아니었나 하는 느낌이 든다. 그것은 발전이라는 희망을 잉태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크게 낙후되어있던 한국의 사회가 많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진보와 발전에 대한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 역동적인 개발의 성과를 일구어냈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국사회 전반에 폭넓게 만연되었던 빈곤을 해소하고 높은 산업생산과 소득 수준에 다다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제적 기회와 선택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있게 되었으며 경제발전에 뒤따르는 정치발전과 사회적인 진보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보다 쉽게 한국의 변화된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대규모의 원조를 제공받던 수원국의 위치에 있던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유망한 원조 공여국의 하나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이와 같은 경이적인 발전과 개발의 성과는 우리들만의 힘에 의해서 이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여러모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그간의 경제개발과 발전의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매우 다양하고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간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무려 140억 달러에 달하는 개발원조를 제공받았다. 또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에 달하는 공공개발차관을 제공받았다. 우리에게 제공된 국제사회로부터의 도움의 손길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에게 제공된 원조의 규모도 규모이지만 이러한 지원이 우리가 경제 ·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시기에 제공되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도 계속된 우리나라에 대한 개발원조 및 협력은 건국 초기 우리의 부족한 기초수요의 충족은 물론 경제 · 사회적 안정기반의 구축,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안보체제를 수립하는데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었다. 또한 개발연대에 있어서는 매우 심각했던 자본과 기술, 수입 수요의 갭을 완화시켜주는 긴요한 수단으로, 무역 · 재정 · 투자 등 경제운용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도구로서 아주 유용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초기 개발단계에 있어서는 경제사회개발 시스템 확충 등 개발역량의 제고와 투입요소의 증대를 통한 성장의 촉진, 초 · 중급 기술의 소화 · 개량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 등의 기반구축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반세기여에 걸쳐 이루어진 한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협력은 '미개발 · 저소득으로부터의 개발과 발전은 가능한 것이며, 국제개발협력이 그 가능성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의 하나를 만들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한국이 빈곤과 저개발의 악순환, 전쟁의 참화 속에서 이를 떨치고 스스로 일어서는데 많은 도움을 필요로 했으며, 이러한 도움의 손길이 국제개발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금번의 조사

연구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할 것은 다른 여러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렇다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국제개발협력이 한국에서만큼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 국제개발협력을 통해서 제공된 자본과 기술이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슷한 내용의 비슷한 규모의 것들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원자의 태도와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틀림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국에 대한 개발원조 및 협력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경성의 요소보다는 연성의 인적 · 기술적 · 제도적 요소의 중요성이 항시 중시되어왔던 것을 확인하기도 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개발과 진보에 대한 인식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마음자세가 아니었을까하는 결론을 끄집어내게 하고 있다. 즉, 하드웨어(hardware)나 소프트웨어(software)도 중요하지만 마음자세, 이른바 마인드웨어(mindware)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될 것이다. 국민들의 개발의지와 욕구, 정치지도자의 미래안적인 리더십과 건전 통치(good governance), 정책결정자의 이니셔티브, 사업수행자의 오우너십과 참여의식 등의 올바른 수원자세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시현함은 물론 이를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동인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그간 우리에게 제공된 국제개발협력의 성과가 모두 긍정적이거나 앞으로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휘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그간이 실시된 개발협력사업들을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망해볼 때 사업실시 이후 거듭되는 주변 경제 환경의 변동과 사회여건의 부단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당초에 설정했던 사업 목표와 기대했던 역할 및 기능을 지속적으로 도모해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영역의

확보와 함께 부단한 기술 · 경영의 혁신을 통한 변신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러한 환경과 여건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속적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당초에 구축했던 사업수행의 기본 목표, 기초 기반과 체제가 기대할만한 수준으로 손색없이 향상(upgrade) 되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후평가가 필요한 사업도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것은 개별적인 원조 및 협력사업에 대한 미시적인 평가측면에서는 물론 경제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평가측면에서도 지적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즉, 과거의 개발단계에서 도입된 자본과 기술이라는 투입요소의 양적 증가를 통해 대부분 이루어진 산출의 증가와 생산성의 향상이 경제수준이 크게 향상된 이 이후의 시점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미래 동아사아 국가들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시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획기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간의 성장과 발전은 자본, 노동, 교육 등 이른바 '투입(inputs)'의 증대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써 이러한 자본투입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향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속 성장 행진에 있어서 요소의 투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소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성장의 기적은 '하나의 경계주의보(a cautionary tale)'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총체적 요소 생산성의 향상 및 21세기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서구와의 '기술격차 해소(technological convergence)'가 부진함에 따라 이제까지의 성장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1]

주요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사례 조사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중의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시각에서의 견해와 맥이 통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그간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개발협력사업 모두 양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요소의 투입 확대에 매우 긴요하였으며 그 효과 또한 즉각적으로, 또한 비교적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국제개발협력을 통해서 실시된 사업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과거에 이루어졌던 요소투입의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그간에 실시된 각종 국제개발협력사업이 급속하게 변화·발전되는 환경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요소 투입의 확대 이상으로 더욱 중요한 요소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기술의 혁신과 시스템의 개선 등 보다 새로운 투자가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롭게 인식해야할 것은 이제 이러한 새로운 투자와 혁신을 개발원조와 협력이라는 도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을 통해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국제개발협력을 통해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개발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우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었던 것은 국제사회의 시대적 흐름, 각각의 다양한 동기와 복잡한 이해관계의 산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국제 평화와 공동번영, 민주와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우방들의 '공유된 미래상(shared vision)'과 선의(goodwill)의 소산이기도 했다. 또한 그것은 어느 특정한 몇 나라만의 주도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같은 이해와 가치, 이상과 비전을 공유한 여러 나라와 국제기관들이 상

---

[1] *Which Asian Model? - The Asian Economic Miracle is Transfixing the West. Might It All be a Myth?*, Newsweek, Nov. 20, 1995

호 연대적인 협력과 호혜의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가능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결정적인 기여와 역할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이례적인 국제개발협력의 성과는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도움과 협력의 손길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이를 받아들이는 수원자의 자세와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개발연대의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개발원조와 협력의 접수에 능동적이었으며 이를 개방적이면서도 주도적 자세로 추진해나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른바 수원자의 '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 정신과 과 주인의식(Ownership)을 꾸준하게 견지해 나왔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세기여의 기간에 걸치는 국제개발협력 과정에서 국제개발은 그 영역이 매우 크게 확대되었으며 그 중요성과 필요성 또한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개발연대 후기에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지기 시작한 환경, 빈곤, 인구와 식량 등 이른바 '범지구적 과제(Global Issues)'의 출현은 국제개발협력의 영역을 보다 다국적인 과제로 크게 확대시키게 되었다.

또한 과거 반세기여에 걸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성찰을 통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적 발전이 성급한 투자나 과시적인 사업의 추진, 의욕적인 성장과 배분과 같은 것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지속발전의 토대가 되는 경제 ·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 창의와 자율이 존중되는 자유시장적 경제 체제, 지속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 · 사회적 안정과 건전 통치(Good Governance),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진보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와 주체의식 등과 같은 것들일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개발 초기과정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유행이 되었던 독립(independence)이라는 화두는 국가와 국가, 사회와 사회 간의 상호관계가 더욱 복잡하고 긴밀해지면서 상호의존(interdependence)라는 새로운 화두를 국제사회에 던져주게 되었다. 더욱이 반세기여의 기간에 걸친 다각적인 국제개발을 위한 노력과 협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남북국가간의 개발 격차와 빈곤의 문제는 물론 지식정보사회로의 급속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남북국가간의 지식정보격차 이른바 Digital Divide의 심화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후 동서냉전과 남북대립이라는 특수한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추구되었던 이념적 안보 우선의 개발협력은 이제 인류모두가 직면하고 빈곤과 질병, 인권과 환경의 문제를 개선하고 지구촌 구성원 모두가 인간적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이른바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추구로 그 방향이 전환되었다.

한국은 이러한 와중에서 다행스럽게도 국제개발협력에 의한 기여와 능동적 개발 노력 등을 통해 단시간 내에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빈곤과 저개발을 극복하여 인간으로써의 품위와 자존을 지킬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와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문화적 다양성을 향유할 수 있는 성숙된 사회 역량을 갖출 수 있게도 되었다.

최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증되면서 이것은 국제평화의 유지와 인류공영의 추구에 필수적인 '지구적 공공재(Global Public Goods)'라는 개념이 거론되고 있다.[1]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정부간 협력과 지원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의 불가결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

[1] *Global Public Goods -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21st Century*, Edited by Inge Kaul & Others, Published by the UNDP,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우리의 받는 협력 이른바 원조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조사사업에 대한 결론을 말하면서 반대로 주는 협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게 된 점은 참으로 역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받는 협력으로부터 탈피하여 주는 협력으로 그 결론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다행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커다란 빚을 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다양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 있는 추진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귀중한 경험과 풍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경우는 앞으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참여와 기여를 아끼지 않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우리가 원조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고도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철저한 주인의식(Ownership)과 유기적인 파트너십, 책임성 있는 이니셔티브로 원조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높였던 것을 교훈으로 앞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를 잘 살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금번의 조사연구를 계기로 우리에 대한 그간의 국제개발 원조와 협력과 관련하여 특정 분야 및 형태 또는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부 록

Ⅰ. 외국 민간원조단체(NGOs)와 기관 일람

1. UN을 통해 성금을 보내온 외국민간기관[1]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merican Junior Red Cross
American Red Cross
American relief for Korea, Inc.
Bancroft-Whitney Co.
Cooperative and Remittance for Europe and the Far East
Committee for Press Asia
Church World Service, Inc.
Friendship Amony Childern and Youth Around the World, Inc.
General Conference of Seventh Day Adventist
Heifer Project Committee
Mrs. J. M. Lee
Lutheran World Relief, Inc.
Manget Foundation
Oriental Missionary Society
Naval Hospital, Bethesda, Md.
Religious Denominations of Fort Devens, Mass.
School Childern of San Francisco
Sharp of Dohme, Inc.
Third U.S. Army
United States Army, Pacific
War Relief Service, National Catholic Welfare Conference

---

[1] 1950.7.1~1952.11.30.까지 UN을 통해 성금을 보내온 외국민간기관으로 그 규모는 수백만 달러로부터 수십 달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함.(Annex 24, United Nations Civil Affairs Activities in Korea, G 5 H.Q., U.S. Army Forces, Far East, 1952. 11.)

2. 한국에서 지원활동을 전개한 외국 민간원조단체[1]

Association Fraternelle Internationale(A.F.I.)
American Korean Foundation(A.K.F.)
Asia Foundation(A.F.)
The Assemblies of God Mission(A.G.M.)
British Red Cross
Cooperative for American Relief Everywhere Inc.(CARE Inc.)
Catholic Relief Services of the United States of Catholic Conference(CRS-USCC)
Christian Childern's Fund(C.C.F.)
Christian Reformed Korean Mission(C.R.K.M.)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the Latter-Day Saints(L.D.S.)
Church of Nazarene Mission
Childern, Incorporated
Columban Fathers
Christian Service, Inc.
Church of Christ Mission]
Catholic Women's Association in Austria
Compassion, Inc.
The Evangelical Alliance Mission
Evangelical Sisterhood of Mary
Foster Parents' Plan(F.P.P.)
Franciscan Fathers, O.F.M.
Franciscan Missionaries Mary(F.M.M.)
German Leprosy Relief Association(G.L.R.A.)

---

[1] 1952. 3.에 조직된 한국외원단체연합회(KAVA: Korean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가 각각 1955, 1962, 1964년에 발간한 *Directory of Foreign Voluntary Agencies*와 1970년에 발간한 *National Social Workers' Training Institute* 및 Korea Social Welfare Research Institute가 1970년에 발간한 *Directory of Social Service Resources in Korea* 등을 토대로 KAVA 40년사 편찬위원회가 정리한 것임. 한때 120여 개에 이르는 외국 민간원조기관이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여기에는 76개의 기관만이 정리되어있음.

German Red Cross
Good Shepherd Sisters
Helpage Korea
Holt Adoption Program(H.A.P.)
Hospitaller Order of St. John of God
Houses for Korea
Institute of Blessed Virgin
International Educational Development, Inc.
Korea Baptist Mission
Korea Christian Mission
Korea Christian Academy(K.C.A.)
Korea Church World Service(K.C.W.S.)
Korea Gospel Mission
Korean Relief, Inc.
Korean Lutheran Mission(K.L.M.)
Korea United Methodist Committee for Overseas Relief(KUNCOR)
Leprosy Mission(L.M.)
Little Company of Mary
Little Sisters of the Poor
Maryknoll Fathers(.M.M)
Maryknoll Sisters
Mennonite Central Committee(M.C.C.)
Methodist World Mission - Korea
Missionary Benedictine Sister(M.B.S.)
Missionary Benedictine Sister, Taegu Priory
Missionary Sisters of Columban
Northern Board Christian Mission
Norwegian korean association(N.K.A.)
OMS International Inc.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M.E.P.)
Pearl S. Buck Foundation
Presbyterian Mission, USA Continued

Save the Childern Feder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Foundation (SCFED)
Seventh Day Adventist Mission(Korean Union)
Sisters of Charity of St. Vincent de Paul
Save the Childern Fund(S.C.F.)
Society of the Sacred Heart(S.S.H.)
Society of Auxiliaries of the Mission(S.A.M.)
Southern Baptist Mission(S.B.M.)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S.P.M.)
Swedish Save the Childern Federation(Radda Barnn)
Sister of St. Paul de Charters(S.P.D.C.)
Salesian Fathers
The Salvation Army
United World Mission
United Church of Canada Board of World Mission(U.C.C.)
Unitarian Service Committee, Inc.
United Presbyterian Mission, U.S.A.(U.P.M.)
Unitarian Service Committee of Canada-USCC
The Voice of China and Asia, Inc.
World Vision of Korea
YMCA
YWCA

Ⅱ. 주요 원조사업관련 협정 등 목록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1963. 12. 7. 제정, 법률 제1480호)

유엔한국재건단간(UNKRA)에 의한 발전시설 및 송배전선 부흥계획에 관한 한국정부와 유엔군사령부간 협정(1953. 5. 13.)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협정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한미공동지원사업계획 협정서(1966. 2. 4.)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1966. 12. 27. 제정, 법률 제1857호)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간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 지원을 위한 증여약정(1971. 8.)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간 포항종합제철공장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기본협약(1969. 12.)

한 · 미간 잉여농산물 도입 협정(1955. 5.)

ADDENDUM containing additional articles to The Agreement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National Medical Center in Korea and its Annex of March 13, 1956(1964. 6. 19.)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1949. 9. 19. 서명, 조약 제1127호)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velopment Loan Fund, an Agency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1959. 4. 8.)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regarding Technical Cooperation(1966. 8. 26. 서명, 조약 제233호)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Korea International Steel Associates(1967. 10. 20.)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in Pusan(1970. 5. 16. 서명, 조역 제334호)

Agreement for a Program of Economic Assistance to Korea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1954. 5. 31. 서명, 조약 제1149호)

Agreement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National Medical Center in Korea(1956. 3. 13.)

Agreement on a Population Programm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1974. 3.)

Agreement on Ai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1948. 12. 10. 서명, 조약 제74호)

Agreement on Economic Coordin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fied Command(1952. 5. 24. 서명, 조약 제1145호)

Agreement on Voluntary Relief Activiti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1955. 4. 22. 및 5. 2. Exchange of Notes, 조약 제1153호, 1971. 5. 19. 개정)

Agreement Relating to the Peace Corp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66. 9. 14. 각서교환)

Basic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FAO World Food Program concerning Assistance from the World Food Program(1968. 5. 3, 조약 제302호)

Combined Economic Board Agreement for a Program of Economic Reconstruction and Financial Stabiliz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1953. 12. 14. 서명, 조약 제1160호)

Loan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the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1968. 11. 7. 서명, 조약 제289호)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Minister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candinavian Board of the National Medical Center in Korea Regarding

Transfer to Korean Authorities of Scandinavian Responsibilities at the National Medical Center(1967. 10.)

Revised Standard Agreement between the UNILO, the FAO, the UNESCO, the ICAO, the WHO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1958. 6. 19.)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f June 25, 1950(S/1501), June 27, 1950(S/1511), and July 7, 1950(S/1588)

Ⅲ. 공공차관사업 일람

1. Grant Element 25%이상 공공차관사업

부 문		사 업 명	도입연도	유형	제공기관	도입기관
대분류	중분류					
사회하부구조	교 육	교육 개발 1차	1969	다자	IDA	교육인적자원부
		과학원시설	1971	양자	미국 AID	한국과학기술원
		공공직업훈련시설	1972	다자	ADB	노동부
		교육개발사업	1972	양자	미국 AID	교육인적자원부
		교육 개발 2차	1973	다자	IDA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시설확충사업	1980	양자	일본 OECF	교육인적자원부
		기초과학분야교육시설확충	1981	양자	일본 OECF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시설확충	1985	양자	일본 OECF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시설확충사업 (II)	1987	양자	일본 OECF	교육인적자원부외
		교육시설확충	1988	양자	일본 OECF	교육인적자원부
		수해운계 교육시설확충사업	1990	양자	일본 OECF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합계				
	보건 인구	5개도립병원건설	1969	양자	덴마크	전라북도외
		시범보건	1975	양자	미국 AID	보건복지부
		병원시설 및 의료시설확충	1978	양자	일본 OECF	보건복지부
		의원시설확충사업	1978	양자	독일 KFW	연세대학교
		인구사업	1979	다자	IBRD	보건복지부
		국공립의료 및 보건 연구기관 장비현대화	1980	양자	일본 OECF	보건복지부

사 업 명	규 모(1,000 USD)		조 건		Grant Element (%)
	인 출 금	협 정 금	이자율(%)	거치-상환기간(년)	
교육 개발 1차	15,004	14,800	0.75	10년 - 40년	80.86
과학원시설	5,916	6,000	3	11년 - 30년	58.32
공공직업훈련시설	3,597	3,700	3	5년 - 14년	41.07
교육개발사업	2,384	2,500	3	11년 - 30년	58.32
교육 개발 2차	20,000	20,000	0.75	10년 - 40년	80.86
교육시설확충사업	45,343	44,103	4	7년 - 18년	40.7
기초과학분야교육시설확충	24,089	27,206	4	4년 - 18년	37.29
교육시설확충	71,712	63,721	5	7년 - 18년	33.64
교육시설확충사업 (II)	94,359	89,263	4.25	7년 - 18년	38.94
교육시설확충	41,698	46,196	4.25	7년 - 18년	38.94
수해운계 교육시설확충사업	16,024	14,918	4	7년 - 19년	40.7
	340,125	332,407			
5개도립병원건설	2,775	2,822	0	7년 - 19년	68.96
시범보건	4,991	5,000	3	11년 - 30년	58.32
병원시설 및 의료시설확충	31,179	33,264	3.5	6년 - 13년	38.35
의원시설확충사업	8,034	8,034	2	10년 - 20년	60.22
인구사업	30,000	30,000	0	5년 - 13년	57.58
국공립의료 및 보건 연구기관 장비현대화	17,533	17,641	4	4년 - 21년	39.54

부 문		사 업 명	도입연도	유형	제공기관	도입기관
대분류	중분류					
사회하부구조	보건 인구	고려대학병원건설	1980	양자	독일 KFW	고려대학교
		의료장비보강	1981	양자	일본 OECF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구병원건설	1982	양자	독일 KFW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병원소아병원건립	1983	양자	일본 OECF	서울대학교병원
		안전성연구센터	1984	양자	일본 OECF	국립보건원
		의료시설확충	1985	양자	일본 OECF	보건복지부
		연세대신체장애자재활원건설	1985	양자	독일 KFW	연세대학교
		사립대부속병원시설확충사업	1988	양자	일본 OECF	동아대학교부속병원외
		의료장비확충사업	1990	양자	일본 OECF	서울대학교병원
		보건 인구 합계				
	주택 수자원 등	대구시상수도	1964	양자	미국 AID	대구광역시
		부산시상수도	1966	양자	독일 KFW	부산광역시
		서울시상수도	1966	양자	미국 AID	서울특별시
		인천시상수도	1967	양자	미국 AID	인천광역시
		광주시상수도시설	1967	양자	일본 청구권	광주광역시
		대전상수도확장	1967	양자	일본 청구권	대전광역시
		소양강대목적댐건설1차	1967	양자	일본 청구권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다목적댐건설2차	1968	양자	일본 청구권	한국수자원공사
		청주상수도 확장	1969	양자	일본 청구권	청주시
		소양강다목적댐건설3차	1970	양자	일본 청구권	한국수자원공사

사 업 명	규 모(1,000 USD)		조 건		Grant Element (%)
	인 출 금	협 정 금	이자율(%)	거치-상환기간(년)	
고려대학병원건설	13,658	13,658	2	10년 - 20년	60.22
의료장비보강	49,946	58,946	4	5년 - 18년	38.51
의료취약지구병원건설	13,389	13,390	2	10년 - 29년	65.69
서울대학교병원소아병원건립	21,761	22,736	4.5	4년 - 18년	34.06
안전성연구센터	9,333	10,104	4.75	7년 - 18년	35.4
의료시설확충	44,978	51,564	5	7년 - 18년	33.64
연세대신체장애자재활원건설	3,125	3,214	2.2	10년 - 20년	58.66
사립대부속병원시설확충사업	28,166	40,999	4.25	7년 - 18년	38.94
의료장비확충사업	30,944	29,836	4	7년 - 18년	40.7
	309,813	341,209			
대구시상수도	1,759	2,400	2	11년 - 30년	66.94
부산시상수도	8,034	8,034	3	5년 - 15년	42.2
서울시상수도	2,853	3,260	2.5	12년 - 30년	63.33
인천시상수도	1,716	1,800	2.5	11년 - 30년	62.63
광주시상수도시설	1,680	1,680	0	3년 - 13년	52.71
대전상수도확장	1,515	1,640	0	4년 - 16년	60.29
소양강대목적댐건설1차	1,098	1,100	0	2년 - 13년	50.01
소양강다목적댐건설2차	13,016	13,050	0	4년 - 13년	55.23
청주상수도 확장	900	900	0	2년 - 13년	50.01
소양강다목적댐건설3차	7,728	7,504	0	4년 - 13년	55.23

부 문		사 업 명	도입연도	유형	제공기관	도입기관
대분류	중분류					
사회하부구조	주택 수자원 등	서울시상수도확장	1971	다자	ADB	서울특별시
		안동다목적댐건설	1971	다자	ADB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건설	1974	양자	일본 OECF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다목점댐건설	1978	양자	일본 OECF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상수도사업	1983	양자	일본 OECF	부산광역시외
		합천다목적댐건설	1983	양자	일본 OECF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상수도 건설	1984	양자	일본 OECF	대전광역시
		상수도시설현대화	1984	양자	일본 OECF	서울특별시
		주암댐건설	1984	양자	일본 OECF	한국수자원공사
		임하다목적댐건설사업	1987	양자	일본 OECF	한국수자원공사외
		대전시상수도차관사업	1989	양자	일본 OECF	대전광역시
		주택 수자원 합계				
사회하부구조 합계						
경제하부구조	교 통	1차 객화차 도입	1962	다자	IDA	철도청
		디젤기관차1차	1962	양자	미국 AID	철도청
		디젤기관차2차	1965	양자	미국 AID	철도청
		철도시설개량1차	1966	양자	일본 청구권	철도청
		해운진흥	1966	양자	일본 청구권	대한선주외
		항공시설개선	1966	양자	미국 AID	건설교통부
		한강철교복구	1966	양자	일본 청구권	철도청

사 업 명	규 모(1,000 USD)		조 건		Grant Element (%)
	인 출 금	협 정 금	이자율(%)	거치-상환기간(년)	
서울시상수도확장	8,737	8,800	0	5년 - 16년	62.44
안동다목적댐건설	16,904	22,000	0	6년 - 19년	68.4
대청댐건설	33,490	40,674	3.5	7년 - 14년	40.69
충주다목점댐건설	60,295	66,527	3.5	6년 - 14년	39.41
지방상수도사업	17,536	32,841	4.5	7년 - 18년	37.17
합천다목적댐건설	50,256	85,891	4.5	5년 - 18년	35.17
대전시 상수도 건설	4,392	9,262	4.75	7년 - 18년	35.4
상수도시설현대화	1,116	12,209	4.75	7년 - 18년	35.4
주암댐건설	31,421	46,733	4.75	7년 - 18년	35.4
임하다목적댐건설사업	35,615	48,396	4.25	7년 - 18년	38.94
대전시상수도차관사업	8,355	10,394	4	7년 - 18년	40.7
	308,417	425,096			
	958,354	1,098,713			
1차 객화차 도입	16,872	14,000	0.75	10년 - 40년	80.86
디젤기관차1차	6,388	8,300	0.75	4년 - 16년	55.64
디젤기관차2차	10,711	11,000	2	10년 - 30년	66.14
철도시설개량1차	10,995	11,000	3.5	7년 - 13년	39.67
해운진흥	8,172	9,008	0	4년 - 12년	53.34
항공시설개선	3,793	4,200	2.5	10년 - 30년	61.88
한강철교복구	892	1,000	3.5	7년 - 13년	39.67

부 문		사 업 명	도입연도	유형	제공기관	도입기관
대분류	중분류					
경제하부구조	교 통	디젤기관차3차	1966	양자	미국 AID	철도청
		2차 탄차및 유조차 도입	1967	다자	IDA	철도청
		철도시설개량2차	1967	양자	일본 청구권	철도청
		전송및하역시설2차	1967	양자	일본 청구권	대한통운
		경부고속도로1차	1968	양자	일본 청구권	한국도로공사
		경부고속도로2차	1969	양자	일본 청구권	한국도로공사
		남해교건설	1969	양자	일본 청구권	건설교통부
		철도신호장치1차	1970	양자	독일 KFW	철도청
		F-27 항공기도입	1970	양자	네델란드	대한항공
		3차 철도 사업	1970	다자	IDA	철도청
		서울시지하철및수도권전철	1972	양자	일본 OECF	철도청외
		2차도로건설	1974	다자	ADB	서울특별시
		부산묵호항개발사업	1976	양자	사우디	해양수산부
		북평항개발	1976	양자	일본 OECF	해양수산부
		충북선복선화	1976	양자	일본 OECF	철도청
		도로건설사업	1976	양자	사우디	건설교통부
		디젤기관차엔진도입	1979	양자	미국 EXIM	철도청
		감천항개발	1984	양자	사우디	해양수산부
		울산시가지철도이설사업	1988	양자	일본 OECF	울산시
		서울시지하철건설사업	1990	양자	일본 OECF	서울특별시
		교통합계				

사 업 명	규 모(1,000 USD)		조 건		Grant Element (%)
	인 출 금	협 정 금	이자율(%)	거치-상환기간(년)	
디젤기관차3차	18,509	18,600	2.5	11년 - 30년	62.63
2차 탄차및 유조차 도입	12,841	11,000	0.75	10년 - 40년	80.86
철도시설개량2차	9,277	9,349	0	7년 - 13년	61.84
전송및하역시설2차	2,594	2,596	0	1년 - 13년	47.12
경부고속도로1차	2,998	3,000	0	1년 - 13년	47.12
경부고속도로2차	3,894	5,000	0	0년 - 13년	44.03
남해교건설	2,186	2,188	0	3년 - 13년	52.71
철도신호장치1차	4,751	4,751	3	7년 - 18년	47.77
F-27 항공기도입	1,711	1,711	3	6년 - 18년	46.52
3차 철도 사업	18,085	15,000	0.75	10년 - 40년	80.86
서울시지하철및수도권전철	100,149	89,868	4.13	3년 - 15년	32.48
2차도로건설	8,287	10,000	0	4년 - 19년	64.52
부산묵호항개발사업	32,666	32,667	4	3년 - 15년	33.23
북평항개발	41,626	41,882	3.5	7년 - 13년	39.67
충북선복선화	15,863	14,500	3.5	5년 - 13년	36.94
도로건설사업	32,805	32,947	4	5년 - 15년	35.95
디젤기관차엔진도입	17,771	17,850	0	1년 - 7년	33
감천항개발	31,133	46,400	5	4년 - 12년	26.02
울산시가지철도이설사업	27,061	34,647	4.25	7년 - 18년	38.94
서울시지하철건설사업	438,983	497,272	4	7년 - 18년	40.7
	881,012	949,735			

부 문		사 업 명	도입연도	유형	제공기관	도입기관
대분류	중분류					
경제하부구조	통 신	통신시설확충	1959	양자	미국 AID	한국전기통신공사
		통신시설확장1차	1962	양자	독일 KFW	철도청
		통신망확장2차	1964	양자	미국 AID	한국전기통신공사
		통신시설확장2차	1965	양자	독일 KFW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외전화시설확장1차	1967	양자	일본 청구권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외전화시설확장2차	1968	양자	일본 청구권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외전화건설확장3차	1970	양자	일본 청구권	한국전기통신공사
		통신시설확장4차	1971	양자	독일 KFW	한국전기통신공사
		통신시설확장1차	1973	양자	일본 OECF	한국전기통신공사
		통신시설확장6차	1973	양자	독일 KFW	한국전기통신공사
		철도신호장치2차	1973	양자	독일 KFW	철도청
		통신시설확장7차	1975	양자	독일 KFW	한국전기통신공사
		통신시설확장2차	1976	양자	일본 OECF	한국전기통신공사
		제3차 M/W 시설 확충공사	1980	양자	미국 EXIM	한국전기통신공사
		재1차 통신망시설확충	1980	양자	미국 EXIM	한국전기통신공사
		제2차 통신망시설확충	1981	양자	미국 EXIM	한국전기통신공사
		통신합계				
	전 력	부산화력	1962	양자	미국 AID	한국전력공사
		송배전시설1차	1964	양자	미국 AID	한국전력공사

사 업 명	규 모(1,000 USD)		조 건		Grant Element (%)
	인 출 금	협 정 금	이자율(%)	거치-상환기간(년)	
통신시설확충	3,491	3,500	3.5	4년 - 18년	40.53
통신시설확장1차	18,747	18,747	4	4년 - 16년	35.57
통신망확장2차	7,791	8,400	2	12년 - 30년	67.69
통신시설확장2차	10,176	10,177	4	3년 - 16년	34.2
시외전화시설확장1차	999	1,000	0	4년 - 18년	63.18
시외전화시설확장2차	1,798	1,800	0	2년 - 13년	50.01
시외전화건설확장3차	1,438	1,436	0	1년 - 13년	47.12
통신시설확장4차	10,712	10,712	3	11년 - 12년	46.66
통신시설확장1차	21,031	22,819	4.25	4년 - 15년	33.14
통신시설확장6차	10,712	10,712	2	10년 - 20년	60.22
철도신호장치2차	9,106	9,106	2	10년 - 20년	60.22
통신시설확장7차	11,784	11,784	2	10년 - 20년	60.22
통신시설확장2차	24,415	22,256	0	5년 - 15년	60.92
제3차 M/W 시설 확충공사	25,300	30,000	0	3년 - 6년	36.2
재1차 통신망시설확충	340,000	357,000	0	1년 - 9년	37.9
제2차 통신망시설확충	233,000	297,000	0	4년 - 12년	53.34
	730,500	816,449			
부산화력	19,022	20,900	0.75	11 - 29	77.21
송배전시설1차	7,382	7,750	2	11 - 30	66.94

부 문		사 업 명	도입연도	유형	제공기관	도입기관
대분류	중분류					
경제하부구조	전 력	군산화력	1964	양자	미국 AID	한국전력공사
		서울화력	1966	양자	미국 AID	한국전력공사
		영남화력	1967	양자	미국 AID	한국전력공사
		송배전시설2차	1967	양자	미국 AID	한국전력공사
		영동화력발전소 건설	1969	양자	일본 청구권	한국전력공사
		송배전시설확장1차	1970	양자	독일 KFW	한국전력공사
		송배전시설확장	1973	양자	독일 KFW	한국전력공사
		345KV 송전선건설	1977	양자	일본 OECF	한국전력공사
		송배전시설확장3차	1978	양자	독일 KFW	한국전력공사
		전력합계				
경제하부구조합계						
생 산	농림수산	제4비료	1965	양자	미국 AID	진해화학
		제3비료	1965	양자	미국 AID	영남화학
		낙농차관	1967	양자	카나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수산물 진흥	1969	양자	일본 청구권	농어촌개발공사
		낙농 개발 1차	1971	다자	IDA	매일유업
		농업 육성	1972	다자	IDA	농림부
		농업육성	1973	양자	독일 KFW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종자경신사업	1973	다자	IBRD	농림부외

사 업 명	규 모(1,000 USD)		조 건		Grant Element (%)
	인 출 금	협 정 금	이자율(%)	거치-상환기간(년)	
군산화력	12,786	12,800	0.75	11년 - 30년	77.72
서울화력	20,668	22,500	2.5	11년 - 30년	62.63
영남화력	15,702	17,500	2.5	11년 - 30년	62.63
송배전시설2차	10,492	12,700	2.5	11년 - 30	62.63
영동화력발전소 건설	1,780	1,780	0	2년 - 13년	50.01
송배전시설확장1차	15,694	16,069	3	7년 - 18년	47.77
송배전시설확장	9,052	9,909	2	10년 - 20년	60.22
345KV 송전선건설	18,570	14,897	4.25	5년 - 15년	34.39
송배전시설확장3차	10,339	10,712	2	10년 - 20년	60.22
	141,487	147,517			
	1,752,999	1,913,700			
제4비료	24,600	24,600	2.5	10년 - 30년	61.88
제3비료	24,200	24,200	2.5	11년 - 30년	62.63
낙농차관	671	672	3	7년 - 23년	51.46
농수산물 진흥	2,309	2,479	0	2년 - 13년	50.01
낙농 개발 1차	7,236	7,000	0.75	10년 - 40년	80.86
농업 육성	10,500	10,500	0.75	10년 - 40년	80.86
농업육성	8,945	8,945	2	10년 - 20년	60.22
종자경신사업	7,000	7,000	0	7년 - 18년	68.96

부 문		사 업 명	도입연도	유형	제공기관	도입기관
대분류	중분류					
생 산	농림수산	대단지농업개발	1974	양자	일본 OECF	농업기반공사외
		작물개량연구사업	1974	양자	미국 AID	농촌진흥청
		수리시설확장	1974	양자	미국 AID	농림부
		양곡창고건설1차	1976	양자	독일 KFW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기계화	1976	양자	독일 KFW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산물공판장건설	1977	양자	독일 KFW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개발	1977	양자	일본 OECF	농림부
		농업종합개발사업	1978	양자	일본 OECF	농림부
		양곡창고건설2차	1979	양자	독일 KFW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우유가공공장건설	1980	양자	독일 KFW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신용3차	1981	다자	IBRD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수산시험기자재현대화	1984	양자	일본 OECF	농촌진흥청외
		서울우유공장2차	1984	양자	독일 KFW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종합해양연구조사선건조	1985	양자	일본 OECF	해양연구소
		부산.경남 우유공장건설	1985	양자	독일 KFW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유가공공장건설사업	1987	양자	일본 OECF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기계화지원차관사업	1987	양자	일본 OECF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영산강지구농업종합개발사업	1988	양자	일본 OECF	농업기반공사
		배합사료공장건설사업	1990	양자	일본 OECF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낙농시설개선사업	1990	양자	일본 OECF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 업 명	규 모(1,000 USD)		조 건		Grant Element (%)
	인 출 금	협 정 금	이자율(%)	거치-상환기간(년)	
대단지농업개발	62,810	66,557	3.25	7년 - 18년	46
작물개량연구사업	4,952	5,000	3	10년 - 30년	57.62
수리시설확장	25,700	25,700	3	11년 - 30년	58.32
양곡창고건설1차	9,373	9,373	2	10년 - 20년	60.22
농업기계화	6,695	6,695	2	10년 - 20년	60.22
농산물공판장건설	2,678	2,678	2	10년 - 20년	60.22
농업개발	59,875	46,926	0	2년 - 10년	43.54
농업종합개발사업	63,886	66,527	5.25	7년 - 13년	28.58
양곡창고건설2차	6,695	6,695	2	10년 - 20년	60.22
우유가공공장건설	8,034	8,034	4.5	5년 - 15년	32.83
농협신용3차	50,000	50,000	0	3년 - 12년	50.75
농수산시험기자재현대화	13,801	13,894	4.75	7년 - 18년	35.4
서울우유공장2차	5,266	5,356	4.5	5년 - 20년	36.52
종합해양연구조사선건조	23,939	17,188	5	7년 - 18년	33.64
부산.경남 우유공장건설	2,540	2,571	4.5	5년 - 15년	32.83
유가공공장건설사업	29,700	26,791	4.25	7년 - 18년	38.94
농업기계화지원차관사업	60,476	53,581	4.25	7년 - 18년	38.94
영산강지구농업종합개발사업	32,137	34,647	4.25	7년 - 18년	38.94
배합사료공장건설사업	16,445	37,392	4	7년 - 18년	40.7
낙농시설개선사업	11,197	16,907	4	7년 - 18년	40.7

부 문		사 업 명	도입연도	유형	제공기관	도입기관
대분류	중분류					
생산	농림수산	육가공공장시설사업	1990	양자	일본 OECF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림수산합계				
	공업 광업 및 건설	중소기업육성1차	1960	양자	미국 AID	한국산업은행
		제3시멘트	1962	양자	미국 AID	현대시멘트
		장성광개발	1963	양자	미국 AID	대한석탄공사
		탄전개발	1964	양자	독일 KFW	대한석탄공사
		소다회공장	1965	양자	미국 AID	동양화학
		중소기업육성2차	1966	양자	독일 KFW	한국산업은행
		포리에스탈화이바	1966	양자	미국 AID	대한화섬
		중소기업육성3차	1966	양자	미국 AID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육성	1966	양자	미국 AID	중소기업은행
		나이론공장	1966	양자	미국 AID	코오롱
		수리간척및준설	1966	양자	일본 청구권	대한준설공사
		건설장비구입	1966	양자	일본 청구권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육성	1966	양자	일본 청구권	중소기업은행
		제3시멘트 추가	1966	양자	미국 AID	현대시멘트
		산업기계공장확장	1967	양자	일본 청구권	대우중공업
		중소기업육성2차	1967	양자	일본 청구권	중소기업은행
		개발금융차관	1968	양자	미국 AID	한국장기신용은행
		과학기구도입	1968	양자	미국 AID	한국과학기술원

사 업 명	규 모(1,000 USD)		조 건		Grant Element (%)
	인 출 금	협 정 금	이자율(%)	거치-상환기간(년)	
육가공공장시설사업	10,286	11,935	4	7년 - 18년	40.7
	591,947	599,842			
중소기업육성1차	4,997	5,000	0.75	4년 - 39년	74.52
제3시멘트	3,986	4,250	0.75	11년 - 30 년	77.72
장성광개발	9,061	9,500	0.75	12년 - 29년	78.1
탄전개발	8,635	11,098	3	3년 - 17년	41.22
소다회공장	4,888	5,600	2.5	10년 - 30년	61.88
중소기업육성2차	10,712	10,712	3	5년 - 15년	42.2
포리에스탈화이바	1,650	1,650	2.5	12년 - 30년	63.33
중소기업육성3차	11,374	12,000	2.5	12년 - 30년	63.33
중소기업육성	6,921	8,000	2.5	10년 - 30년	61.88
나이론공장	5,810	5,810	2.5	11년 - 30년	62.63
수리간척및준설	3,300	3,300	0	1년 - 17년	54.46
건설장비구입	6,500	6,500	0	1년 - 19년	57.57
중소기업육성	14,818	15,000	0	4년 - 17년	61.77
제3시멘트 추가	2,977	3,000	2.5	10년 - 30년	61.88
산업기계공장확장	2,813	3,000	0	3년 - 14년	54.56
중소기업육성2차	7,414	15,000	0	6년 - 16년	64.47
개발금융차관	2,891	3,000	2.5	10년 - 30년	61.88
과학기구도입	1,855	2,000	2.5	11년 - 30년	62.63

부 문		사 업 명	도입연도	유형	제공기관	도입기관
대분류	중분류					
생산	공업 광업 및 건설	A.N 모노마공장건설	1968	양자	미국 AID	동서석유화학
		중규모산업	1968	양자	미국 AID	한국산업은행
		암모니아센터	1969	양자	미국 AID	한국종합화학공업
		디젤엔진	1971	양자	독일 KFW	대우중공업
		종합제철공장건설1차	1971	양자	일본 청구권	포항종합제철
		종합제철공장건설2차	1972	양자	일본 청구권	포항종합제철
		산업합리화자금조성	1972	양자	일본 OECF	한국산업은행
		선박수리시설도입	1973	양자	독일 KFW	대한조선공사
		민간기업육성	1973	양자	독일 KFW	한국산업은행
		종합제청공장건설3차	1973	양자	일본 청구권	포항종합제철
		종합제철공장건설4차	1973	양자	일본 청구권	포항종합제철
		산업합리화자금조성2차	1974	양자	일본 OECF	한국산업은행
		기초과학육성	1975	양자	미국 AID	서울대학교
		한국표준과학연구소건립	1975	양자	미국 AID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민간중소기업육성	1975	양자	독일 KFW	중소기업은행
		종합제철공장건설5차	1975	양자	일본 청구권	포항종합제철
		민간기업육성	1976	양자	독일 KFW	한국산업은행
		생사가공타당성조사	1976	양자	독일 KFW	한국견직
		민간중소기업육성3차	1980	양자	독일 KFW	중소기업은행
		민간중소기업육성5차	1983	양자	독일 KFW	중소기업은행

사 업 명	규 모(1,000 USD)		조 건		Grant Element (%)
	인 출 금	협 정 금	이자율(%)	거치-상환기간(년)	
A.N 모노마공장건설	4,998	5,000	3	12년 - 30년	58.97
중규모산업	11,000	15,000	2.5	5년 - 37년	60.3
암모니아센터	4,953	5,000	3	4년 - 37년	55.21
디젤엔진	24,638	24,638	3	7년 - 18년	47.77
종합제철공장건설1차	9,501	8,244	0	2년 - 13년	50.01
종합제철공장건설2차	39,563	35,463	0	1년 - 13년	47.12
산업합리화자금조성	28,340	25,403	3.5	7년 - 13년	39.67
선박수리시설도입	15,961	15,961	2	10년 - 20년	60.22
민간기업육성	5,356	5,356	2	10년 - 20년	60.22
종합제청공장건설3차	3,720	4,000	0	1년 - 13년	47.12
종합제철공장건설4차	43,784	47,068	0	2년 - 13년	50.01
산업합리화자금조성2차	25,944	26,363	3.5	0년 - 13년	28.24
기초과학육성	4,955	5,000	3	11년 - 30년	58.32
한국표준과학연구소건립	4,996	5,000	3	11년 - 30년	58.32
민간중소기업육성	4,285	4,285	2	10년 - 20년	60.22
종합제철공장건설5차	760	759	0	0년 - 13년	44.03
민간기업육성	10,712	10,712	2	10년 - 20년	60.22
생사가공타당성조사	126	161	2	10년 - 20년	60.22
민간중소기업육성3차	4,159	4,159	2	10년 - 20년	60.22
민간중소기업육성5차	8,034	8,034	4.5	5년 - 15년	32.83

부 문		사 업 명	도입연도	유형	제공기관	도입기관
대분류	중분류					
생산	공업 광업 및 건설	측정표준및화학연구기자재보강	1985	양자	일본 OECF	한국표준과학연구원외
		중소기업부문금융차관	1987	양자	일본 OECF	중소기업은행외
		연구소시설확충	1988	양자	일본 OECF	생명공학연구소외
		중소기업부문금융차관업(2)	1989	양자	일본 OECF	국민은행
		중소기업현대화사업(III)	1990	양자	일본 OECF	중소기업은행외
		공업, 광업, 건설 합계				
생산 합계						
다부문	환경 기타	청계천하수처리장1차	1966	양자	미국 AID	서울특별시
		한강홍수예경보건설	1973	양자	일본 청구권	건설교통부
		청계천하수처리장2차	1974	양자	미국 AID	서울특별시
		부산하수처리장건설	1977	양자	독일 KFW	부산광역시
		도시하수처리장건설	1980	양자	일본 OECF	대구광역시외
		서울탄천하수처리장건설	1983	양자	일본 OECF	서울특별시
		기상장비현대화	1984	양자	일본 OECF	기상청
		서울중랑천하수처리장건설	1984	양자	일본 OECF	서울특별시
		쓰레기종말처리장기술용역	1984	양자	일본 OECF	대구광역시
		부산수영하수처리장건설	1984	양자	일본 OECF	부산광역시
		부산장림하수처리장건설	1985	양자	일본 OECF	부산광역시
		광주하수처리장건설	1985	양자	일본 OECF	광주광역시
		춘천하수처리장건설	1985	양자	일본 OECF	춘천시

사 업 명	규 모(1,000 USD)		조 건		Grant Element (%)
	인 출 금	협 정 금	이자율(%)	거치-상환기간(년)	
측정표준및화학연구기자재보강	12,300	11,319	5	8년 - 18년	34.76
중소기업부문금융차관	60,476	53,581	4.25	7년 - 13년	34.92
연구소시설확충	19,167	20,905	4.25	7년 - 18년	38.94
중소기업부문금융차관업(2)	42,821	44,941	4	7년 - 13년	36.5
중소기업현대화사업(III)	85,501	79,564	4	6년 - 14년	36.26
	586,653	590,338			
	1,178,599	1,190,181			
청계천하수처리장1차	3,213	3,500	2.5	12년 - 30년	63.33
한강홍수예경보건설	1,558	1,700	0	1년 - 13년	47.12
청계천하수처리장2차	2,517	2,800	3	5년 - 35년	55.42
부산하수처리장건설	5,356	5,356	2	10년 - 20년	60.22
도시하수처리장건설	18,971	22,052	4	9년 - 18년	42.62
서울탄천하수처리장건설	29,723	48,419	4.5	7년 - 18년	37.17
기상장비현대화	10,318	17,683	4.75	7년 - 18년	35.4
서울중랑천하수처리장건설	41,918	70,310	4.75	5년 - 18년	33.5
쓰레기종말처리장기술용역	998	1,684	4.75	3년 - 18년	31.3
부산수영하수처리장건설	11,206	26,524	4.75	7년 - 18년	35.4
부산장림하수처리장건설	25,129	38,819	5	7년 - 18년	33.64
광주하수처리장건설	22,802	31,693	5	7년 - 18년	33.64
춘천하수처리장건설	16,432	13,750	5	7년 - 18년	33.64

부 문		사 업 명	도입연도	유형	제공기관	도입기관
대분류	중분류					
다부문	환경 기타	쓰레기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1987	양자	일본 OECF	대구광역시외
		쓰레기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1987	양자	일본 OECF	대구광역시외
		하수처리장건설사업	1988	양자	일본 OECF	청주시외
		환경 기타 합계				
	새마을종합계발	타당성조사1차	1965	양자	미국 AID	재경부일반회계외
		타당성조사2차	1972	양자	미국 AID	한국수자원공사외
		영산강 유역 개발	1972	다자	IDA	농업기반공사
		새마을1차 (일반조건)	1976	다자	IBRD	농림부외
		새마을1차 (중간조건)	1976	다자	IBRD	농림부외
		새마을 종합계발 합계				
다부문 합계						
기 타	상품 원자재	원자재1차(489-H-031)	1965	양자	미국 AID	비전대
		원자재2차(489-H041)	1966	양자	미국 AID	비전대
		원자재3차(489-H-049)	1968	양자	미국 AID	비전대
		원자재4차(489-H-060)	1969	양자	미국 AID	비전대
		원자재5차 (489-H-093)	1970	양자	미국 AID	비전대
		우지 (489-H-086)	1972	양자	미국 AID	한국산업은행
		상품 원자재 합계				
	양 곡	1968년 PL480	1968	양자	미농무성FAS	농림부외
		1969년 PL480 (1차)	1969	양자	미농무성FAS	농림부

사 업 명	규 모(1,000 USD)		조 건		Grant Element (%)
	인 출 금	협 정 금	이자율(%)	거치-상환기간(년)	
쓰레기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21,819	35,447	4.25	7년 - 18년	38.94
쓰레기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1,636	1,694	3.25	7년 - 18년	46
하수처리장건설사업	19,790	32,454	4.25	7년 - 18년	38.94
	233,385	353,885			
타당성조사1차	1,975	2,000	2.5	11년 - 30년	62.63
타당성조사2차	1,845	2,000	3	11년 - 30년	58.32
영산강 유역 개발	15,037	15,000	0.75	10년 - 40년	80.86
새마을1차 (일반조건)	40,000	40,000	4.35	7년 - 18.5년	38.57
새마을1차 (중간조건)	20,000	20,000	0	7년 - 18년	68.96
	78,857	79,000			
	312,242	432,885			
원자재1차(489-H-031)	9,930	10,000	2.5	11년 - 30년	62.63
원자재2차(489-H041)	12,069	12,500	2.5	7년 - 34년	61.01
원자재3차(489-H-049)	9,929	10,000	2.5	10년 - 30년	61.88
원자재4차(489-H-060)	9,700	10,000	3	10년 - 30년	57.62
원자재5차 (489-H-093)	8,672	10,000	3	11년 - 30년	58.32
우지 (489-H-086)	4,827	5,000	3	10년 - 30년	57.62
	55,127	57,500			
1968년 PL480	40,548	41,700	2.5	0년 - 30년	50.44
1969년 PL480 (1차)	30,145	32,800	3	10년 - 30년	57.62

부 문		사 업 명	도입연도	유형	제공기관	도입기관
대분류	중분류					
기 타	양 곡	1969년 일본미	1969	양자	일본식량청	농림부
		1969년 PL480 (2차)	1969	양자	미농무성FAS	농림부
		1970년 일본미 (1차)	1970	양자	일본식량청	농림부
		1970년 일본미 (2차)	1970	양자	일본식량청	농림부
		1970년 PL480 (1차)	1970	양자	미농무성FAS	농림부
		1970년 PL480 (2차)	1970	양자	미농무성FAS	농림부
		1971년 미곡 (1차)	1971	양자	미국 AID	농림부
		1971년 미곡 (2차)	1971	양자	미국 AID	농림부
		1971년 PL480 (1차)	1971	양자	미농무성FAS	농림부
		1971년 일본미 (1차)	1971	양자	일본식량청	농림부
		1971년 일본미 (2차)	1971	양자	일본식량청	농림부
		1971년 PL480 (2차))	1971	양자	미농무성FAS	농림부
		1972년 미곡	1972	양자	미국 AID	농림부외
		1972년 PL480	1972	양자	미농무성FAS	농림부
		1973년 미곡	1973	양자	미국 AID	농림부
		1973년 PL480	1973	양자	미농무성FAS	농림부
		1973년 일본미	1973	양자	일본식량청	농림부
		1976년 PL480	1976	양자	미농무성FAS	농림부
		1977년 PL480	1977	양자	미농무성FAS	농림부
		1979년 PL480	1979	양자	미농무성FAS	농림부

사업명	규 모(1,000 USD)		조 건		Grant Element (%)
	인 출 금	협 정 금	이자율(%)	거치-상환기간(년)	
1969년 일본미	35,418	35,418	0	0년 - 30년	67.81
1969년 PL480 (2차)	18,578	18,600	3	0년 - 30년	46.97
1970년 일본미 (1차)	20,380	19,776	3	6년 - 24년	51.02
1970년 일본미 (2차)	32,902	31,927	0	0년 - 29년	66.9
1970년 PL480 (1차)	7,767	8,400	3	10년 - 30년	57.62
1970년 PL480 (2차)	39,394	40,500	3	0년 - 39년	51.52
1971년 미곡 (1차)	31,837	35,000	3	1년 - 39년	52.75
1971년 미곡 (2차)	14,000	14,000	3	10년 - 30년	57.62
1971년 PL480 (1차)	58,382	58,500	3	10년 - 30년	57.62
1971년 일본미 (1차)	30,949	26,854	3	0년 - 29년	46.34
1971년 일본미 (2차)	39,243	34,051	3	0년 - 29년	46.34
1971년 PL480 (2차))	28,096	30,000	3	10년 - 30년	57.62
1972년 미곡	17,000	17,000	3	11년 - 30년	58.32
1972년 PL480	191,750	202,200	3	10년 - 30년	57.62
1973년 미곡	24,149	25,000	3	10년 - 30년	57.62
1973년 PL480	122,851	126,800	3	10년 - 30년	57.62
1973년 일본미	26,261	28,231	3	1년 - 29년	47.83
1976년 PL480	143,458	154,000	3	10년 - 30년	57.62
1977년 PL480	96,651	103,300	3	10년 - 30년	57.62
1979년 PL480	37,483	40,000	3	0년 - 30년	46.97

부 문		사 업 명	도입연도	유형	제공기관	도입기관
대분류	중분류					
기 타	양 곡	1980년 PL480	1980	양자	미농무성FAS	농림부
		1981년 일본미 (1차)	1980	양자	일본식량청	농림부
		1981년 일본미 (2차)	1980	양자	일본식량청	농림부
		1981년 일본미 (3차)	1980	양자	일본식량청	농림부
		1981년 PL480	1981	양자	미농무성FAS	농림부
		양곡 합계				
기타합계						
총 합 계						

사 업 명	규 모(1,000 USD)		조 건		Grant Element (%)
	인 출 금	협 정 금	이자율(%)	거치-상환기간(년)	
1980년 PL480	28,113	30,000	3	10년 - 30년	57.62
1981년 일본미 (1차)	64,126	62,372	3	6년 - 10년	37.53
1981년 일본미 (2차)	28,648	27,865	3	1년 - 19년	39.88
1981년 일본미 (3차)	37,266	36,247	3	0년 - 20년	39.06
1981년 PL480	24,769	27,000	3	10년 - 30년	57.62
	1,270,165	1,307,541			
	1,325,292	1,365,041			
	5,527,486	6,000,520			

2. Grant Element 25%미만 공공차관사업

부 문		사 업 명	도입연도	유형	제공기관	도입기관
대분류	중분류					
사회하부구조	교 육	교육3차	1973	다자	IBRD	교육인적자원부
		TOCM시설도입	1973	양자	미국 EXIM	교육인적자원부
		교육3차	1975	다자	IBRD	교육인적자원부외
		서울대시설현대화본차관	1976	양자	영국	서울대학교
		공업시험원 및 공산품 검사소 시설확충	1977	다자	ADB	기술표준원
		직업훈련사업	1977	다자	IBRD	노동부
		연구소시설확충	1978	다자	ADB	한국기계연구소
		서울대시설현대화착수자관	1978	양자	홍콩	서울대학교
		교육시설확충	1979	양자	미국 EXIM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과학원시설확충	1979	양자	미국 EXIM	한국과학기술원
		교육5차	1980	다자	IBRD	교육인적자원부
		연구기자재보강사업	1980	다자	ADB	한국과학기술원외
		국립대학실험	1982	양자	영국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교육	1984	다자	IBRD	교육인적자원부외
		교육실습선건조사업	1987	다자	ADB	교육인적자원부
		다목적연구로건설	1988	양자	카나다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초첨단과학교육지원	1990	다자	IBRD	교육인적자원부
		실업계고교실험실습기자재확충	1991	다자	IBRD	교육인적자원부
		실업계고교실험실습기자재확충	1992	다자	IBRD	교육인적자원부
		환경연구교육사업	1993	다자	IBRD	교육인적자원부

사 업 명	규 모(1,000 USD)		조 건		Grant Element (%)
	인 출 금	협 정 금	이자율(%)	거치-상환기간(년)	
교육3차	23,000	23,000	7.2	10년-20년	19.49
TOCM시설도입	7,000	7,000	6	2년-3년	8.88
교육3차	22,500	22,500	8.5	7년-18년	8.91
서울대시설현대화본차관	2,960	2,960	7	1년-5년	7.41
공업시험원 및 공산품 검사소 시설확충	16,946	17,000	8.3	6년-11년	8.41
직업훈련사업	22,785	23,000	8.2	4년-13.5년	8.98
연구소시설확충	32,709	33,000	7.7	6년-11년	11.86
서울대시설현대화착수자관	1,000	1,000	LIBOR	2년-3년	
교육시설확충	98,684	100,000	8.375	3년-6년	5.14
한국과학원시설확충	11,321	11,600	8	2년-4년	9
교육5차	99,855	100,000	8.25	4년-13년	8.55
연구기자재보강사업	14,900	15,000	7.6	5년-9년	10.98
국립대학실험	39,493	34,677	7.75	2년-7년	7.38
과학기술교육	96,582	100,000	변동	3년-12년	
교육실습선건조사업	52,995	53,000	변동	4년-20년	
다목적연구로건설	16,509	16,509	LIBOR	4년-8년	
기초첨단과학교육지원	44,429	45,000	변동	5년-10년	
실업계고교실험실습기자재확충	29,570	30,000	변동	5년-10년	
실업계고교실험실습기자재확충	29,036	30,000	변동	5년-10년	
환경연구교육사업	60,000	60,000	변동	5년-10년	

부 문		사 업 명	도입연도	유형	제공기관	도입기관
대분류	중분류					
사회하부구조	교 육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1994	다자	IBRD	교육인적자원부외
		교육 합계				
	보건인구	서울대학교병원시설확충	1975	양자	미국 EXIM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시설확충	1991	다자	IBRD	보건복지부
		병원의료시설및보건연구장비현대화	1992	다자	IBRD	보건복지부외
		보건인구합계				
	주택, 수자원 등	제2차상수도	1983	다자	IBRD	한국수자원공사외
		수도권광역상수도3단계	1985	다자	IBRD	한국수자원공사
		제4차상수도사업(남강,대구)	1985	다자	IBRD	대구광역시외
		주암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	1990	다자	IBRD	한국수자원공사
		8차상수도시설	1984	다자	ADB	건설교통부외
		중소도시지방상수도시설	1983	다자	ADB	행정자치부
		9차상수도시설	1985	다자	ADB	인천광역시외
		10차 상수도 사업	1989	다자	ADB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상수도시설	1981	다자	ADB	울산시외
		삼랑진양수발전소건설	1980	다자	ADB	한국전력공사
		수계별광역상수도시설	1977	다자	ADB	한국수자원공사외
		부산,대구시 상수도 시설	1972	다자	ADB	부산광역시외
		수도권상수도취수장이설사업	1972	다자	ADB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상수도확장사업	1978	다자	ADB	부산광역시

사 업 명	규 모(1,000 USD)		조 건		Grant Element (%)
	인출금	협정금	이자율(%)	거치-상환기간(년)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189,363	190,000	변동	5년-10년	
	911,637	915,246			
서울대학교병원시설확충	32,000	35,000	8	3년-2년	4.16
의료시설확충	57,053	60,000	변동	5년-10년	
병원의료시설및보건연구장비현대화	29,082	30,000	변동	5년-10년	
	118,135	125,000			
제2차상수도	51,288	78,500	변동	5년-7.5년	
수도권광역상수도3단계	89,282	95,000	변동	3년-12년	
제4차상수도사업(남강,대구)	34,009	38,000	변동	3년-12년	
주암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	28,012	34,000	변동	5년-10년	
8차상수도시설	26,797	70,000	10.25	5년-20년	-3.39
중소도시지방상수도시설	25,949	60,000	10.5	4년-20년	-4.98
9차상수도시설	0	27,000	10.25	3년-22년	-3.31
10차 상수도 사업	6,332	10,400	변동	4년-21년	
지방상수도시설	16,500	38,100	10.1	5년-20년	-2.47
삼랑진양수발전소건설	47,759	52,630	9	5년-15년	4.75
수계별광역상수도시설	28,300	30,000	8.3	5년-14년	8.88
부산,대구시 상수도 시설	5,493	5,700	7.5	6년-15년	14.6
수도권상수도취수장이설사업	25,352	25,600	7.5	5년-14년	13.74
부산시상수도확장사업	14,269	15,000	7.4	5년-15년	14.74

부 문		사 업 명	도입연도	유형	제공기관	도입기관
대분류	중분류					
사회하부구조	주택, 수자원 등	충주다목점댐건설	1979	다자	IBRD	한국수자원공사
		임계댐타당성조사본차관	1975	양자	불란서	건설교통부
		측지및지도제작	1974	양자	미국 EXIM	건설교통부
		지방상수도	1981	다자	IBRD	광주광역시외
		2차주택건설	1981	다자	ADB	대한주택공사
		3차주택건설	1975	양자	미국 AID	대한주택공사
		4차주택건설	1976	양자	미국 AID	대한주택공사
		서울시주택건설	1976	양자	미국 AID	서울특별시
		국민주택기금지원	1987	다자	IBRD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건설	1991	다자	IBRD	건설교통부
		5차주택건설	1977	양자	미국 AID	대한주택공사
		6차주택건설	1977	양자	미국 AID	대한주택공사
		2차주택건설	1974	양자	미국 AID	대한주택공사
		1차주택건설	1973	양자	미국 AID	대한주택공사
		1차주택건설	1980	다자	ADB	대한주택공사
		주택, 수자원 등 합계				
사회하부구조 합계						
경제하부구조	교 통	CTC 철도신호장치	1964	양자	영국	철도청
		경인고속도로건설	1968	다자	ADB	한국도로공사
		수송하역장비도입	1969	다자	ADB	대한통운

사 업 명	규 모(1,000 USD)		조 건		Grant Element (%)
	인출금	협정금	이자율(%)	거치-상환기간(년)	
충주다목점댐건설	123,989	125,000	7	3년-12년	14.36
임계댐타당성조사본차관	710	798	6.4	1년-5년	9.02
측지및지도제작	3,200	3,200	6	1년-2년	5.91
지방상수도	81,479	90,000	11.6	3년-12년	-9.56
2차주택건설	34,205	60,000	10.1	2년-18년	-2.03
3차주택건설	25,000	25,000	9.5	9.5년-15.5년	2.23
4차주택건설	15,000	15,000	9.45	9.5년-16년	2.25
서울시주택건설	5,000	5,000	9.4	6년-21년	2.62
국민주택기금지원	150,000	150,000	변동	3년-12년	
국민주택건설	100,000	100,000	변동	5년-10년	
5차주택건설	15,000	15,000	8.89	9년-16.5년	6.29
6차주택건설	5,000	5,000	8.89	9년-16.5년	6.29
2차주택건설	20,000	20,000	8.75	9.5년-15.5년	7.25
1차주택건설	10,000	10,000	8	4년-21년	12.09
1차주택건설	25,396	30,000	7.6	2년-18년	12.98
	1,013,321	1,233,928			
	2,043,093	2,274,175			
CTC 철도신호장치	803	803	변동	5년-10년	
경인고속도로건설	6,311	6,800	6.88	3년-11년	14.39
수송하역장비도입	6,847	7,500	6.875	3년-7년	11.54

부 문		사 업 명	도입연도	유형	제공기관	도입기관
대분류	중분류					
경제하부구조	교 통	철도 3차	1970	다자	IBRD	철도청
		도로1차	1971	다자	IBRD	건설교통부
		도로 4차	1971	다자	IBRD	철도청
		김포공항확장	1973	양자	미국 EXIM	건설교통부
		항만 1차	1973	다자	IBRD	해양수산부
		도로2차	1974	다자	IBRD	건설교통부
		산업전철화	1974	다자	구주은행단	철도청
		1차도로개량	1975	다자	ADB	건설교통부
		철도 5차	1975	다자	IBRD	철도청
		디젤기관차도입	1975	양자	미국 EXIM	철도청
		도로3차	1976	다자	IBRD	건설교통부
		항만2차	1977	다자	IBRD	해양수산부
		2차도로개량	1977	다자	ADB	건설교통부
		디젤기관차도입	1978	양자	미국 EXIM	철도청
		철도 6차	1978	다자	IBRD	철도청
		도로4차	1978	다자	IBRD	건설교통부외
		철도 7차	1980	다자	IBRD	철도청외
		인천항개발2차사업	1980	다자	ADB	해양수산부외
		디젤기관차엔진등 부품도입	1982	양자	미국 FNBC	철도청
		도로개량3차협조금융	1982	다자	ADB	건설교통부외

사 업 명	규 모(1,000 USD)		조 건		Grant Element (%)
	인출금	협정금	이자율(%)	거치-상환기간(년)	
철도 3차	39,648	40,000	7	4년-21년	18.95
도로1차	53,423	54,500	7.25	4년-20년	16.93
도로 4차	40,000	40,000	7.25	5년-21년	17.73
김포공항확장	39,200	40,000	8.25	10년-5년	8.02
항만 1차	80,000	80,000	7.25	5년-20년	17.43
도로2차	47,000	47,000	7.25	7년 -18년	17.74
산업전철화	7,381	7,604	8.5	2년-9년	5.31
1차도로개량	35,675	43,000	8.75	4년-19년	6.69
철도 5차	10,000	100,000	8.5	5년-20년	8.76
디젤기관차도입	37,036	37,890	7	1년-3년	5.43
도로3차	90,000	90,000	8.5	4년-20년	8.5
항만2차	66,217	67,000	8.5	4년-13.5년	7.26
2차도로개량	41,500	41,500	8.3	3년-19년	9.34
디젤기관차도입	30,045	30,132	8.5	1년-3년	2.48
철도 6차	120,000	120,000	7.45	4년-13년	12.64
도로4차	143,000	143,000	7.35	4년-13년	13.64
철도 7차	92,962	94,000	8.25	4년-13년	8.55
인천항개발2차사업	38,700	54,000	8.1	4년-20년	11.2
디젤기관차엔진등 부품도입	18,105	18,445	LIBOR	1.5년-4.5년	
도로개량3차협조금융	80,500	100,000	11	4년-20년	-8.34

부 문		사 업 명	도입연도	유형	제공기관	도입기관
대분류	중분류					
경제하부구조	교 통	군도개발	1982	다자	IBRD	행정자치부외
		석탄양회수송체제개선	1983	다자	IBRD	철도청외
		도로부문1차	1984	다자	IBRD	건설교통부외
		경부선CTC	1985	다자	IBRD	철도청
		서울시교통개선	1985	다자	IBRD	서울특별시
		부산항3단계	1986	다자	IBRD	해양수산부
		경기지역교통망	1988	다자	IBRD	한국도로공사
		대구시고속화도로건설	1988	다자	IBRD	대구광역시
		도로부문사업	1988	다자	ADB	건설교통부
		도로부문2차	1989	다자	IBRD	건설교통부
		5차도로개량사업	1989	다자	ADB	한국도로공사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1994	양자	불란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항만개발및 환경개선사업	1994	다자	IBRD	해양수산부외
		부산도시교통관리 사업	1995	다자	IBRD	부산교통공단외
		교통 합계				
	통 신	통신시설확장3차	1967	양자	독일 KFW	한국전기통신공사
		제1위성통신지구국건설	1968	양자	미국 EXIM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외전송시설확장	1969	양자	미국 EXIM	한국전기통신공사
		통신시설확장1차	1971	양자	카나다	한국전기통신공사
		KBS반송센타용방송기재공급	1971	양자	영국	한국방송공사

사 업 명	규 모(1,000 USD)		조 건		Grant Element (%)
	인출금	협정금	이자율(%)	거치-상환기간(년)	
군도개발	124,325	125,000	변동	3년-12년	
석탄양회수송체제개선	54,028	122,000	변동	3년-12년	
도로부문1차	215,003	230,000	변동	3년-12년	
경부선CTC	32,944	67,000	변동	3년-12년	
서울시교통개선	24,601	53,000	변동	2년-11년	
부산항3단계	134,500	141,000	변동	3년-12년	
경기지역교통망	111,859	116,000	변동	3년-12년	
대구시고속화도로건설	30,000	30,000	변동	3년-12년	
도로부문사업	100,000	100,000	변동	4년-20년	
도로부문2차	177,210	200,000	변동	5년-10년	
5차도로개량사업	100,000	100,000	변동	5년-20년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2,036,633	2,360,369	6.25	8년-4년	16.03
항만개발및 환경개선사업	83,246	100,000	변동	5년-10년	
부산도시교통관리 사업	92,068	100,000	변동	5년-10년	
	4,440,770	5,107,543			
통신시설확장3차	9,627	9,641	6	0년-10년	14.28
제1위성통신지구국건설	6,280	6,280	6	2년-8년	14.85
시외전송시설확장	2,898	2,900	6	2년-7년	13.8
통신시설확장1차	3,873	3,891	6	2년-10년	16.78
KBS반송센타용방송기재공급	3,441	3,441	6	5년-8년	18.22

부 문		사 업 명	도입연도	유형	제공기관	도입기관
대분류	중분류					
경제하부구조	통 신	방송기재공급	1971	양자	영국	한국방송공사
		통신시설확장5차	1971	양자	독일 KFW	한국전기통신공사
		통신시설확장2차	1973	양자	카나다	한국전기통신공사
		통신시설확장3차	1974	양자	카나다	한국전기통신공사
		통신시설확장9차	1975	양자	독일 KFW	한국전기통신공사
		통신시설확장8차	1975	양자	독일 KFW	한국전기통신공사
		제2위성통신지구국건설	1975	양자	미국 EXIM	한국전기통신공사
		M/W 시설확장공사	1976	양자	미국 EXIM	한국전기통신공사
		제2차 M/W 시설확장공사	1978	양자	미국 EXIM	한국전기통신공사
		PMC통신시설확충	1980	양자	카나다	한국전기통신공사
		전자교환시설본차관	1980	양자	벨지움	한국전기통신공사
		전자교환시설추가본차관	1981	양자	벨지움	한국전기통신공사
		중용량전자교환시설본차관	1982	양자	스웨덴	한국전기통신공사
		농어촌전자교환시설본차관	1983	양자	스웨덴	한국전기통신공사
		통신 합계				
	전 력	MRO 자금	1965	양자	독일 KFW	중소기업은행
		냉동냉장시설	1969	다자	ADB	한국냉장
		1차송배전시설	1970	다자	ADB	한국전력공사
		2차송배전시설	1971	다자	ADB	중소기업은행
		2차송배전시설	1971	다자	ADB	한국전력공사

사 업 명	규 모(1,000 USD)		조 건		Grant Element (%)
	인출금	협정금	이자율(%)	거치-상환기간(년)	
방송기재공급	2,138	2,138	6	5년-8년	18.22
통신시설확장5차	10,901	10,927	6	0년-10년	14.28
통신시설확장2차	3,915	3,929	6	2년-10년	16.78
통신시설확장3차	10,074	10,074	6	3년-10년	16.78
통신시설확장9차	16,472	16,845	8.25	5년-10년	8.02
통신시설확장8차	4,925	5,008	8.25	5년-6년	6.53
제2위성통신지구국건설	5,000	5,000	8	1년-9년	6.84
M/W 시설확장공사	14,914	15,000	9	8년-3년	3.25
제2차 M/W 시설확장공사	14,936	15,250	8.5	3년-4년	2.43
PMC통신시설확충	55,319	56,850	8.625	2.5년-10년	5.24
전자교환시설본차관	193,006	201,324	7.5	2.5년-10년	10.43
전자교환시설추가본차관	38,436	45,762	7.75	2.5년-10년	9.28
중용량전자교환시설본차관	92,890	120,000	7.75	3년-10년	9.58
농어촌전자교환시설본차관	67,922	103,000	10.75	1년-10년	-4.09
	556,967	637,260			
MRO 자금	8,034	8,034	30	3년-12년	-105.22
냉동냉장시설	4,779	7,000	6.875	3년-12년	15.01
1차송배전시설	9,499	9,500	7.5	3년-18년	14.13
2차송배전시설	14,978	15,000	7.5	1년-12년	10.43
2차송배전시설	9,547	10,600	7.5	1년-31년	16.39

부 문		사 업 명	도입연도	유형	제공기관	도입기관
대분류	중분류					
경제하부구조	전 력	삼랑진양수발전타당성조사	1975	다자	ADB	한국전력공사
		연료가공본차관	1975	양자	불란서	한국원자력연구소
		화학처리대체사업차관	1975	양자	불란서	한국원자력연구소
		월성1호기본차관	1976	양자	카나다	한국전력공사
		월성1호기착수금차관	1976	양자	영국	한국전력공사
		고리원자력2호기건설	1977	양자	미국 EXIM	한국전력공사
		아산화력발전건설을위한 타당성조사	1977	다자	ADB	한국전력공사
		고리원자력2호기건설	1977	다자	미국 EXIM Co Financing	한국전력공사
		삼천포화력1,2호기 건설	1977	다자	미국 EXIM Co Financing	한국전력공사
		원자력5,6호기건설	1978	양자	미국 EXIM	한국전력공사
		고정화력1,2호기건설	1979	다자	IBRD	한국전력공사
		삼천포화력1,2호기 건설	1979	양자	미국 EXIM	한국전력공사
		고정화력1,2호기건설	1980	양자	미국 EXIM	한국전력공사
		원자력7,8호기건설	1980	양자	미국 EXIM	한국전력공사
		원자력9,10호1차계통	1981	양자	불란서	한국전력공사
		원자력9,10호농축우라늄	1981	양자	불란서	한국전력공사
		화학처리대체사업추가본차관	1981	양자	불란서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9,10호기건설	1982	양자	미국 EXIM	한국전력공사
		원자력9,10호2차계통	1982	양자	불란서	한국전력공사
		5차초고압송전시설	1983	다자	ADB	한국전력공사

사 업 명	규 모(1,000 USD)		조 건		Grant Element (%)
	인출금	협정금	이자율(%)	거치-상환기간(년)	
삼랑진양수발전타당성조사	981	1,000	8.75	0년-2년	1.15
연료가공본차관	1,785	2,100	7.12	4년-6.5년	11
화학처리대체사업차관	20,081	23,973	6.96	8년-5년	13.37
월성1호기본차관	370,719	371,390	8.5	6년-15년	8.14
월성1호기착수금차관	9,000	9,000	LIBOR	2년-4년	
고리원자력2호기건설	362,089	362,089	8.5	13년-6년	7.73
아산화력발전건설을위한 타당성조사	581	1,650	8.3	2년-8년	5.77
고리원자력2호기건설	140,492	140,492	LIBOR	3년-4.5년	
삼천포화력1,2호기 건설	10,514	9,789	LIBOR	4년-1.5년	
원자력5,6호기건설	850,234	921,744	8.3	7년-15년	9.73
고정화력1,2호기건설	102,703	115,000	7.95	3년-12년	9.42
삼천포화력1,2호기 건설	73,421	78,855	LIBOR	4년-1.5년	
고정화력1,2호기건설	55,976	59,960	11.35	5년-12년	-9.07
원자력7,8호기건설	856,947	1,101,500	8	7년-15년	11.72
원자력9,10호1차계통	612,939	638,672	7.6	7.5년-15년	14.59
원자력9,10호농축우라늄	186,152	239,502	7.6	7년-15년	14.38
화학처리대체사업추가본차관	7,916	10,027	7.5	3.5년-8년	9.99
원자력9,10호기건설	2,597	7,800	10.75	7년-5년	-4.54
원자력9,10호2차계통	493,731	574,804	7.85	7년-15년	12.72
5차초고압송전시설	20,944	50,000	11	3년-15년	-7.14

부 문		사 업 명	도입연도	유형	제공기관	도입기관
대분류	중분류					
경제하부구조	전 력	LNG인수기지건설	1983	양자	불란서	한국가스공사
		경인지구LPG공급망건설	1984	다자	ADB	한국가스공사
		핵연료가공공장건설	1985	양자	독일 KFW	한국핵연료
		송배전시설사업	1986	다자	IBRD	한국지역난방
		남서울지역난방공사	1986	다자	ADB	한국지역난방
		액화천연가스전국공급사업	1991	다자	IBRD	한국가스공사
		전국송유관건설사업	1993	다자	IBRD	대한송유관공사
		JEXIM UNTIED TSL	1999	양자	일본 JEXIM	한국전력공사
		JEXIM UNTIED TSL	1999	양자	일본 JEXIM	한국가스공사
		전력합계				
경제하부구조 합계						
생 산	농림수산	수산개발1차사업	1972	다자	ADB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차농산물가공사업	1974	다자	IBRD	농어촌개발공사
		농업진흥	1975	양자	일본 JEXIM	농림부
		농업신용2차	1976	다자	IBRD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낙농개발 2차	1976	다자	IBRD	매일유업
		2차수산개발	1978	다자	ADB	교육인적자원부외
		농업용수개발	1978	양자	일본 OECF	농람부
		제2차농산물가공사업	1980	다자	IBRD	농어촌개발공사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	1982	다자	IBRD	서울특별시외

사 업 명	규 모(1,000 USD)		조 건		Grant Element (%)
	인출금	협정금	이자율(%)	거치-상환기간(년)	
LNG인수기지건설	128,811	142,504	8.25	3.5년-10년	7.41
경인지구LPG공급망건설	16,623	40,000	10.25	4년-16년	-3.01
핵연료가공공장건설	19,942	21,422	7.26	3년-10년	11.96
송배전시설사업	185,926	230,000	변동	2년-12년	
남서울지역난방공사	24,179	32,000	변동	3년-14년	
액화천연가스전국공급사업	80,717	100,000	변동	5년-10년	
전국송유관건설사업	112,040	120,000	변동	5년-10년	
JEXIM UNTIED TSL	854,030	1,030,147	JLTPR	1년-6년	
JEXIM UNTIED TSL	282,401	321,921	JLTPR	1년-6년	
	5,931,305	6,807,474			
	10,929,042	12,552,277			
수산개발1차사업	13,300	13,300	7.5	2년-12년	11.12
1차농산물가공사업	12,963	13,000	7.25	4년-14년	14.67
농업진흥	36,820	37,063	5.75	0년-9년	14.16
농업신용2차	20,000	20,000	8.9	4년-13.5년	4.96
낙농개발 2차	15,000	15,000	8.5	7년-18년	8.91
2차수산개발	7,841	19,000	7.7	5년-15년	12.55
농업용수개발	27,380	28,512	5.75	1년-10년	16.61
제2차농산물가공사업	47,304	50,000	8.25	3년-12년	7.86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	30,614	50,000	11.6	3년-12년	-9.56

부 문		사 업 명	도입연도	유형	제공기관	도입기관
대분류	중분류					
생 산	농림수산	농업신용4차	1985	다자	IBRD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림수산 합계				
	공업,광업 및 건설	민간기업육성1차	1968	다자	IBRD	한국장기신용은행
		1차기업육성	1969	다자	ADB	중소기업은행
		민간기업육성2차	1969	다자	IBRD	한국장기신용은행
		1차기업육성	1970	다자	ADB	한국산업은행
		카프로락담공장건설	1971	다자	ADB	한국카프로락담
		민간기업육성3차	1971	다자	IBRD	한국장기신용은행
		중소기업육성	1971	양자	일본 JEXIM	중소기업은행
		산업합리화자금	1972	양자	일본 JEXIM	한국산업은행
		2차기업육성	1972	다자	ADB	한국산업은행
		민간기업육성4차	1973	다자	IBRD	한국장기신용은행
		인천항개발1차사업	1973	다자	ADB	해양수산부
		2차기업육성	1973	다자	ADB	한국기업은행
		산업합리화자금	1974	양자	일본 JEXIM	한국산업은행
		3차기업육성	1974	다자	ADB	한국산업은행
		1차기업육성	1974	다자	ADB	한국장기신용은행
		제2제철타당성조사	1974	양자	미국 EXIM	포항종합제철
		종합기계공장건설	1975	다자	ADB	한국산업은행
		4차기업육성	1975	다자	ADB	한국산업은행

사 업 명	규 모(1,000 USD)		조 건		Grant Element (%)
	인출금	협정금	이자율(%)	거치-상환기간(년)	
농업신용4차	25,000	25,000	변동	3년-12년	
	236,222	270,875			
민간기업육성1차	4,949	5,000	6.5	1년-9년	12.66
1차기업육성	9,957	10,000	6.875	2년-12년	14.19
민간기업육성2차	19,725	20,000	6.5	2년-9년	13.74
1차기업육성	10,000	10,000	7.5	3년-13년	12.21
카프로락담공장건설	24,924	25,000	7.5	3년-10년	10.77
민간기업육성3차	29,125	30,000	7.25	1년-12년	11.58
중소기업육성	17,797	15,458	6.25	9년-8년	20.35
산업합리화자금	28,340	25,403	6.25	6년-9년	18.73
2차기업육성	20,000	20,000	7.5	0년-12년	9.69
민간기업육성4차	39,608	40,000	8.5	2년-14년	6.71
인천항개발1차사업	11,632	16,300	7.5	4년-21년	15.52
2차기업육성	29,653	30,000	7.5	0년-12년	9.69
산업합리화자금	25,944	26,363	5	0년-9년	16.8
3차기업육성	30,000	30,000	7.5	0년-13년	10.2
1차기업육성	29,892	30,000	7.5	1년-11년	9.91
제2제철타당성조사	409	409	6	0년-2년	4.28
종합기계공장건설	17,415	17,500	8.75	2년-10년	4.51
4차기업육성	40,000	40,000	8.75	2년-11년	4.75

부 문		사 업 명	도입연도	유형	제공기관	도입기관
대분류	중분류					
생 산	공업,광업 및 건설	민간기업육성1차	1975	다자	IBRD	한국산업은행
		민간기업육성5차	1975	다자	IBRD	한국장기신용은행
		2차기업육성	1976	다자	ADB	한국장기신용은행
		4차기업육성	1976	다자	ADB	중소기업은행
		1차석탄개발	1976	다자	ADB	대한석탄공사
		민간기업육성2차	1976	다자	IBRD	한국산업은행
		민간기업육성1차	1976	다자	IBRD	중소기업은행
		기간산업기계공장건설	1977	다자	IBRD	한국중공업
		민간기업육성6차	1977	다자	IBRD	한국장기신용은행
		민간기업육성2차	1978	다자	IBRD	중소기업은행
		광물자원개발사업	1978	다자	ADB	한국동력자원연구소
		5차기업육성	1978	다자	ADB	중소기업은행
		5차기업육성	1978	다자	ADB	한국산업은행
		민간기업육성3차	1978	다자	IBRD	한국산업은행
		민간기업육성7차	1978	다자	IBRD	한국장기신용은행
		전자기술개발사업	1979	다자	IBRD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민간중소기업육성3차	1979	다자	IBRD	중소기업은행
		2차석탄개발	1979	다자	ADB	대한석탄공사
		3차기업육성	1979	다자	ADB	한국장기신용은행
		1차기업육성	1979	다자	ADB	국민은행

사 업 명	규 모(1,000 USD)		조 건		Grant Element (%)
	인출금	협정금	이자율(%)	거치-상환기간(년)	
민간기업육성1차	60,000	60,000	8.5	1년-13년	6.09
민간기업육성5차	54,897	55,000	8.5	1년-14년	6.35
2차기업육성	37,896	40,000	9.1	3년-11년	3.3
4차기업육성	29,963	30,000	8.9	1년-11년	3.78
1차석탄개발	11,006	12,000	8.75	2년-11년	4.75
민간기업육성2차	82,458	82,500	8.7	1년-14년	5.34
민간기업육성1차	29,856	30,000	8.5	0년-15년	6.21
기간산업기계공장건설	80,000	80,000	8.2	5년-10년	8.25
민간기업육성6차	70,000	70,000	8.2	1년-14년	7.86
민간기업육성2차	54,988	55,000	7.9	2년-12년	9.15
광물자원개발사업	7,952	8,000	7.7	5년-11년	11.37
5차기업육성	39,843	40,000	7.7	3년-12년	10.72
5차기업육성	49,969	50,000	7.65	3년-12년	10.98
민간기업육성3차	110,000	110,000	7.5	0년-15년	11.13
민간기업육성7차	100,000	100,000	7.35	1년-14년	12.13
전자기술개발사업	23,940	29,000	7	5년-11년	15.23
민간중소기업육성3차	59,974	60,000	7.9	6년-16년	12.3
2차석탄개발	21,678	25,000	7.6	5년-11년	11.92
3차기업육성	49,781	50,000	7.6	3년-12년	11.24
1차기업육성	9,866	10,000	7.4	3년-12년	12.28

부 문		사 업 명	도입연도	유형	제공기관	도입기관
대분류	중분류					
생 산	공업,광업 및 건설	배합사료가공공장건설사업	1979	다자	ADB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외
		6차기업육성	1980	다자	ADB	중소기업은행
		소규모기업육성사업1차	1980	다자	IBRD	국민은행
		중소기업경영기술연구원설립	1981	다자	ADB	중소기업진흥공단
		4차기업육성	1981	다자	ADB	한국장기신용은행
		2차기업육성	1981	다자	ADB	국민은행
		민간중소기업육성4차	1981	다자	IBRD	중소기업은행
		민간중소기업육성4차	1981	양자	독일 KFW	중소기업은행
		민간기업육성8차	1981	다자	IBRD	한국장기신용은행
		민간기업육성4차	1981	다자	IBRD	한국산업은행
		기술개발촉진사업1차	1982	다자	IBRD	한국기술개발
		소규모기업육성2차	1982	다자	IBRD	국민은행
		7차기업육성	1982	다자	ADB	중소기업은행
		중소기계공업육성	1982	다자	IBRD	중소기업은행외
		산업금융차관1차	1983	다자	IBRD	한국산업은행외
		5차기업융성	1983	다자	ADB	한국장기신용은행
		기술개발촉진사업2차	1984	다자	IBRD	한국기술개발
		3차기업육성	1984	다자	ADB	국민은행
		산업금융2차	1985	다자	IBRD	국민은행외
		중소기업금융	1986	다자	IBRD	국민은행외

사 업 명	규 모(1,000 USD)		조 건		Grant Element (%)
	인출금	협정금	이자율(%)	거치-상환기간(년)	
배합사료가공공장건설사업	10,900	13,000	7.4	3년-0년	3.65
6차기업육성	39,961	40,000	9	3년-12년	3.96
소규모기업육성사업1차	29,806	30,000	8.25	0년-11년	6.12
중소기업경영기술연구원설립	6,180	13,000	9.25	3년-12년	2.66
4차기업육성	55,543	60,000	10.1	3년-12년	-1.76
2차기업육성	28,033	30,000	10.1	3년-12년	-1.76
민간중소기업육성4차	59,988	60,000	9.6	0년-12년	0.69
민간중소기업육성4차	1,607	1,607	변동	5년-15년	
민간기업육성8차	88,507	90,000	9.25	2년-12년	2.52
민간기업육성4차	99,838	100,000	9.25	0년-13년	2.31
기술개발촉진사업1차	47,943	50,000	11.6	4년-9년	-8.84
소규모기업육성2차	28,202	30,000	11.6	0년-12년	-7.88
7차기업육성	16,514	50,000	11	3년-12년	-6.44
중소기계공업육성	46,084	70,000	변동	3년-11년	
산업금융차관1차	252,694	255,000	변동	3년-12년	
5차기업융성	40,152	70,000	10.5	3년-12년	-3.84
기술개발촉진사업2차	45,160	50,000	변동	5년-5년	
3차기업육성	6,926	40,000	10.25	3년-12년	-2.54
산업금융2차	173,057	218,000	LIBOR	3년-12년	
중소기업금융	20,331	21,000	변동	3년-12년	

부 문		사 업 명	도입연도	유형	제공기관	도입기관
대분류	중분류					
생 산	공업,광업및 건설	토지개발사업	1986	다자	IBRD	한국토지개발공사
		부산시도시개발	1987	다자	IBRD	부산광역시
		기술개발촉진사업3차	1988	다자	IBRD	한국종합금융
		과학기술발전지원차관	1989	다자	IBRD	한극과학기술원외
		과학기술연구지원사업	1990	다자	IBRD	한국과학기술원외
		연구및사업평가시설확충사업	1991	다자	IBRD	기술표준원외
		기초과학연구기반조성사업	1992	다자	IBRD	교육인적자원부
		중소기업시설현대화사업	1994	다자	IBRD	한국종합기술금융외
		JEXIM UNTIED TSL	1999	양자	일본 JEXIM	중소기업은행
		JEXIM UNTIED TSL	1999	양자	일본 JEXIM	한국산업은행
		공업,,광업및 건설 합계				
	무역관광	1차수출산업육성	1971	양자	일본 JEXIM	한국외환은행
		2차수출산업육성	1974	양자	일본 JEXIM	한국외환은행
		무역관광합계				
생산합계						
다부문	환경,기타	중량천하수처리장시설	1975	양자	영국	서울특별시
		공업지역하수처리타당성조사	1979	다자	ADB	건설교통부
		공업지역하수처리시설사업	1981	다자	ADB	건설교통부외
		한강유역환경보전사업	1981	다자	ADB	환경부외
		읍면분뇨염수처리시설사업	1983	다자	ADB	환경부외

사 업 명	규 모(1,000 USD)		조 건		Grant Element (%)
	인출금	협정금	이자율(%)	거치-상환기간(년)	
토지개발사업	150,000	150,000	변동	3년-11년	
부산시도시개발	50,000	50,000	변동	3년-12년	
기술개발촉진사업3차	49,082	50,000	변동	5년-6년	
과학기술발전지원차관	16,303	16,400	변동	5년-10년	
과학기술연구지원사업	31,572	31,600	변동	5년-10년	
연구및사업평가시설확충사업	59,786	60,000	변동	5년-10년	
기초과학연구기반조성사업	49,212	50,000	변동	5년-10년	
중소기업시설현대화사업	99,561	100,000	LIBOR+ 0.5	5년-10년	
JEXIM UNTIED TSL	1,424,005	1,347,248	JLTPR	1년-6년	
JEXIM UNTIED TSL	291,476	1,066,807	JLTPR	4년-6년	
	4,691,860	5,601,595			
1차수출산업육성	17,814	15,458	6.25	10년-6년	19.49
2차수출산업육성	20,751	21,227	6.25	12년-6년	22.36
	38,566	36,685			
	4,966,648	5,909,155			
중량천하수처리장시설	4,857	5,714	7.5	3.5년-7년	9.39
공업지역하수처리타당성조사	1,742	2,100	7.6	2년-7년	7.93
공업지역하수처리시설사업	24,600	27,900	9	5년-19년	5.19
한강유역환경보전사업	2,385	4,100	10.1	2년-8년	-1.34
읍면분뇨염수처리시설사업	12,337	25,500	11	4년-20년	-8.34

부 문		사 업 명	도입연도	유형	제공기관	도입기관
대분류	중분류					
다부문	환경,기타	공업지역하수처리장건설	1983	다자	ADB	환경부외
		인천하수처리장건설	1986	다자	ADB	인천광역시
		4차하수처리장건설사업	1988	다자	ADB	대구광역시
		제5차하수처리장건설사업	1990	다자	ADB	수원시외
		부산 대전시 하수처리장건설사업	1992	다자	IBRD	대전광역시외
		광주,서울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	1993	다자	IBRD	서울특별시외
		환경개선사업	1994	다자	IBRD	한국과학기술원외
		폐기물처리사업	1995	다자	IBRD	부산광역시외
		환경,기타 합계				
	새마을,종합계발	금강평택지구개발	1969	다자	IBRD	농업기반공사
		1단계영산강유역개발	1972	다자	IBRD	농업기반공사
		경주 개발	1974	다자	IBRD	건설교통부외
		임진지구개발	1974	다자	ADB	농업기반공사외
		광주권 지역 개발 1단계	1975	다자	IBRD	건설교통부외
		미호천유역개발공사	1976	다자	IBRD	농업기반공사
		남강유역개발	1976	다자	ADB	농업기반공사외
		2단계영산강유역개발공사	1977	다자	IBRD	농업기반공사
		낙동강유역개발	1977	다자	ADB	건설교통부외
		새마을2차	1978	다자	IBRD	농림부외
		옥서지구개발공사	1978	다자	IBRD	농업기반공사

사 업 명	규 모(1,000 USD)		조 건		Grant Element (%)
	인출금	협정금	이자율(%)	거치-상환기간(년)	
공업지역하수처리장건설	50,249	62,800	10.5	6년-19년	-5.17
인천하수처리장건설	30,287	35,000	변동	5년-20년	
4차하수처리장건설사업	22,111	22,800	변동	5년-20년	
제5차하수처리장건설사업	16,672	20,600	변동	4년-20년	
부산 대전시 하수처리장건설사업	33,516	34,000	변동	5년-10년	
광주,서울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	39,296	60,750	변동	5년-10년	
환경개선사업	88,568	90,000	변동	5년-10년	
폐기물처리사업	53,482	75,000	변동	5년-10년	
	380,102	466,264			
금강평택지구개발	44,994	45,000	6.5	7년-23년	24.82
1단계영산강유역개발	33,000	33,000	7.25	6년-23년	18.71
경주 개발	24,884	25,000	7.25	7년-18년	17.74
임진지구개발	19,000	19,000	8.25	7년-19년	10.86
광주권 지역 개발 1단계	15,000	15,000	8	7년 -18년	12.45
미호천유역개발공사	28,996	29,000	8.5	4년-13년	7.14
남강유역개발	31,890	32,000	9.1	8년-19년	4.87
2단계영산강유역개발공사	94,994	95,000	8.5	3년-12년	6.56
낙동강유역개발	44,273	45,000	8.3	7년-20년	10.67
새마을2차	94,685	95,000	7.45	4년-13년	12.64
옥서지구개발공사	36,000	36,000	7.9	2년-12년	9.15

부 문		사 업 명	도입연도	유형	제공기관	도입기관
대분류	중분류					
다부문	새마을,종합계발	광주권 2단계	1979	다자	IBRD	건설교통부외
		주택개발및건설1차	1981	다자	IBRD	대한주택공사외
		제2차택지개발및주택건설	1982	다자	IBRD	건설교통부외
		전주권지역개발	1984	다자	IBRD	건설교통부외
		새마을 종합계발 합계				
다부문 합계						
기 타	상품,원자재	농수산원자재도입	1971	양자	일본 JEXIM	농림부
		농수산물자재	1973	양자	일본 JEXIM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품1차	1975	다자	IBRD	비전대
		상품2차	1976	다자	IBRD	비전대
		상품, 원자재 합계				
	양 곡	1981년 일본미	1981	양자	일본 식량청	농림부
		양곡 합계				
	구조조정, 긴급지원	구조조정1차	1981	다자	IBRD	비전대
		구조조정2차	1983	다자	IBRD	비전대
		경제재건차관	1997	다자	IBRD	한국수출입은행외
		금융부문프로그램	1997	다자	ADB	한국산업은행외
		금융부문기술지원	1997	다자	ADB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차관2차	1998	다자	IBRD	한국산업은행
		기술지원차관	1998	다자	IBRD	금융감독위원회외

사 업 명	규 모(1,000 USD)		조 건		Grant Element (%)
	인출금	협정금	이자율(%)	거치-상환기간(년)	
광주권 2단계	51,199	65,000	7.9	5년-13년	10.98
주택개발및건설1차	71,340	90,000	9.6	3년-12년	0.84
제2차택지개발및주택건설	100,000	100,000	변동	3년-12년	
전주권지역개발	38,599	60,000	변동	3년-12년	
	728,854	784,000			
	1,108,956	1,250,264			
농수산원자재도입	17,756	15,458	6.25	2년-9년	14.79
농수산물자재	5,451	6,625	6.25	3년-8년	14.98
상품1차	100,000	100,000	8.5	5년-15년	7.87
상품2차	75,000	75,000	8.5	5년-15년	7.87
	198,207	197,083			
1981년 일본미	212,820	240,361	3	0년-9년	23.86
	212,820	240,361			
구조조정1차	250,000	250,000	11.6	3년-12년	-9.56
구조조정2차	300,000	300,000	변동	3년-12년	
경제재건차관	3,000,000	3,000,000	LIBOR+ 1.0	6년-5년	
금융부문프로그램	3,700,000	4,000,000	LIBOR+ 0.6	7년-0년	
금융부문기술지원	7,869	15,000	변동	3년-12년	
구조조정차관2차	2,000,000	2,000,000	LIBOR+ 0.75	5년-10년	
기술지원차관	26,038	48,000	LIBOR+ 0.5	5.83년-10년	

부 문		사 업 명	도입연도	유형	제공기관	도입기관
대분류	중분류					
기 타	구조조정, 긴급지원	구조조정차관1차	1998	다자	IBRD	한국산업은행외
		구조조정, 긴급지원 합계				
	기 타	군사판매	1979	양자	미국 FMS	국방부
		자본재수입차관	1998	양자	미국 EXIM	한국산업은행
		기타 합계				
기타 합계						
총합계						

사 업 명	규 모(1,000 USD)		조 건		Grant Element (%)
	인출금	협정금	이자율(%)	거치-상환기간(년)	
구조조정차관1차	2,000,000	2,000,000	LIBOR+ 0.75	5년-10년	
	11,283,907	11,613,000			
군사판매	13,192	13,192	미재무성	1.5년-6년	
자본재수입차관	439,703	2,000,000	CIRR	5년-5년	
	452,895	2,013,192			
	12,147,830	14,063,636			
	31,195,569	36,049,507			